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근진·박창현·김희수





연구보고 2020-18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저 자** 김근진, 박창현, 김희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 선 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정인애드 02) 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69-2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육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종합적 관점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만 3년을 경과하는 중간시점에 해당하는 2020년은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과 더불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육아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5년 연속과제로 진행되는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2018~2022)」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2019~2020년의 육아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육아정책의 범주는 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돌봄(초등돌봄 포함), 아동정책을 포괄한다. 부처별로 제시한 정책의 계획과 연도별 목표 대비 달성도에 의한 협의의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추진된 정책의 목표와 계획의 이행이 부모, 현장 교직원,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육아의 과정과 환경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모, 육아정책 전문가, 현장 교직원 대상 조사 결과, 대체로 육아정책의 방향 설정과 추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아직 미비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해야 지점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지급연령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주요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에 도움을 주신 각계 전문가와 육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신 교직원, 그리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b>요약</b>	<b>1</b>
<b>I. 서론</b>	<b>2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25
3. 연구방법	26
4. 연구의 배경	38
<b>II.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b>	<b>43</b>
1. 육아정책의 범주	45
2. 선행연구 성과지표	47
3.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 성과지표	69
<b>III.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분석</b>	<b>71</b>
1. 부모의 국정과제 성과 평가	73
2. 전문가의 국정과제 성과 평가	75
<b>IV. 저출산정책 성과분석</b>	<b>87</b>
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89
2. 부모 및 전문가 의견(설문조사)	94
3. 면담자료 분석	121
4. 계량 분석	123
<b>V.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성과분석</b>	<b>139</b>
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141
2. 부모, 전문가, 원장 및 교사의 의견(설문조사)	149
3. 부모, 원장 및 교사 면담자료 분석	205
4. 계량 분석	268

---

<b>VI. 아동정책 성과분석</b>	<b>289</b>
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291
2. 부모 및 전문가 의견 .....	297
<b>VII. 총괄평가 및 정책제언</b>	<b>309</b>
1. 저출산정책 .....	311
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	317
3. 아동정책 .....	341
<b>참고문헌</b>	<b>349</b>
<b>Abstract</b>	<b>355</b>
<b>부록</b>	<b>357</b>
부록 1. 설문조사지(부모) .....	357
부록 2. 설문조사지(유치원교사(원장 포함)) .....	373
부록 3. 설문조사지(어린이집 보육교사용(원장 포함)) .....	377
부록 4. 설문조사지(전문가) .....	382
부록 5. 면담조사지(영유아 부모) .....	403
부록 6. 면담조사지(초등학생 부모) .....	405
부록 7. 면담조사지(유치원 원장) .....	407
부록 8. 면담조사지(유치원 교사) .....	409
부록 9. 면담조사지(어린이집 원장) .....	411
부록 10. 면담조사지(어린이집 보육교사) .....	413
부록 11. 면담조사지(초등돌봄 종사자) .....	415
부록 12. 설문조사 부표: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전문가 의견조사) .....	417
부록 13. 설문조사 부표: 저출산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부모 설문조사) .....	424
부록 14. 설문조사 부표: 저출산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전문가 의견조사) .....	432
부록 15. 설문조사 부표: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부모 설문조사) .....	439
부록 16. 설문조사 부표: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 .....	445

---



---

부록 17. 설문조사 부표: 유아교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453
부록 18. 설문조사 부표: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458
부록 19. 설문조사 부표: 아동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부모 설문조사) .....	464
부록 20. 설문조사 부표: 아동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전문가 의견조사) .....	466

---



## 표 목차

〈표 I-3-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일정 .....	27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일정 .....	27
〈표 I-3-3〉 면담조사 개요 .....	28
〈표 I-3-4〉 부모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	29
〈표 I-3-5〉 유치원 원장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	29
〈표 I-3-6〉 유치원 교사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	30
〈표 I-3-7〉 어린이집 원장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	30
〈표 I-3-8〉 어린이집 교사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	30
〈표 I-3-9〉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	31
〈표 I-3-10〉 설문조사 개요 .....	32
〈표 I-3-11〉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32
〈표 I-3-12〉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1~3차년) .....	33
〈표 I-3-13〉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34
〈표 I-3-14〉 부모 조사 내용(1~3차년) .....	35
〈표 I-3-15〉 유치원 교사·원장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36
〈표 I-3-16〉 어린이집 교사·원장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37
〈표 I-3-17〉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조사 내용(1, 3차년) .....	37
〈표 I-4-1〉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성과 및 평가 .....	39
〈표 I-4-2〉 영유아 관련 돌봄과 복지, 저출산정책에 정책 성과 및 평가 .....	40
〈표 I-4-3〉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2차년 연구 요약 .....	41
〈표 II-1-1〉 1차년 연구에서 선정한 15대 핵심육아정책 목록 .....	45
〈표 II-1-2〉 10대 핵심정책과제 목록 및 중요도 결과 .....	46
〈표 II-1-3〉 2019년 육아정책 범주 재구조화 .....	47
〈표 II-2-1〉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평가 지표 내 저출산· 육아정책 관련 지표 .....	48
〈표 II-2-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에 대응하는 해외지표 목록 (저출산·육아정책 관련 지표) .....	49
〈표 II-2-3〉 ‘2010~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	49
〈표 II-2-4〉 ‘2010~2015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	50
〈표 II-2-5〉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성과지표 .....	52

---

〈표 II-2-6〉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지표(2019) .....	53
〈표 II-2-7〉 교육부 자체평가 지표(2019) .....	54
〈표 II-2-8〉 여성가족부 자체평가 지표(2019) .....	54
〈표 II-2-9〉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	55
〈표 II-2-10〉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	57
〈표 II-2-11〉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	58
〈표 II-2-12〉 OECD 삶의 질 지표 .....	59
〈표 II-2-13〉 OECD 아동복지지표(2015) .....	59
〈표 II-2-14〉 UNICEF 아동 웰빙 지표(2013) .....	60
〈표 II-2-15〉 OECD 아동웰빙지표(2009) .....	61
〈표 II-2-16〉 EU 아동웰빙지수(2008) .....	62
〈표 II-2-17〉 2019 국민 삶의 질 지표 .....	62
〈표 II-2-18〉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지표 .....	64
〈표 II-2-19〉 아동 및 부모의 삶의 질 지표 .....	65
〈표 II-2-20〉 정부 주요 국정과제-육아정책 성과평가 지표 연계 .....	66
〈표 II-2-21〉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효과평가)을 위한 지표(안) .....	68
〈표 II-3-1〉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 성과지표 .....	69
〈표 III-1-1〉 육아정책 의제에 우리나라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부모들의 욕구 반영 .....	73
〈표 III-1-2〉 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 성과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생각 ...	74
〈표 III-1-3〉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육아정책의 효과성 평가 .....	75
〈표 III-2-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2019년/2020년 조사) .....	76
〈표 III-2-2〉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2019년/2020년 조사) .....	77
〈표 III-2-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2019년/2020년 조사) .....	78
〈표 III-2-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2019년/2020년 조사) .....	81
〈표 III-2-5〉 육아정책 계획수립-실행추진 평가 .....	82
〈표 III-2-6〉 구체적 정책설계-정책의제설정-투입요소-수행체계-정책집행 평가 .....	83
〈표 III-2-7〉 육아정책 중장기 평가(기여도 평가)(2019년/2020년 조사) .....	84
〈표 III-2-8〉 육아정책 조정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2019년/2020년 조사) .....	85
〈표 IV-1-1〉 보건복지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저출산정책) .....	89
〈표 IV-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90
〈표 IV-1-3〉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90

---

---

〈표 IV-1-4〉 「아동수당 지급」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91
〈표 IV-1-5〉 여성가족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저출산정책) .....	92
〈표 IV-1-6〉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92
〈표 IV-1-7〉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93
〈표 IV-2-1〉 가구 월 평균 소득 .....	94
〈표 IV-2-2〉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	95
〈표 IV-2-3〉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2019년/2020년) .....	97
〈표 IV-2-4〉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현금지원) .....	97
〈표 IV-2-5〉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시간지원) .....	98
〈표 IV-2-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건강/의료 지원 등) .....	99
〈표 IV-2-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2019년/2020년) .....	100
〈표 IV-2-8〉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현금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	101
〈표 IV-2-9〉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시간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	101
〈표 IV-2-1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건강/의료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	102
〈표 IV-2-11〉 저출산정책 과제의 목표 달성률(2019년/2020년 조사) .....	103
〈표 IV-2-12〉 문재인 정부에서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1순위 ·	105
〈표 IV-2-13〉 문재인 정부에서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	106
〈표 IV-2-14〉 문재인 정부에서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 ·	107
〈표 IV-2-15〉 문재인 정부에서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	107
〈표 IV-2-16〉 저출산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 ·	109
〈표 IV-2-17〉 저출산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	110
〈표 IV-2-18〉 저출산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19년/2020년 조사) ·	112
〈표 IV-2-19〉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	114
〈표 IV-2-20〉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	117
〈표 IV-2-21〉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할 과제 .....	118
〈표 IV-2-22〉 저출산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	120
〈표 IV-4-1〉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 (OLS, 고정효과모형) .....	129
〈표 IV-4-2〉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 (동적패널모형: 강외생성 가정) .....	130
〈표 IV-4-3〉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 (동적패널모형: 약외생성 가정) .....	131
〈표 IV-4-4〉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의 영향	

---

---

(OLS, 고정효과모형) .....	132
〈표 IV-4-5〉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의 영향(동적패널모형) .....	133
〈표 IV-4-6〉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2SLS) ..	134
〈표 IV-4-7〉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 (OLS, 고정효과모형) .....	135
〈표 IV-4-8〉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 (동적패널모형: 강외생성 가정) .....	136
〈표 IV-4-9〉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 (동적패널모형: 약외생성 가정) .....	137
〈표 V-1-1〉 보건복지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보육정책) .....	141
〈표 V-1-2〉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142
〈표 V-1-3〉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142
〈표 V-1-4〉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143
〈표 V-1-5〉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144
〈표 V-1-6〉 교육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유아교육·돌봄정책) .....	145
〈표 V-1-7〉 「출발선의 평등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145
〈표 V-1-8〉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146
〈표 V-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147
〈표 V-1-10〉 여성가족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돌봄정책) .....	148
〈표 V-1-11〉 「자녀 돌봄 지원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148
〈표 V-2-1〉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19년/2020년 조사) .....	150
〈표 V-2-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① .....	150
〈표 V-2-3〉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② .....	151
〈표 V-2-4〉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19년/2020년 조사) .....	153
〈표 V-2-5〉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	153
〈표 V-2-6〉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 인지도 .....	154
〈표 V-2-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 만족도 .....	155
〈표 V-2-8〉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만족하는 이유 .....	156
〈표 V-2-9〉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불만족하는 이유 .....	157
〈표 V-2-10〉 공영형 유치원 인지도 .....	158
〈표 V-2-11〉 공영형 유치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159
〈표 V-2-12〉 공영형 유치원에 만족하는 이유 .....	160

---

---

〈표 V-2-13〉	공영형 유치원에 불만족하는 이유	160
〈표 V-2-14〉	매입형 유치원 인지도	161
〈표 V-2-15〉	매입형 유치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62
〈표 V-2-16〉	매입형 유치원에 만족하는 이유	163
〈표 V-2-17〉	매입형 유치원에 불만족하는 이유	164
〈표 V-2-18〉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2019년/2020년 조사)	165
〈표 V-2-19〉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	165
〈표 V-2-20〉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19년/2020년 조사)	167
〈표 V-2-21〉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167
〈표 V-2-22〉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인지도	168
〈표 V-2-23〉	긴급돌봄 이용 경험	169
〈표 V-2-24〉	긴급돌봄 이용 이유	170
〈표 V-2-25〉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171
〈표 V-2-26〉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 시 도움이 될 만한 제도	172
〈표 V-2-2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의 목표 달성률(2019년/2020년 조사)	173
〈표 V-2-28〉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1순위	174
〈표 V-2-29〉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175
〈표 V-2-30〉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	176
〈표 V-2-31〉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177
〈표 V-2-3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178
〈표 V-2-3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	179
〈표 V-2-3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2019년/2020년 조사)	181
〈표 V-2-3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2019년)	183
〈표 V-2-36〉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	185
〈표 V-2-3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86
〈표 V-2-38〉	유아교육 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187

---

---

〈표 V-2-39〉 보육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	187
〈표 V-2-40〉 돌봄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	188
〈표 V-2-41〉 유아교육정책의 항목별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	190
〈표 V-2-42〉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91
〈표 V-2-43〉 ‘(2)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91
〈표 V-2-44〉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92
〈표 V-2-45〉 ‘(4)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93
〈표 V-2-46〉 ‘(5)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94
〈표 V-2-47〉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95
〈표 V-2-48〉 보육정책의 항목별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	197
〈표 V-2-49〉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98
〈표 V-2-50〉 ‘(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99
〈표 V-2-51〉 ‘(3) 국공립 어린이집 질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200
〈표 V-2-52〉 ‘(4)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201
〈표 V-2-53〉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201
〈표 V-2-54〉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202
〈표 V-2-55〉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203
〈표 V-2-56〉 ‘(8)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	204
〈표 V-4-1〉 취업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 모형) .....	270
〈표 V-4-2〉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 모형) .....	270
〈표 V-4-3〉 취업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71
〈표 V-4-4〉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72
〈표 V-4-5〉 취업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 모형) .....	273
〈표 V-4-6〉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 모형) .....	273

---

---

〈표 V-4-7〉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74
〈표 V-4-8〉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여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75
〈표 V-4-9〉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76
〈표 V-4-10〉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동적패널모형) .....	277
〈표 V-4-11〉 모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80
〈표 V-4-12〉 모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	281
〈표 V-4-13〉 모 상용직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81
〈표 V-4-14〉 모 상용직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	282
〈표 V-4-15〉 모 종일제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82
〈표 V-4-16〉 모 종일제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	283
〈표 V-4-17〉 모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84
〈표 V-4-18〉 모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	284
〈표 V-4-19〉 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85
〈표 V-4-20〉 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	285
〈표 V-4-21〉 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	286
〈표 V-4-22〉 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	286
〈표 VI-1-1〉 보건복지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아동정책) .....	291
〈표 VI-1-2〉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292
〈표 VI-1-3〉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292
〈표 VI-1-4〉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293
〈표 VI-1-5〉 여성가족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아동정책) .....	294
〈표 VI-1-6〉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295
〈표 VI-1-7〉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296

---




---

〈표 VI-1-8〉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296
〈표 VI-2-1〉 아동정책 과제의 목표 달성률(2019년/2020년 조사)	298
〈표 VI-2-2〉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동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298
〈표 VI-2-3〉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동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	299
〈표 VI-2-4〉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동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300
〈표 VI-2-5〉 아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	301
〈표 VI-2-6〉 아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301
〈표 VI-2-7〉 아동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19년/2020년 조사)	303
〈표 VI-2-8〉 아동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304
〈표 VI-2-9〉 아동정책에서 가장 미흡한 성과를 보인 과제	305
〈표 VI-2-10〉 아동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306
〈표 VI-2-11〉 아동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307

---

---



## 그림 목차

[그림 1-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	25
[그림 1-3-1] 2020년 연구 진행 절차 .....	38



##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	417
〈부록 표 2〉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2)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417
〈부록 표 3〉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3)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	417
〈부록 표 4〉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4)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418
〈부록 표 5〉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5)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418
〈부록 표 6〉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6)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419
〈부록 표 7〉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7)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419
〈부록 표 8〉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8)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419
〈부록 표 9〉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9)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420
〈부록 표 10〉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0)(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420
〈부록 표 11〉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1)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421
〈부록 표 12〉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2)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	421
〈부록 표 13〉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3)일·가정 양립 일상화 .....	421
〈부록 표 14〉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4)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422
〈부록 표 15〉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5)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	422

---

〈부록 표 16〉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6)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	423
〈부록 표 17〉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7)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423
〈부록 표 18〉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	424
〈부록 표 19〉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424
〈부록 표 20〉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425
〈부록 표 21〉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육아시간 지원 .....	425
〈부록 표 22〉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426
〈부록 표 23〉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부모의 노동권 보장 .....	426
〈부록 표 24〉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부모의 육아권 보장 .....	427
〈부록 표 25〉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	427
〈부록 표 26〉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출산·양육 세제 개선 ..	428
〈부록 표 27〉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양육지원체계 개편 (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	429
〈부록 표 28〉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의료비 지원 강화 (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	429
〈부록 표 29〉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2)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	430
〈부록 표 30〉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3)(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	430
〈부록 표 31〉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4)(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	431
〈부록 표 32〉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5)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	431
〈부록 표 33〉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	432
〈부록 표 34〉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432
〈부록 표 35〉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433
〈부록 표 36〉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육아시간 지원 .....	433
〈부록 표 37〉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433
〈부록 표 38〉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부모의 노동권 보장 .....	434

---

---

〈부록 표 39〉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부모의 육아권 보장	434
〈부록 표 40〉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435
〈부록 표 41〉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출산·양육 세제 개선	435
〈부록 표 42〉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양육지원체계 개편 (보육료지원-수당 조정)	435
〈부록 표 43〉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의료비 지원 강화 (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436
〈부록 표 44〉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2)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	436
〈부록 표 45〉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3)(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437
〈부록 표 46〉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4)(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437
〈부록 표 47〉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5)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437
〈부록 표 48〉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439
〈부록 표 49〉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의 목표 달성률: (2)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439
〈부록 표 50〉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439
〈부록 표 5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440
〈부록 표 5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440
〈부록 표 5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441
〈부록 표 5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보육서비스 질 제고	441
〈부록 표 5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441
〈부록 표 56〉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442
〈부록 표 5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442

---

---

〈부록 표 58〉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	442
〈부록 표 59〉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2)육아지원의 확대 ...	443
〈부록 표 60〉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3)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	443
〈부록 표 6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4)공공성 확대 ...	443
〈부록 표 6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5)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	444
〈부록 표 6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6)취학 전 출발선 평등 .....	444
〈부록 표 6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7)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	444
〈부록 표 6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8)양육비 부담 완화 ...	444
〈부록 표 66〉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445
〈부록 표 6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	445
〈부록 표 68〉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446
〈부록 표 69〉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	446
〈부록 표 70〉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	447
〈부록 표 7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447
〈부록 표 7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보육서비스 질 제고 .....	447
〈부록 표 7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	448
〈부록 표 7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 체계 .....	448
〈부록 표 7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449

---

---

〈부록 표 76〉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449
〈부록 표 7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2)육아지원의 확대 .....	450
〈부록 표 78〉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3)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	450
〈부록 표 79〉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	450
〈부록 표 80〉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5)취학 전 출발선 평등 .....	451
〈부록 표 8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6)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	451
〈부록 표 8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7)양육비 부담 완화 .....	452
〈부록 표 83〉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453
〈부록 표 84〉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 .....	453
〈부록 표 85〉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454
〈부록 표 86〉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국공립 유치원 질 강화 ..	454
〈부록 표 87〉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 .....	455
〈부록 표 88〉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455
〈부록 표 89〉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취학 전 출발선 평등 ..	456
〈부록 표 90〉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 시간 확대 .....	457
〈부록 표 91〉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458
〈부록 표 92〉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	458
〈부록 표 93〉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국공립 어린이집 질 강화 ..	459
〈부록 표 93〉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 .....	459
〈부록 표 94〉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460
〈부록 표 95〉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보육서비스 질 제고 ..	460

---

---

〈부록 표 96〉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	461
〈부록 표 97〉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	461
〈부록 표 98〉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462
〈부록 표 99〉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돌봄 서비스 .....	462
〈부록 표 100〉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	463
〈부록 표 101〉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	464
〈부록 표 102〉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	464
〈부록 표 103〉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	464
〈부록 표 104〉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	464
〈부록 표 105〉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부모의 육아 행복감 ..	465
〈부록 표 106〉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아버지의 양육 참여 ..	465
〈부록 표 107〉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아동의 웰빙/행복 ..	465
〈부록 표 108〉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	466
〈부록 표 109〉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	466
〈부록 표 110〉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	467
〈부록 표 111〉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	467
〈부록 표 112〉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부모의 육아 행복감 ..	467
〈부록 표 113〉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아버지의 양육참여 ..	468
〈부록 표 114〉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아동의 웰빙/행복 ..	468

---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3년이 경과하는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100대 국정과제 등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검토, 분석하여 실행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임.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본 과제는 3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2차년도(2019년)에 개발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2019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2020년 육아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점 현안을 심층 분석하여 당면한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본 연구는 2019년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함.

### 나. 연구내용

- 첫째, 1~2차년도 연구결과를 정리, 분석함. 3차년도에 수행할 성과지표 정리는 기존 성과지표를 수정, 보완함.
- 둘째, 2019년도에 추진한 각 부처별 육아정책을 수합, 분석함.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한 육아정책 자료들을 정리함.
- 셋째, 2018~2019년에 개발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2019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의 이행 수준을 진단함. 이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접근을 통해 진단함.
- 넷째, 2020년의 현안 육아정책 또는 부처의 당면 정책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2019년 성과 분석과 함께 당면 현안에 대해 정책 방안 수립을 모색함. 이를 위해 2019년에 추진한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행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함.

## 다.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육아정책에 관한 평가와 성과분석을 다룬 국내외 연구와 정부보고서를 고찰

### □ 통계자료에 기반한 계량분석

- 저출산, 보육, 유아교육, 초등돌봄 등 육아정책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성과지표 보완 및 새로 필요한 지표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방안에 대해 자문

### □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운영

- 성과지표 보완 및 새로 필요한 정책 지표 논의를 위하여 정책분석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실시

### □ 면담조사

- 육아정책에 대한 정성평가를 위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집단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
  - 부모 면담: 영유아 부모,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부모
  - 기관 종사자 면담: 어린이집 원장, 교사/ 유치원 원장, 교사/ 돌봄(초등돌봄 종사자 포함) 종사자

### □ 설문조사

- 2019년과 2020년 상반기까지 수행한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저출산, 아동, 가족, 복지, 교육, 보육, 경제, 고용 정책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
- 육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최종 1,731명 참여)
-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목표 달성도,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원장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최종 유치원 215명, 어린이집 151명 참여)

## 라. 연구의 배경

- 유아교육·보육정책 성과 연구
- 영유아 돌봄, 복지, 저출산정책 성과 연구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2차년도 연구

## 2.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

### 가. 육아정책의 범주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2차 연구)
  - 1차년도 연구(이윤진·양미선·김문정, 2018)에서는 15대 핵심 육아정책을 선정함.
  - 2차년도 연구(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에서는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정책으로 재구조화하여 범주의 내용을 20개로 확대함.

### 나. 선행연구 성과지표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지표
-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2015년)」의 성과지표
-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성과지표
-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지표
-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성과지표
- 삶의 질 지표

###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 성과지표

-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

〈표 1〉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 성과지표

단계	지표	내용
집행 (input & process)	재정 (투입의 충분성)	-예산충분성 -예산의 안정성 -GDP 대비 육아정책 재정 비율
	전달체계	-법적 근거 -전달체계의 통일성 * 예시: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미비, 온종일돌봄체계의 연계성 부족, 유보통합 추진 답보 상태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인력관리	-종사자 직업 안정성 -종사자 자격관리 및 양성체계 -종사자 전문성 관리 및 지원체계(보수교육)
	접근성 (access, diversity)	-서비스 접근성(시간, 거리, 비용적 측면) -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편차 * 예시: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급률의 지역 간 차이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공공성 (publicness)	-국공립기관 비율 -국공립기관 이용률 -사립/민간기관의 경우 공적 예산 투입 증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성 확보 여부 * 예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 비율
산출 (output)	수급자 범위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서비스 이용률 -아동수당 수급률 -지원의 사각지대 및 형평성(equity) * 예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치중(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사용 어려움), 초등돌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비중 낮음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원의 충분성	-부모 및 기관의 비용 부담 경감 정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원 여부 * 예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수준 -아동수당의 충분성
	만족도 (서비스의 질)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여부
성과 (outcome)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각 부처가 제시한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파급 효과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간접적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미친 영향 -현금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 특정정책이 미치는 영향 분석 * 예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방임/방과후 방치 비용 감소 -아동빈곤율 감소 -영유아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중장기 영향	육아정책이 아동 및 부모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

### 3.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 분석

#### 가. 부모의 국정과제 성과 평가

##### □ 현행 육아정책 수립 실태에 관한 의견

- 우리나라 육아정책 의제에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나 문제, 그리고 부모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정책이 의도한 서비스의 성과가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40.0%)이 긍정적인 인식(16.8%)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인식(30.1%)은 효과가 없다는 인식(29.4%)에 비해 근소하지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전문가 국정과제 성과 평가

##### □ 육아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는 2019년보다 긍정 비율이 높아짐.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는 2019년보다 긍정비율이 낮아짐.

##### □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평가 순위

- 국정과제 중 실행이 우수한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9.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15.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육아정책 평가: 육아정책의 계획-실행-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 육아정책 수립계획: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정책은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2020년 조사에서 긍정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저출산정책, 돌봄정책, 아동정책은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는 긍정비율이 하락함.
- 육아정책 실행추진: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정책은 2019년과 비교하여 긍정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저출산정책, 돌봄정책, 아동정책은 약간 하락함.
- 육아정책 구체적 정책설계 및 정책 의제 평가: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긍정비율이 하락함.
- 육아정책 투입요소 및 정책집행 평가: 201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함.

□ 육아정책 중장기 평가

- 국가수준
  - 재정투자(확대)에서는 긍정평가가 61.0%로 2019년 조사의 48.1%보다 상승하였고, 부정평가는 17.0%로 2019년 조사의 23.6%보다 하락하였음. 2019~2020년 동안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등으로 육아정책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부모수준
  -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은 긍정평가가 31.0%로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의 43.4%보다 하락함. 이러한 결과는 부모 육아휴직이 아직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모의 육아 행복감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짐.
- 아동수준
  - 형평성은 긍정평가가 35.0%로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 결과의 50.9%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함.
  - 웰빙 및 발달성과는 긍정평가가 33.0%로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 결과의 46.2%와 비교하면 하락함.
  - 아동수준의 형평성은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을 뜻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웰빙 및 발달성과는 아동의 행복감,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아동학대 및 아동 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표들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기관수준
- 서비스의 질은 긍정평가가 53.0%로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 결과의 48.1%보다 상승함.
-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상승한 것은 2020년에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보육지원체계 개편,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짐.

## 4. 저출산정책 성과분석

### 가.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 보건복지부: 2019년 기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미흡), 임신·출산 지원 강화(다소미흡), 아동수당 지급(다소미흡)
  - 여성가족부: 2019년 기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다소미흡),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우수)

### 나. 부모 및 전문가 의견(설문조사)

- 저출산정책 과제 관련하여 부모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저출산정책의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45.8%) 임.
  -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 과제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11.1%의 수치를 나타냄.
  -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특히 성과가 두드러졌던 과제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가 1순위(24.9%)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미흡하였던 과제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이 1순위(20.0%)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의 1순위 응답 비율이 16.3%로 가장 많았음.
- 저출산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81.0%인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

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으로 저출산정책 중 보건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달성도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 기준으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출산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결과를 보면 노력(effort)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평가요소에서 7점 척도 기준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노력(effort)의 경우만 긍정평가가 56.0%이고, 다른 평가요소들은 긍정평가가 15~31% 수준에 불과함.

#### 다. 부모 면담자료 분석

□ 영유아 부모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해서 영유아 부모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가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음.
- 아동수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서비스 지원 확대에 비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음.

#### 라. 계량 분석

□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출산지원금은 100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을 약 1.8~2.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동적패널모형을 통해 이전 연도 합계출산율을 통제 한 후에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음.
-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지



원금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함.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을 모형에 투입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함.
  - 2017년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합계출산율을 약 0.17~0.2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동적패널모형에서도 유의미하였음. 이런 점에서 2017년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음.

## 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성과분석

### 가.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보건복지부: 2019년 기준,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다소 우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미흡),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통),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보통)
- 교육부: 2019년 기준, 출발선의 평등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보통),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보통),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보통)
- 여성가족부: 2019년 기준, 자녀 돌봄 지원 강화(보통)

### 나. 부모, 전문가, 원장 및 교사의 의견(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의 정책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27.9%)'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의 정책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 과제는 '취학 전 출발선 평등'으로 12.5%의 응답률을 나타냄.

-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우수하였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14.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남.
  -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미흡한 성과를 보였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0.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 의견조사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결과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68.0%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으로 나타남.
  -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은 ‘취학 전 출발선 평등’으로 33.0%에 그쳤음.
  -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가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최근 2년간(2019~2020년) 추진되었던 유아교육정책 8개 세부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의 경우, 응답자의 61.0%가 달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유아교육정책 중 추진 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평가되었음.
  -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서 40.5%의 부정 응답률을 보였음.
-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최근 2년간(2019~2020년) 정부가 보육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 11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된 정책과제는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로서 긍정 응답 비율이 64.9%로 나타남.

-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서 56.3%의 부정 응답 비율을 나타남.

## 다. 부모, 원장 및 교사 면담자료 분석

□ 영유아 부모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긴급돌봄의 프로그램 및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임.
- 영유아 부모들은 영아기 가정 내 양육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게 된다고 보고 있었음. 가정 내 양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양육수당보다는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아이돌보미와 산후도우미를 포함한 개별 돌봄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영유아 부모들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음. 아이돌보미와 산후도우미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민간 육아도우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임.

□ 초등 부모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초등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는 돌봄의 측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초등 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는 교사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음.
-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돌봄의 질적 측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맞벌이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되지만 초등돌봄교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초등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학교 밖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현 정부에서 초등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정책에 대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보다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한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어린이집 원장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연장보육 시작 시간과 연장반 교사 채용 지원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였음.
-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동 수에 기반한 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설의 노후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교사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교사의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어린이집 보육교사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4시에 시작하지만 연장보육료 지원은 오후 5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후 4~5시 사이의 1시간은 기존 보육교사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휴게시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업무경감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영아반 80%, 유아반 30%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음.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현장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유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유치원 원장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정책에 따라 2021년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릴 경

우, 사립유치원은 2018년 대비 900개소 이상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음.
-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교급식법의 적용은 공유지분 아파트 단지 유치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음.
-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용도변경을 유연하게 해주고, 공유부지에 대한 제한 조항을 풀어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초등돌봄전담사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음.
-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양적 질적으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 초등돌봄전담사들은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인데, 승급과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에서 우려하는 점은 지자체 이관 자체보다는 민간위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초등돌봄교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라. 계량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KOSIS 국가통계포털의 기초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데이터와 노동패널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종일제 취업,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통제하는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월평균 임금수준을 제외하고 그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 확충 정책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 상용직 취업 여부, 종일제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여부,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공급률 증가는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상용직 취업, 정규직 취업 확률을 대체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

## 6. 아동정책 성과분석

### 가.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 보건복지부: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보통),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통),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보통)
  - 여성가족부: 2019년 기준,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우수),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다소우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부진)

### 나. 부모 및 전문가 의견(설문조사)

- 아동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현 정부의 아동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던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권리보장’이 1순위(26.1%)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 정부의 아동정책 중 비교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육아 행복감’이 1순위(26.0%)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아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1순위 응답 비율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아동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부모의 육아 행복감'이 36.0%로 가장 높았음.
- 아동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7. 총괄평가 및 정책제언

### 가. 저출산정책

□ 집행

- 재정(투입의 충분성)
  - 아동·가족에 대한 GDP 대비 재정투입은 아동수당을 포함해도 1.36%로 OECD 평균인 2.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산출

- 수급자 범위
  - 2019년에 이루어진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및 지급연령 확대는 부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지원의 충분성
  -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 설문조사에서 아동수당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현금 지원수준이 낮아서'가 73.2%로 대부분을 차지함.
- 만족도(서비스의 질)
  - 부모 설문조사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61.1%로 2019년 조사의 43.9%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함.

□ 성과

- 목표 대비 성과달성 정도
  -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는 부모 설문조사에서 저출산정책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음.
- 파급효과
  - 계량 분석에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고정효과 모형에서 100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을 약 1.8~2.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자체 합계출산율의 과거값을 통제한 동적패널모형에서는 그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키므로써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함.

□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언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 예산의 GDP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제도 개선
  - 시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 집행

- 재정(투입의 충분성)
  - 아직까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한시법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달체계
  - 전문가들은 온종일 돌봄체계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을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행정과 지역행정



의 분리로 인해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 전문가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도 유보격차 완화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 인력관리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에서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보수교육의 부실함을 문제로 지적함.

#### - 접근성

- 학교 밖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초등 부모의 48.3%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산출

#### - 수급자 범위

-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29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확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국회, 2020b: 34).

#### - 지원의 충분성

-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응답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 및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응답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의 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 만족도(서비스의 질)

- 부모 설문조사에서 2019년 조사보다 만족도가 하락한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보육’과 ‘공동육아나눔터’로 나타남.
- 초등방과후 돌봄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은 만족도가 60.3%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의 70.9%보다 하락함.

### □ 성과

#### - 목표 대비 성과달성 정도

- 부모 설문조사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달성도 평가에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긍정비율 27.9%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확충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 파급효과

-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각각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종일제 취업,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초등돌봄교실 확충은 취업, 상용직 취업, 정규직 취업, 월평균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안

- 초등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온종일 돌봄체계와 초등돌봄의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근거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초등돌봄교실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보육지원체계 개편 후속조치

- 연장보육료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연장보육 시간 조정이 요구됨.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후속조치

-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 충분한 교육 자료 제공이 필요함.

- 유보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달체계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로드맵이 요구됨.

## 다. 아동정책

### □ 집행

#### - 재정(투입의 충분성)

-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및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019년 225억원, 2020년 225.8억원으로 편성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비해 예산 지원 증가는 크지 않음.

#### - 전달체계

- 2019년 7월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달체계상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음.

### □ 산출

#### - 수급자 범위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은 여전히 많은 학대 피해아동,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예방 및 대응체계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약함.

### □ 성과

#### - 중장기 영향(아동 및 부모의 삶의 질 제고)

- 전문가 의견조사의 아동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아동의 웰빙/행복’은 2019년 조사에서는 긍정비율이 44.3%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긍정비율이 23.0%로 가장 크게 하락함.

### □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언

#### - 아동학대 대응 정책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 아동학대 대응 정책 예산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집행하고 있으나 그 예산은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에서 나오고 있음.
- 기금이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안정적인 아동학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I

##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의 배경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2018년 0.98명보다 더 하락하고, 2019년 출생아 수가 약 30만명에 그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기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이다(통계청, 2020: 1).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기피와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비혼과 비출산이 젊은 세대에 합리적인 선택과 가치관으로 그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어려움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의 부족, 사립/민간 위주의 기관 인프라 및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의 행복감과 놀이시간의 부족, 취약계층의 출발선 평등저해 증대 등 당면한 많은 정책 이슈가 제시되고 있다.

2020년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3년이 경과하는 중반 이후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실행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이다.

정부의 육아정책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 부모의 노동권과 육아권을 비롯하여 아동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의 패러다임 전환과 양육지원체계의 개편, 돌봄체계의 구축 등 큰 틀에서의 제도적 구축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여 왔으며, 정책 실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의 도입과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부모지원의 확대, 국공립기관의 확충을 추진하였다.

「2018~2022년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는 3년차 연구로서,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매년 수행하는 연속과제이다.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윤진·양미선·김문정, 2018).

2018년 1년차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보육 위주에서 확대하여 일·가정양립의 저출산정책을 위주로 포괄하여 분석하였다(이윤진 외, 2018).

2019년 2년차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 2019

년 정책 수행의 시점에서 육아정책의 범주를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를 구성, 적용하였다(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 이를 통해 저출산과 아동, 돌봄, 유아교육과 보육의 영역에서 정책의 설계와 수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정책 수행을 중심으로 현재의 육아정책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육아정책의 추진을 성과 위주로 점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 및 육아정책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년 연속과제 중 3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서, 2차년도(2019년)에 개발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2019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20년 육아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점 현안을 심층 분석하여 당면한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시점은 2019년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는 2차년도 과제와 연속하여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정책의 범주로 구분한다. 저출산을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육아정책은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정책을 포괄한다. 저출산정책이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저출산정책은 인구정책 뿐 아니라 교육 및 보육정책 등을 포괄한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 및 보육정책을 포괄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고, 마찬가지로 아동정



책 역시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저출산정책은 현금지원, 시간지원, 임신 및 출산지원정책 등에 한정한다.

## 2.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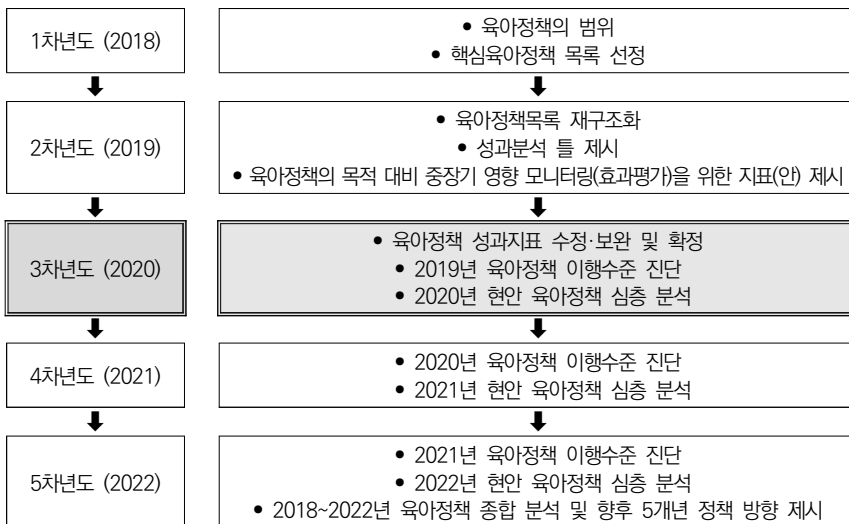
첫째, 1~2차년도 연구결과를 정리, 분석한다. 이에 기반하여 3차년도에 수행할 성과지표 정리는 기존 성과지표를 수정, 보완한다.

둘째, 2019년도에 추진한 각 부처별 육아정책을 수합,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한 육아정책 자료들을 정리한다.

셋째, 2018~2019년에 개발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2019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의 이행 수준을 진단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접근을 통해 진단한다.

넷째, 2020년의 현안 육아정책 또는 부처의 당면 정책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2019년 성과분석과 함께 당면 현안에 대해 정책 방안 수립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추진한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행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1-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육아정책에 관한 평가와 성과분석을 다룬 국내외 연구와 정부보고서를 고찰하여 정책 성과분석에 필요한 정책 범주,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위해 통계자료, 법령, 정부발간자료(각 부처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를 분석하였다. 1~2차년도 과제를 분석하여 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나. 통계자료에 기반한 계량 분석

육아정책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KOSIS 국가통계포털의 행정자료 및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데이터 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국가통계포털의 2012~2018년 데이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육통계 자료 및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자료를 결합하여 229개 시군구 및 7개년도(2012~2018년)의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2018년 6개년도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군구 특성 및 각 연도별로 공통적으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군구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고정효과 이외에 성과변수의 과거값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

하는 모형인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ellano와 Bond(1991)가 제시한 차분 GMM(difference GMM), Arellano와 Bover(1995) 및 Blundell과 Bond(1998)가 제시한 시스템 GMM(System GMM)을 사용하였다.

#### 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성과지표 보완 및 새로 필요한 지표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방안에 대해 자문하였다.

〈표 I-3-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일정

구분	대상	내용	비고
1차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무관	저출산정책의 성과 및 방향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2차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서기관	보육정책의 성과 및 방향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회상으로 진행

#### 라.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운영

1~2차년도 개발한 성과지표 보완 및 새로 필요한 정책 지표 논의를 위하여 정책 분석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저출산, 아동, 가족, 복지, 교육, 보육, 정책 등의 육아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 문항 검토, 육아정책 성과지표 논의, 정책방안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일정

회차	내용	자문자	비고
1차	설문지 및 면담조사지 문항 검토	-국가정책연구기관(교육분야) 박사 1인 -유아교육과 교수 3인	서면자문
2차	유아교육 정책의 주요 이슈 및 성과지표에 대한 자문	-유아교육과 교수 2인	
3차	육아정책의 성과지표 논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국가정책연구기관(행정 분야) 박사 1인	
4차	육아정책의 성과지표에 대한 자문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국가정책연구기관(행정 분야) 박사 1인	서면자문

## 마. 면담조사

육아정책에 대한 정성평가를 위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집단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정책 수행 과정의 경험, 내용 및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육아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개선점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 및 출산양육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sup>1)</sup>

면담조사의 대상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교사 및 돌봄 종사자로 구성하였다.

〈표 I-3-3〉 면담조사 개요

구분	부모 면담	기관 종사자 면담
대상	1) 영유아 부모 2)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부모	1) 어린이집 원장, 교사 2) 유치원 원장, 교사 3) 돌봄(초등돌봄 포함) 종사자
면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육아 실태 및 현황: 기관 이용, 육아 시 어려운 점, 만족감 등</li> <li>• 현 정부에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체감하는 정책</li> <li>• 현 정부에서 가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li> <li>• 현 정부의 미흡한 정책</li> <li>• 주요 육아정책 이용 여부, 만족도 및 각 정책에 대한 평가</li> <li>•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의견, 제안하고 싶은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 대한 생각</li> <li>• 현 정부 정책으로 체감하는 변화</li> <li>•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정책</li> <li>•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li> <li>•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li> <li>• 현 정부 정책에서 미흡한 점</li> <li>• 주요 육아정책(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 등) 만족도 및 각 정책에 대한 평가</li> <li>•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li> </ul>

### 1) 부모 면담조사

부모 대상 면담조사는 총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5명,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5명씩 각각 구분해서 진행한다. 실제 면담조사에 참여한 부모는 영유아 부모 5명, 초등 저학년 부모 3명으로, 면담조사 참여자와 그들의 자녀 특성은 〈표 I-3-4〉와 같다.

1) 부록 5~11에 면담질문지를 수록함.

〈표 I-3-4〉 부모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구분	참여자					자녀		
	부/모	연령(만)	최종학력	취업상태	지역	자녀수	연령(만)/성별	이용기관
영유아 부모	모	35세	대졸	미취업	서울	3명	1세(남)	가정양육
							5세(여)	어린이집
							7세(남)	(유치원→)초등학교
	모	34세	대학원	취업	경기	2명	2세(남)	어린이집
							7세(남)	초등학교
모	35세	대졸	취업	경기	2명	6세(남)	어린이집	
모	35세	대졸	미취업	서울	1명	4세(남)	어린이집	
모	36세	대졸	미취업	서울	2명	6세(여)	어린이집	
초등 부모	모	40세	대학원	취업	서울	2명	3세(여)	어린이집
							8세(남)	초등학교
	모	44세	대졸	취업	서울	2명	6세(여)	유치원
							10세(남)	초등학교
							8세(여)	초등학교
모	34세	대학원	미취업	서울	2명	8세(여)	초등학교	
						6세(남)	유치원	

## 2)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면담조사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면담조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원장 포함) 10명,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10명으로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원장과 교사는 분리하여 면담을 진행한다.

실제 면담 조사는 유치원 원장 4명, 유치원 교사 5명, 어린이집 원장 5명, 어린이집 교사 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I-3-5〉 유치원 원장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설립 유형	지역	교사 경력	원장 경력	(만)연령	성별	최종 학력
사립사인	경기	-	21년	59세	여	대졸
사립사인	서울	5년 6개월	22년 6월	63세	여	대학원
사립사인	서울	3년	21년	58세	여	대학원
사립사인	서울	3년	18년 9월	59세	여	대졸

〈표 I-3-6〉 유치원 교사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설립 유형	지역	담당 학급	교사 경력	(만)연령	성별	최종 학력
공립병설	경기	만5세	19년 2월	44세	여	대학원
공립단설	경기	만3,4,5세 교과담임	7년 9월	34세	남	대학원
공립병설	서울	만4세	5년 6월	33세	여	대졸
공립병설	경기	만5세	10년 9월	35세	여	대졸
공립병설	경기	만3세	9년 8월	36세	여	대졸

〈표 I-3-7〉 어린이집 원장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설립 유형	지역	보육교사 경력	원장 경력	(만)연령	성별	최종 학력
민간	서울	20년	11년 7월	59세	여	대학원
민간	서울	2년 6월	18년	58세	여	대학원
국공립	서울	14년	22년	50세	여	대학원
국공립	서울	8년	12년	49세	여	대학원
국공립	서울	2년 4월	25년	55세	여	대학원

〈표 I-3-8〉 어린이집 교사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설립 유형	지역	담당 학급	보육교사 경력	(만)연령	성별	최종 학력
국공립	서울	만2세	18년 3월	45세	여	대졸
민간	경기	만2세	6년	40세	여	대졸
가정	대구	만1세	10년	40세	여	대졸
전직 보육교사	강원	-	15년	46세	여	고졸

### 3) 초등돌봄 종사자 면담조사

초등돌봄 종사자 면담조사는 초등돌봄교실에 종사하는 초등돌봄전담사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돌봄 정책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제공되는 공

적인 초등돌봄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초등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3-9〉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면담 참여자 특성

지역	초등돌봄 경력	(만)연령	성별	최종 학력(전공)
서울	15년	55세	여	대학원(사회복지)
서울	10년	49세	여	대졸(보육)
서울	12년 3월	50세	여	대졸(외국어교육)
서울	11년 6월	50세	여	대학원(교육학/사회복지)
서울	9년 10월	44세	여	대졸(유아교육)

## 바.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2019년과 2020년 상반기까지 수행한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저출산, 아동, 가족, 복지, 교육, 보육, 경제, 고용 정책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육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유아 자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목표 달성도,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원장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를 위해 2019년과 2020년 양육 및 교육·보육·돌봄정책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문항 등 양적·질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 구성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교수 3인과 국가정책연구기관 박사 1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육아정책연구소 동료 멘토링을 통해 1,2차년 연구 책임 박사의 설문 검토 과정을 거쳤다.<sup>2)</sup>

또한, 연구 전반과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sup>3)</sup>

2) 부록 1~4에 설문조사표를 수록함.

3) 연구(220996-200603-HR-007)에 대한 IRB 승인(KICCEIRB-2020-제10호, 2020. 7. 20)

〈표 I-3-10〉 설문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 조사	부모 조사	교사(원장) 조사
대상	전문가 100명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 1,500명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300명
조사 목적	2019/2020년에 추진한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육아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등 파악	육아정책의 목표 달성도, 개선점 및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등 파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성과평가</li> <li>•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관련 교육,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이용경험 및 만족도</li> <li>• 육아정책 성과평가 및 정책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정책의 달성도 및 개선점</li> <li>• 육아정책 성과평가 및 정책 분석</li> </ul>

### 1)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에는 총 1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유아교육/교육이 39.0%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아동 31.0%, 사회복지 10.0%, 보육 9.0%, 경제 5.0%, 정책/행정, 가족 각 3.0% 순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직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 교수가 80.0%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연구기관 연구원, 현장 전문가는 각 8.0%의 참여비율을 나타냈다. 전문가 조사의 분석은 전체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필요에 따라 유아교육/교육(39인), 보육/가족/아동(43인),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18인) 세 개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표 I-3-11〉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100)			
성별			분야		
남성	16.0	(16)	유아교육	35.0	( 35)
여성	84.0	(84)	보육	40.0	( 40)
연령			기타	25.0	( 25)
30대	3.0	( 3)	전공		
40대	38.0	(38)	유아교육/교육	39.0	( 39)
50대	48.0	(48)	보육/가족/아동	43.0	( 43)
60대 이상	11.0	(11)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18.0	( 18)
전공			현재 직종		
사회복지	10.0	(10)	대학 교수	80.0	(80)
정책/행정	3.0	( 3)	연구기관 연구원	8.0	( 8)
유아교육/교육	39.0	(39)	현장 전문가	8.0	( 8)
보육	9.0	( 9)	기타 전문가	4.0	( 4)
가족	3.0	( 3)			
아동	31.0	(31)			
경제	5.0	( 5)			



〈표 I-3-12〉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1~3차년)

1차년(2018)	2차년(2019)	3차년(2020)
I.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각성 정도  II. 「복합·혁신과제 :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관련 •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평가 • 3개 중목표 상대적 중요도 • 8개 세부목표 상대적 중요도  III. 복합·혁신과제 중 세부 목표별 정책 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립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주거 공공성 강화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성평등 문화 정착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IV.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정책과제 추가 선정을 위한 질문 •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I. 육아정책의 범주/내용구성 • 육아정책 범주와 분류의 적절성 평가  II. 육아정책 평가-육아정책 전반 및 범주별 평가  • 육아정책 성과평가 • 중요한 과제 • 실행이 가장 잘되었다고 평가하는 과제 • 실행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과제 • 국정과제 수립, 실행, 성과 관련 전반적 평가 • 육아정책별(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 성과가 가장 큰 과제 •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정책  III.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 정책의 계획-실행-수행 체계-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육아정책 전반, 육아정책 실행 및 추진, 구체적 정책 설계, 정책의제 평가, 수행 및 전달 체계) • 정책 투입 요소 평가, 정책 집행 평가, 정책성과평가, 평가요소별 평가 •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국가-부모-아동-기관 수준별) • 육아정책에서 조정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 및 전략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 육아정책연구소.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2) 부모 조사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6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아동연령별(영유아 및 초등 부모를 연령별로 구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로 비례 배분하여 표집하였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부모는 총 1,731명이다. 부모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65.0%가 어머니이며 35.0%는 아버지이다. 연령은 30대가 64.6%로 가장 많고, 40대 31.5%, 20대 3.9%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89.1%, 고졸 이하가 10.9%로 분포되었고, 중소도시 44.1%, 대도시 41.0%, 읍면 14.8%이다.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이 60.7%로 과반 이상이며, 외벌이 36.5%, 한부모 가정 등으로 해당 없는 경우가 2.8% 분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로는 취업이 48.4%로 절반 정도이며, 휴직 중은 16.7%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 또

는 휴직 중일 경우, 전일제는 79.1%, 시간제는 20.9%로 분포되었다. 월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250만원 이하가 6.5%로 나타났으며,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의 취약 가구인 경우는 1.9%이다. 이외에 다문화 가구 1.3%, 한부모 가구 2.2%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첫째아를 기준으로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45.3%, 영아 32.5%, 초등 22.2%이며, 모든 자녀를 기준으로, 초등 부모는 22.2%, 유아 부모는 58.3%, 영아 부모는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3-13〉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1,731)		
성별		응답자 최종학력	
아버지	35.0( 606)	고졸 이하	10.9( 189)
어머니	65.0(1,125)	대졸 이상	89.1(1,542)
지역 구분		취업모 여부	
대도시	41.0( 710)	취업	48.4( 833)
중소도시	44.1( 764)	휴직 중	16.7( 287)
읍면	14.8( 257)	학업 중	0.6( 10)
연령		구직 중	6.9( 119)
20대	3.9( 67)	미취업	27.4( 471)
30대	64.6(1,119)	맞벌이 여부	
40대 이상	31.5( 545)	맞벌이	60.7(1,050)
첫째아 기준		외벌이	36.5( 632)
초등부모	22.2( 384)	해당없음(한부모 등)	2.8( 49)
유아부모	45.3( 784)	가구내 여성취업	
영아부모	32.5( 563)	전일제 취업	79.1( 886)
모든자녀기준(중복응답)		시간제 취업	20.9( 234)
초등부모	22.2( 384)	취약가구 여부	
유아부모	58.3(1,009)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1.9( 33)
영아부모	50.4( 873)	해당 없음	98.1(1,698)
서비스이용여부		다문화 여부	
어린이집 이용자	79.1(1,362)	다문화	1.3( 23)
유치원 이용자	41.6( 716)	다문화 아님	98.7(1,708)
초등 돌봄 전반	14.5( 249)	한부모 여부	
양육수당 이용자	87.7(1,510)	한부모	2.2( 38)
아동수당 이용자	94.9(1,633)	한부모 아님	97.8(1,693)
모 근로단축 이용자	16.4( 283)	소득 기준	
부 근로단축 이용자	5.2( 89)	250만원 이하	6.5( 113)
모 육아휴직 이용자	38.1( 655)	251~350만원	14.0( 242)
부 육아휴직 이용자	6.9( 119)	351~500만원	29.5( 510)
		501~600만원	17.0( 295)
		601만원 이상	33.0( 571)

주: 가구 내 여성취업은 어머니가 취업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 조사됨.

〈표 I-3-14〉 부모 조사 내용(1~3차년)

1차년(2018)	2차년(2019)	3차년(2020)
<p>〈영유아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li> <li>• 사교육 이용 현황</li> <li>•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영유아 가구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예: 아동수당,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등)</li> </ul> <p>〈초등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하교 후 주 양육자</li> <li>• 방과후 돌봄 이용 현황</li> <li>• 사교육 현황</li> <li>•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초등 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예: 온종일돌봄정책, 하교시간 늦추는 정책,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등)</li> </ul> <p>〈자녀가 없는 성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계획 등</li> </ul>	<p>II. 육아 관련 서비스 - 이용경험, 인지도,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대상 서비스</li> <li>• 초등학교 아동 대상 서비스</li> <li>• 부모 대상 서비스</li> <li>• 추가 출산 계획 및 출산 지원 이용 의향</li> <li>• 육아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이용 계획 변동 유무</li> </ul> <p>III.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정책별(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 추진 목표 달성도(체감) 평가</li> <li>• 정부의 육아정책에서 가장 잘 된 부분, 미흡한 부분, 가장 중요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li> <li>• 국정과제 관련 정부 수행정도 체감 평가</li> <li>• 성과가 가장 우수한 육아정책</li> <li>•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실행과 성과평가</li> <li>• 육아정책 중 인지도, 성과 수준, 내용과 구성, 의제 반영 정도, 서비스 산출 정도 평가</li> <li>• 항목별 육아정책 실행이 기여한 정도</li> <li>•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국가·부모-아동-기관 수준)</li> </ul>	<p>II. 육아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p> <p>〈영유아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li> <li>•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변경 인지도 및 등</li> <li>• 공영형 유치원 인지도 및 만족도 등</li> <li>• 매입형 유치원 인지도 및 만족도 등</li> </ul> <p>〈초등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li> <li>•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인지도 등</li> </ul> <p>〈모든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li> <li>•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이용 경험 등</li> </ul> <p>• 현 육아정책 이슈와 문제, 부모의 요구를 반영 정도</p> <p>• 정책 관련 서비스의 성과</p> <p>• 현 정부의 육아정책 효과의 전반적 평가</p>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3)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조사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설문조사는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하며 총 300명으로 구성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각 100명과 원장 각 50명으로 구성된다. 보육 및 교육 통계 등 데이터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설립유형별(국공립, 사립/민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로 비례 배분하였다.

먼저 유치원 종사자 조사부터 살펴보면, 실제 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원장은 총 215명으로, 원장은 24.2%이고 교사는 75.8%이다.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사립사인이 37.7%로 가장 많고, 공립단설 32.1%, 공립병설 20.5%, 사립법인 9.8%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정원을 살펴보면, 40인 미만인 소규모 10.2%, 40~100인 미만인 중규모 31.2%이고, 100인 이상인 대규모는 58.6%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치원 소재지는 대도시 37.7%, 중소도시 40.0%, 읍면지역 22.3%로, 약 77%의 응답자는 대·중소도시의 유치원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3-15〉 유치원 교사·원장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215)		
원장/교사 구분		성별	
원장	24.2( 52)	여	95.3(205)
교사	75.8(163)	남	4.7( 10)
설립유형		연령	
공립단설	32.1( 69)	20대	18.6( 40)
공립병설	20.5( 44)	30대	20.9( 45)
사립사인	37.7( 81)	40대	27.4( 59)
사립법인	9.8( 21)	50대 이상	33.0( 71)
규모(정원)		최종학력	
40인 미만	10.2( 22)	전문대(2~3년) 졸업	24.7( 53)
40~100인 미만	31.2( 67)	대학교(4년제) 졸업	35.3( 76)
100인 이상	58.6(126)	대학원 졸업 이상	40.0( 86)
지역 구분		전공(최종학력 기준)	
대도시	37.7( 81)	유아교육학	76.3(164)
중소도시	40.0( 86)	아동(가족)학	6.5( 14)
읍면	22.3( 48)	아동(사회)복지학	5.1( 11)
		교육학	1.9( 4)
		특수교육학	3.7( 8)
		보육학	3.7( 8)
		기타	2.8( 6)

이어서, 어린이집 교사·원장 조사를 살펴보면, 실제 15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원장 36.4%, 교사 63.6%로 구성되며, 현재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으로는 가정어린이집이 37.1%로 가장 많고, 민간어린이집 30.5%, 국공립어린이집 22.5%, 법인단체등어린이집 5.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4.6%로 분석되었다. 어린이집 규모를 살펴보면 정원 40인 미만인 소규모어린이집은 47.0%, 40~100인 미만인 중규모는 39.7%, 100인 이상 대규모는 13.2%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소재지는 대도시 49.0%로 절반 정도의 어린이집이 대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중소도시 34.4%, 읍면지역 16.6%로 집계되었다.

〈표 I-3-16〉 어린이집 교사·원장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151)		
원장/교사 구분		성별	
원장	36.4( 55)	여	97.4(147)
교사	63.6( 96)	남	2.6( 4)
설립유형		연령	
국공립	22.5( 34)	20대	9.3( 14)
사회복지법인	4.6( 7)	30대	21.9( 33)
법인단체 등	5.3( 8)	40대	37.7( 57)
민간	30.5( 46)	50대 이상	31.1( 47)
가정	37.1( 56)	최종학력	
규모(정원)		고등학교 졸업	6.0( 9)
40인 미만	47.0( 71)	전문대(2~3년) 졸업	29.1( 44)
40~100인 미만	39.7( 60)	대학교(4년제) 졸업	38.4( 58)
100인 이상	13.2( 20)	대학원 졸업 이상	26.5( 40)
지역 구분		전공(최종학력 기준)	
대도시	49.0( 74)	보육학	9.9( 14)
중소도시	34.4( 52)	아동(가족)학	16.2( 23)
읍면	16.6( 25)	아동(사회)복지학	16.9( 24)
		가정(관리)학	2.1( 3)
		유아교육학	39.4( 56)
		교육학	2.8( 4)
		특수교육학	4.2( 6)
		기타	8.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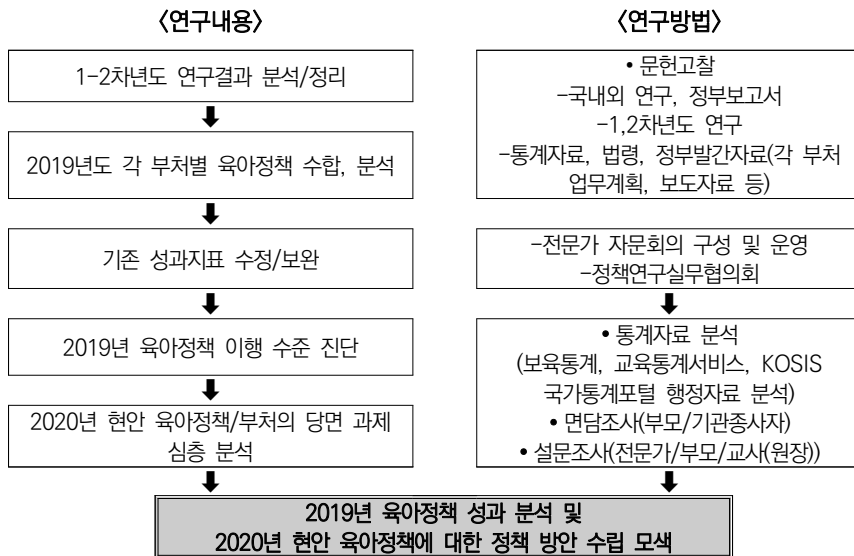
〈표 I-3-17〉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조사 내용(1, 3차년)

1차년(2018)	3차년(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산의 심각성, 원인, 대응책</li> <li>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li> <li>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유아교육·보육정책에 대한 중요도</li> <li>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 운영시간 등</li> <li>(어린이집)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보장에 대한 의견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li> <li>정부의 유아교육정책과제 항목별 추진 목표 달성도</li> <li>각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li> <li>현 유아교육의 현안</li> <li>〈어린이집〉</li> <li>정부의 보육정책 과제 항목별 추진 목표 달성도</li> <li>각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li> <li>현 보육의 현안</li> </ul>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 육아정책연구소.

지금까지 제시한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3-1]과 같다.

[그림 I-3-1] 2020년 연구 진행 절차



## 4. 연구의 배경

### 가. 유아교육·보육정책 성과 연구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누리과정 정책 도입 이후, 2014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성과 분석 등이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유해미, 강은진, 조아라(2015)는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성, 양육(이용) 비용, 보육의 질, 보육지원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부모 만족도 조사도 포함하였다. 유아교육분야에서,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2015)은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며 유아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실태를 포함하여 연구를 차별화하였다. 이운진, 김지현, 이민경(2016)은 BSC 모델을 적용하여 누리과정 정책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가 의견조사와 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객, 재무,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관점으로 누리과정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표 I-4-1〉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성과 및 평가

연구 명(연구자, 연도)	분석 방법	주요 결과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sup>1)</sup>	-설문조사(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1,102명)	-보육서비스 접근성, 양육(이용) 비용, 보육의 질, 보육지원의 성과 분석 -부모 만족도 조사 -시간제 보육, 열린어린이집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최은영 외, 2015) <sup>2)</sup>	-설문조사(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직원 500명, 부모 500명)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 (이윤진 외, 2016) <sup>3)</sup>	-전문가 의견조사 -가구조사(부모 1000명,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1000명, 공무원 100명)	-BSC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성과 지 표 개발(고객, 재무, 내부 프로세스, 학 습 및 성장 관점에서 성과 분석)

자료: 1) 유해미 외(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 최은영 외(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3)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나. 영유아 돌봄, 복지, 저출산정책 성과 연구

영유아 관련 돌봄과 복지, 저출산정책의 정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출산율과 가계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승권, 김태완, 김유경, 신현용, 김연우(2012)의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 성과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현금지원과 보육지원, 육아휴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김은정과 이혜숙(2016)은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평가와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보육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계 교육 및 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 출산에 미친 영향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2016)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평가와 과제를 모성보호제도와 출산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성보호제도 이용여부, 모성보호제도의 휴가 및 휴직 기간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영욱 외(2018)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 개편 연구를 실시하여, 정책 평가 체계 점검하였다. 박종서, 이소영, 황남희, 장인수(2019)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시행계획에 포

함된 전체 사업에 대한 각각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나타난 13개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표 I-4-2〉 영유아 관련 돌봄과 복지, 저출산정책에 정책 성과 및 평가

연구 명(연도)	분석 방법	주요 결과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김승권 외, 2012) -제11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sup>1)</sup>	-한국복지패널 이용	-현금 지원 및 보육 지원 -육아 휴직 정책
영유아 보육(돌봄)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김은정·이혜숙, 2016) <sup>2)</sup>	-전국보육실태조사 데이터 이용	-가계 보육비 및 교육비에 미친 영향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출산에 미친 영향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박중서 외, 2016) <sup>3)</sup>	-건강보험 DB 원자료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 DB 원자료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부가 추가자녀 출산 이행에 미치는 효과 -모성보호제도의 휴가 및 휴직 기간이 추가자녀 출산 이행에 미치는 효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 개편 연구(이영옥 외, 2018) <sup>4)</sup>	-정책 평가 체계 점검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박중서 외, 2019) <sup>5)</sup>		-2018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에 대하여 각각 추진과정과 추진성과를 평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3개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에 대하여 평가

자료: 1)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 성과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중서 외(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영옥 외(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체계 개편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5) 박중서 외(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2차년도 연구 요약

1~2차년도 연구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결과,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표 I-4-3〉과 같다.



〈표 I-4-3〉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2차년 연구 요약

구분	1차년(이윤진 외, 2018)	2차년(최윤경 외, 2019)
연구 목적	육아정책 선정,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및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2018년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의 육아정책 실행력 제고에 기여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면담조사(영유아/초등 부모, 무자녀 성인, 어린이집 원장·교사)</li> <li>• 전문가 의견조사(AHP기법)</li> <li>• 설문조사(일반국민조사, 원장·교사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분석</li> <li>• 심층면담(부모, 기관 원장)</li> <li>• 설문조사(전문가, 수요자)</li> <li>• 정책분석, 성과평가</li> </ul>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다룬 육아정책 과제 도출</li> <li>-복합·혁신 육아정책 10대 과제 선정</li> <li>-5개년 유아교육·보육정책 5대 과제 선정</li> <li>-15대 핵심 육아정책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에서 도출한 육아정책 재범주화</li> <li>•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의 틀 제시</li> <li>•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중장비 영향 모니터링(효과평가)을 위한 지표 제시</li> </ul>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li> <li>-육아정책 목표의 명료화</li> <li>-육아정책 다양한 수요자들의 유목화</li> <li>-유목화에 따라 기존 육아정책 재정비</li> <li>• 추진방안 제시</li> <li>-복합·혁신 육아정책 재조직화</li> <li>-선정된 육아정책 별 추진방안 제시</li> <li>• 중장기 육아연구 기반으로 육아정책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성과평가에 근거한 제언</li> <li>-시간지원의 실행력 강화-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li> <li>-현금지원의 효과성 검증 및 후속정책 설계</li> <li>-초등시기 다양한 수요 충족과 양질의 프로그램/환경 구성</li> <li>-육아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어젠다 설정</li> <li>• 정책 단계와 요소를 고려한 정책분석 결과에 근거한 제언</li> <li>-저출산정책의 재구조화</li> <li>-온종일돌봄체계 및 국공립기관 확대 추진방식에 대한 재고</li> <li>-육아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강화</li> <li>-포용정책 성과를 위한 정책대상 집단의 확대</li> <li>-지역간 격차, 사교육 이용, 인프라 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육아정책의 과정</li> </ul>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 육아정책연구소.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II

##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

- 01 육아정책의 범주
- 02 선행연구 성과지표
- 03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 성과지표



## II.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

### 1. 육아정책의 범주

#### 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2차 연구)

1차년도 연구(이윤진 외, 2018: 24)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들 중 향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육아정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및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향후 5년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룰 정부의 육아정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15대 핵심 육아정책은 <표 II-1-1>과 같다.

<표 II-1-1> 1차년 연구에서 선정한 15대 핵심육아정책 목록

분야		핵심정책과제
복합·혁신 10대 과제	저출산정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6.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7.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10.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유아교육·보 육정책 5대 과제	유아교육정책	11.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12.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보육정책	13.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14.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15.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 육아정책연구소. p. 89 <표 III-1-10>.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하여 정책수요자(일반국민, 원장·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 일반국민, 원장·교사는 공통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

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3개 과제를 상위 3위권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육아정책은 노동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면담조사,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15개 정책과제 별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이윤진 외, 2018).

〈표 II-1-2〉 10대 핵심정책과제 목록 및 중요도 결과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1.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 일·가정 양립 일상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2.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2.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3.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확대	5.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6.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4.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7.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10. 공공보육 이동 아동비율 40% 달성	

주: 음영색은 각 응답에서 1순위로 나온 과제임.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125 〈표 III-4-1〉.

2차년도 연구(최윤경 외, 2019)는 2018년 정책 수행을 중심으로 정책 계획과 목표 대비 구체적인 산출 또는 결과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향후 중장기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모니터링)를 제안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최윤경 외, 2019: 13).

2차년도 연구는 연속과제(2018~2022년)로 수행되는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의 수행을 위해, 정책의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이슈로부터 정책의 의제가 구성되고 정책의 내용이 결정되는 정책의 설계와 목표설정, 추진체계 등에 관한 ‘정책분석’과, 정책 실행을 통해 나타나는 구체적 결과와 성과에 관한 ‘성과평가’의 두 축으로 나누었으며, 국정과제 중심의 육아정책의 성과평가를 위주로 수행되었다(최윤경 외, 2019: 185). 이를 위해 1차년도에서 제시한 1)저출산정책 2)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3)아동정책으로 재구조화하여 범주의 내용을 확대하였다(최윤경 외, 2019: 187).

〈표 II-1-3〉 2019년 육아정책 범주 재구조화

분야	육아정책 범주
저출산정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4.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5. 출산·양육 세제 개선 6. 의료비 제로화 7. 기타지원: 난임, 다자녀지원 등 8. 포용적 가족: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 등 9. 초등교육 혁신 10. 양육지원체계 개편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11. 놀이중심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 개편 1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대 13.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강화 14.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15.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16.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7.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서비스 18.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도입
아동정책	19.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0.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21. 아동권리보장(4영역:보호, 참여, 건강, 놀이)

자료: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65 〈표 II-1-6〉.

## 2. 선행연구 성과지표

### 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 정부, 2015)에서는 총 13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부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성과 지표와 각 지표의 2020년 최종 목표치를 설정하여 연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점검하였다.

총 13개의 지표 중, 육아 및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 7개를 제시하면 〈표 II-2-1〉과 같다.

〈표 II-2-1〉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평가 지표 내 저출산·육아정책 관련 지표

성과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목표 (2020)	출처	설정근거	측정방법	관련 과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4.8%	-	8.24%	8.24%	8.24%	10%	국토부 행정통계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정책효과	공공임대신혼부부 지원물량/연간초혼부부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임신유지율	77.6%	84.83%	-	-	85.7%	82%	보사연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연평균 유산·임신 중절 비율 두배 이상(1.1%) 감소 목표	유배우 부인 임신자 수-유산, 임신중절 등 규모/15~44세 유배우 부인 임신자 수×100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청년 고용률	40.7%	41.2%	42.3%	42.1%	42.7%	48%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평균치 (50.9%) 도달	15~29세 청년 취업자/청년 경제활동인구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 과제 -일학습병행 등
전체 휴직자 중 남성비율	5.0% (*15.7)	-	8.58%	13.4%	17.8%	15%	고용부 고용보험 D/B	최근 증가세, 정책효과 반영	남성육아휴직자/전체 육아휴직자*100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26%	-	22.8%	23.7%	26.3%	37% (*25년 까지 45%)	복지부 보육정책 D/B	복지부 정책 목표치	평균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평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사교육비 부담	18.2조	18.7조	18.7조	18.7조	19.5조	17조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매년 2천억 이상 감소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명목)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여성고용률	55.4%	55.7%	56.2%	50.8%	50.9%	6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 평균 수준 도달	15~64세 여성고용률	-여성 재취업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자료: 1)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p. 44.  
 2) 박종서 외(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17, 220, 223, 228, 231, 237, 247.

또한 박종서 외(2019)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주요 핵심성과의 국제비교 평가를 시도하였다. 2017년과 비교하여 이후의 최신 수치로 갱신이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비교가 가능한 지표와, 핵심성과지표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비교적 핵심성과 지표와 유사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저출산·육아정책 관련 지표 중, 청년고용률, 전체 휴직자 중 남성 비율,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사교육비 부담, 여성고용률의 5개 지표에 대한 해외지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표 II-2-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에 대응하는 해외지표 목록(저출산·육아정책 관련 지표)

지표명	해외지표 존재여부	해외지표명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x	-
임신유지율	x	-
청년 고용률	○	Employment/population ratio(OECD)
전체 휴직자 중 남성비율	△	Number of users/recipients per 100 live births (출생아 100명 당 남성 육아휴직자 수)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	Participation rates for 0-to-2-year-olds in formal childcare and preschool 취학 전 0~2세 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OECD)
사교육비 부담	○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OECD)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여성고용률	○	Employment/population ratio, women(OECD)

자료: 박종서 외(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4.

### 나.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2015년)」의 성과지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보육비용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재정, 공급 및 이용률, 시간연장보육, 평가인증, 교사 근무환경을 평가영역으로 활용하였다.

〈표 II-2-3〉 ‘2010~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수행연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2010 ~2014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전체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보육재정	GDP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유아교육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예산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평가인증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율	
2015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 아동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재정 투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아동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 투입, 공급·이용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양육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부모 양육비 부담 인식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자녀 양육시 도움 정도

수행연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서비스 질 제고	평가인증제도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 평가인증 유지율
		부모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부모 인지도/도움 정도
		정보공시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열린어린이집	
		교직원 양성 관리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증 발급 건수, 보육교사 배치 현황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대비 대체인력 비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준		
부모 선택권 보장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실시 기관수, 부모인지도/도움정도	
	장애아 보육지원	장애아 보육 기관수/아동수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다문화 영유아 기관수/아동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기타	가정양육수당의 선택권 보장 수준, 육아종합지원 센터 이용 만족도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 육아정책연구소. pp. 58-59.

- 재인용 문헌: 1)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0.  
 2)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72.  
 3)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03.  
 4)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1.  
 5)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69-70.  
 6)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2010년에는 유아교육 학비지원, 유아교육 재정, 유치원 이용률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였고, 2011년에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을 활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유아 학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지원 체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표 II-2-4〉 '2010~2015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수행연도	평가지표	
2010	유아교육 학비지원	5세 무상교육비지원 유아비율, 학비지원 유아비율
	유아교육 재정	총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예산
	유치원 이용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종일제 이용률
2011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수,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치원 학비 정부 부담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규모
	교육비 지원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 비율
	종일제 운영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 종일제 교육 유아 비율,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비율

수행연도	평가지표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 참여 비율
	교사 근무환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 교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교사 비율
	기타 인프라	유아교육 진흥원 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비율,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2012 ~2015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수, 학급 수, 유치원 이용률(만3, 4, 5세),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 수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규모
	유아 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율, 3, 4세 유아학비 지원율
	교사 근무환경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사 급여(공립,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교사 처우 개선수당 지급 교사 비율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방과후 과정 이용률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 참여 비율
	유아교육지원 체계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교육원 수,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참여유치원 비율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 육아정책연구소. p. 57.

- 재인용 문헌: 1)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42.  
 2)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0.  
 3)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47.  
 4)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5-76.  
 5)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3-74.  
 6) 최은영 외(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57-58.

### 다.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성과지표

최효미 외(2018)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분야 사업군 성과지표를 설계, 집행, 산출, 성과, 영향으로 나누어 1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설계에는 사업군의 특성상 일부 지표의 경우는 특정 사업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설계는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로 구성하였고, 집행은 투입의 충분성,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으로 구성하였다. 산출은 수급자 비율, 요구 충족률로 구성하였고, 성과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영향은 간접적 파급 효과로 구성하였다.

〈표 II-2-5〉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성과지표

단계	지표명	지표에 대한 설명	지표 미적용 사업군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지원(보호)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도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된 집단에 사업군의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영유아 보호 사업군,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대상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조사, 통계 등)이 존재하는지 유무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대상자 설정에 있어 대상자층의 중첩이나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중첩이 존재할 때 보장성을 강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파악	
집행	투입의 충분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규모와 보호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이나 인적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지원 방식의 적절성	급여 및 서비스 유형, 지원 단위의 사업별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자원 투입이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욕구에 비례하여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	
	추진 방식의 적절성	지원을 위한 적절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사업별 설계 단계에서 모니터링 방법(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하였는가를 평가	
산출	수급자 비율	대상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 대비 실제 급여를 받는 자의 비율	
	요구 충족률 (또는 급여 및 서비스 충분성)	실제 급여 혹은 서비스를 수급한 자의 급여액(수급액) 혹은 서비스 등이 사업군이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요구)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평가	
성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성과 관리와 관련된 객관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영향	간접적 파급 효과	정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간접적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미친 영향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자료: 최효미 외(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사회보장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pp. 61-62.

재인용 문헌: 강산욱·강혜규·노대명·이현주·이병재(2015).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라.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지표

각 중앙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설정된 관리과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초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체평가 등급을 발표한다. 육아와 관

련된 정책을 소관하는 대표적인 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 최종 정책성과 배점을 높여 성과지향성 및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아래의 지표를 사용하여 주요 정책부문을 자체 평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성과지표 적절성 분석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의 정합성을 추구하고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소통 등 국민체감도 제고 노력도 적극 평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2019년도는 총 72개, 2018년도는 총 75개, 2017년도는 총 74개 관리과제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였다.

〈표 II-2-6〉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지표(2019)

구분	평가지표	세부지표
정책형성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과제의 난이도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
	의견수렴 적절성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의 충실성 -타 부처·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적절성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성과지표 적절성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책집행	추진일정 충실성	-추진일정 준수 여부(분기별)
	정책소통 충실성	-홍보활동의 적극성 -홍보성과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현장모니터링 및 협의과정의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및 적절성
정책성과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목표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의 목표한 성과 달성도 -정책목표 기여도 및 향후 기대효과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3.

2) 교육부

교육부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과제의 충실성, 정책효과, 대표성 및 노력도의 4개 지표를 사용한다. 각 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69개, 2018년에는 64개, 2017년에는 69개 관리과제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였다.

〈표 II-2-7〉 교육부 자체평가 지표(2019)

평가 지표	배점	평가 내용
계획수립의 적절성	15점	-정책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등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전년도 환류 및 국민소통계획 등을 평가
집행과정의 충실성	25점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추진계획별 적기 완수 여부, 대내외 홍보 및 의견수렴 과정의 충실성 등을 평가
정책효과	50점	-성과지표 달성여부, 당초 의도한 정책 효과 및 부수적 효과, 향후 기대효과 등을 평가
대표성 및 노력도	10점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업무추진 전 과정에서의 부서 노력정도(갈등 해소, 협업 등) 등을 평가

자료: 교육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3.

###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정책과제의 계획, 집행, 결과 등 정책추진 전 과정을 포함하는 3개 평가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9개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추진일정의 충실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추진 노력도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대표성, 달성도를 통해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다. 정책효과의 국민체감도,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 환류의 충실성의 지표로 정책효과성을 평가한다.

각 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26개, 2018년에는 27개, 2017년에는 28개 관리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표 II-2-8〉 여성가족부 자체평가 지표(2019)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1. 정책추진 노력도(10점)	①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②현장 의견 수렴	-계획 수립 시 현장 의견 수렴 여부
	*협업우수사례(가점)	-정책추진과정에서 타부처·기관과의 협업 우수 사례를 제출 받아 평가
2. 목표 달성도 (60점)	①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평가(높음, 보통, 낮음)
	②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평가(높음, 보통, 낮음)
	③성과지표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거의달성, 일부달성, 미달성의 5단계 평가
	*관리과제 성과의 질(가감점)	-언론보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기관장의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
	*지표별로 달성도 및 적극성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대표성 (높음/낮음/보통)을 반영 지표별 차등 점수 부여	
3. 정책효과성 (30점)	①정책효과의 국민체감도	-정책집행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정책수요자, 일반국민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반영 * 50명의 국민체감도 평가단을 선정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②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	-국민여론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및 긴급하게 발생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성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대립·반발 등 잠재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소·극복한 정도(5단계 평가)
	③사회적 가치 실현	-관리과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실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5단계 평가)
	④정책환류의 충실성	-전년도 자체평가 개선사항 반영실적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4.

### 마.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성과지표

앞서 살펴본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부처별 평가지표 내 하위 지표인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임신·출산지원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의 9개 관리과제에 대해 다음 <표 II-2-9>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II-2-9>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전년대비 출생아수 감소세 완화	출생아수 전년대비 감소율-(해당연도 3년치 평균)+1.9%* *최근 '16~'18년 표준편차: 1.9%
임신·출산지원 강화	난임우울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공통)	만족률=만족도 평가점수/만족도 총점(20점)×100
	고위험 임신부 수혜율(공통)	(고위험 임신부 지원자수/전체 임신진료 고위험 임신부 수)×100
	미숙아 진료비 지원율	미숙아 의료비 지원율=미숙아 지원자 수/미숙아(환아) 수×10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개소 수	연도말 기준 다함께돌봄 실태조사
	지역아동센터 이용 서비스 만족도	(측정산식)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Σ이용자별 만족도×20/만족도 조사 참여자 수 • 대상: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 표본수: 시설 전체 이용아동의 약 10% • 시기: 연도말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문항: 프로그램, 지도자, 주변환경, 도움, 전반적 만족도 등 5개 항목 26개 문항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평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점)	사후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의 합/설문조사 대상자 수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연령·성·학력·거주지·문항배치방식 등 고려한 무작위 표본 추출 온라인 설문조사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k-CBCL 정상범위 아동수/사업참여자수×100
	보호대상 아동자립률(%)	(퇴소 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당해연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100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점)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재학대 발생률(%) *하향지표	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던 건수/당해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100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 (18세 미만 아동)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실종아동 발생자 수×100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 집계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보육료 지원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5점 평균)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평균 이용건수(건)	(월별 총이용건수/월별 시간제 보육반수) 연간 합계/12
	시간제 보육 연간 이용아동수(천명)	중복 제거한 연간 이용아동 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평가제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행(점)	(과정)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여부(30점) -개최횟수당 3점 -10회 이상: 30점 (내용) 아동안전,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및 반영(15점) -어린이집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평정기준 개선(5점) -놀이중심·유아중심의 보육과정운영 평정기준 개선(5점) -교직원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표축소, 서류감축, 관찰면접 확대(15점) (시행) 5월까지 개선안 마련 및 중보위 심의(10점) -6월까지 시행규칙 개정(10점) -19.9월부터 개선 평가체계 적용(10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개소 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보조교사 배치율(%)	측정산식=보조교사 수/영아반 수×10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방법: 빈도분석 -측정대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약 1,500명 -조사시기: 12월말 -측정문항: 콘텐츠 만족, 상담 만족 등 *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만족 25점, 불만족 0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측정산식=(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수 -측정대상자 및 표본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 -측정문항: 시스템 구성 및 이용편의성, 기능개선 노력 정도 등에 대한 만족도 측정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 491-496.

### 2) 교육부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은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3개 관리과제에 대해 <표 II-2-10>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II-2-10>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공공 유치원 취원아 수 / 전체 유치원 취원아 수 × 100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율(%)	(K-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수) ÷ (사립유치원 수)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만명)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조사('20.4.)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만명)	부처별 초등돌봄 이용실적 조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초등돌봄 사업 중 취약계층 고려 사업비율(%)	사업별 지침에 취약계층 고려 유무 조사
	온종일 돌봄 시설(교실) 수 증가분(개소 수)	부처별 초등돌봄기관 확충실적 조사

자료: 교육부(2019b). 2019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 443-469.

###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은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의 6개 관리과제에 대해 <표 II-2-11>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II-2-11〉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인증 유효 기업 수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가족친화 컨설팅 수혜 기업 수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자녀 돌봄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수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25%
	아이돌보미 수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2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2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수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25%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만족도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양육비 이행률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40%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가족기능 향상률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10%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만족도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인원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60점, 성과의 질±2 -가중치 50%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22-68.

## 바. 삶의 질 지표

### 1)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삶의 질 지표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삶의 질 지표로 먼저 OECD 삶의 질 지표는 주거, 소득, 노동,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조화로 구성된 11개 영역에 대해 24개 지표를 〈표 II-2-1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2-12〉 OECD 삶의 질 지표

영역	지표명
주거(housing)	-주거 관련 지출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개인당 방 수
소득(income)	-가계금융자산 -가계순가처분소득
노동(jobs)	-직업안정성 -개인소득 -고용률 -장기 실업률
공동체(social connections)	-지원관계망의 질
교육(education)	-기대교육기간 -학생들의 역량 -교육성취
환경(environment)	-수질 -대기오염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의 참여 -투표 참여율
건강(health)	-자기보고 건강상태 -기대수명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안전(safety)	-살인률 -야간보행 안전도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장시간 근로자

자료: 정해식·강신욱·김동진·김성아(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아동복지지표(2015)는 투입, 맥락, 성과의 3개 영역 및 8개 세부영역에 대해 27개의 측정지표를 〈표 II-2-1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2-13〉 OECD 아동복지지표(2015)

영역	세부영역	측정지표
투입	지출	-아동의 연령에 따른 공공지출
맥락	가족적 맥락	-아동과 함께하는 부모의 시간 -무직가정 혹은 장기 실직가정의 아동
	학교 및 지역사회 맥락	-특별한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아동인구 트렌드
성과	건강 및 안전	-영아사망률 -출생 시 기대수명 -저체중 출생 -아동기 예방접종률 -모유수유율 -당뇨 유병률 -15세 과체중과 비만률

영역	세부영역	측정지표
		-11, 13, 15세 건강한 식사 -아동의 삶의 만족도 -아동의 주관적 건강 -천식 유병률
	물질적 복지 및 경제적 안전	-아동빈곤율
	교육적 복지	-15세 문해 점수 -15세 교육결핍 -10세 문해 점수 -학교생활 만족도
	행동 및 위험	-10대 자살률 -15세 흡연 경험률 -15세 약물남용
	사회적, 경제적 및 시민참여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생애최초 투표참여율 -교육이나 취업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NEET)

자료: 이주연(2016).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01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3.

UNICEF 아동 웰빙 지표(2013)는 물질적 웰빙, 건강과 안전, 교육, 행동과 위험, 주거와 환경, 주관적 웰빙의 6개 영역에 대해 33개 지표로 다음 <표 II-2-14>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2-14> UNICEF 아동 웰빙 지표(2013)

영역	구성요소	지표
물질적 웰빙	금전적 결핍	-상대적 아동 빈곤률 -아동빈곤격차
	물질적 결핍	-아동 결핍률 -가족의 풍요율
건강과 안전	출생 시 건강	-영아 사망률(0~1세) -저체중아(2.5kg 미만) 비율
	예방 의료서비스	-전반적 예방접종 아동비율
	아동사망률	-아동사망률(1~19세)
교육	교육 참여	-영유아교육 참여율 -15~19세 교육 참여율 -NEET 15~19세 아동비율
	교육 성취	-읽기, 수학, 과학 평균 PISA 성적
행동과 위험	건강행동	-과체중 아동비율 -아침 식사하는 아동비율 -매일 과일먹는 아동비율 -신체활동 아동비율 -10대 출산율
	위험행동	-흡연비율 -음주 아동비율 -대마초 흡연비율

영역	구성요소	지표
주거와 환경	폭력 노출경험	-12개월간 싸움을 한 아동비율 -2개월간 왕따 당한 아동비율
	주거	-가구원 1인당 방수 -주택문제
	안전한 환경	-살인 사건률 -공해 정도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 정도
	인간관계	-부모와 대화 정도 -반친구와의 관계
	학업만족도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신체 증상

자료: 이희길·도남희·유민상·정지은(2018).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 pp. 31-32.

OECD 아동웰빙지표(2009)는 물질적 웰빙, 주거와 환경, 교육적 웰빙, 건강과 안전, 위험 행동, 학교 생활의 질의 6개 영역에 대해 21개 지표를 <표 II-2-15>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2-15> OECD 아동웰빙지표(2009)

영역	지표	연령 범위
물질적 웰빙	평균 소득	0~17세
	빈곤 가정	0~17세
	교육 결핍	15세
주거와 환경	과밀 주거	0~17세
	열악한 주거 환경	0~17세
교육적 웰빙	평균 능력 점수	15세
	능력의 불평등	15세
	청소년 고용	15~19세
건강과 안전	저체중아	0세
	영아 사망	0~1세
	모유 수유	0세
	예방접종(백일해)	2세
	예방접종(홍역)	2세
	신체 활동	11~15세
	사망	0~19세
위험 행동	자살	0~19세
	흡연	15세
	음주	13~15세
	심대 출산	15~19세
학교 생활의 질	괴롭힘	11~15세
	학교 선호도	11~15세

자료: 이희길 외(2018).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 p. 33.

EU 아동웰빙지수(2008)는 아동 웰빙과 사회정책으로 나누어 경제적 보장 및 물질적 상황, 주거, 지역환경, 건강, 교육, 사회적 참여 및 가족환경, 위험노출과 위험행동, 사회서비스와 인프라,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국가지출의 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II-2-16>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2-16> EU 아동웰빙지수(2008)

구분	영역	하위영역	자료산출 시 하위집단 구성
아동 웰빙	경제적 보장 및 물질적 상황	가구소득	소득 종류, 가구 종류, 지역 정보(지역, 행정구역), 수당 종류
		가구지출	지출 종류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상황	가구의 노동 강도(work intensity)
		아동 빈곤 위험	성별, 연령, 가구 종류, 노동시장 지위, 아동의 수, 부모 의 교육 수준, 부모의 건강 수준
		물질적 결핍	가구 종류
	주거		주거 형태
	지역환경		
	건강		사망원인, 가구의 경제 수준
	교육		연령, 성별, 학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참여 및 가족환경		
사회정책	위험노출과 위험행동		지역, 연령, 성별, 출신, 교육정도, 부모의 돌봄을 못 받 게 된 이유
	사회서비스와 인프라		지역, 연령, 성별, 국적, 교육 수준, 서비스 종류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국가지출		수당 종류, 재정적 출처 종류, 지역

출처: 이희길 외(2018).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 p. 35.

통계청·통계개발원(2019)에서 제시한 2019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 참여, 주관적 웰빙의 11개 영역에 대해 42개 객관적 지표와 29개 주관적 지표를 다음 <표 II-2-1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2-17> 2019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가족·공동체	-독거노인 비율 -사회적 고립도 -사회단체 참여율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건강	-기대수명 -건강수명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을 -자살률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교육	-유아교육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비 부담도
고용·임금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1인당 GNI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	-여가시간 -1인당 여행일수 -문화여가 지출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주거	-1인당 주거면적 -통근시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미세먼지 농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기후변화 불안도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범죄피해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산재사망률 -화재사망자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아간보행 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시민 참여	-선거투표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정치적 역량감 -시민의식 -부패인식지수 -대인신뢰도 -기관신뢰도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자료: 통계청 통계개발원(2019). 국민 삶의 질 2019. pp. 9-10.

이봉주 외(2013)에서 제시한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지표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의 8개 영역에 대해 60개 지표로 다음 <표 II-2-18>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II-2-18〉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지표

영역	지표
건강(health)	-객관적 건강 -건강문제로 한 달에 일주일 이상 결석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주관적 건강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동 -운동을 일주일에 4일 이상 30분간 한 아동의 비율 -세 끼의 식사를 가정에서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 -가정에서 신선한 과일을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
	-정신건강 -아동의 우울 정도(내재화)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개인적 행복 -전반적인 행복감 -나에 대한 만족도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학교에서의 행복 -학업 스트레스 정도 -학교 만족도 -학교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가정에서의 행복 -가족에 대한 만족도
	-동네에서의 행복 -지역사회 만족도
아동의 관계(children's relationships)	-가족관계의 질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도
	-친구 관계 -긍정적인 또래관계 정도
물질적 상황(material situation)	-물질적 결핍 -물질적 결핍 상황에 있는 아동의 비율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 정도 -소유한 재화 -소유한 도서의 양이 10권 미만인 아동의 비율
	-빈곤 -차상위 빈곤가구 비율
	-실업 -부모의 경제활동 미참여 비율
위험과 안전(risk and safety)	-폭력과 폭력적 행동 -학교 폭력 피해(폭력, 따돌림) 아동의 비율
	-위험 행동 -아동의 지위비행 정도 -아동의 범죄비행 정도
교육(education)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전체과목, 국어, 영어, 수학)
	-참여 -학교 밖에서 정규과목 외 다른 과목 배우기 -학교 밖에서 재미를 위한 책 읽기 -학교 밖에서 숙제하기
주거환경(housing and environment)	-주거과밀 -주거과밀 상황의 아동 비율



영역	지표
	-환경 -거주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아동의 방과후 방치율 -사회적 자본(지역생활환경) 정도
	-거주지 불안정 -거주지 불안정 상황의 아동 비율
바람직한 인성(flourishing)	-바람직한 인성 -관용 -이타심 -공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사회적 능력

자료: 이봉주 외(2013). 쉽게 알아보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pp. 12-13.

## 2) 본 연구에서 선정한 아동 및 부모의 삶의 질 지표

앞에서 살펴본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의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부모의 삶의 질 지표를 <표 II-2-19>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2-19> 아동 및 부모의 삶의 질 지표

구분	영역	지표
아동	교육 및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제외) -교사의 질 -환경의 질 -유치원·어린이집 생활 만족도 -교육 및 보육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건강	-아동기 예방접종률 등 객관적 건강 지표 -정신건강(아동의 우울정도) -아동의 주관적 건강
	안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학교폭력 피해(폭력, 따돌림) 아동의 비율 -가정 및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건수)
	아동의 관계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도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도
	행복	-나에 대한 만족도 -가정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물질적 웰빙	-아동빈곤격차 -아동빈곤율 -아동의 박탈경험

구분	영역	지표
부모	일과 삶의 조화	-아동과 함께 하는 부모의 시간 -여가 및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 시간
	노동	-직업안정성 -직무만족도 -가구소득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여성 고용률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정신건강지표(우울 등)
	삶의 만족	-삶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 사.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2차년도 연구의 성과평가 지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육아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와 본 연구에서 재구조화 한 육아정책의 범주(4개 하위분류),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달성도-성과평가-증상기영향)와 정책분석을 연계하여 <표 II-2-20>과 같이 제시하였다(최윤경 외, 2019).

<표 II-2-20> 정부 주요 국정과제-육아정책 성과평가 지표 연계

육아정책 성과지표 <저출산정책>	국정과제 핵심과제	결과지표(세부목표달성) 달성도 평가	전문가/수요자 평가 성과평가-정책분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일상화	-최대 2년 사용가능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 -이용자 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도입</li> <li>• 정책 인지도</li> <li>• 서비스 이용률</li> <li>• 이용 만족도</li> <li>• 향후 이용의향</li> <li>• 만족/불만족 및 미이용이유 (주관적 판단에 의한)</li> </ul>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관련 장려금(20→30만원) 인상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동수당제도 도입	-남성 육아휴직 증가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책수행의 단계별/요소별 평가(정책분석)</li> <li>• 정부 정책의 수행이 미치는 증상기영향 모니터링(효과분석)</li> </ul>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대상연령 확대 -현금지원제도 보강	
출산·양육 세제 개선		-소득공제, 세액공제조정 -현금/서비스지원체계 균형(조정) 및 수요자맞춤 확대	
양육지원체계 개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립	-의료비 감면 -예방접종 확대	
의료비제로화			
기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배우자출산휴가확대	

육아정책 성과지표	국정과제 핵심과제	결과지표(세부목표달성)	전문가/수요자 평가
포용적 가족정책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	
초등교육 혁신		-놀이학교 개념 도입 -학교시간 연장	
<b>&lt;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gt;</b>	(놀이권/보호권 보장)		
놀이중심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및 현장 안착	-유아학습-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방과후 과정 개선 -유아기 사교육 문화 개선(사교육이용 비용 및 이용률)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연도별 양적 목표 :(초과달성중) -질적 목표 :질적목표 부재 :국공립인프라 지역격차 :공-사립 상생방안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격차 해소 -놀이중심 공통과정 누리과정 개정 및 안착 :구체적 어젠다 및 실행계획 부족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이용시간실수요보장 -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기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의무평가제 도입 및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서비스이용률 -효율적 전달체계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도입(돌보미자격)	온종일돌봄체제도입	-공적돌봄체계 구축(53만명 돌봄 목표) -초등돌봄부족 해소 -아이돌봄사업 확대 (지원기준안화, 이용확대, 품질/돌보미 관리)	
<b>&lt;아동정책&gt;</b>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건강 지원:아동의료비부담경감 -위기아동 발견 -위기아동 보호체계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보호종합 지원체계 구축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위기아동 예측 지원시스템 가동 및 성과)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요보호아동 지원 체계 통합(아동권리 보장원 설립)	

자료: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188-189 <표 IV-1-2>.

2차년도 연구는 이외에도 육아정책의 실행이 육아 과정 및 환경 전반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표 II-2-21>과 같이 제시하였다(최윤경 외, 2019: 189). 이 지표는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지표인 서비스의 질(quality), 이용률/이용시간/접근성(quantity/access), 비용지불 및 비용지원(affordability), 형평성(equity), 아동의 성장·발달(developmental outcome)과 OECD 5개 정책수단인 질관리체계, 커리큘럼, 교직원의 전문성, 부모/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데이터와 연구 및 모니터링(OECD, 2012)의 중요성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정책 현황에 맞는 지표로 수정 보완하였다(최윤경 외, 2019: 70).

<표 II-2-21>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중장기 영향 모니터링(효과평가)을 위한 지표(안)

	영역/지표	평가항목
국가수준	출산율	출산율
	접근성 (access, diversity)	다양한 서비스(교육·보육·돌봄, 종일제-시간제) 이용률 및 접근성 무상/의무 교육·보육 및 돌봄 체계(교육연한, 시간)
	재정	GDP 대비 ECEC/가족복지 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교육돌봄 예산
부모대상	삶의 질	사회적 격차 완화(계층별, 출산율, 결혼율, 부모취업률, 양육비지출 차이)
	양육비용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양육비용(평균, 편차, 양육비용부담비율) 공·사 교육·보육·돌봄 비용 부담 비용지원체계(서비스-현금 지원 조합 및 선택권) 보건으로 지원(산전-산후 출산지원, 양육지원)
	서비스의 질	포용성(inclusiveness): 취약계층 지원체계 다문화, 장애, 한부모/조손 가족 서비스 이용률 및 지원을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서비스 이용만족도(질, 이용시간, 내용/프로그램 등) 부모 참여(교사와의 소통, 부모교육 및 참여)
아동대상	형평성(equity)	부모 육아휴직 비율 및 급여수준 부모역량(양육역량, 육아행복감, 부모 양육시간) 가정환경의 질(HOME)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취학전 출발선 평등(학습준비도) 아동웰빙(행복감, 생활시간조사: 보육·교육·놀이-수면-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등) 아동사망률/유병률,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기관관점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국가수준 공통의 커리큘럼 평가/모니터링 체계, 평가/모니터링 참여율 교직원 자격, 교육(연수), 급여, 복지(근로시간, 이직률 등)

영역/지표	평가항목
	과정적 질: 교직원 전문성(역량/효능감, 페다고지, 상호작용) 구조적 질: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아동1인당 면적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공공성	인프라(다양한 서비스인프라, 국공립기관인프라(이용률)) 기관지원체계(유-보, 공-사립 격차 완화)

자료: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90 <표 IV-1-3>.

### 3.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 성과지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표 II-3-1>과 같이 구성하였다. 다음의 성과지표는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정책의 성과분석에 사용되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 모든 정책의 성과지표로 사용되지는 않고 특정 정책에만 적용될 수 있다.

<표 II-3-1>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 성과지표

단계	지표	내용
집행 (input & process)	재정 (투입의 충분성)	-예산충분성 -예산의 안정성 -GDP 대비 육아정책 재정 비율
	전달체계	-법적 근거 -전달체계의 통일성 * 예시: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미비, 온종일돌봄체계의 연계성 부족, 유보통합 추진 담보 상태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인력관리	-종사자 직업 안정성 -종사자 자격관리 및 양성체계 -종사자 전문성 관리 및 지원체계(보수교육)
	접근성 (access, diversity)	- 서비스 접근성(시간, 거리, 비용적 측면) -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편차 * 예시: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급률의 지역 간 차이 -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공공성 (publicness)	-국공립기관 비율 -국공립기관 이용률 -사립/민간기관의 경우 공적 예산 투입 증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성 확보 여부 * 예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 비율

단계	지표	내용
산출 (output)	수급자 범위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서비스 이용률 -아동수당 수급율 -지원의 사각지대 및 형평성(equity) * 예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차중(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사용 어려움), 초등돌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비중 낮음 -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원의 충분성	-부모 및 기관의 비용 부담 경감 정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원 여부 * 예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수준 - 아동수당의 충분성
	만족도 (서비스의 질)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여부
성과 (outcome)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각 부처가 제시한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파급 효과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간접적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 -현금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 특정정책이 미치는 영향 분석 * 예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방임/방과후 방치 비율 감소 -아동빈곤율 감소 -영유아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중장기 영향	육아정책이 아동 및 부모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

# III

##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분석

01 부모의 국정과제 성과 평가

02 전문가의 국정과제 성과 평가





### Ⅲ.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분석

#### 1. 부모의 국정과제 성과 평가

##### 가. 현행 육아정책 수립 실태에 관한 의견

설문조사에 참여한 1,731명 부모를 대상으로 현행 육아정책 수립 실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육아정책 의제에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나 문제, 그리고 부모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질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4%(전혀 그렇지 않다 8.5%+그렇지 않은 편이다 32.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초등 부모(39.4%)보다 영아(44.6%)와 유아 부모(40.3%)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이 2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45.9%)이고, 대졸 이상(41.9%)인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1〉 육아정책 의제에 우리나라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부모들의 욕구 반영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④어느정도 적절하다	⑤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8.5	32.9	40.0	17.9	0.7	100.0(1,731)	2.7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6.8	32.6	46.4	13.3	1.0	100.0( 384)	2.7
유아부모	9.2	31.1	40.4	18.9	0.4	100.0( 784)	2.7
영아부모	8.9	35.7	35.0	19.5	0.9	100.0( 563)	2.7
$\chi^2(df)/F$			19.343(8)*				0.1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0	32.7	43.4	15.0	0.9	100.0( 113)	2.7
251~350만원	9.5	36.4	39.7	13.6	0.8	100.0( 242)	2.6
351~500만원	6.3	32.0	44.1	17.6	0.0	100.0( 510)	2.7
501~600만원	7.8	29.2	43.1	19.0	1.0	100.0( 295)	2.8
601만원 이상	10.7	34.3	34.2	19.8	1.1	100.0( 571)	2.7
$\chi^2(df)/F$			26.807(16)*				1.6

구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④어느정도 적절하다	⑤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최종학력							
고졸 이하	8.5	30.2	50.3	10.6	0.5	100.0( 189)	2.6
대졸 이상	8.6	33.3	38.7	18.7	0.7	100.0(1,542)	2.7
$\chi^2(df)/t$			12.476(4)*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다음으로, 정책이 의도한 서비스의 성과가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40.0%, 전혀 그렇지 않다 8.2%+그렇지 않은 편이다 31.8%)이 긍정적인 인식(16.8%, 어느 정도 적절하다 16.3%+매우 그렇다 0.5%)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44.7%)인 가구의 부정적 응답 경향성이 여타 범주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2〉 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 성과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어느 정도 적절하다	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8.2	31.8	43.1	16.3	0.5	100.0(1,731)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8.4	31.6	41.9	17.4	0.7	100.0(1,050)	2.7
외벌이	7.6	32.1	45.7	14.4	0.2	100.0( 632)	2.7
해당없음	12.2	32.7	34.7	18.4	2.0	100.0( 49)	2.7
$\chi^2(df)/F$			10.053(8)				0.3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9.7	27.4	50.4	12.4	0.0	100.0( 113)	2.7
251~350만원	7.9	36.8	39.3	15.7	0.4	100.0( 242)	2.6
351~500만원	7.1	30.2	47.6	14.9	0.2	100.0( 510)	2.7
501~600만원	6.8	29.5	42.4	19.7	1.7	100.0( 295)	2.8
601만원 이상	9.8	33.3	39.6	17.0	0.4	100.0( 571)	2.6
$\chi^2(df)/F$			27.657(16)*				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한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인식(30.1%)은 무효하다는 인식(29.4%)에 비해 근소하지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점수로 비교해 보면, 영아보다는 유·초등 부모일수록 육

아정책의 효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III-1-3〉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육아정책의 효과성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효과가 없다	②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	④다소 효과가 있다	⑤매우 효과가 있다	계(수)	평균
전체	7.2	22.2	40.4	28.0	2.1	100.0(1,731)	3.0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2	21.9	41.9	28.6	2.3	100.0( 384)	3.0
유아부모	6.1	21.6	41.6	28.8	1.9	100.0( 784)	3.0
영아부모	10.1	23.3	37.8	26.5	2.3	100.0( 563)	2.9
$\chi^2(df)/F$				12.959(8)			3.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3	22.1	42.5	27.4	2.7	100.0( 113)	3.0
251~350만원	7.9	22.7	43.4	24.8	1.2	100.0( 242)	2.9
351~500만원	6.3	21.6	43.9	26.9	1.4	100.0( 510)	3.0
501~600만원	5.4	17.3	42.0	31.9	3.4	100.0( 295)	3.1
601만원 이상	9.1	25.0	34.9	28.5	2.5	100.0( 571)	2.9
$\chi^2(df)/F$				25.290(16)			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나. 소결

부모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육아정책 의제에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나 문제, 그리고 부모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4%(전혀 그렇지 않다 8.5%+그렇지 않은 편이다 32.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이 의도한 서비스의 성과가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40.0%)이 긍정적인 인식(16.8%)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전문가의 국정과제 성과 평가

### 가. 육아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 결과를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

능 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는 2019년보다 긍정 비율이 높아졌으나,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는 2019년보다 긍정비율이 낮아졌다.

〈표 III-2-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6	4.0	100.0(106)	39.0	4.1	100.0(10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23.6	3.5	100.0(106)	29.0	3.7	100.0(10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3.0	3.8	100.0(106)	32.0	4.0	100.0(10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5.1	3.2	100.0(106)	19.0	3.4	100.0(10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40.6	3.9	100.0(106)	45.0	4.2	100.0(100)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26.4	3.5	100.0(106)	24.0	3.7	100.0(100)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27.4	3.9	100.0(106)	27.0	3.8	100.0(100)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34.9	3.9	100.0(106)	39.0	4.1	100.0(100)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39.6	4.1	100.0(106)	33.0	4.0	100.0(100)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54.7	4.6	100.0(106)	60.0	4.6	100.0(100)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38.7	4.0	100.0(106)	35.0	3.9	100.0(100)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8.3	3.7	100.0(106)	25.0	3.6	100.0(100)
(13)	↳ 일·가정 양립 일상화	34.9	3.8	100.0(106)	30.0	3.8	100.0(100)
(14)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8.9	3.2	100.0(106)	18.0	3.4	100.0(100)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34.9	3.8	100.0(106)	36.0	4.0	100.0(100)
(16)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43.4	4.2	100.0(106)	44.0	4.2	100.0(100)
(17)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46.2	4.2	100.0(106)	47.0	4.3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 매우 잘하고 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세부 국정과제별 성과평가 결과는 부록 12에 수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108.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조사결과를 2019년 결과와 비교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가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 23.6%가 나온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하락하였으나, 1+2순

위 기준으로는 2020년 30.0%로 2019년 31.1%와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이 14.0%였고,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3.0%로 그 뒤를 이었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은 2019년 조사에서도 1순위 기준으로 16.0%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이어 2번째로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표 III-2-2〉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2019년/2020년 조사)

단위: %

관련 국정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1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3.6	31.1	17.0	13.0	30.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5.7	12.3	11.0	7.0	18.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6.0	23.6	14.0	10.0	24.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6.6	11.3	5.0	4.0	9.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8.5	19.8	13.0	16.0	29.0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1.9	3.8	3.0	4.0	7.0
(7)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8.5	17.0	2.0	3.0	5.0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2.8	6.6	-	6.0	6.0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2.8	7.5	3.0	3.0	6.0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0.9	3.8	-	-	-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4.7	5.7	3.0	3.0	6.0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3.8	9.4	2.0	6.0	8.0
(13) ◦ 일·가정 양립 일상화	4.7	16.0	7.0	7.0	14.0
(14)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5.7	14.2	7.0	7.0	14.0
(15)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2.8	9.4	4.0	2.0	6.0
(16)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0.9	5.7	3.0	7.0	10.0
(17)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2.8	6.0	2.0	8.0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110.

### 나.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평가 순위

국정과제 중 실행이 우수한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9년에도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8.9%로 2020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였다.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가 16.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조사에서 19.8%로 가장 높

게 나타났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16.0%로 다소 하락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행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과제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으로 15.0%로 나타났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은 2019년 조사에서는 11.3%로 나타났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그 중요도가 다소 상승하였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및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시기에도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등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선별적 복지지원의 실질적 증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 제도적 부분에서의 우선적 혜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비교적 분명하고 신청이 간편함, 아동양육비 금액의 실질적 확대,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확대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및 인적자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사업 확장, 온종일 돌봄 참여 인원 증가, 초등돌봄교실의 활성화, 지역별 다함께돌봄센터의 확대, 긴급돌봄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표 III-2-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2019년/2020년 조사)

단위: %

관련 국정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1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5.7	6.6	3.0	3.0	6.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	1.9	2.0	1.0	3.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8	4.7	3.0	4.0	7.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0.9	2.0	3.0	5.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18.9	29.2	19.0	10.0	29.0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2.8	7.5	2.0	2.0	4.0
(7)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3.8	8.5	2.0	1.0	3.0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1.9	8.5	9.0	6.0	15.0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6.6	14.2	5.0	6.0	11.0

관련 국정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1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19.8	27.4	16.0	22.0	38.0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6.6	11.3	3.0	3.0	6.0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9	5.7	1.0	-	1.0
(13) ◦ 일·가정 양립 일상화	4.7	11.3	3.0	3.0	6.0
(14)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0.9	4.7	1.0	2.0	3.0
(15)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2.8	10.4	6.0	10.0	16.0
(16)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8.5	21.7	8.0	15.0	23.0
(17)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11.3	25.5	15.0	9.0	24.0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운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10.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로는 1순위 기준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이 14.0%,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13.0%,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10.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들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은 2019년 조사 결과에서는 8.5%였으나,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14.0%로 나타나 그 성과가 2019년보다 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다각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실제 출생률은 하락추세인 것에 대해 미래세대가 현재 처한 상황과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부족, 다양한 아동·가족 지원은 증가하였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 거시적 관점의 사업 설계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시스템 운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맞벌이 여성의 경력 단절, 정책 체감도가 낮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시스템 유지, 관계 부처 협력에 의한 선택과 집중의 부재 등을 제시하였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1순위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저출산 대책이 부처별로 각각 수행되는 부분이 많아 정책의 중복



성이 강하게 여겨지므로 주무 부처의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인식될 필요 있음, 현재 컨트롤 타워에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체감하지 못함,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음, 저출산 대책을 위한 범부처간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요구됨,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의 업무 분산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국과 같이 돌봄·교육·가족 업무가 한 부서로 통합되어야 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였으나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만 끝나고 다른 부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미루는 등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미함 등을 제시하였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1순위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자녀 양육과 교육은 가정의 몫이라는 인식 개선 미비,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 육아휴직 실행의 어려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수준의 저조,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 1순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가임기 예비 부모들의 사고와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 영유아보육 뿐 아니라 교육·고용·주거 등 총체적 접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전개, 가정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교육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한 전반적 사회적 제도 개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공공육아서비스 질의 표준화, 시설별 지원방식의 단일화 등을 제시하였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운동과 교육, 출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유상 육아휴직·탄력근무제·가족돌봄휴가의 확대, 아동수당의 현실화, 개인·기업·국가·지자체 간 결혼과 출산·양육을 부담하고 지원하는 가치의 틀 마련,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사회분위기 마련, 결혼·출산·양육을 별도의 단계로 인식하여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 연속된 단계로 보고 정책을 입안 등을 제시하였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1순위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 뿐 아니라 기재부·행안부·문체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의 협업, 노동·경제·사회·교육 등에 대한 통합적 저출산대책 상시기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1순위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일부 직종에서만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의 완전한 보장 및 양육·교육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의무재택근무의 확대, 육아휴직 의무화, 아동양육지원 문화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재택근무·스마트 워크 등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이 모두의 권리로 정착되어야 함 등을 제시하였다.

〈표 III-2-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2019년/2020년 조사)

단위: %

관련 국정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1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3.8	16.0	10.0	9.0	19.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14.2	20.8	15.0	11.0	26.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8.5	18.9	14.0	6.0	20.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6.0	22.6	13.0	11.0	24.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7.5	15.1	6.0	8.0	14.0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7.5	21.7	7.0	4.0	11.0
(7)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3.8	9.4	4.0	4.0	8.0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1.9	5.7	2.0	-	2.0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1.9	3.8	3.0	4.0	7.0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0.9	0.9	1.0	-	1.0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8.5	10.4	6.0	2.0	8.0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8	7.5	9.0	5.0	14.0
(13) ㄴ 일·가정 양립 일상화	6.6	12.3	3.0	15.0	18.0
(14) ㄴ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3.2	20.8	4.0	8.0	12.0
(15)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2.8	8.5	2.0	6.0	8.0
(16) ㄴ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	2.8	1.0	1.0	2.0
(17) ㄴ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2.8	-	6.0	6.0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10.

### 다. 육아정책 평가: 육아정책의 계획-실행-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육아정책 계획수립 평가 결과를 보면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정책은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2020년 조사에서 긍정비율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저출산정책, 돌봄정책, 아동정책은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는 긍정비율이 하락하였다. 육아정책 실행추진 평가 결과를 보면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정책은 2019년과 비교하여 긍정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저출산정책, 돌봄정책, 아동정책은 약간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에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주요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2-5〉 육아정책 계획수립-실행추진 평가

단위: %(명), 점

관련 국정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계획수립 평가		실행·추진 평가		계(수)	계획수립 평가		실행·추진 평가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긍정 비율	7점 평균		긍정 비율	7점 평균	긍정 비율	7점 평균	
1. 저출산정책	27.4	3.3	19.8	3.2	100.0(106)	14.0	3.3	17.0	3.3	100.0(100)
2. 유아교육정책	38.7	4.1	37.7	3.9	100.0(106)	52.0	4.4	47.0	4.3	100.0(100)
3. 보육정책	47.2	4.3	41.5	4.2	100.0(106)	54.0	4.4	54.0	4.4	100.0(100)
4. 돌봄정책	50.9	4.4	48.1	4.3	100.0(106)	41.0	4.2	46.0	4.4	100.0(100)
5. 아동정책	45.3	4.3	40.6	4.2	100.0(106)	35.0	4.2	37.0	4.3	100.0(100)

주: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 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18.

육아정책 구체적 정책 설계 평가 및 정책 의제 설정 평가 결과는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긍정비율이 하락하였다. 육아정책 투입요소 및 정책집행 평가 결과는 2019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육아정책 전반의 구체적 정책 설계 및 정책 의제 설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표 III-2-6〉구체적 정책설계-정책의제설정-투입요소-수행체계-정책집행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육아정책 구체적 정책 설계 평가	66.0	4.9	100.0 (106)	49.0	4.3	100.0 (100)
육아정책 정책 의제 평가	50.0	4.2	100.0 (106)	40.0	4.2	100.0 (100)
육아정책 투입요소 평가	26.4	3.7	100.0 (106)	26.0	3.8	100.0 (100)
육아정책 정책집행 평가	27.4	3.8	100.0 (106)	28.0	3.9	100.0 (100)

주: 긍정비율은 '⑥적절한 편이다', '⑥적절하다', '⑦매우 적절하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19.

### 라. 육아정책 중장기 평가

육아정책 중장기 평가를 보면 국가수준에서는 출산율은 긍정평가(5+6+7)가 18.0%로 2019년 조사의 15.1%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나, 부정평가(1+2+3)는 64.0%로 2019년 조사의 58.5%보다 더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재정투자(확대)에서는 긍정평가가 61.0%로 2019년 조사의 48.1%보다 상승하였다. 부정평가는 17.0%로 2019년 조사의 23.6%보다 하락하였는데, 2019~2020년 동안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등으로 육아정책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수준에서는 서비스의 질에서 긍정평가가 48.0%로 2019년 조사의 53.8%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가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은 긍정평가가 31.0%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의 43.4%보다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육아휴직이 아직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모의 육아 행복감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수준에서는 형평성은 긍정평가가 35.0%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 결과의 50.9%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하였다. 웰빙 및 발달성과는 긍정평가가 33.0%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 결과의 46.2%와 비교하면 하락하였다. 아동수준의 형평성은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웰빙 및 발달성과는 아동의 행복감, 부모와 함께 하



는 시간, 아동학대 및 아동 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표들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관수준에서는 서비스의 질은 긍정평가가 53.0%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 결과의 48.1%보다 상승하였다. 공공성은 긍정평가가 58.0%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 결과의 57.5%와 비슷하였다.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상승한 것은 2020년에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보육지원체계 개편,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2-7〉 육아정책 중장기 평가(기여도 평가)(2019년/2020년 조사)

단위: %, 점

영역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1+2+3 (부정)	4 (보통)	5+6+7 (긍정)	7점 평균	1+2+3 (부정)	4 (보통)	5+6+7 (긍정)	7점 평균
<b>〈국가수준〉</b>								
1. 출산율	58.5	26.4	15.1	3.1	64.0	18.0	18.0	3.1
2. 접근성	17.9	32.1	50.0	4.4	20.0	24.0	56.0	4.5
3. 재정투자(확대)	23.6	28.3	48.1	4.3	17.0	22.0	61.0	4.6
4. 육아환경	30.2	20.8	49.1	4.3	18.0	39.0	43.0	4.3
5. 삶의 질	37.7	32.1	30.2	3.8	39.0	32.0	29.0	3.7
영역 평균(5개)	56.9점(100점 환산)				57.7점(100점 환산)			
<b>〈부모수준〉</b>								
1. 양육비용 부담	21.7	24.5	53.8	4.6	24.0	22.0	54.0	4.5
2. 서비스의 질	24.5	21.7	53.8	4.5	22.0	30.0	48.0	4.3
3.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30.2	26.4	43.4	4.1	38.0	31.0	31.0	3.8
영역 평균(3개)	62.9점(100점 환산)				60.0점(100점 환산)			
<b>〈아동수준〉</b>								
형평성	24.5	24.5	50.9	4.4	33.0	32.0	35.0	4.0
2. 웰빙 및 발달성과	30.2	23.6	46.2	4.2	42.0	25.0	33.0	3.8
영역 평균(2개)	61.4점(100점 환산)				55.7점(100점 환산)			
<b>〈기관 수준〉</b>								
1. 서비스의 질	20.8	31.1	48.1	4.4	20.0	27.0	53.0	4.4
2. 공공성	19.8	22.6	57.5	4.5	27.0	15.0	58.0	4.5
영역 평균(2개)	63.4점(100점 환산)				63.5점(100점 환산)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24.

육아정책 조정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는 수요자/대중과의 소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정책의 수요자가 가지는 요구와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내용 점검이 18.0%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육아정책의 조정과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정책이 잘 작동하는가 여부와 정책 수행의 문제점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형성이 14.0%, 전달체계 변화와 거버넌스 점검이 각 12.0%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I-2-8〉 육아정책 조정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구분		수요자/ 대중과의 소통	정책내용 점검	문화 형성	전달체계 변화	거버넌스 점검	목적/목 표 설정	기타	계(수)
2019년	전체	22.6	23.6	13.2	14.2	13.2	12.3	0.9	100.0(106)
	전체	34.0	18.0	14.0	12.0	12.0	10.0	0.0	100.0(100)
2020년	분야								
	유아교육	37.1	25.7	14.3	2.9	14.3	5.7	0.0	100.0( 35)
	보육	35.0	17.5	20.0	10.0	7.5	10.0	0.0	100.0( 40)
	기타	28.0	8.0	4.0	28.0	16.0	16.0	0.0	100.0( 25)
	$\chi^2(df)$				16.354(10)				
	전공								
	유아교육/교육	38.5	15.4	17.9	7.7	17.9	2.6	0.0	100.0( 39)
보육/가족/아동	34.9	25.6	11.6	7.0	9.3	11.6	0.0	100.0( 43)	
사회복지/행정/경제	22.2	5.6	11.1	33.3	5.6	22.2	0.0	100.0( 18)	
$\chi^2(df)$				20.084(10)*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25.

\*  $p < .05$ .

## 마. 소결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 결과(전문가 의견 조사)를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는 2019년보다 긍정 비율이 높아졌으나,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는 2019년보다 긍정비율이 낮아졌다.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조사결과를 2019년 결과와 비교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가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 23.6%가 나온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하락하였으나, 1+2순위 기준으로는 2020년 30.0%로 2019년 31.1%와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이 14.0%였고,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3.0%로 그 뒤를 이었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은 2019년 조사에서도 1순위 기준으로 16.0%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이어 2번째로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국정과제 중 실행이 우수한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9년에도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8.9%로 2020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 확대'는 2019년 조사에서는 19.8%였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16.0%로 다소 하락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행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과제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으로 15.0%로 나타났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은 2019년 조사에서는 11.3%로 나타났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그 중요도가 다소 상승하였다.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로는 1순위 기준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이 14.0%,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13.0%,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10.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들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은 2019년 조사 결과에서는 8.5%였으나,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14.0%로 나타나 그 성과가 2019년보다 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IV

## 저출산정책 성과분석

- 0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02 부모 및 전문가 의견(설문조사)
- 03 면담자료 분석
- 04 계량 분석





## IV. 저출산정책 성과분석

### 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가.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 1) 보건복지부

2017년에서 2019년까지의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평가한 저출산정책 부문에 해당하는 과제는 모두 3개로 정리되며, 해당 연도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보건복지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저출산정책)

과제명	2017년	2018년	2019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다소우수	미흡	미흡
임신·출산 지원 강화	보통	부진	다소미흡
아동수당 지급	우수	우수	다소미흡

자료: 1)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9-10.

2)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7-9.

3)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6-8.

#### 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미흡」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90).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을 삶의 질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을 주요성으로 평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획득 점수가 낮으며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다른 지표로 변경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보건복지부, 2020b: 90).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IV-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적절하고 정책 난이도 높음.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분석 실시
의견수렴 적절성	-전문가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 충실 -지역별 인구변동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 순회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적절하나, 도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한 다각적 인구정책 전략을 제시·실현할 필요 -기업·사업장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견수렴도 필요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 -삶의 질 제고로의 방향 전환에 따른 적합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표로 변경 고려
추진 일정 충실성	-양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정책소통의 충실성	-복지부 내부적인 소통보다는 외부주체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 정책과제에서 핵심임. -노동시장, 성별분업, 가사 및 양육부담 분담, 주택마련, 결혼식 문화, 교육비부담 등과 관련된 공·사적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정책소통이 핵심임.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사회적대타협 협력회의의 노력은 양호하게 평가됨.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연대회의가 선연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될 필요 있음. -인구포럼에서 구체적 정책 사안별 논의가 부족함.
성과지표 달성도	-노력에 비해 성과가 높지 않음.
정책목표 달성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과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90-91.

### 나) 임신·출산 지원 강화

「임신·출산 지원 강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92).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한 것을 주요 성과로 보았으나,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이 필요하고, 실제로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보건복지부, 2020b: 92). 실제로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토는 임신·출산 지원 강화 뿐 아니라 다른 저출산정책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IV-1-3〉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만혼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난·불임, 미숙아 출생, 산모 건강 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정책 난이도 높음. -다양한 정책으로 대비책 마련 충실하나 실제로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성 검토 필요
의견수렴 적절성	-관련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사업별로 적극 수용하였음.
성과지표 적절성	-관리과제 내용을 포괄하는 지표로 변경 필요
추진 일정 충실성	-일정대로 충실하게 추진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소통의 충실성	-난임, 고위험임산부 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사업초기 및 매년 초 홍보강화 수행일정을 선행할 필요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두드러지는 성과 부족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하였으나, 목표치가 낮음.
정책목표 달성도	-노력에 비해 성과는 높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92.

#### 다)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95). 아동수당 보편 지급 및 연령확대를 통해 총 7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은 것을 주요 성과로 보면서도, 아동 빈곤을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고, 아동수당의 실제 용도를 더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95). 아동수당은 육아를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시행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아직 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르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지표가 개발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1-4〉 「아동수당 지급」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아동수당법의 개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난이도와 충실도 인정됨. -아동을 위한 기본소득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성과지표 적절성	-'20년부터는 아동빈곤을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아동수당 도입이 가지는 당초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함.
추진 일정 충실성	-추진일정 준수함.
정책소통의 충실성	-아동수당의 실제 쓰임새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연초에 개최된 국회 포럼이 현장 모니터링이나 집행과정상 대응의 적절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되었으나 만족도 조사는 초기 도입 이후 계속 낮아지는 속성이 있어 목표치가 소극적임.
정책목표 달성도	-완전한 보편복지제도로서의 아동수당제도 정착을 이룬 성과 인정됨.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95.

##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저출산정책과 관련된 관리과제는 모두 2개로 정리되며, 자체평가한 2019년도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여성가족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저출산정책)**

관리과제명	2019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다소미흡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우수

주: 2017년,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해당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등급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8.

### 가)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다소미흡」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51).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지속 확대,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 확대 운영, 지역밀착·맞춤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을 주요 성과로 보았으나, 경영여건이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51-52).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직장문화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실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표 IV-1-6>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추진일정의 충실성(5점)	충실	-당해연도 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 추진이 인정됨
2. 현장 의견 수렴(5점) * 협업우수사례(2점 가점)	우수 *우수	-근로자 직장만족도가 향상함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이 우수함
3. 지표① : 가족친화인증 유효 기업 수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50%	우수 (111%)	-목표치가 적극 상향 설정되었고, 목표치를 달성함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수 증가 뿐 아니라 기업 내에서 가족 친화적인 활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4. 지표② : 가족친화 컨설팅 수혜 기업 수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50%	우수 (105%)	-컨설팅 수혜를 받은 기업 내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추적 필요
5. 정책효과의 국민체감도(10점)	우수	-국민체감도 평가인단 평가 결과 우수함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6.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 (10점)	보통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사회적 효과를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움
7. 정책 환류의 충실성(5점)	보통	-보다 내실 있는 보수교육 내용 구성 필요 -사후지원, 관리강화 노력 필요
8. 사회적 가치 평가(5점)	보통	-일, 생활 균형 지원으로 삶의 질 제고 및 기업 성과 향상함 -인증 기업 내부 가치 외에 사회 전반에 대한 가치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53.

### 나)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우수」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57). 가족센터 설치 및 임신출산갈등 상담 등 가족서비스 확대, 가족정책기본법 추진, 성평등 관점 저출산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성과로 보았고,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57-58).

〈표 IV-1-7〉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추진일정의 충실성(5점)	충실	-당해연도 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 추진이 인정됨. -지역맞춤형 가족센터 설치 및 '20년 생활SOC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가 돋보임.
2. 현장 의견 수렴(5점) * 협업우수사례(2점 가점)	우수 * 우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함. -폭넓은 협업체계가 구축됨.
3. 지표① :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50%	우수 (102%)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달성함. -가족상담 전문가들에 대한 자질향상 전문 연수 프로그램이 절실함.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고급 교육 필요
4. 지표②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50%	우수 (104%)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5. 정책효과의 국민체감도(10점)	우수	-국민체감도 평가인단 평가 결과 우수함
6.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 (10점)	우수	-가족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효과적인 추진 노력이 돋보임 -1인가구 프로그램 개발 등 현안에 대응함
7. 정책 환류의 충실성(5점)	우수	-과제 특성상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책환류가 법 개정에 국한됨
8. 사회적 가치 평가(5점)	우수	-다양한 가족 포용 등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59.

## 2. 부모 및 전문가 의견(설문조사)

### 가. 부모의 만족도, 요구도 및 정책 성과 평가

#### 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 가) 월평균 소득 및 자녀양육 비용

부모조사 참여 대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5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월 평균 소득은 378만 6천원, 어머니의 월 평균 소득은 152만원, 그 외의 임대 소득, 이자소득, 정부지원금 등 기타소득은 평균 29만 1천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특성별로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 취업모의 소득 수준이 외벌이 가구 및 시간제 취업모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1〉 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부 평균 소득		모 평균 소득		기타 가구 근로 소득		총 가구 소득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378.6	(1,694)	152.0	(1,720)	29.1	(1,731)	550.6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406.9	( 374)	148.9	( 381)	30.3	( 384)	574.4	( 384)
유아부모	377.1	( 766)	148.6	( 778)	26.8	( 784)	542.7	( 784)
영아부모	361.4	( 554)	159.0	( 561)	31.3	( 563)	545.4	( 563)
F	7.8***		0.8		0.9		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8.5	(1,050)	226.6	(1,050)	30.7	(1,050)	635.8	(1,050)
외벌이	379.1	( 632)	26.6	( 632)	24.4	( 632)	430.1	( 632)
해당없음	355.8	( 12)	176.9	( 38)	55.7	( 49)	280.0	( 49)
F	0.1		495.2***		6.7**		163.1***	
취업모 여부								
취업	365.2	( 809)	251.3	( 833)	30.0	( 833)	636.0	( 833)
휴직 중	385.0	( 282)	144.9	( 287)	37.2	( 287)	560.4	( 287)
학업 중	447.0	( 10)	42.5	( 10)	22.0	( 10)	511.5	( 10)
구직 중	356.2	( 112)	43.1	( 119)	21.3	( 119)	399.7	( 119)
미취업	402.2	( 470)	10.7	( 471)	25.0	( 471)	437.0	( 471)
F	4.4**		341.6***		2.3		56.6***	
가구내 여성 취업								
전일제 취업	372.2	( 863)	255.3	( 886)	34.2	( 886)	652.0	( 886)

구분	부 평균 소득		모 평균 소득		기타 가구 근로 소득		총 가구 소득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시간제 취업	363.4	( 228)	105.8	( 234)	22.9	( 234)	482.8	( 234)
<i>t</i>	0.7		21.2***		3.1**		10.1***	
연령								
20대	287.9	( 63)	112.7	( 66)	34.4	( 67)	416.1	( 67)
30대	368.9	(1,093)	153.8	(1,114)	29.1	(1,119)	542.5	(1,119)
40대 이상	408.9	( 538)	153.2	( 540)	28.3	( 545)	583.8	( 545)
<i>F</i>	18.9***		2.1		0.3		12.9***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298.4	( 178)	101.1	( 188)	25.0	( 189)	406.6	( 189)
대졸 이상	388.0	(1,516)	158.3	(1,532)	29.6	(1,542)	568.3	(1,542)
<i>t</i>	-8.0***		-6.1***		-1.0		-10.4***	
지역 구분								
대도시	399.3	( 692)	167.0	( 706)	30.4	( 710)	585.7	( 710)
중소도시	369.6	( 751)	143.4	( 758)	27.0	( 764)	532.6	( 764)
읍·면	348.1	( 251)	136.3	( 256)	31.2	( 257)	507.0	( 257)
<i>F</i>	9.9***		5.6**		0.7		1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을 조사하였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비, 공과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고유하게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연령에 해당되는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 0~5세인 취학 전 자녀의 양육비용은 월 평균 58만 9천 원이고, 취학 후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양육 비용은 6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1가구당 총 자녀양육 비용은 70만 5천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2〉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취학전 자녀 양육비용		취학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58.9	(1,472)	64.0	(554)	70.5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37.5	( 197)	66.4	(384)	85.7	( 384)
유아부모	61.3	( 712)	58.5	(170)	68.2	( 784)
영아부모	63.4	( 563)	0.0	( 0)	63.4	( 563)
<i>F</i>	19.8***		3.0		1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64.2	( 897)	67.2	(315)	74.9	(1,050)
외벌이	49.8	( 541)	59.7	(222)	63.6	( 632)
해당없음	63.7	( 34)	61.2	( 17)	65.4	( 49)
<i>F</i>	13.1***		1.5		7.9***	

구분	취학전 자녀 양육비용		취학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취업모 여부						
취업	65.2	( 690)	66.9	(284)	76.7	( 833)
휴직 중	58.7	( 262)	68.2	( 55)	66.6	( 287)
학업 중	49.8	( 8)	59.0	( 5)	69.3	( 10)
구직 중	54.5	( 102)	65.2	( 40)	68.6	( 119)
미취업	49.1	( 403)	58.2	(166)	62.5	( 471)
F	6.4***		0.9		5.1***	
연령						
20대	54.5	( 66)	33.0	( 4)	55.6	( 67)
30대	58.6	(1,013)	60.0	(271)	67.5	(1,119)
40대 이상	60.4	( 393)	68.2	(279)	78.5	( 545)
F	0.4		2.7		9.1***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53.9	( 149)	50.4	( 74)	62.3	( 189)
대졸이상	59.5	(1,323)	66.1	(480)	71.5	(1,542)
t	-1.2		-3.0**		-2.5*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8.3	( 98)	47.5	( 28)	53.7	( 113)
251~350만원	49.5	( 203)	53.2	( 73)	57.6	( 242)
351~500만원	51.1	( 439)	52.4	(162)	60.6	( 510)
501~600만원	54.8	( 250)	60.3	(106)	68.1	( 295)
601만원 이상	74.3	( 482)	82.9	(185)	89.5	( 571)
F	16.6***		11.5***		26.4***	
지역 구분						
대도시	64.0	( 605)	68.5	(218)	75.5	( 710)
중소도시	57.7	( 652)	63.2	(242)	69.3	( 764)
읍·면	48.3	( 215)	55.4	( 94)	60.7	( 257)
F	7.6***		2.3		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현금지원, 시간지원, 건강/의료 지원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이용률을 조사하였다.

2020년 조사를 기준으로, 현금지원 제도부터 살펴보면 아동수당이 94.3%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양육수당 87.2%, 출산장려금 63.7%,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4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장려금은 28.6%로 현금지원 제도 중 가장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시간지원 제도의 경우, 모 출산휴가의 이용률은 45.6%로 시간지원 제도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모 육아휴직은 37.8%, 부 출산휴가 36.0%, 모 근로시



간 단축 16.3%, 모 유연근무제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 부 육아휴직 (6.9%), 부 유연근무제(6.5%), 부 근로시간 단축(5.1%)은 10% 미만의 이용률을 보였다. 부-모 간의 시간지원제도 이용률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간지원제도의 경우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의료 지원 등의 제도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임신·출산 지원은 54.6%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의료비 지원 32.5%, 산후조리 지원 25.3%, 취약가 구 양육 지원 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2019년/2020년)

단위: %(명)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이용률	계(수)	이용률	계(수)
현금 지원	1. 출산장려금	64.8	100.0(1,013)	63.7	100.0 (1,731)
	2. 양육수당	85.2	100.0(1,013)	87.2	100.0 (1,731)
	3. 아동수당	88.5	100.0(1,013)	94.3	100.0 (1,731)
	4. 자녀장려금	30.7	100.0(1,013)	28.6	100.0 (1,731)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49.0	100.0(1,013)	47.1	100.0 (1,731)
시간 지원	6. 모 출산휴가	38.9	100.0(1,013)	45.6	100.0 (1,731)
	7. 부 출산휴가	35.2	100.0(1,013)	36.0	100.0 (1,731)
	8. 모 근로시간 단축	10.4	100.0(1,013)	16.3	100.0 (1,731)
	9. 부 근로시간 단축	3.3	100.0(1,013)	5.1	100.0 (1,731)
	10. 모 육아휴직	31.1	100.0(1,013)	37.8	100.0 (1,731)
	11. 부 육아휴직	4.9	100.0(1,013)	6.9	100.0 (1,731)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6.7	100.0(1,013)	11.5	100.0 (1,731)
	13.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3.3	100.0(1,013)	6.5	100.0 (1,731)
	건강/ 의료 지원 등	14. 의료비 지원	33.8	100.0(1,013)	32.5
15. 산후조리 지원		20.3	100.0(1,013)	25.3	100.0 (1,731)
16. 임신·출산 지원		48.1	100.0(1,013)	54.6	100.0 (1,731)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2.1	100.0(1,013)	3.1	100.0 (1,731)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40.

〈표 IV-2-4〉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현금지원)

단위: %(명)

구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계(수)
전체	63.7	87.2	94.3	28.6	47.1	100.0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1.8	74.5	84.1	26.6	45.3	100.0 ( 384)
유아부모	62.8	89.3	97.6	33.0	47.2	100.0( 784)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구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계(수)
영아부모	73.0	93.1	96.8	23.8	48.1	100.0( 563)
$\chi^2(df)$	44.871(4)***	78.469(4)***	96.946(2)***	22.084(4)***	3.17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4.7	87.3	94.2	24.6	48.5	100.0(1,050)
외벌이	62.0	87.5	94.9	32.6	44.9	100.0( 632)
해당없음	63.3	81.6	89.8	63.3	44.9	100.0( 49)
$\chi^2(df)$	7.062(4)	6.089(4)	2.360(2)	55.797(4)***	17.758(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67.3	81.4	92.0	56.6	35.4	100.0( 113)
251~350만원	62.8	87.6	93.4	43.0	40.5	100.0( 242)
351~500만원	65.3	89.0	94.7	29.6	47.8	100.0( 510)
501~600만원	62.7	86.8	95.6	23.7	51.5	100.0( 295)
601만원 이상	62.3	86.9	94.2	18.6	49.2	100.0( 571)
$\chi^2(df)$	7.645(8)	8.083(8)	2.545(4)	101.676(8)***	18.269(8)*	
연령						
20대	73.1	95.5	95.5	41.8	47.8	100.0( 67)
30대	66.7	89.5	96.3	29.8	46.7	100.0(1,119)
40대 이상	56.3	81.5	90.1	24.4	47.7	100.0( 545)
$\chi^2(df)$	22.372(4)***	28.712(4)***	26.939(2)***	11.631(4)*	2.135(4)	
지역구분						
대도시	61.0	87.7	93.4	26.8	45.8	100.0( 710)
중소도시	63.1	86.3	95.2	27.4	47.9	100.0( 764)
읍면	72.8	88.7	94.6	37.4	48.2	100.0( 257)
$\chi^2(df)$	15.993(4)**	4.255(4)	2.201(2)	13.256(4)*	1.14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2-5〉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시간지원)

단위: %(명)

구분	모 출산 휴가	부 출산 휴가	모 근로 시간 단축	부 근로 시간 단축	모 육아 휴직	부 육아 휴직	모 유연 근무제 (사차출퇴근제 등)	부 유연 근무제 (사차출퇴근제 등)	계(수)
전체	45.6	36.0	16.3	5.1	37.8	6.9	11.5	6.5	100.0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39.3	25.3	10.7	3.9	32.0	6.8	9.6	4.9	100.0 ( 384)
유아부모	44.1	35.6	15.1	5.5	35.2	7.7	11.6	6.9	100.0 ( 784)
영아부모	52.0	43.9	22.0	5.5	45.5	5.9	12.6	6.9	100.0 ( 563)
$\chi^2(df)$	20.317(4)***	34.682(4)***	24.085(4)***	5.112(4)	22.838(4)***	5.912(4)	3.089(4)	3.06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9	38.8	22.2	5.8	51.0	8.5	16.4	7.2	100.0 (1,050)
외벌이	19.9	33.1	6.8	4.1	16.6	4.7	3.5	5.2	100.0 ( 632)
해당없음	28.6	14.3	14.3	4.1	28.6	0.0	10.2	6.1	100.0 ( 49)
$\chi^2(df)$	325.820(4)***	39.057(4)***	187.510(4)***	28.434(4)***	277.516(4)***	43.291(4)***	188.245(4)***	24.900(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7.7	16.8	7.1	3.5	15.0	2.7	7.1	1.8	100.0 ( 113)
251~350만원	22.3	26.4	6.2	4.5	16.1	2.1	3.3	4.5	100.0 ( 242)
351~500만원	34.9	39.6	12.0	4.5	29.2	7.5	8.2	5.3	100.0 ( 510)

구분	모 출산 휴가	부 출산 휴가	모 근로 시간 단축	부 근로 시간 단축	모 육아 휴직	부 육아 휴직	모 유연 근무제 (사차출퇴 근제 등)	부 유연 근무제 (사차출퇴 근제 등)	계(수)
501~600만원	45.4	30.5	18.6	5.8	38.3	6.1	11.9	5.8	100.0 ( 295)
601만원 이상	70.8	43.4	25.2	6.0	59.0	9.6	18.6	9.6	100.0 ( 571)
$\chi^2(df)$	258.198(8)***	81.407(8)***	109.214(8)***	37.225(8)***	209.492(8)***	55.142(8)***	100.925(8)***	51.746(8)***	
연령									
20대	34.3	37.3	32.8	3.0	28.4	4.5	7.5	1.5	100.0 ( 67)
30대	49.2	37.4	43.2	5.7	41.3	6.9	13.1	6.7	100.0 (1,119)
40대 이상	39.8	40.7	39.4	4.2	31.9	7.2	8.6	6.6	100.0 ( 545)
$\chi^2(df)$	17.780(4)**	22.894(4)***	21.120(4)***	12.451(4)*	20.975(4)***	11.105(4)*	17.020(4)**	9.206(4)	
지역구분									
대도시	46.3	34.2	16.3	5.4	39.3	6.5	10.7	7.5	100.0 ( 710)
중소도시	45.2	38.0	17.3	5.1	37.3	7.1	12.6	6.2	100.0 ( 764)
읍면	45.1	35.0	13.6	4.7	35.4	7.4	10.5	4.7	100.0 ( 257)
$\chi^2(df)$	1.771(4)	3.009(4)	2.556(4)	0.384(4)	1.538(4)	1.314(4)	1.967(4)	3.39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2-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건강/의료 지원 등)

단위: %(명)

구분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	임신·출산 지원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계(수)
전체	32.5	25.3	54.6	3.1	100.0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25.5	15.9	43.0	2.9	100.0 ( 384)
유아부모	31.3	21.9	55.2	3.8	100.0 ( 784)
영아부모	39.1	36.4	61.6	2.1	100.0 ( 563)
$\chi^2(df)$	23.801(4)***	61.838(4)***	38.281(4)***	3.38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2	27.3	56.9	2.3	100.0 (1,050)
외벌이	29.1	22.6	50.9	3.0	100.0 ( 632)
해당없음	40.8	16.3	53.1	20.4	100.0 ( 49)
$\chi^2(df)$	24.713(4)***	21.688(4)***	9.963(4)*	66.541(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5.4	18.6	51.3	9.7	100.0 ( 113)
251~350만원	29.3	28.1	52.9	5.4	100.0 ( 242)
351~500만원	32.4	25.9	54.5	2.2	100.0 ( 510)
501~600만원	31.5	24.7	58.0	2.0	100.0 ( 295)
601만원 이상	34.0	25.2	54.3	2.1	100.0 ( 571)
$\chi^2(df)$	8.205(8)	6.748(8)	5.068(8)	27.986(8)***	
연령					
20대	38.8	35.8	70.1	7.5	100.0 ( 67)
30대	32.3	26.5	57.4	2.8	100.0 (1,119)
40대 이상	32.3	21.5	47.0	3.1	100.0 ( 545)
$\chi^2(df)$	2.531(4)	10.756(4)*	24.818(4)***	7.82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 다)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제지원, 부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15개 모든 항목에서 만족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 지원(75.0%)과 부 유연근무제(73.2%)의 만족비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지만,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20년 출산 육아지원제도 만족도가 전체 항목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2019년/2020년)

단위: %(명), 점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현금 지원	1. 출산장려금	39.2	3.2	50.3	3.4	100.0 (1,102)
	2. 양육수당	41.1	3.3	60.1	3.6	100.0 (1,510)
	3. 아동수당	43.9	3.3	61.1	3.6	100.0 (1,633)
	4. 자녀장려금	41.8	3.2	58.6	3.6	100.0 ( 495)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35.9	3.2	48.1	3.4	100.0 ( 815)
시간 지원	6. 모 출산휴가	61.4	3.7	67.5	3.8	100.0 ( 790)
	7. 부 출산휴가	34.7	3.0	47.8	3.3	100.0 ( 623)
	8. 모 근로시간 단축	61.9	3.7	68.9	3.8	100.0 ( 283)
	9. 부 근로시간 단축	51.5	3.5	59.6	3.8	100.0 ( 89)
	10. 모 육아휴직	50.5	3.4	62.3	3.6	100.0 ( 655)
	11. 부 육아휴직	48.0	3.2	55.5	3.6	100.0 ( 119)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64.7	3.8	67.8	3.8	100.0 ( 199)
	13.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72.7	3.8	73.2	3.9	100.0 ( 112)
건강/의료 지원 등	14. 의료비 지원	65.2	3.7	75.0	3.9	100.0 ( 563)
	15. 산후조리 지원	46.6	3.3	58.3	3.6	100.0 ( 438)
	16. 임신·출산 지원	44.4	3.4	52.3	3.5	100.0 ( 945)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38.1	3.4	51.0	3.6	100.0 ( 53)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40.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현금지원 제도에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현금 지원 수

준이 낮아서'가 56~73%의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이 외에는 낮은 수준으로 응답되기는 하였으나, '지자체별로 현금지원제도에 차이가 있어서', '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도 응답되어, 현금지원제도의 불만족 이유로 지역 차, 낮은 연령, 보편적 지원을 꼽았다.

〈표 IV-2-8〉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현금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현금 지원 수준이 낮아서	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지자체별로 현금지원제도에 차이가 있어서	기타	계(수)
1. 출산장려금	62.5	0.6	5.0	0.0	0.6	29.4	1.9	100.0(160)
2. 양육수당	73.4	8.4	7.7	2.1	0.7	7.0	0.7	100.0(143)
3. 아동수당	73.2	11.8	4.6	2.6	2.6	4.6	0.7	100.0(153)
4. 자녀장려금	56.7	0.0	10.0	0.0	0.0	11.7	21.7	100.0( 60)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67.6	1.8	4.5	3.6	3.6	15.3	3.6	100.0(111)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시간 지원제도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부/모 출산휴가, 부 근로시간 단축, 부/모 유연근무제의 경우,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가 불만족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모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불만족의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대체로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 지원 제도에 관한 불만족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인식', '직장 지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시간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6. 모 출산휴가	20.8	3.9	42.9	18.2	9.1	5.2	100.0( 77)
7. 부 출산휴가	11.5	0.7	58.1	12.2	10.1	7.4	100.0(148)

구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8. 모 근로시간 단축	25.0	3.6	25.0	32.1	14.3	0.0	100.0( 28)
9. 부 근로시간 단축	12.5	0.0	50.0	12.5	25.0	0.0	100.0( 8)
10. 모 육아휴직	61.5	2.2	18.7	9.9	4.4	3.3	100.0( 91)
11. 부 육아휴직	66.7	6.7	26.7	0.0	0.0	0.0	100.0( 15)
12. 모 유연근무제 (사차출퇴근제등)	18.8	6.3	62.5	12.5	0.0	0.0	100.0( 16)
13. 부 유연근무제 (사차출퇴근제등)	16.7	16.7	33.3	0.0	33.3	0.0	100.0( 6)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건강/의료 지원 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가 57~68%로 응답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도 적은 수준 이기는 하지만 불만족 이유로 응답되었다.

〈표 IV-2-1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건강/의료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14. 의료비 지원	57.1	4.8	19.0	4.8	9.5	4.8	100.0( 21)
15. 산후조리 지원	68.9	11.1	11.1	4.4	2.2	2.2	100.0( 45)
16. 임신·출산 지원	64.7	16.5	3.5	5.9	5.9	3.5	100.0( 85)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60.0	0.0	20.0	20.0	0.0	0.0	100.0( 5)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2) 저출산정책 평가

### 가) 저출산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한 저출산정책의 목표 달성

률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저출산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인식한 목표 달성률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열다섯 가지의 정책 과제 중, ‘달성되었다’와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 40.6%, ‘기타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 34.4%, ‘양육지원체계(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9.1%,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 정책’ 26.5% 순이었다. 한편,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 과제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11.1%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노동권’(13.8%)과 ‘육아권 보장’(14.3%)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률을 보였다.

이상의 응답률을 2019년도 조사와 비교한 결과,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 ‘의료비 지원 강화’,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을 제외한 열한 가지 정책 과제의 긍정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변동이 있는 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4.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 지원 강화’의 긍정비율은 전년도 37.6%에서 40.6%로 3.0%p 상승하였다.

〈표 IV-2-11〉 저출산정책 과제의 목표 달성률(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 비율	5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5점 평균	계(수)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0.2	2.3	100.0(1,013)	11.1	2.3	100.0(1,73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5	2.6	100.0(1,013)	18.1	2.5	100.0(1,731)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23.0	2.7	100.0(1,013)	19.8	2.6	100.0(1,731)
(4) 육아시간 지원	20.2	2.6	100.0(1,013)	16.3	2.5	100.0(1,731)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9.8	2.8	100.0(1,013)	25.7	2.7	100.0(1,731)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15.0	2.5	100.0(1,013)	13.8	2.5	100.0(1,731)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16.7	2.5	100.0(1,013)	14.3	2.5	100.0(1,731)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46.9	3.3	100.0(1,013)	45.8	3.3	100.0(1,731)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26.5	2.8	100.0(1,013)	24.1	2.8	100.0(1,731)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9.7	2.9	100.0(1,013)	29.1	3.0	100.0(1,731)
(11) 의료비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37.6	3.1	100.0(1,013)	40.6	3.2	100.0(1,731)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35.0	3.1	100.0(1,013)	34.4	3.1	100.0(1,731)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6.9	3.0	100.0(1,013)	26.5	3.0	100.0(1,731)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 비율	5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5점 평균	계(수)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0.4	2.8	100.0(1,013)	22.8	2.8	100.0(1,731)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18.1	2.7	100.0(1,013)	19.3	2.7	100.0(1,731)

- 주: 1) 긍정비율은 '매우 잘 달성되었다',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긍정비율이 30%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4) 세부 결과는 부록 13에 수록함.
-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49.

### 나)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드러냈던 1순위 과제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첫 자녀의 연령,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응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24.0%),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4.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2.0%)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유아 부모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28.2%),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9.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영아 부모는 초등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21.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7.8%),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3.7%) 순이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22.6%),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6.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1.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외벌이 가구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29.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9%),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0.3%)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끝으로, 월평균 소득인 250만원 이하인 가구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3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7.7%)와 '의료비 지원 강화'(9.7%)가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18.2%),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6.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3.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드러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는 첫 자녀의 연령,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전 범주에서 가장 성과가 뛰어났던 과제로 지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첫째 자녀가 유아고, 외벌이이며, 월평균 가구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때, 이를 특히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12〉 문재인 정부에서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계(수)
전체	24.9	14.1	11.0	8.6	7.7	7.4	4.6	3.8	3.6	3.6	3.2	2.4	2.1	1.6	1.3	100.0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24.0	14.6	12.0	7.3	6.8	6.8	5.5	3.9	2.9	5.7	2.6	1.8	3.1	1.6	1.6	100.0 ( 384)
유아부모	28.2	11.2	8.7	9.8	7.9	7.1	5.5	3.8	3.7	2.7	2.9	2.3	2.9	1.8	1.4	100.0 ( 784)
영아부모	21.0	17.8	13.7	7.8	8.2	8.2	2.8	3.6	4.1	3.4	4.1	2.8	0.4	1.4	0.9	100.0 ( 563)
$\chi^2(df)$																59.067(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6	16.2	11.2	10.2	7.4	7.1	4.0	4.3	3.8	3.9	3.0	2.5	1.4	1.2	1.1	100.0 (1,050)
외벌이	29.1	10.3	10.9	5.9	8.4	8.1	5.9	3.0	3.3	2.8	3.8	2.2	3.3	2.1	0.9	100.0 ( 632)
해당없음	20.4	18.4	8.2	10.2	6.1	4.1	2.0	2.0	4.1	6.1	2.0	2.0	2.0	4.1	8.2	100.0 ( 49)
$\chi^2(df)$																67.177(2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1.0	17.7	6.2	3.5	4.4	9.7	4.4	2.7	2.7	3.5	4.4	0.9	3.5	0.9	4.4	100.0 ( 113)
251~350만원	30.6	12.4	8.3	6.2	8.3	7.9	5.0	3.3	3.3	4.5	1.2	2.5	2.9	2.1	1.7	100.0 ( 242)
351~500만원	26.5	11.2	11.0	7.6	8.4	8.2	4.7	3.1	3.7	2.9	4.5	2.7	2.2	2.2	1.0	100.0 ( 510)
501~600만원	28.1	15.3	10.2	7.8	6.8	6.1	4.1	4.4	3.4	2.7	3.4	3.4	2.4	1.7	0.3	100.0 ( 295)
601만원 이상	18.2	16.1	13.7	11.9	8.1	6.7	4.7	4.4	4.0	4.2	2.6	1.8	1.4	1.1	1.2	100.0 ( 571)
$\chi^2(df)$																82.199(56)*

주: ①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②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③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⑥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⑦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⑧육아시간 지원 ⑨부모의 노동권 보장 ⑩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⑪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⑫부모의 육아권 보장 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⑭출산·양육 세제 개선 ⑮(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특히 성과가 두드러졌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의 1순위(24.9%)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4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의 1순위 응답 비율은 14.1%였으며, 2순위 포함 시 22.9%로 증가하여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응답률(11.0%)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2순위가 포함되면서 전체 항목 중



네 번째로 높은 응답률(19.5%)을 보였다. 끝으로, ‘의료비 지원 강화’의 1순위 응답 비율은 7.4%에 그쳤으나, 2순위 포함 시 20.4%로 증가하여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표 IV-2-13〉 문재인 정부에서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7.7	2.8	10.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6	6.4	15.0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4.1	8.8	22.9
(4) 육아시간 지원	3.8	4.3	8.1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1.0	8.5	19.5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3.6	4.5	8.1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2.4	4.9	7.2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4.9	15.8	40.7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1.6	5.0	6.6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4.6	10.8	15.4
(11) 의료비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7.4	13.0	20.4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3.2	4.9	8.1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1.3	1.9	3.2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1	3.5	5.7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3.6	4.9	8.5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한편,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그 성과가 가장 미흡하였던 1순위 과제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 여부 및 부모의 연령에 따라 응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맞벌이 가구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21.0%),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7.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나, 외벌이 가구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19.0%),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1.4%),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1.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20대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22.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3.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1.9%) 순이었다. 30대 부모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20.1%),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5.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0%)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40대 이상 부모는 30대 부모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21.5%)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3.8%),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9.0%)가 그 뒤를 이었다.

〈표 IV-2-14〉 문재인 정부에서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계(수)
전체	20.0	15.0	9.8	9.5	7.5	5.7	5.5	5.4	4.6	3.9	3.4	3.1	2.8	2.2	1.7	100.0 (1,7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0	17.4	9.0	10.4	7.0	4.9	4.8	5.6	4.3	3.2	3.4	2.8	2.6	2.1	1.6	100.0 (1,050)
외벌이	19.0	11.1	11.4	8.4	8.9	6.5	6.6	4.9	5.2	4.7	3.5	3.3	3.2	2.1	1.3	100.0 ( 632)
해당없음	14.3	12.2	6.1	6.1	0.0	12.2	6.1	6.1	4.1	6.1	2.0	6.1	2.0	6.1	10.2	100.0 ( 49)
$\chi^2(df)$																63.374(28)***
연령																
20대	7.5	22.4	11.9	13.4	9.0	6.0	0.0	7.5	0.0	4.5	0.0	6.0	4.5	3.0	4.5	100.0 ( 67)
30대	20.1	15.1	10.0	9.8	7.9	5.9	4.3	5.8	4.6	3.7	3.0	3.2	2.9	2.0	1.7	100.0 (1,119)
40대 이상	21.5	13.8	9.0	8.4	6.6	5.1	8.6	4.2	5.1	4.2	4.6	2.4	2.4	2.6	1.5	100.0 ( 545)
$\chi^2(df)$																47.901(28)*

주: ①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②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③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부모의 노동권 보장 ⑥부모의 육아권 보장 ⑦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⑧육아시간 지원 ⑨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⑩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⑪출산-양육 세제 개선 ⑫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⑭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⑮(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미흡하였던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의 1순위(20.0%)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2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1순위(15.0%) 및 1,2순위 종합 응답(25.1%)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응답률은 9.8%로,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2순위가 포함되면서 그 순위가 네 번째(18.3%)로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순위 응답 비율은 9.5%였으나, 2순위가 포함되자 19.8%로 증가하여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2-15〉 문재인 정부에서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20.0	6.0	26.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5	10.3	19.8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5.0	10.1	25.1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4) 육아시간 지원	5.4	6.4	11.8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9.8	8.5	18.3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7.5	8.6	16.1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5.7	10.3	16.0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5.5	5.7	11.2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3.4	5.3	8.7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3.9	6.7	10.6
(11) 의료비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3.1	5.0	8.1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2.2	3.1	5.3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1.7	2.8	4.5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8	4.0	6.8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4.6	7.3	11.9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다) 저출산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현행 저출산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1순위 과제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 자녀의 연령,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부모의 연령에 따라 응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18.2%), ‘육아 휴직 급여 현실화’(13.0%),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10.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 부모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17.6%), ‘육아 휴직 급여 현실화’(12.8%), ‘부모의 노동권 보장’(9.6%)과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9.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영아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7.2%)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그다음이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13.1%), ‘부모의 육아권 보장’(11.0%) 순이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7.1%),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1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9.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외벌이 가구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17.7%),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10.6%),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9.8%) 및 ‘부모의 육아권 보장’(9.8%)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가구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에 대한 응답률이 1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14.2%)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3.3%)가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서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16.1%)과 ‘육아휴직 급여

여 현실화'(1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7%), '부모의 육아권 보장'(10.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끝으로, 20대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9.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7.9%), '부모의 육아권 보장'(13.4%) 순이었다. 30대 부모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15.5%),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3.9%), '부모의 육아권 보장'(1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40대 이상 부모는 30대 부모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19.1%)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14.3%),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10.3%)가 그 뒤를 따랐다.

〈표 IV-2-16〉 저출산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계(수)
전체	16.3	14.3	9.1	8.8	8.9	7.5	6.9	6.1	5.4	5.5	3.4	2.7	2.1	1.8	1.3	100.0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8.2	13.0	8.1	8.6	10.4	6.0	5.2	6.8	4.4	7.6	4.2	2.1	3.4	0.8	1.3	100.0 ( 384)
유아부모	17.6	12.8	8.2	9.6	9.6	8.4	6.5	6.0	5.4	4.8	2.7	2.4	2.4	1.9	1.8	100.0 ( 784)
영아부모	13.1	17.2	11.0	8.0	6.9	7.1	8.5	5.7	6.2	5.0	3.7	3.6	0.9	2.3	0.7	100.0 ( 563)
$\chi^2(df)$																47.799(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2	17.1	9.0	9.0	7.5	9.2	6.2	5.5	6.0	4.8	3.4	2.7	1.7	1.6	1.0	100.0 (1,050)
외벌이	17.7	9.8	9.8	8.7	10.6	4.7	8.2	7.1	4.6	6.3	3.5	3.0	3.0	1.9	0.9	100.0 ( 632)
해당없음	20.4	10.2	2.0	6.1	16.3	4.1	4.1	4.1	4.1	10.2	0.0	0.0	0.0	4.1	14.3	100.0 ( 49)
$\chi^2(df)$																122.906(2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2.4	16.8	5.3	4.4	14.2	4.4	13.3	6.2	1.8	6.2	2.7	2.7	0.9	3.5	5.3	100.0 ( 113)
251~350만원	14.0	13.2	8.3	9.9	14.5	5.8	7.0	7.9	3.7	5.4	1.7	3.7	1.2	1.2	2.5	100.0 ( 242)
351~500만원	19.0	13.7	7.8	9.2	8.0	5.9	5.7	6.5	5.3	6.1	4.3	2.9	2.5	2.4	0.6	100.0 ( 510)
501~600만원	15.3	11.5	10.8	9.5	7.8	6.4	9.5	6.8	5.8	6.4	3.7	2.7	2.0	1.0	0.7	100.0 ( 295)
601만원 이상	16.1	16.1	10.3	8.6	6.8	10.7	5.3	4.6	6.8	4.4	3.2	2.1	2.5	1.6	1.1	100.0 ( 571)
$\chi^2(df)$																100.694(56)***
연령																
20대	7.5	19.4	13.4	9.0	9.0	6.0	17.9	1.5	3.0	1.5	0.0	3.0	0.0	3.0	6.0	100.0 ( 67)
30대	15.5	13.9	10.0	9.1	8.2	8.1	7.0	6.2	6.3	5.0	3.1	2.8	2.0	1.9	1.0	100.0 (1,119)
40대 이상	19.1	14.3	6.6	8.3	10.3	6.2	5.3	6.4	4.0	7.0	4.2	2.6	2.8	1.5	1.5	100.0 ( 545)
$\chi^2(df)$																61.820(28)***

주: ①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②육아휴직 급여 현실화③부모의 육아권 보장 ④부모의 노동권 보장 ⑤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⑦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⑧종합적 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 ⑨육아시간 지원 ⑩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⑪출산-양육 세제 개선 ⑫의료비 지원 강화 (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⑭기타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⑮(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의 1순위 응답 비율은 16.3%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으나, 2순위가 포함(20.6%)되면서 한 단계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1순위 응답률 14.3%에서 2순위 포함 24.1%로 향상됨에 따라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끝으로, '부모의 육아권 보장'의 1순위 및 1,2순위 종합 응답비율은 각각 9.1%와 19.1%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2-17〉 저출산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1+2순위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6.3	4.3	20.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5	8.8	16.2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4.3	9.8	24.1
(4) 육아시간 지원	5.4	6.6	12.0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6.9	6.2	13.1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8.8	8.5	17.3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9.1	10.0	19.1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8.9	8.1	17.0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3.4	5.5	8.9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5.5	9.5	15.0
(11) 의료비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2.7	6.4	12.0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1.8	2.7	4.5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1.3	1.6	2.9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1	2.5	4.6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6.1	9.5	15.5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라) 소결

저출산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인식한 목표 달성률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열다섯 가지의 정책 과제 중, '달성되었다'와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 40.6%, '기타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 34.4%, '양육지원체계(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9.1%,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

원 등) 포용적 가족 정책' 26.5% 순이었다. 한편,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 과제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11.1%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노동권'(13.8%)과 '육아권 보장'(14.3%)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률을 보였다.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는 첫 자녀의 연령,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전 범주에서 가장 성과가 뛰어났던 과제로 지목되었다.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의 1순위(24.9%)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4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성과가 미흡하였던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의 1순위(20.0%)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2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1순위 응답률 15.0%에서 2순위 포함 25.1%로 상승함에 따라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현 정부의 저출산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의 1순위 응답 비율은 16.3%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으나, 2순위가 포함(20.6%)되면서 한 단계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1순위 응답률 14.3%에서 2순위 포함 24.1%로 향상됨에 따라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 나. 전문가 정책 성과 평가

2019~2020년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하의 응답자 특성은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정책의 전문가 의견조사에 공통된다.

### 1) 저출산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저출산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는 2020년 조사에서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81.0%인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이었고, 그 다음으로 78.0%인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

자녀지원 등'으로 나타나 저출산정책 중 보건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달성도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역시 78.0%로 달성도 인식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가 21.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달성도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아동수당이 2019년 4월 이후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지급하게 되었고, 2019년 9월 이후로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54.7%에서 2020년 46.0%로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2-18〉 저출산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물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25.5	3.5	100.0(106)	22.0	3.5	100.0(10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4.7	4.4	100.0(106)	46.0	4.2	100.0(100)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51.9	4.5	100.0(106)	48.0	4.3	100.0(100)
(4) 육아시간 지원	49.1	4.3	100.0(106)	51.0	4.3	100.0(100)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65.1	4.7	100.0(106)	60.0	4.6	100.0(100)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34.0	4.1	100.0(106)	44.0	4.1	100.0(100)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37.7	4.0	100.0(106)	39.0	4.1	100.0(100)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1.7	5.5	100.0(106)	78.0	5.3	100.0(100)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47.2	4.5	100.0(106)	56.0	4.7	100.0(100)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66.0	4.7	100.0(106)	63.0	4.9	100.0(100)
(11) 의료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외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70.8	5.2	100.0(106)	81.0	5.4	100.0(100)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72.6	5.1	100.0(106)	78.0	5.4	100.0(100)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57.5	4.7	100.0(106)	63.0	5.0	100.0(100)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50.0	4.5	100.0(106)	53.0	4.7	100.0(100)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47.2	4.3	100.0(106)	49.0	4.5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3) 세부 결과는 부록 14에 수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12.



## 2) 저출산정책 성과평가 순위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 기준으로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이 15.0%,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이 12.0%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형평성을 담보하는 비용 지원 확대,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연령의 순차적 확대,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가정의 양육비 경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초기 양육의 구조에서 정기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육아비용에 대한 부분적 감면 추진, 육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의 공공성 확보, 아동의 기본권 및 생존권을 보호하는 아동가족지원정책과 연계, 아동과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 지원-수당 조정)’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양육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보육부담의 지속적인 경감, sub-group별 정책요구의 현실적인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을 1순위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누리과정에 명시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통합교육과정을 통해서 놀이 중심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하고 사회적 협의와 구성원의 노력을 이끌어냄, 놀이중심·유아중심·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된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2순위로는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이 18.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와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이 각각 13.0%로 그 뒤를 이었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을 2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기본인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는 현장 마련,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유보 통합 프로그램 및 유초 연계 프로그램의 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를 2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대상 연령 확대로 자녀 양육비 지원 효과 증진,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수요자에게 구체적인 성과로 인식됨,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가시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국가가 아동양육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추후에도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 저출산 극복대책으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국가 수준에서 분명하게 입증한 제도가 아동수당 도입이며 이를 연령별로 확대 등으로 제시하였다.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를 2순위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예: 난청어린이 대상 보청기 지원을 통한 언어장애 및 사회부적응 가능성 최소화)의 실현,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의 증가, 실질적 혜택의 체감 증진, 영유아의료비지원 및 임신출산의료비 경감을 통한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 지원과정과 내용을 온·오프라인에서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여 인지도 상승 및 정책 수혜감 가시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전반적인 의료지원체계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표 IV-2-19〉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0년 조사		
	1순위	2순위	1+2순위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3.0	3.0	6.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0	4.0	8.0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3.0	3.0	6.0
(4) 육아시간 지원	-	3.0	3.0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8.0	4.0	12.0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1.0	1.0	2.0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1.0	2.0	3.0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34.0	13.0	47.0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2.0	4.0	6.0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15.0	12.0	27.0
(11) 의료비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9.0	13.0	22.0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3.0	7.0	10.0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3.0	9.0	12.0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12.0	18.0	30.0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2.0	4.0	6.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 기준으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이 1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1.0%로 그 뒤를 이었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은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에서는 3번째였으나,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에서도 2번째로 나타났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삶의 질 제고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가치적 측면에 대한 지원의 미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가시적인 정책 기조의 미비,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삶의 질 향상 방안 구축 미비, 가임기 연령인 20-30대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음, 출산율과 직접 관련된 요인에 대한 질 제고 정책 마련 미흡,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인식되지 않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보이지 않음,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못함, 삶의 질에 대한 정의 및 내용 등의 구체성 부족, 과도한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 전환 실패,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 홍보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을 1순위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놀이중심 교육이 기존의 교육과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놀이중심의 효과가 무엇인지가 모호함, 누리과정의 개정이었으나 현장의 실행능력이 뒤따르지 못함,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사 인력의 비전문성, 놀이환경의 부족,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 내용의 질적 차이 확대, 놀이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 및 현장 이해 부족, 부모의 학습에 대한 강박관념 및 실외 자연 놀이 환경 부족, 조기 사교육에 대한 경쟁적 교육투자 등을 제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공급의 문제, 실질적 단축 미흡, 제도적 제안과 현실의 부조화, 정책적 시도는 좋았으나 대체인력 지원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제도는 바람직하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직종 있음, 민간기업에 확산이 안됨 등을 제시하였다.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2순위로는 ‘부모의 육아권 보장’이

15.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와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이 각각 14.0%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의 육아권 보장’을 2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형태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와 기피요인 제거 실패,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되지 못함,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부모가 육아를 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여론 형성 실패, 대부분의 출산·육아정책이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남성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지 못함, 민간기업까지 육아권 보장 안됨,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권을 개인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는 인식, 부모의 육아권보다는 노동권을 중시하여 돌봄정책 강화를 우선, 민간의 일·가정 양립 지원 부족, 부모가 영유아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보다는 보육 의존도를 높임 등을 제시하였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를 2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서 강조한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전반에 걸쳐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자체가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 및 협력이 필요한 과제인데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당면한 가정의 문제로만 남아 있음, 저출산 패러다임이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출산을 제고에 머물러 있음, 삶의 질 제고하는 패러다임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의 정책 설정 미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활동 미비, 자녀가 있음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등을 제시하였다.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을 2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급격하게 3~5세 연령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다 보니 진정한 놀이 중심이기 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교육 시장 확대, 표면적으로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바뀐다 해도 우리 사회의 경쟁 의식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잠재적으로는 비놀이적 학습이 중요시됨, 놀이중심에 대한 부모 인식개선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표 IV-2-20〉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0년 조사		
	1순위	2순위	1+2순위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33.0	14.0	47.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0	6.0	17.0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8.0	8.0	16.0
(4) 육아시간 지원	1.0	11.0	12.0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3.0	5.0	8.0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6.0	4.0	10.0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9.0	15.0	24.0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	-	-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	3.0	3.0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5.0	5.0	10.0
(11) 의료비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	2.0	2.0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	-	-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0	6.0	8.0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15.0	14.0	29.0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7.0	7.0	14.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3) 저출산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 기준으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육아권 보장’이 15.0%,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이 14.0%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삶의 질이 높아져야 결혼 및 출산을 할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안정적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적 지원이 있어도 결혼 및 출산 의지가 생기기 어려움, 현재 자신에 대해 불안한 사람들이 자녀를 갖기는 어려움, 저출산이 아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삶의 전환에 중점 등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육아권 보장’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부모의 노동권만 보장하는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육아권 보장으로 전환, 이미 부모인 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 마련 추구, 근로하는 부모들에게 근로시간 단축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소득 축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모의 육아시간을 찾아주는 정책으로 전환, 육아권을 보장하는 것이 취업 부모의 자녀양육

을 위한 지원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임, 육아권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권리로 인정될 때 보다 적극적인 보장이 가능, 부모의 육아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산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임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을 1순위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출산·양육 등을 논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정보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지원체계는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의미가 없음, 부모가 일하는 동안 하루 5-8시간 씩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것이 일반화된 보육시스템을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 맞춤형 문제해결 시스템 제공, 복지 및 교육 뿐 아니라 기업 및 노동계에서 참여하는 인프라 구축 필요, 육아지원의 다양화 속에 선택과 집중 필요,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을 정리 및 종합하여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부모, 맞벌이 등)에 따라 육아지원 요구도나 방법이 다르므로 다양한 측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예산과 공급 모두를 원스톱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표 IV-2-21〉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할 과제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0년 조사		
	1순위	2순위	1+2순위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32.0	10.0	42.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0	14.0	23.0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1.0	6.0	17.0
(4) 육아시간 지원	2.0	6.0	8.0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	5.0	6.0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5.0	2.0	7.0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15.0	11.0	26.0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0	3.0	5.0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4.0	-	4.0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1.0	6.0	7.0
(11) 의료비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	-	-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	4.0	4.0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	7.0	7.0
(14) (놀이중심)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4.0	3.0	7.0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14.0	22.0	36.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4) 저출산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

저출산정책을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돌봄, 아동 정책을 묶은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위의 5개 정책 범주 각각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요소는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적절성(relevance), 포괄성(inclusiveness), 노력(effort), 대응성(responsiveness), 추진체계(governance),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된다(권기현, 2010: 44-59). 이하 평가요소는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정책에 공통된다. 평가요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권기현, 2010: 44-59).

- (1) 효과성: 목표성취-(가시적인, 가치 있는) 결과가 나타났는가?
- (2) 효율성: 비용 등 투입 대비 선출 및 대상 설정(targeting)의 적절성
- (3) 형평성: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가?
- (4) 적절성: 가치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즉 전체적인 성과의 정도가 전체 욕구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가?
- (5) 포괄성: 정책의 대상과 내용 설계에 있어 (기존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포괄하여 전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화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인가?
- (6) 노력: 정책수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노력을 위한 역량이나 노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평가요소임.)
- (7) 대응성: 성취된 정책 결과가 해당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주는가? 즉 정책이 수혜자/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는가?

저출산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결과를 보면 노력(effort)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평가요소에서 7점 척도 기준으로 부정평가(1+2+3)가 긍정평가(5+6+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노력(effort)의 경우만 긍정평가가 56.0%이고, 다른 평가요소들은 긍정평가가 15.0~3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결과를 반영

하고 있다. 효율성(efficiency)에서는 그동안 투입한 예산에 비해 출산을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형평성(equity)에서도 저출산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포괄성(inclusiveness)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점에 있어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적절성(relevance)과 대응성(responsibility)에 있어서도 실제 수요자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진체계(governance)에 있어서도 저출산정책의 관리체계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IV-2-22〉 저출산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단위: %(명), 점

요소	1	2	3	잘 안된 편 (1+2+3)	4 (중간)	5	6	7	잘 된 편 (5+6+7)	계수	7점 평균
1. 효과성	17.0	25.0	24.0	66.0	15.0	18.0	1.0	0.0	19.0	100.0(100)	3.0
2. 효율성	15.0	23.0	28.0	66.0	19.0	13.0	2.0	0.0	15.0	100.0(100)	3.0
3. 형평성	4.0	9.0	26.0	39.0	37.0	13.0	11.0	0.0	24.0	100.0(100)	3.8
4. 적절성	11.0	20.0	23.0	54.0	25.0	19.0	2.0	0.0	21.0	100.0(100)	3.3
5. 포괄성	7.0	7.0	23.0	37.0	32.0	18.0	13.0	0.0	31.0	100.0(100)	3.9
6. 노력	2.0	6.0	7.0	15.0	29.0	36.0	17.0	3.0	56.0	100.0(100)	4.5
7. 대응성	5.0	21.0	23.0	49.0	30.0	16.0	5.0	0.0	21.0	100.0(100)	3.5
8. 추진체계	3.0	15.0	19.0	37.0	40.0	13.0	10.0	0.0	23.0	100.0(100)	3.8
9.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4.0	17.0	28.0	49.0	24.0	19.0	8.0	0.0	27.0	100.0(100)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5) 소결

저출산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는 2020년 조사에서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81.0%인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이었고, 그 다음으로 78.0%인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으로 나타나 저출산정책 중 보건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달성도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역시 78.0%로 달성도 인식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가 21.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달성도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아동수당이 2019년 4월 이후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지급하게 되었고, 2019년 9월 이후로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 기준으로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이 15.0%,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혁신’이 12.0%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 기준으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혁신’이 1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1.0%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 기준으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육아권 보장’이 15.0%,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이 14.0%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결과를 보면 노력(effort)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평가요소에서 7점 척도 기준으로 부정평가(1+2+3)가 긍정평가(5+6+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노력(effort)의 경우만 긍정평가가 56.0%이고, 다른 평가요소들은 긍정평가가 15.0~30.1%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 3. 면담자료 분석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저출산정책과 관련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가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E: 확실히 최근에는 사용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3개월 동안 썼었고, 주변에 맞벌이인 엄마들을 보면 대부분 유연근무제를 해서 남편이랑 시간을 나눠서 아이 등하원을 나눠서 하고, 예전보다는 기업에서 남자들이 쓰는 육아 휴직에 대한 인식도 좋아진 것 같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모든 케이스를 아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비율이 좀 많아졌고, 남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여자들은 힘든 부분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남자들이 쉴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복직을 하거나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 나.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C: 제 주변이나 저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거 같아요. 차라리 선별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희 육아하는 엄마들끼리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좋긴 한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육아가 나아진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동수당은 육아의 소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사교육 확대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A: 아동수당이 육아에 대한 소비에 도움을 주려고 시작된 거라면, 첫째 아이 엄마들과 아동수당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럼 학원 하나 더 보낼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육아 소비에 도움이라고 하면 도움이라고 하겠지만, 육아 자체로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금액보다는 제도나 다른 부분이 개선되어야 육아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동수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서비스 지원 확대에 비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E: 집집마다 10만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뿐이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큰 예산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아까 말한 만 3세까지 지원을 확실하게 해 준다던지, 기관을 보내지 않아도 엄마들이 덜 부담함을 느낄 수 있게 가정양육을 더 지원을 해준다던

지, 아니면 베이비시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월 200만원씩 쓰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예산을 더 쓴다든지, 그쪽으로 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의 정책이다라고 확실하게 있으면, 학원이나 하나 더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나라가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있어야 확실하게 인식이 있어야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10만원을 주는 걸로는 사실 이게 공중에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의미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돈인 것 같아요. 사실 주면, 용돈처럼 받는 거라 좋기는 좋지만, 이걸 나라에서 커다란 부담을 지면서까지 줘서, 실제로 받은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액수인데, 이게 계속 가도 되는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한테 세금이나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 4. 계량 분석

### 가. 저출산에 대한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효과 분석

#### 1) 개요

광주광역시에는 2021년부터 출생육아수당을 1인당 최대 680만원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가 출산할 시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정책이다(경향신문, 2020.6.11.). 광주광역시의 이러한 정책은 최근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출산지원금을 증대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고(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9: 284),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되었던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육아 인프라 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정책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증대로 자녀를 가진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출산율 증대를 불러온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지역이 출산율은 낮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2년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으나(민규량, 2019: 113)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9: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이 저출산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이에 따른 역량 집중과제로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8-9).

다른 한편으로 2006년 이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으며, 그동안의 예산 증가는 서비스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어, OECD 주요국에 대비하면 현금지출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박선권, 2020a: 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 및 질 제고 뿐 아니라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방안(대상, 금액)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8-22).

육아를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지원정책은 아동수당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고, 모든 만7세 미만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므로 시군구별 변이가 크지 않다. 이에 비해 출산지원금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시군구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저출산에 대응하는 현금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실제 합계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주로 시군구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데이터, 변수 및 분석방법

### 가) 데이터 및 변수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국가통계포털의 2012~2018년 데이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육통계 자료 및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자료<sup>4)</sup>를 결합하여 229개 시군구 및 7개년도(2012~2018년)의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각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각 시군구의 출산지원금, 국공립어린이집공급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각 시군구의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유치원공급률,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중, 가임기 여성(25~39세) 순이동자수를 사용하였다. 재정자립도는 각 시군구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였고(김미곤 외, 2019: 341),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군구의 재정투입을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김미곤 외, 2019, 272; 이상협·이철희·홍석철, 2016: 129). 가임기 여성(25~39세) 순이동자수는 각 시군구별 가임기 여성(25~39세)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출산지원금 및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같은 육아정책이 가임기 여성을 각 시군구로 유입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출산율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김미곤 외, 2019: 286).

종속변수인 합계출산율과 통제변수인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중, 가임기 여성(25~39세) 순이동자수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시군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변수에 따라서는 2018년까지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의 2018년까지의 자료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중 출산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는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중 지자체 출산지원금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중

4) 보건복지부(2013).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201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2018b).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지자체 출산지원금 자료는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별로 출산순위별로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도와 시군구의 출산지원금을 합산하고(분할지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환산),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출산순위별 출생아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출산순위별 출산지원금을 가중평균 함으로써 출산지원금 변수를 구성하였다(김미곤 외, 2019: 271).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중 지자체 출산지원금 자료는 2012년부터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2012~201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출산지원금은 100만원 단위로 계산하였다.

독립변수 중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는 보육통계에서 시군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시군구별 0~5세 인구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통제변수 중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과 유치원공급률은 보육통계의 시군구별 국공립외어린이집정원과 교육통계서비스의 시군구별 유치원 원아수를 시군구별 0~5세 인구로 나누어 구성하였다(민규량, 2019: 120-121).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유치원공급률은 백분율(퍼센트) 단위로 계산하였다. 어린이집공급률은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유치원공급률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치원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돌봄에 중점을 두는 어린이집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국공립유치원이라고 해서 돌봄기능이 사립유치원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와 그 이전을 구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을 모형에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 나)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군구 특성 및 각 연도별로 공통적으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군구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고정효과 이외에 성과변수의 과거값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는 모형인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ellano와 Bond(1991)가 제시한 차분 GMM(difference GMM), Arellano 와 Bover(1995) 및 Blundell과 Bond(1998)가 제시한 시스템 GMM(System GMM)을 사용하였다. 차분 GMM에 대해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식 (1)에서는 우변에 성과변수의 과거값( $Y_{it-1}$ ) 및 고정효과( $U_i$ )를 포함하였으나, 식(2)에서는 차분을 통해 고정효과( $U_i$ )를 제거하였다.

$$Y_{it} = \alpha + \sum_{k=1}^m \beta_k X_{k,it} + \delta Y_{it-1} + \mu_i + \nu_{it} \quad \text{식(1)}$$

$$\Delta Y_{it} = \sum_{k=1}^m \beta_k \Delta X_{k,it} + \delta \Delta Y_{it-1} + \Delta \nu_{it} \quad \text{식(2)}$$

그런데 식(2)에서  $cov(\Delta Y_{it-1}, \Delta \nu_{it}) \neq 0$ 이고 이는  $\Delta Y_{it-1}$ 과  $\Delta \nu_{it}$  사이에는 상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Delta \nu_{it}$ 과 상관관계가 없는 도구변수가 필요하다. 차분 GMM에서는 이러한 도구변수로 해당 변수의 과거값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Y_{it-1}$ 에 대해서는 각  $t$ 에 대해  $Y_{i1}, \dots, Y_{i,t-2}$  이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형은 동적패널모형 중에서 차분 GMM(difference GMM)에 해당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검사를 위해 차분 GMM 뿐 아니라, 시스템 GMM(system GMM)과 고정효과 모형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차분 GMM의 경우 변수의 변화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모형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제도가 시행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변수의 변화 정도가 크지 않고 개체별 추세(incidental trends)에 차이가 적은 평균정상성 가정(mean stationarity assumption) 하에서는 차분방정식(difference equation)과 수준방정식(level equation)을 결합한 시스템 GMM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한치록, 2017: 185).

종속변수인 합계출산율은 최근 추세가 안정화되어 있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 GMM 사용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동적패널모형의 핵심 가정은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차항의 차분값이 1계 자기상관은 유의하지만 2계 자기상관은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에서는 오차항 차분값의 1계 및 2계 자기상관 검정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자기상관 검정 결과에서는 1계 자기상관이 유의한 반면, 2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아야 동적패널모형의 가정을 충족할 수 있다(한치록, 2017: 192).

동적패널모형을 사용 시 독립변수가 강외생적(strictly exogenous)인가 약외생적(weakly exogenous)인가에 따라 모형이 달라질 수 있다(한치록, 2017: 176). 독립변수가 강외생적이라는 것은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과거의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독립변수가 약외생적이라는 것은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과거의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동적패널에서 독립변수를 강외생적으로 가정한 경우는 독립변수의 도수변수로 해당 변수의 차분값을 사용하지만 약외생적으로 가정한 경우는 도구변수로 해당 변수의 과거값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동적패널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강외생적인 경우와 약외생적인 경우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3)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

#### 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현재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

##### (1) OLS 및 고정효과모형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을 보면 OLS 분석에서 출산지원금의 계수는 0.02241로 나오는데 이는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02241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합계출산율의 기준을 1이라고 가정할 시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하면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약 2.2%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계수가 0.017951로 나오는데 이는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017951(약 1.8%)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시 약 2.6~3%를 높이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김미곤 외, 2019: 274)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선행연구는 2005년 이후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김미곤 외, 2019: 262),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2년 이후 데이터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높았고, 출산지원금은 낮은 시기가 포함되었으므로 계수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1% 증가할 시 OLS 분석에서는 합계출산율이 0.01007 (약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증가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음(-)의 계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군구 및 연도 더미를 포함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증가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출산지원금	.02241*(.01015)	.017951*(.00771)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1007***(.00169)	-.00386(.00242)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036(.0009)	-.00375*(.00165)
유치원공급률	-.00285(.00195)	-.00222(.00289)
재정자립도	-.0024**(.00079)	-.00009(.00139)
사회복지예산비중	-.00865***(.00084)	.00093(.00134)
가입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4***(.000008)	.00001*(.000006)

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군구 및 연도더미 포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동적패널모형: 강외생성 가정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을 강외생적(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이전 연도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지 않음)이라고 가정한 동적패널분석 결과를 보면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두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상관 검정 결과는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두 1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고 2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적패널모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은

고정효과모형의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은 고정효과모형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유의미하고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이전 연도 합계출산율을 통제했을 시 출산지원금의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출산지원금 증가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4-2〉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동적패널모형: 강외생성 가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합계출산율	.47494***(.11811)	.51205***(.0953)
출산지원금	.007(.00801)	.00607(.008)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3(.0032)	-.00493(.00284)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386*(.00137)	-.00353*(.00172)
유치원공급률	-.00408(.00322)	-.00403(.00322)
재정자립도	-.00176(.00153)	-.00009(.00211)
사회복지예산비중	-.001(.00173)	-.00411(.00211)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08(.000006)	.000009†(.000006)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0	.0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2709	.2437

주: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 (3) 동적패널모형: 약외생성 가정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을 약외생적(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이전 연도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음)이라고 가정한 동적패널분석 결과를 보면 차분 GMM에서는 유의도 10%에서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01888(약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GMM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은 차분 GMM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시스템 GMM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00515(약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 검정 결과는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두 1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고 2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적패널모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동적패널모형에서 약외생성 가정을 통해 출산지원금에 미치는 이전 연도의 합계 출산율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지원금 증가가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출산지원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원래 출산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역시 동적패널모형에서도 다른 모형과 마찬가지로 합계 출산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IV-4-3〉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동적패널모형: 약외생성 가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합계출산율	.28309 <sup>**</sup> (.08957)	.54138 <sup>***</sup> (.07036)
출산지원금	-.01888 <sup>†</sup> (.01036)	-.00377(.00959)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492(.00386)	-.00515 <sup>***</sup> (.00147)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231 <sup>†</sup> (.0014)	-.00079(.00123)
유치원공급률	-.00495(.00302)	-.0015(.00288)
재정자립도	-.00231(.00147)	-.0027 <sup>†</sup> (.00161)
사회복지예산비중	-.00052(.00158)	-.00875 <sup>***</sup> (.00144)
가입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1 <sup>†</sup> (.000005)	.00002 <sup>**</sup> (.000006)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0	.0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2959	.1944

주: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sup>†</sup> $p < .1$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 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

##### (1) OLS 및 고정효과모형

지금까지의 분석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당해 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 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임신 후 출산까지 10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해 연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OLS 분석에서는 이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증가는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서울과 같이 국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지자체가 이전부터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시군구별 추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포함한 경우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합계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변화량이 합계출산율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증가한 지자체는 원래부터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자체이므로, 2017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전국적인 하락 추세에서 특히 더 하락했을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특히 더 하락한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증가로 인해 하락의 정도를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전년도 출산지원금 증가는 OLS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시군구별 추세 미포함)에서는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은 1.95~2.53%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에서 시군구별 추세를 포함할 시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증가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합계출산율이 원래부터 높은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4〉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934 <sup>***</sup> (.00168)	-.00078(.00256)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018(.00081)	-.00169(.00121)
유치원공급률	-.00304(.00189)	-.00008(.0023)
출산지원금	.02531 <sup>*</sup> (.01067)	.01951 <sup>*</sup> (.00793)
재정자립도	-.00274 <sup>**</sup> (.00078)	.00116(.00132)
사회복지예산비중	-.00796 <sup>***</sup> (.00082)	-.00103(.00132)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6 <sup>***</sup> (.000009)	.00003 <sup>***</sup> (.000008)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군구 및 연도더미 포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동적패널모형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의 영향을 동적패널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전의 분석에서는 강외생성 가정과 약외생성 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전년도 변수이기 때문에 약외생성 가정은 사용하지 않고 강외생성 가정만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영향은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고,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은 차분 GMM에서만 10%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차분 GMM에서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할 시 합계출산율은 약 0.52%가 증가하였다. 차분 GMM에서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나, 시스템 GMM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는 2017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시스템 GMM이 적합한 모형이 되기 위한 평균정상성 가정(mean stationarity assumption)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동적패널모형에서 전년도 합계출산율을 통제한 합계출산율의 변화량에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변화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년도 합계출산율에 의해 합계출산율의 변화량 역시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합계출산율과 밀접한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보다 동적패널모형의 결과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4-5〉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합계출산율	.35533 <sup>**</sup> (.10441)	.45215 <sup>***</sup> (.10416)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00523 <sup>†</sup> (.00284)	.00198(.00349)
국공립외어린이집 공급률	.00257 <sup>*</sup> (.00111)	.002(.00124)
유치원공급률	.00268(.00238)	.00325(.00272)
출산지원금	-.00325(.0062)	-.00752(.00648)
재정자립도	.00051(.00121)	.00322 <sup>†</sup> (.00185)
사회복지예산비중	-.00204(.00144)	-.00271(.00208)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2 <sup>***</sup> (.000004)	.00003 <sup>***</sup> (.000005)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0	.0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3555	.2875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sup>†</sup> $p < .1$ ,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3) 2SLS(2stage least squares) 모형

동적패널모형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을 민규량(2019)이 사용한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2 stage least squares: 2SLS)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11월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민규량, 2019: 128), 이를 도구변수로 이용하면 각 지자체의 상황과 무관하게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증가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영향을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013년 이후의 교차항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SLS로 분석하였다.

이전의 분석 데이터는 출산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2~2018년의 7개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가 2012년 11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이 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2009~2018년의 10개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증가는 합계출산율이 10%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1% 증가는 서울시 합계출산율을 0.895%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동적패널모형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표 IV-4-6〉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2SLS)

변수	2SLS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895 <sup>†</sup> (.00479)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055(.00073)
유치원공급률	-.00425(.00263)
재정자립도	.00067(.00144)
사회복지예산비중	-.00121(.00147)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6 <sup>***</sup> (.000008)

-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데이터는 2009~2018년 데이터를 사용  
 3) 도구변수는 서울과 2013년 이후의 교차항을 사용  
 4) 2SLS에서는 시도 더미와 연도 더미 포함

<sup>†</sup> $p < .1$ , <sup>\*\*\*</sup> $p < .001$ .

## 4)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

## 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및 고정효과모형)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1% 증가할 시 합계출산율이 OLS 분석에서는 .00171(약 0.17%) 증가하였고, 고정효과모형(시군구별 추세 미포함)에서는 .00274(약 0.27%) 증가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을 투입한 모형은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시군구의 여건과는 별개로 외생적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군구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에 기반한 일종의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차분모형의 핵심 가정은 정책 시행 이전에 각각의 그룹이 공통 추세(common trends)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다(Angrist & Jorn-Steffen, 2014: 262; Angrist & Jorn-Steffen, 2017: 183).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룹별 추세(group specific trends)를 투입할 수 있다(Autor, 2003; Beasley & Burgess, 2004). 이에 따라 시군구별 추세를 고정효과모형에 투입한 결과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1% 증가 시 합계출산율은 .0017(약 0.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978***(.00167)	-.00846**(.00266)	-.01536***(.00419)
2017년 이후	-.19931***(.01352)	-.2938***(.03333)	-.41531***(.03693)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0171*(.00085)	.00274**(.00093)	.0017*(.00082)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02(.00074)	-.00383*(.00152)	-.00573***(.00112)
유치원공급률	-.0019(.00181)	-.00186*(.00297)	-.00604*(.00301)
출산지원금	.03904***(.01021)	.01587*(.0078)	.00508(.00583)
재정자립도	-.00171*(.00081)	-.00012(.00138)	-.00117(.00112)
사회복지예산비중	-.00808***(.00084)	.00095(.00133)	.00247*(.00141)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5***(.000008)	.00001†(.000006)	-.0000002(.000004)

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군구 및 연도더미 포함

†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동적 패널모형: 강외생성 가정)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강외생적(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이전 연도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가정한 동적패널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1% 증가할 시 합계출산율이 차분 GMM에서는 .00268(약 0.27%) 증가하였고, 시스템 GMM에서는 .00276(약 0.28%) 증가하였다. 자기상관 검정 결과는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두 1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고 2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적패널모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4-8〉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동적패널모형: 강외생성 가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합계출산율	.45923***(.11696)	.50219***(.09601)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709†(.00362)	-.00823†(.00339)
2017년 이후	-.09943***(.01299)	-.09698***(.01307)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0268**(.00098)	.00276**(.00098)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382**(.00138)	-.00339†(.00174)
유치원공급률	-.00351(.00321)	-.00339(.00325)
출산지원금	.00555(.00788)	.00484(.00794)
재정자립도	-.00148(.00152)	0.00006(.00209)
사회복지예산비중	-.00072(.00171)	-.00406†(.00209)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05(.000006)	.000008(.000006)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0	.0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2589	.2381

주: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동적 패널모형: 약외생성 가정)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약외생적(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이전 연도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받음)으로 가정한 동적패널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1% 증가할 시 합계출산율이 차분 GMM에서는 .00259(약 0.26%) 증가하였고, 시스템 GMM에서는 .00244(약



0.24%) 증가하였다. 자기상관 검정 결과는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두 1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고 2계 자기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적패널모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모형에서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 계수가 .0017~.0028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 1% 증가할 시 합계출산율을 약 0.17~0.28%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을 때와는 달리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유효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IV-4-9〉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동적패널모형: 약외생성 가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합계출산율	.2658**(.09246)	.5149***(.07224)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447(.00431)	-.00707***(.0017)
2017년 이후	-.10381***(.0122)	-.10431***(.013)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0259**(.00081)	.00244**(.00073)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251†(.00133)	-.00096(.00122)
유치원공급률	-.0035(.00305)	.00021(.00286)
출산지원금	-.02348†(.01026)	-.00832(.00981)
재정자립도	-.00233(.0015)	-.00313†(.00164)
사회복지예산비중	-.00049(.00157)	-.00951***(.00146)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08(.000006)	.00002*(.000006)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0	.0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2793	.1585

주: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소결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출산지원금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출산지원금은 100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을 약 1.8~2.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을 1이라고 가정 시). 그러나 이러한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동적패널모형을 통해 이전 연도 합계출산율을 통제 한 후에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

이 낮은 지역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을 모형에 투입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7년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합계출산율을 약 0.17~0.2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을 1이라고 가정 시). 이러한 결과는 동적패널모형에서도 유의미하였다. 이런 점에서 2017년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정책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육아 인프라 확충 정책은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어떻게 관련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정책 효과를 증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V

##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성과분석

- 0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02 부모, 전문가, 원장 및 교사의 의견(설문조사)
- 03 부모, 원장 및 교사 면담자료 분석
- 04 계량 분석



## V.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성과분석

### 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가.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 1) 보건복지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평가한 보육·돌봄정책에 해당하는 과제는 모두 4개로 정리되며, 해당 연도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1-1〉 보건복지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보육정책)

과제명	2017년	2018년	2019년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보통	우수	다소우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미흡	보통	미흡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다소미흡	다소우수	보통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보통	보통

자료: 1)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9-10.

2)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7-9.

3)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6-8.

##### 가)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다소우수」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111). 2019년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지원체계 모형 개발·현장 적용방안 마련·시행 준비, 보육료 단가 인상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 반영, 가정양육 가구의 긴급·일시적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를 주요 성과로 보았고, 성과지표 중 「보육료 지원 만족도」는 그 특성상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111).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정책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족도 이외에 양육비용 부담 감소 등 다른 성과지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V-1-2〉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보육 관련 분석과 대비책 분석이 구체적 통계 등으로 적절히 제시됨. -표준보육비용 법적 기반 마련 의미 높음.
의견수렴 적절성	-부모, 교사, 어린이집,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영역구분 및 내용으로 분류되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됨.
성과지표 적절성	-보육료 지원 만족도는 개선 초기 이후부터 그 속성상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가짐.
추진 일정 충실성	-추진일정의 난이도와 추진의 성실도가 인정됨.
정책소통의 충실성	-홍보의 적극성과 홍보 성과 제시는 대체로 우수함.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특이사항 없음.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이 한계를 보임.
정책목표 달성도	-추가지표들이 양호하게 제시되었음. -보육정책의 출산을 유인효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연구용역 등)으로 정책기여도를 제시하면 좋을 것임. -체계개편의 성과 중 상당 부분이 연장반 전담교사가 적재적소에 조달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 -보육교사 지원은 인건비뿐 아니라 교사 1인당 상시 담당 영유아수 축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111-112.

#### 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미흡」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113).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관련 후속조치,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전면시행 및 운영체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보았으나, 성과지표 적절성 및 정책목표 기여도 등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113).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전면 시행이 시작되었으므로 어린이집 질관리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정교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V-1-3〉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의 적절성 및 난이도 인정되나, 정책분석을 위한 수량적, 통계적 정보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법 위반 등으로 사후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향성을 가져야 함
의견수렴 적절성	-보육전문가, 현장단체, 학계, 지자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조정 노력 양호함
성과지표 적절성	-의무평가제 전면 시행의 첫 해이므로 평가결과 관련 지표가 도출되지 못한 것은 이해되나, 추진일정처럼 구성된 성과지표가 객관성 측면에서 좋은 지표인지 검토 필요(등급향상비율 등)
추진 일정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소통의 충실성	-홍보 적극성에 비해 홍보 성과가 약함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평가항목 축소가 실질적으로 평가의 간소화를 가져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반대로 평가항목 축소로 필요한 부분을 평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 -여러 사건 이후, 영유아기 정신건강 관련 교육이 추가된 것은 매우 적절함
성과지표 달성도	-달성함
정책목표 달성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로 어린이집을 일정 수준으로 질 관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113-114.

#### 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115). 국공립어린이집 654개소 확충(목표 550개소 대비 초과 달성),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조사 및 명단 공표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주요 성과로 보았고, 성과지표에서는 단순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소수」보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115). 현 정부 정책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소수보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1-4〉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논리만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별 어린이집 사각지대, 과소 어린이집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의견수렴 적절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노력 양호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객관성이 향상되었으나,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추진 일정 충실성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준수 존재
정책소통의 충실성	-정책소통의 성과는 충실하고 양호함.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여건 상황변화 대처 노력 양호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함.
정책목표 달성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노력이 인정되며, 향후 지속적 노력 요구됨.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115-116.

### 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93).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있는 것을 주요 성과로 보면서도, 신규 개소수는 실수요와 매칭이 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타당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초등돌봄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보건복지부, 2020b: 93).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시작 단계에 있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초등돌봄의 수요 측면을 생각할 때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꾸고 있는가를 고려하는 지표가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V-1-5〉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돌봄에 대한 공백을 메우려는 정책 중요도 및 난이도 인정됨. -기존 인프라 및 서비스 기관 간 협력-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거시적이지만 치밀한 사업 시행 기반의 틀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1일 생활시간에 따른 돌봄 유형 간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의견수렴 적절성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 활동이 돋보임. -교육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초등돌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력 강화 필요
성과지표 적절성	-신규 개소수는 실수요와 매칭이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타당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나홀로 있는 시간이 감소한 아동 수’(전년도 지표)가 더 바람직해보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 지표는 아동과 함께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가 향후 추가되면 좋을 것임.
추진 일정 충실성	-추진일정의 타당성과 추진노력 우수
정책소통의 충실성	-홍보노력과 성과의 내용이 차별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돌봄수행 인력에 대한 권리보장과 명확한 책임 기준, 근무여건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일자리 질 관리)도 필요함. -다함께돌봄 사업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성과지표 달성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지표 미달성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처 필요
정책목표 달성도	-성과보고회 개최 자체가 성과지표 외 목표한 성과 달성도를 가능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취약계층에서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는 고무적임.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93-94.



## 2) 교육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교육부에서 자체 평가한 유아교육 및 돌봄정책 부문에 해당하는 과제는 모두 3개로 정리되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V-1-6〉 교육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유아교육·돌봄정책)

관리과제명	2017	2018	2019
출발선의 평등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다소우수	우수	보통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	-	보통
운중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보통	매우우수	보통

자료: 1) 교육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8-10.  
 2) 교육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6-8.  
 3) 교육부(2018).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39, 100.

## 가)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b: 114).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확충,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 하위법령 개정을 주요 성과로 보았고, 교육현장의 적정시기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교육부, 2020b: 114).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등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등 유치원 공공성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대한 컨설팅 확대 등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V-1-7〉 「출발선의 평등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적절성	보통	-관리 과제설정, 성과지표 설정 및 환류 소통계획은 적절히 계획되었음. -'16~'18년 국공립 취원을 고려 시, '21년 40% 목표 달성을 위해 '19년은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2. 집행과정 충실성	보통	-분기별 추진 이행 계획이 세밀하게 수립되고 추진되었음.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과제를 적기에 완료하였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3. 정책효과	보통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운영 모델 다양화를 통해 공립유치원 수요를 원활하게 반영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사립유치원 단계적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회계집행과정의 투명성 강화하였음.
4. 대표성 및 노력도	보통	-전반적인 출발선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 전과정의 노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력이 엇보이나,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40%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 신설, 운영모델 다양화(공영형, 협동조합형 등) 범부처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자료: 교육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115.

### 나)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b: 116).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 계획 26.8만명 대비 실제 이용학생수 29만명으로 목표치 초과 달성,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확대(2017년 대비 29.3% 증가), 돌봄전담사 근무 질 향상(초단시간 근무자 없음), 돌봄전담사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편운영 등을 통한 돌봄전담사의 처우 및 전문성 향상 기여, 돌봄교실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5%가 만족을 주요 성과로 보았으나, 학교 공간 부족 및 돌봄인력 확보·관리 문제가 지적되었다(교육부, 2020b: 116). 초등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처우에 있어서 정규직 교직원과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한 돌봄인력의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V-1-8〉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적절성	다소미흡	-범부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 마련 이후 단계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인프라를 확충 중으로, 지속적으로 협력이 추진되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이행 필요
2. 집행과정 충실성	다소미흡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여 이용학생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미선발 등 학부모의 불만요소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등 조치를 통해 돌봄 수용을 늘리고 대기자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3. 정책효과	보통	-정책에 대한 학부모 인식이 긍정적이며,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 목표치 달성 -단계적인 돌봄 인프라 확충과 수요 충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4. 대표성 및 노력도	보통	-돌봄의 질 및 서비스 편의 제공 측면에서 소통 및 장애 제거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정책 시행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봄.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봄. 돌봄에 종사하는 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 전담사를 선택 가능한 중요한 직책으로 자리잡았다는 건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보여짐.

자료: 교육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117.

### 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b: 184). 초등돌봄 이용 학생 수 증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부처 간 안내사이트를 통합하여 「정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구축 추진을 주요 성과로 보았으나, 지역 돌봄 기관 공간 확보의 어려움,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가 지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교육부, 2020b: 184).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에서 특히 학교밖 마을돌봄의 경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 이용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초등돌봄 이용 학생 수는 모든 초등돌봄 기관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V-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적절성	보통	-관리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설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양성평등의 기반을 확립하고 전국 학부모의 절실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함. -성과지표로 ‘초등돌봄 이용 학생 수’를 설정한 것은 대체로 적절함. 하지만 교육청별 지역별 학생 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초등돌봄 학생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별 편차 발생이 가능함.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 하에 영유아아동에 대한 돌봄을 성과지표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소외계층의 ‘초등돌봄 이용 학생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다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찾아내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18년 자체평가 지적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
2. 집행과정 충실성	보통	-추진일정이 계획대로 준수되었음. -초등돌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역별로 골고루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온종일 돌봄 정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은 긍정적임.
3. 정책효과	보통	-‘초등돌봄 이용 학생 수’ 성과지표 목표치 37.2만명, 실적 39.6만명으로 초과달성됨. -온종일 돌봄서비스 수혜인원이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진출을 촉진하여 양성평등의 기반이 확립되었으며, 돌봄서비스라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년에 추진예정인 ‘정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은 돌봄서비스의 체계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대표성 및 노력도	보통	-교육청별 지역별 학생 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초등돌봄 학생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한계가 있음.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소외계층의 ‘초등돌봄 이용 학생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다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찾아내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초등돌봄뿐만 아니라 영유아돌봄에 대하여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교육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185-186.

###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돌봄정책과 관련된 관리과제는 모두 1개로 정리되며, 자체평가한 2019년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1-10〉 여성가족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돌봄정책)

관리과제명	2019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보통

주: 2017년,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해당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등급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8.

#### 가) 자녀 돌봄 지원 강화

「자녀 돌봄 지원 강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5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및 아이돌보미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 제고로 미스매칭 및 대기 완화,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자격 강화·사례 중심 교육 강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을 주요 성과로 보았고, 아이돌보미 교육체계 개편 및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 세부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54-55).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아이돌보미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가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표 V-1-11〉 「자녀 돌봄 지원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추진일정의 충실성(5점)	충실	-당해연도 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 추진이 인정됨.
2. 현장 의견 수렴 (5점) * 협업우수사례(2점 가점)	우수 *보통	-현장의견 수렴 노력이 충실하게 이행됨. -사립유치원 파업 사태에 적절히 대응함.
3. 지표①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수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25%	보통 (88%)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여 미달성함.
4. 지표② : 아이돌보미 수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25%	우수 (109%)	-아이돌보미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에 대한 자질 교육, 서비스 향상 노력도 중요함.
5. 지표③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25%	우수 (100%)	-목표치를 달성함.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6. 지표④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수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25%	우수 (110%)	-신규지표임에도 목표치에 달성함. 새로운 활동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함.
7. 정책효과의 국민체감도(10점)	우수	-국민체감도 평가인단 평가 결과 우수함
8.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10점)	보통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9. 정책 환류의 충실성(5점)	보통	-이용자 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산정하는 등 정책 환류가 이루어짐.
10. 사회적 가치 평가(5점)	우수	-민관협력,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통해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필요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56.

## 2. 부모, 전문가, 원장 및 교사의 의견(설문조사)

### 가. 부모의 만족도, 요구도 및 정책 성과 평가

#### 1) 영유아 및 초등 교육 및 돌봄 서비스

##### 가)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 (1) 이용률

최근 2년 이내에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유아 대상 서비스 중 10개 항목에 대한 이용 경험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2020년 조사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중 78.7%가 어린이집을 이용해 본 것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유치원 41.4%, 공공 산후도우미 22.5%, 시간제 보육/돌봄 20.2%, 육아종합지원센터 19.9%, 아이돌보미 1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률은 각각 5.2%, 4.6%로 5% 내외의 낮은 이용률을 나타내었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2019년과 2020년 조사 결과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서비스 항목의 이용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 이용률 10.0%(2019년 조사)에서 18.8%(2020년 조사)로 8%p 가량 상승하였으며 시간제보육/돌봄 또한 14.0%(2019년 조사)에서 20.2%(2020년 조사)로 약 6%p 가량 상승하였다.

〈표 V-2-1〉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이용률	계(수)	이용률	계(수)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10.0	100.0(1,013)	18.8	100.0 (1,731)
2.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6.7	100.0(1,013)	10.7	100.0 (1,731)
3.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19.6	100.0(1,013)	22.5	100.0 (1,731)
4. 민간 산후도우미	14.4	100.0(1,013)	18.3	100.0 (1,731)
5. 어린이집 이용	73.1	100.0(1,013)	78.7	100.0 (1,731)
6. 유치원 이용	38.3	100.0(1,013)	41.4	100.0 (1,731)
7. 시간제보육/돌봄	14.0	100.0(1,013)	20.2	100.0 (1,731)
8. 육아종합지원센터	17.2	100.0(1,013)	19.9	100.0 (1,731)
9. 공동육아나눔터	3.9	100.0(1,013)	4.6	100.0 (1,731)
10. 지역아동센터	3.7	100.0(1,013)	5.2	100.0 (1,731)

주: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이용률이 20%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30.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을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아이돌보미와 민간베이비시터, 시간제 보육/돌봄 서비스 및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이 더 높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민간베이비시터/돌보미, 민간산후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시간제 보육/돌봄 이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지역규모가 클수록 민간베이비시터/돌보미 이용률이 높은 반면, 반대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①

단위: %(명)

구분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베이비시터/ 돌보미	공공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 산후도우미	계(수)
전체	18.8	10.7	22.5	18.3	100.0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20.6	9.6	13.5	19.8	100.0 ( 384)
유아부모	18.9	11.5	20.7	18.8	100.0 ( 784)
영아부모	17.4	10.5	31.1	16.7	100.0 ( 563)
$\chi^2(df)$	1.510(2)	0.975(2)	43.014(2)***	1.64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8	13.9	23.4	19.2	100.0 (1,050)
외벌이	11.4	4.7	21.0	16.3	100.0 ( 632)
해당없음	28.6	20.4	20.4	24.5	100.0 ( 49)
$\chi^2(df)$	36.615(2)***	39.410(2)***	1.411(2)	3.567(2)	

구분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배이비서터/ 돌보미	공공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 산후도우미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9.5	5.3	22.1	14.2	100.0 ( 113)
251-350만원	15.3	3.7	26.4	11.2	100.0 ( 242)
351-500만원	17.3	6.5	23.1	16.9	100.0 ( 510)
501-600만원	15.6	9.2	20.3	16.3	100.0 ( 295)
601만원 이상	23.1	19.4	21.4	24.5	100.0 ( 571)
$\chi^2(df)$	11.755(4)*	71.440(4)***	3.503(4)	25.824(4)***	
연령					
20대	11.9	6.0	35.8	9.0	100.0 ( 67)
30대	17.4	10.6	24.8	17.3	100.0 (1,119)
40대 이상	22.4	11.6	16.0	21.5	100.0 ( 545)
$\chi^2(df)$	8.045(2)*	1.984(2)	23.717(2)***	8.261(2)*	
지역구분					
대도시	18.6	14.2	22.8	20.1	100.0 ( 710)
중소도시	17.8	8.6	21.5	16.6	100.0 ( 764)
읍면	22.2	7.4	24.5	18.3	100.0 ( 257)
$\chi^2(df)$	2.444(2)	15.512(2)***	1.107(2)	3.04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표 V-2-3>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②

구분	단위: %(명)						계(수)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 보육/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 나눔터	지역아동 센터	
전체	78.7	41.4	20.2	19.9	4.6	5.2	100.0(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78.6	64.8	28.4	10.9	3.1	7.6	100.0( 384)
유아부모	90.6	57.7	22.7	21.4	4.7	5.2	100.0( 784)
영아부모	62.2	2.7	11.0	24.0	5.5	3.6	100.0( 563)
$\chi^2(df)$	157.511(2)***	520.698(2)***	48.560(2)***	26.344(2)***	2.968(2)	7.41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8	39.3	25.1	20.5	4.8	5.3	100.0(1,050)
외벌이	76.9	44.1	11.6	19.0	4.0	4.1	100.0( 632)
해당없음	77.6	49.0	24.5	20.4	10.2	16.3	100.0( 49)
$\chi^2(df)$	2.031(2)	4.973(2)	45.868(2)***	0.555(2)	4.147(2)	13.858(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72.6	24.8	16.8	20.4	4.4	7.1	100.0( 113)
251-350만원	73.1	36.8	14.0	18.6	2.9	2.9	100.0( 242)
351-500만원	81.2	41.0	19.8	20.2	4.1	6.1	100.0( 510)
501-600만원	78.0	43.1	21.4	20.3	4.7	3.7	100.0( 295)
601만원 이상	80.4	46.1	23.1	20.0	5.8	5.8	100.0( 571)
$\chi^2(df)$	9.920(4)*	20.483(4)***	9.804(4)*	0.337(4)	3.692(4)	5.907(4)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 보육/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 나눔터	지역아동 센터	계(수)
연령							
20대	58.2	13.4	14.9	22.4	4.5	7.5	100.0( 67)
30대	79.2	37.4	20.2	21.2	5.2	4.5	100.0(1,119)
40대 이상	80.2	53.0	20.7	17.1	3.5	6.4	100.0( 545)
$\chi^2(df)$	17.639(2) <sup>***</sup>	59.535(2) <sup>***</sup>	1.253(2)	4.153(2)	2.398(2)	3.563(2)	
지역구분							
대도시	77.6	40.7	17.9	20.1	3.4	4.6	100.0( 710)
중소도시	77.6	42.7	20.2	20.7	5.5	5.4	100.0( 764)
읍면	84.8	39.3	26.5	17.1	5.4	6.2	100.0( 257)
$\chi^2(df)$	6.788(2) <sup>*</sup>	1.116(2)	8.613(2) <sup>*</sup>	1.561(2)	4.209(2)	1.03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만족도

최근 2년간 이용하였던 영유아 교육 및 돌봄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긍정 응답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이 71.9%, 유치원 이용이 69.6%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59.4%, 시간제보육/돌봄 54.4%, 공공 산후도우미 53.2%, 아이돌보미 52.0%, 공동육아나눔터 51.3% 순으로 나타나,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5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만족비율이 가장 낮은 서비스는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로서 36.0%의 만족비율을 보였고, 지역 아동센터는 48.9%, 민간 산후도우미는 49.2%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 비율로 조사되었다.

2019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아이돌보미, 민간 산후도우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3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7개 서비스에서 만족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간제보육/돌봄 서비스의 경우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만족비율이 9%p 하락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7~8%p 가량 하락하였다. 반면,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 비율은 43.6%(2019년 조사 결과)에서 52.0%(2020년 조사 결과)로 8.4%p 상승하였다.



〈표 V-2-4〉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43.6	3.3	52.0	3.4	100.0 ( 325)
2.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39.7	3.2	36.0	3.2	100.0 ( 186)
3.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56.8	3.6	53.2	3.5	100.0 ( 389)
4. 민간 산후도우미	48.6	3.4	49.2	3.5	100.0 ( 317)
5. 어린이집 이용	73.4	3.9	71.9	3.9	100.0 (1,362)
6. 유치원 이용	74.7	3.9	69.6	3.8	100.0 ( 716)
7. 시간제보육/돌봄	63.4	3.8	54.4	3.5	100.0 ( 349)
8. 육아종합지원센터	58.6	3.6	59.4	3.6	100.0 ( 345)
9. 공동육아나눔터	60.0	3.6	51.3	3.6	100.0 ( 80)
10. 지역아동센터	56.8	3.6	48.9	3.4	100.0 ( 90)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만족비율이 60%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30.

이어서,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해당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공 산후 도우미의 경우, 응답자의 73.1%가 불만족한 이유로 '서비스의 질/내용의 수준이 낮아서'를 선택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의 불만족한 이유로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50.0%)이 가장 많았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불만족한 이유로는 '주위에 가까이 없음'(32.0%)이 가장 많아 이용 절차의 복잡성, 낮은 접근성을 지적하였다.

〈표 V-2-5〉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신청 후 서비스 원하는 시간/시기에 걸림(공급부족)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42.2	8.9	11.1	6.7	8.9	6.7	13.3	2.2	100.0(45)
2.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46.9	9.4	0.0	6.3	21.9	12.5	3.1	0.0	100.0(32)
3.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73.1	3.0	4.5	4.5	0.0	6.0	1.5	7.5	100.0(67)
4. 민간 산후도우미	50.0	7.9	2.6	5.3	26.3	0.0	5.3	2.6	100.0(38)

구분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공급부족)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5. 어린이집 이용	37.7	2.9	5.8	5.8	17.4	7.2	10.1	13.0	100.0(69)
6. 유치원 이용	35.1	5.4	8.1	2.7	21.6	10.8	8.1	8.1	100.0(37)
7. 시간제보육/돌봄	35.6	6.7	13.3	8.9	8.9	6.7	17.8	2.2	100.0(45)
8. 육아종합지원센터	24.0	16.0	4.0	32.0	12.0	4.0	8.0	0.0	100.0(25)
9. 공동육아나눔터	16.7	50.0	0.0	33.3	0.0	0.0	0.0	0.0	100.0( 6)
10. 지역아동센터	20.0	20.0	10.0	20.0	10.0	20.0	0.0	0.0	100.0(10)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3) 영유아 교육 및 돌봄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 및 돌봄정책 중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 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의 인지도, 만족도 등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중 46.2%(약간 알고 있음 27.4%+알고 있음 18.8%)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알고 있었으나, 41.6%(거의 알지 못함 26.2%+전혀 알지 못함 15.4%)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하면 평균 3.1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 부모와 비교하여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6〉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 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거의 알지 못함	③ 보통	④ 약간 알고 있음	⑤ 알고 있음	계(수)	평균
전체	15.4	26.2	12.2	27.4	18.8	100.0 (1,731)	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5.4	30.7	13.3	27.1	13.5	100.0 ( 384)	2.9
유아부모	12.9	24.9	13.1	28.4	20.7	100.0 ( 784)	3.2
영아부모	19.0	25.0	10.1	26.1	19.7	100.0 ( 563)	3.0
$\chi^2(df)/F$				22.729(8)**			5.4**

구분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거의 알지 못함	③ 보통	④ 약간 알고 있음	⑤ 알고 있음	계(수)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5	24.8	11.3	30.6	18.9	100.0 (1,050)	3.1
외벌이	16.3	28.6	14.1	22.5	18.5	100.0 ( 632)	3.0
해당없음	24.5	26.5	6.1	22.4	20.4	100.0 ( 49)	2.9
$\chi^2(df)/F$			19.772(8)*				3.3*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3.9	27.4	15.0	13.3	20.4	100.0 ( 113)	2.8
251~350만원	16.1	25.6	10.3	31.0	16.9	100.0 ( 242)	3.1
351~500만원	15.1	25.9	14.5	25.1	19.4	100.0 ( 510)	3.1
501~600만원	12.9	24.7	10.8	33.6	18.0	100.0 ( 295)	3.2
601만원 이상	15.1	27.3	11.0	27.5	19.1	100.0 ( 571)	3.1
$\chi^2(df)/F$			27.310(16)*				1.7
연령							
20대	14.9	23.9	13.4	22.4	25.4	100.0 ( 67)	3.2
30대	16.1	25.6	10.6	27.3	20.4	100.0 (1,119)	3.1
40대 이상	14.1	27.9	15.2	28.1	14.7	100.0 ( 545)	3.0
$\chi^2(df)/F$			16.920(8)*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이러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만족 비율은 29.0%(만족 24.3%+매우 만족 4.7%)로 나타났다. 보통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24.3%, 불만족 18.1%, 매우 불만족 6.0%, 매우 만족 4.7% 순으로 응답되었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0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V-2-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6.0	18.1	46.9	24.3	4.7	100.0(1,731)	3.0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2	16.1	51.0	25.5	2.1	100.0( 384)	3.0
유아부모	6.6	16.7	46.3	23.9	6.5	100.0( 784)	3.1
영아부모	5.7	21.3	44.8	24.2	4.1	100.0( 563)	3.0
$\chi^2(df)/F$			19.589(8)*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	18.0	44.1	26.2	5.5	100.0(1,050)	3.1
외벌이	5.7	17.9	51.9	21.2	3.3	100.0( 632)	3.0
해당없음	6.1	22.4	40.8	24.5	6.1	100.0( 49)	3.0
$\chi^2(df)/F$			14.492(8)				1.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6.2	19.5	50.4	18.6	5.3	100.0( 113)	3.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계(수)	평균
251~350만원	10.3	17.4	48.8	21.1	2.5	100.0 ( 242)	2.9
351~500만원	4.1	15.9	49.4	24.9	5.7	100.0 ( 510)	3.1
501~600만원	6.1	14.6	46.8	26.8	5.8	100.0 ( 295)	3.1
601만원 이상	5.8	21.9	43.1	25.0	4.2	100.0 ( 571)	3.0
$\chi^2(df)/F$			29.863(16)*				3.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1	12.2	51.9	18.0	7.9	100.0 ( 189)	3.0
대졸 이상	5.5	18.8	46.2	25.1	4.3	100.0 (1,542)	3.0
$\chi^2(df)/t$			19.094(4)***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어린이집 보육지원체제 변화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50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의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5%가 ‘연장보육 이용이 용이해졌으므로’를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기본보육시간 이외에 실시되는 연장보육(16:00~19:30)에 대해 만족해하며,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37.0%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를 응답하여, 보육지원체제의 변화로 인한 보육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타내었다. 이 외에 ‘비용 부담이 낮아지므로’ 역시 14.7%로 응답되어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보다 중소/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즉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연장보육 이용 용이성’을 만족 이유로 꼽은 비율이 더 높았으며,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비용 부담이 낮아짐’을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어린이집 보육지원체제 변화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연장보육 이용이 용이해졌으므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비용 부담이 낮아지므로	기타	계(수)
전체	45.5	37.0	14.7	2.8	100.0 (503)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45.3	43.4	9.4	1.9	100.0 (106)
유아부모	43.7	37.4	15.5	3.4	100.0 (238)
영아부모	48.4	32.1	17.0	2.5	100.0 (159)
$\chi^2(df)$			6.00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7	38.7	14.4	2.1	100.0 (333)
외벌이	45.8	35.5	14.2	4.5	100.0 (155)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 이용이 용이해졌으므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비용 부담이 낮아지므로	기타	계(수)
해당없음	60.0	13.3	26.7	0.0	100.0 ( 15)
$\chi^2(df)$			7.529(6)		
지역구분					
대도시	37.3	38.7	20.3	3.8	100.0 (212)
중소도시	51.6	35.9	11.5	0.9	100.0 (217)
읍면	51.4	35.1	8.1	5.4	100.0 ( 74)
$\chi^2(df)$			19.238(6)**		

주: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만족(만족+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503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한편,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의 변화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한 부모 417명을 대상으로 불만족한 이유를 물었다.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지므로’를 46.5%가 응답하여 불만족하는 응답자 절반 정도가 보육지원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연장보육 이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므로’가 38.4%,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가 12.0%로 나타났다.

〈표 V-2-9〉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비용 부담이 높아지므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	기타	계(수)
전체	46.5	38.4	12.0	3.1	100.0 (417)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42.7	30.5	22.0	4.9	100.0 ( 82)
유아부모	47.0	39.9	10.4	2.7	100.0 (183)
영아부모	48.0	40.8	8.6	2.6	100.0 (152)
$\chi^2(df)$			11.70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2	36.6	11.8	2.4	100.0 (254)
외벌이	43.0	40.9	11.4	4.7	100.0 (149)
해당없음	35.7	42.9	21.4	0.0	100.0 ( 14)
$\chi^2(df)$			4.873(6)		
지역구분					
대도시	46.7	40.0	10.0	3.3	100.0 (180)
중소도시	47.3	35.9	14.1	2.7	100.0 (184)
읍면	43.4	41.5	11.3	3.8	100.0 ( 53)
$\chi^2(df)$			2.208(6)		

주: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417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정책인 공영형과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23.7%(약간 알고 있음 19.9%+알고 있음 3.8%)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53.2%(거의 알지 못함 38.0%+전혀 알지 못함 15.2%)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부모 중 절반 이상은 공영형 유치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며 분석하면, 평균 2.6점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표 V-2-10〉 공영형 유치원 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거의 알지 못함	③ 보통	④ 약간 알고 있음	⑤ 알고 있음	계(수)	평균
전체	15.2	38.0	23.1	19.9	3.8	100.0(1,731)	2.6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3.0	35.9	28.9	18.2	3.9	100.0( 384)	2.6
유아부모	13.9	37.2	23.1	21.2	4.6	100.0( 784)	2.7
영아부모	18.5	40.5	19.2	19.2	2.7	100.0( 563)	2.5
$\chi^2(df)/F$			21.376(8)**				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9	41.8	21.1	21.0	3.2	100.0(1,050)	2.6
외벌이	18.7	32.0	26.4	18.4	4.6	100.0( 632)	2.6
해당없음	20.4	34.7	22.4	16.3	6.1	100.0( 49)	2.5
$\chi^2(df)/F$			28.913(8)***				0.1
연령							
20대	17.9	26.9	26.9	22.4	6.0	100.0( 67)	2.7
30대	16.5	38.5	20.7	19.7	4.5	100.0(1,119)	2.6
40대 이상	12.1	38.3	27.5	19.8	2.2	100.0( 545)	2.6
$\chi^2(df)/F$			21.087(8)**				0.8

주: 공영형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부모의 부담금을 줄이고 엄격한 공공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공영형 유치원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9.9%는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맞벌이 가구는 11.8%, 외벌이 가구는 7.3%의 공영형 유치원 이용률을 보여, 외벌이 보다 맞벌이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형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16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만족 비율은 50.0%(만족 36.2%+매우 만족 13.8%)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은 공영형 유치원 이용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5점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V-2-11〉 공영형 유치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평균	
	이용 비율	계(수)	①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매우 만족		
전체	9.9	100.0 (1,168)	0.9	10.3	38.8	36.2	13.8	100.0 (116)	3.5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2.0	100.0 ( 384)	0.0	10.9	34.8	43.5	10.9	100.0 ( 46)	3.5
유아부모	8.9	100.0 ( 784)	1.4	10.0	41.4	31.4	15.7	100.0 ( 70)	3.5
$\chi^2(df)/F$	2.682(1)				2.579(4)				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8	100.0 ( 679)	1.3	13.8	37.5	33.8	13.8	100.0 ( 80)	3.5
외벌이	7.3	100.0 ( 452)	0.0	3.0	45.5	42.4	9.1	100.0 ( 33)	3.6
해당없음	8.1	100.0 ( 37)	0.0	0.0	0.0	33.3	66.7	100.0 ( 3)	4.7
$\chi^2(df)/F$	6.234(2)*				12.042(8)				2.9
지역구분									
대도시	10.3	100.0 ( 467)	2.1	12.5	43.8	31.3	10.4	100.0 ( 48)	3.4
중소도시	8.6	100.0 ( 513)	0.0	9.1	31.8	43.2	15.9	100.0 ( 44)	3.7
읍면	12.8	100.0 ( 188)	0.0	8.3	41.7	33.3	16.7	100.0 ( 24)	3.6
$\chi^2(df)/F$	2.804(2)				4.355(8)				1.4

주: 공영형 유치원을 이용해본 11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공영형 유치원에 만족하는 이유는 알아보았다. ‘부모 부담금이 낮아지므로’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이 높아지므로’ 20.7%, ‘교육 및 서비스 질이 높아지므로’ 12.1%, ‘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므로’ 8.6%,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므로’ 3.4% 순으로 응답되었다. 공영형 유치원을 이용한 부모는 비용 측면과 공공성/질 측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2〉 공영형 유치원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부모 부담금이 낮아지므로	유치원의 공공성이 높아지므로	교육 및 서비스의 부모의 의견이 높아지므로 잘 반영되므로	사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므로	계(수)	
전체	55.2	20.7	12.1	8.6	3.4	100.0 (58)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60.0	24.0	8.0	4.0	4.0	100.0 (25)
유아부모	51.5	18.2	15.2	12.1	3.0	100.0 (33)
$\chi^2(df)$			2.14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6	26.3	13.2	7.9	0.0	100.0 (38)
외벌이	64.7	5.9	11.8	5.9	11.8	100.0 (17)
해당없음	33.3	33.3	0.0	33.3	0.0	100.0 ( 3)
$\chi^2(df)$			10.719(8)			
지역구분						
대도시	65.0	20.0	15.0	0.0	0.0	100.0 (20)
중소도시	61.5	19.2	7.7	11.5	0.0	100.0 (26)
읍면	25.0	25.0	16.7	16.7	16.7	100.0 (12)
$\chi^2(df)$			13.974(8)			

주: 공영형 유치원에 만족(만족+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58명의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공영형 유치원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가 46.2%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30.8%,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2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3〉 공영형 유치원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므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수)
전체	46.2	30.8	23.1	100.0 (13)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40.0	60.0	0.0	100.0 ( 5)
유아부모	50.0	12.5	37.5	100.0 ( 8)
$\chi^2(df)$		4.198(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0	25.0	25.0	100.0 (12)
외벌이	0.0	100.0	0.0	100.0 ( 1)
$\chi^2(df)$		2.438(2)		



구분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므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수)
지역구분				
대도시	57.1	28.6	14.3	100.0 ( 7)
중소도시	25.0	50.0	25.0	100.0 ( 4)
읍면	50.0	0.0	50.0	100.0 ( 2)
$\chi^2(df)$		2.554(4)		

주: 공영형 유치원에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13명의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매입형 유치원의 인지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매입형 유치원을 알고 있는 비율은 21.6%(약간 알고 있음 18.0% + 알고 있음 3.6%)로 나타났으며, 알지 못하는 비율은 58.1%(거의 알지 못함 40.8% + 전혀 알지 못함 17.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매입형 유치원에 대하여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4〉 매입형 유치원 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거의 알지 못함	③ 보통	④ 약간 알고 있음	⑤ 알고 있음	계(수)	평균
전체	17.3	40.8	20.2	18.0	3.6	100.0 (1,731)	2.5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3.3	40.1	21.1	22.1	3.4	100.0 ( 384)	2.6
유아부모	16.6	40.7	19.6	18.8	4.3	100.0 ( 784)	2.5
영아부모	21.0	41.6	20.4	14.2	2.8	100.0 ( 563)	2.4
$\chi^2(df)/F$			19.076(8) <sup>*</sup>				7.3 <sup>***</sup>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9	42.6	19.4	19.9	3.2	100.0 (1,050)	2.5
외벌이	20.9	38.0	21.8	15.2	4.1	100.0 ( 632)	2.4
해당없음	22.4	40.8	16.3	14.3	6.1	100.0 ( 49)	2.4
$\chi^2(df)/F$			19.576(8) <sup>*</sup>				2.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1.2	45.1	19.5	9.7	4.4	100.0 ( 113)	2.3
251~350만원	23.6	35.5	24.4	12.8	3.7	100.0 ( 242)	2.4
351~500만원	18.2	38.6	20.4	18.8	3.9	100.0 ( 510)	2.5
501~600만원	15.3	42.4	20.7	18.3	3.4	100.0 ( 295)	2.5
601만원 이상	14.0	43.4	18.2	21.0	3.3	100.0 ( 571)	2.6
$\chi^2(df)/F$			29.716(16) <sup>*</sup>				2.2
연령							
20대	19.4	38.8	29.9	7.5	4.5	100.0 ( 67)	2.4
30대	19.0	40.5	18.4	18.1	3.9	100.0 (1,119)	2.5
40대 이상	13.4	41.8	22.8	19.1	2.9	100.0 ( 545)	2.6
$\chi^2(df)/F$			19.412(8) <sup>*</sup>				1.6

구분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거의 알지 못함	③ 보통	④ 약간 알고 있음	⑤ 알고 있음	계(수)	평균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9	43.4	20.6	9.5	1.6	100.0 ( 189)	2.2
대졸 이상	16.3	40.5	20.2	19.1	3.9	100.0 (1,542)	2.5
$\chi^2(df)/t$			18.399(4)**				-4.5***

주: 매입형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정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매입형 유치원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5.1%의 부모가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매입형 유치원을 이용하였던 6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비율은 36.7%(만족 30.0%+매우 만족 6.7%)로 나타났으며, 이를 5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3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15〉 매입형 유치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계(수)	평균
	이용 비율	계(수)	①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매우 만족		
전체	5.1	100.0 (1,168)	0.0	16.7	46.7	30.0	6.7	100.0(60)	3.3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6.5	100.0 ( 384)	0.0	12.0	44.0	36.0	8.0	100.0(25)	3.4
유아부모	4.5	100.0( 784)	0.0	20.0	48.6	25.7	5.7	100.0(35)	3.2
$\chi^2(df)/F$	2.214(1)				1.254(3)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	100.0 ( 679)	0.0	17.1	48.8	29.3	4.9	100.0(41)	3.2
외벌이	3.5	100.0 ( 452)	0.0	12.5	43.8	37.5	6.3	100.0(16)	3.4
해당없음	8.1	100.0( 37)	0.0	33.3	33.3	0.0	33.3	100.0( 3)	3.3
$\chi^2(df)/F$	4.168(2)				5.462(6)				0.2
지역구분									
대도시	5.4	100.0 ( 467)	0.0	12.0	60.0	24.0	4.0	100.0(25)	3.2
중소도시	5.3	100.0 ( 513)	0.0	22.2	37.0	29.6	11.1	100.0(27)	3.3
읍면	4.3	100.0( 188)	0.0	12.5	37.5	50.0	0.0	100.0( 8)	3.4
$\chi^2(df)/F$	0.361(2)				5.511(6)				0.2

주: 매입형 유치원을 이용해본 6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매입형 유치원을 이용하였을 때 만족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모 부담금이 낮아지므로’를 고른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서비

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31.8%, '유치원의 공공성이 높아지므로' 18.2%, '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므로' 9.1%,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므로' 4.5%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V-2-16〉 매입형 유치원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부모 부담금이 낮아지므로	교육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유치원의 공공성이 높아지므로	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므로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므로	계(수)
전체	36.4	31.8	18.2	9.1	4.5	100.0 (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6	42.9	21.4	7.1	0.0	100.0 (14)
외벌이	57.1	0.0	14.3	14.3	14.3	100.0 ( 7)
해당없음	0.0	100.0	0.0	0.0	0.0	100.0 ( 1)
$\chi^2(df)$			8.474(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	57.1	28.6	0.0	14.3	0.0	100.0 ( 7)
351~500만원	60.0	0.0	20.0	0.0	20.0	100.0 ( 5)
501~600만원	0.0	25.0	50.0	25.0	0.0	100.0 ( 4)
601만원 이상	16.7	66.7	16.7	0.0	0.0	100.0 ( 6)
$\chi^2(df)$			16.895(12)			
지역구분						
대도시	71.4	14.3	14.3	0.0	0.0	100.0 ( 7)
중소도시	9.1	54.5	18.2	18.2	0.0	100.0 (11)
읍면	50.0	0.0	25.0	0.0	25.0	100.0 ( 4)
$\chi^2(df)$			15.217(8)			

주: 매입형 유치원에 만족(만족+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22명의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매입형 유치원을 이용 시, 불만족하였던 부모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입형 유치원의 불만족 이유로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70.0%)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이어서 '부모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지므로'(20.0%),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므로'(10.0%)가 불만족 이유로 나타났다.

〈표 V-2-17〉 매입형 유치원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므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수)
전체	70.0	20.0	10.0	100.0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1.4	14.3	14.3	100.0 ( 7)
외벌이	100.0	0.0	0.0	100.0 ( 2)
해당없음	0.0	100.0	0.0	100.0 ( 1)
$\chi^2(df)$		5.102(4)		
지역구분				
대도시	100.0	0.0	0.0	100.0 ( 3)
중소도시	66.7	16.7	16.7	100.0 ( 6)
읍면	0.0	100.0	0.0	100.0 ( 1)
$\chi^2(df)$		5.595(4)		

주: 매입형 유치원에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10명의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나)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 (1) 이용률

최근 2년 이내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중 5개 항목에 대한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2020년 조사 기준,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중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이용률이 6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이 44.9%,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이 27.1%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는 7.0%, 다함께돌봄센터는 1.1%의 이용률에 그쳤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온종일돌봄/다함께돌봄센터,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의 이용률은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87.0%(2019년 조사)에서 69.9%(2020년 조사)로 감소하여 17.1%p의 차이로 대폭 감소하고,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역시 36.5%(2019년 조사)에서 27.1%(2020년 조사)로 9.4%p 감소하였다.

〈표 V-2-18〉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이용률	계(수)	이용률	계(수)
1. 초등돌봄교실	42.8	100.0 (353)	44.9	100.0 (554)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87.0	100.0 (353)	69.9	100.0 (554)
3. 지역아동센터	4.2	100.0 (353)	7.0	100.0 (554)
4. 온종일돌봄/다함께돌봄센터	2.5	100.0 (353)	1.1	100.0 (554)
5.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36.5	100.0 (353)	27.1	100.0 (554)

주: 1) 2019년은 '4. 온종일돌봄', 2020년은 '4. 다함께돌봄센터'로 조사함.  
 2)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이용률이 40%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35.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을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외별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는 맞벌이(23.8%)보다 외별이(33.3%)가구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률은 대도시 39.4%, 중소도시 44.6%, 읍면 58.5%로 분석되어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9〉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초등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학교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기타	계(수)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전체	44.9	69.9	7.0	1.1	27.1	100.0(5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6	73.0	8.6	1.6	23.8	100.0(315)
외별이	18.5	64.4	3.6	0.5	33.3	100.0(222)
해당없음	82.4	82.4	23.5	0.0	5.9	100.0( 17)
$\chi^2(df)$	107.764(2)***	5.876(2)	12.198(2)**	1.763(2)	9.972(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2.9	71.4	10.7	0.0	17.9	100.0( 28)
251~350만원	28.8	67.1	4.1	0.0	30.1	100.0( 73)
351~500만원	42.6	67.9	8.0	0.6	25.3	100.0(162)
501~600만원	40.6	67.9	6.6	0.0	28.3	100.0(106)
601만원 이상	56.2	73.5	7.0	2.7	28.1	100.0(185)
$\chi^2(df)$	18.452(4)**	1.949(4)	1.806(4)	7.125(4)	1.988(4)	

구분	초등돌봄교실	초등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계(수)
연령						
20대	75.0	100.0	25.0	0.0	25.0	100.0( 4)
30대	49.4	67.5	6.6	1.5	25.8	100.0(271)
40대 이상	40.1	71.7	7.2	0.7	28.3	100.0(279)
$\chi^2(df)$	6.279(2)*	2.867(2)	2.044(2)	0.784(2)	0.439(2)	
지역구분						
대도시	39.4	66.5	4.6	1.4	28.0	100.0(218)
중소도시	44.6	71.5	7.9	1.2	25.6	100.0(242)
읍면	58.5	73.4	10.6	0.0	28.7	100.0( 94)
$\chi^2(df)$	9.661(2)**	2.024(2)	4.107(2)	1.259(2)	0.48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만족도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020년 조사를 기준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한 긍정 응답 비율은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이 67.3%,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61.3%, 초등돌봄교실 60.3%로 나타나 60% 이상의 부모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53.8%, 다함께돌봄센터는 33.4%의 이용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2020년 조사에서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다함께돌봄센터의 만족비율은 약 10%p 감소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비율은 2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의 경우, 2019년 62.8%에서 2020년 67.3%의 만족도를 보여 4.5%p 상승하였다.

〈표 V-2-20〉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만족비율	5점 평균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1. 초등돌봄교실	70.9	3.9	60.3	3.6	100.0(249)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70.0	3.8	61.3	3.7	100.0(387)
3. 지역아동센터	73.3	3.9	53.8	3.7	100.0( 39)
4. 다함께돌봄센터	44.4	3.2	33.4	3.2	100.0( 6)
5.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62.8	3.7	67.3	3.7	100.0(150)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9년은 '4. 온종일돌봄', 2020년은 '4. 다함께돌봄센터'로 조사함.  
 3)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4)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만족비율이 60%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34.

다음으로,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매우 불만족+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대다수의 응답자인 70.6%가 불만족의 이유로 서비스의 낮은 질/내용을 꼽았다.

〈표 V-2-21〉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이용 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공급부족)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1. 초등돌봄교실	70.6	2.9	5.9	0.0	0.0	2.9	11.8	5.9	100.0 (34)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51.7	3.4	3.4	3.4	6.9	3.4	20.7	6.9	100.0 (29)
3. 지역아동센터	0.0	50.0	0.0	50.0	0.0	0.0	0.0	0.0	100.0 ( 2)
4. 다함께돌봄센터	50.0	0.0	0.0	0.0	0.0	0.0	0.0	50.0	100.0 ( 2)
5.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50.0	0.0	0.0	16.7	0.0	0.0	33.3	0.0	100.0 ( 6)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3) 초등돌봄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돌봄정책인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인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3%(약간 알고 있음 24.2%+알고 있음 5.1%)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48.3%(거의 알지 못함 32.5%+전혀 알지 못함 15.8%)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첫째자녀가 초등, 영아인 부모보다 유아인 부모가 본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외벌이보다 맞벌이 가구에서 인지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2〉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알지 못함	② 거의 알지 못함	③ 보통	④ 약간 알고 있음	⑤ 알고 있음	계(수)	평균
전체	15.8	32.5	22.4	24.2	5.1	100.0(1,731)	2.7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6.4	35.4	21.9	21.4	4.9	100.0( 384)	2.6
유아부모	14.5	30.5	21.2	27.8	6.0	100.0( 784)	2.8
영아부모	17.2	33.4	24.3	21.1	3.9	100.0( 563)	2.6
$\chi^2(df)/F$			15.741(8)*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4	32.7	21.0	26.8	5.2	100.0(1,050)	2.8
외벌이	18.2	32.0	24.2	20.7	4.9	100.0( 632)	2.6
해당없음	16.3	36.7	28.6	14.3	4.1	100.0( 49)	2.5
$\chi^2(df)/F$			14.884(8)				3.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0.6	32.3	23.8	18.5	4.8	100.0( 189)	2.5
대졸 이상	15.2	32.6	22.2	24.9	5.1	100.0(1,542)	2.7
$\chi^2(df)/t$			6.178(4)				-2.0*
지역구분							
대도시	15.4	32.1	23.9	23.7	4.9	100.0( 710)	2.7
중소도시	16.2	32.7	22.6	24.0	4.5	100.0( 764)	2.7
읍면	16.0	33.1	17.1	26.5	7.4	100.0( 257)	2.8
$\chi^2(df)/F$			8.210(8)				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다) 코로나19 관련 돌봄정책에 대한 의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휴원/휴교 하였을 때, 긴급돌



봄을 이용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41.1%는 긴급돌봄을 이용하였고 58.9%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가 유아인 가구에서 긴급돌봄 이용률이 48.3%, 영아 자녀 37.8%, 초등 자녀 31.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첫째 자녀가 유아인 가구에서 긴급돌봄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벌이(24.8%)에 보다 맞벌이(51.1%)가구, 대도시(37.7%)보다 읍면지역(49.4%)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3〉 긴급돌봄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전체	41.1	58.9	100.0 (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31.3	68.8	100.0 ( 384)
유아부모	48.3	51.7	100.0 ( 784)
영아부모	37.8	62.2	100.0 ( 563)
$\chi^2(df)$	34.848(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48.9	100.0 (1,050)
외벌이	24.8	75.2	100.0 ( 632)
해당없음	36.7	63.3	100.0 ( 49)
$\chi^2(df)/F$	113.114(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0.4	79.6	100.0 ( 113)
251~350만원	29.8	70.2	100.0 ( 242)
351~500만원	41.6	58.4	100.0 ( 510)
501~600만원	43.1	56.9	100.0 ( 295)
601만원 이상	48.7	51.3	100.0 ( 571)
$\chi^2(df)$	47.038(4)***		
연령			
20대	37.3	62.7	100.0 ( 67)
30대	45.2	54.8	100.0 (1,119)
40대 이상	33.2	66.8	100.0 ( 545)
$\chi^2(df)$	22.245(2)***		
지역구분			
대도시	37.7	62.3	100.0 ( 710)
중소도시	41.5	58.5	100.0 ( 764)
읍면	49.4	50.6	100.0 ( 257)
$\chi^2(df)$	10.68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712명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이용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가 71.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가 13.2%로 높았다.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5.9%),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2.8%), ‘비용지원이 되어서’(1.4%)도 긴급돌봄 이용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4〉 긴급돌봄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	비용 지원이 되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타	계(수)
전체	71.9	13.2	2.8	1.4	5.9	4.8	100.0 (712)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84.2	5.8	2.5	1.7	3.3	2.5	100.0 (120)
유아부모	71.8	14.0	2.1	1.1	6.3	4.7	100.0 (379)
영아부모	65.3	16.0	4.2	1.9	6.6	6.1	100.0 (213)
$\chi^2(df)$			16.818(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85.5	7.1	1.9	0.7	3.5	1.3	100.0 (537)
외벌이	26.8	35.0	6.4	2.5	14.0	15.3	100.0 (157)
해당없음	61.1	5.6	0.0	11.1	5.6	16.7	100.0 ( 18)
$\chi^2(df)$			233.599(1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3.5	8.7	8.7	0	17.4	21.7	100.0 ( 23)
251~350만원	41.7	29.2	2.8	4.2	11.1	11.1	100.0 ( 72)
351~500만원	63.7	17.9	3.8	1.9	7.5	5.2	100.0 (212)
501~600만원	78.0	11.0	2.4	0.8	3.1	4.7	100.0 (127)
601만원 이상	85.6	6.8	1.8	0.7	3.6	1.4	100.0 (278)
$\chi^2(df)$			99.007(20)***				

주: 긴급돌봄을 이용한 7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하였지만 자녀를 긴급돌봄에 보내지 않은 1,019명을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52.5%는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로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자녀의 질병 감염 걱정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22.1%,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어서’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5〉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신청을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공급부족)	주위에 가까이 없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기타	계(수)
전체	52.5	22.1	1.9	2.1	7.7	13.8	100.0(1,019)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7.6	22.0	1.5	2.3	6.1	10.6	100.0( 264)
유아부모	56.3	20.7	2.7	1.7	7.4	11.1	100.0( 405)
영아부모	44.3	23.7	1.1	2.3	9.1	19.4	100.0( 350)
$\chi^2(df)$				24.741(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5.2	15.2	2.5	2.3	10.1	14.6	100.0( 513)
외벌이	49.3	29.9	1.3	1.7	4.6	13.3	100.0( 475)
해당없음	58.1	16.1	0.0	3.2	12.9	9.7	100.0( 31)
$\chi^2(df)$				41.541(10)***			
지역구분							
대도시	53.6	19.7	2.5	2.0	8.1	14.0	100.0( 442)
중소도시	53.0	22.8	1.3	2.2	7.8	12.8	100.0( 447)
읍면	46.9	27.7	1.5	1.5	5.4	16.9	100.0( 130)
$\chi^2(df)$				8.225(10)			

주: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할 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현금지원’ 25.0%, ‘가족 돌봄 휴가’ 24.0%, ‘긴급돌봄’ 23.6%로서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연 근로제’ 9.6%, ‘육아휴직’ 9.5%, ‘아이돌봄 지원’ 7.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초등 부모, 외벌이, 월소득 25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현금 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족돌봄 휴가’, ‘긴급돌봄’, ‘육아휴직’, ‘유연 근로제’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맞벌이 가구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V-2-26〉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 시 도움이 될 만한 제도

단위: %(명)

구분	현금지원	가족돌봄 휴가	긴급돌봄	육아휴직	유연 근로제	아이돌봄 지원	기타	계(수)
전체	25.0	24.0	23.6	9.5	9.6	7.5	0.8	100.0(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29.7	23.7	20.3	7.3	9.9	8.1	1.0	100.0( 384)
유아부모	26.1	23.0	24.5	8.2	9.3	8.2	0.8	100.0( 784)
영아부모	20.2	25.8	24.5	13.0	9.8	6.2	0.5	100.0( 563)
$\chi^2(df)$					25.478(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8	25.8	27.3	11.0	10.2	7.0	0.8	100.0(1,050)
외벌이	35.8	21.5	17.6	7.3	8.9	8.2	0.8	100.0( 632)
해당없음	40.8	18.4	20.4	6.1	6.1	8.2	0.0	100.0( 49)
$\chi^2(df)$					84.737(1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6.9	15.0	16.8	5.3	7.1	8.0	0.9	100.0( 113)
251~350만원	33.1	22.7	20.7	7.4	7.4	7.9	0.8	100.0( 242)
351~500만원	26.7	21.8	22.4	9.0	11.2	8.4	0.6	100.0( 510)
501~600만원	22.0	25.4	25.1	12.5	5.8	8.1	1.0	100.0( 295)
601만원 이상	17.3	27.7	26.4	10.2	11.6	6.1	0.7	100.0( 571)
$\chi^2(df)$					76.308(24)***			
연령								
20대	29.9	28.4	17.9	14.9	3.0	4.5	1.5	100.0( 67)
30대	21.7	24.3	25.6	10.6	10.0	7.1	0.6	100.0(1,119)
40대 이상	31.2	22.9	20.0	6.6	9.5	8.8	0.9	100.0( 545)
$\chi^2(df)$					35.439(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 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평가

### 가)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한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목표 달성률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인식한 목표 달성률에 대해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총 열여덟 가지의 정책 과제 중, ‘달성되었다’와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27.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26.5%,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25.3%, ‘보육 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24.2%, ‘육아지원의 확대’ 23.4% 순이었다. 한편,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 과제는 ‘취학 전 출발선 평등’으로 12.5%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사립유치원 공공

성 강화'(16.7%)와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18.7%) 역시 비교적 낮은 긍정률을 나타냈다.

이상의 수치를 2019년도 조사와 비교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육아지원의 확대',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을 제외한 열두 가지 정책 과제의 긍정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의 경우,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4.7%p, 4.2%p 상승함으로써 가장 큰 변동을 나타냈다. 반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의 긍정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2.2%p, 1.8%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2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의 목표 달성률(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구분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 비율	5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5점 평균	계(수)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5.8	3.0	100.0(1,013)	27.9	3.0	100.0(1,731)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24.9	2.8	100.0(1,013)	23.1	2.8	100.0(1,731)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8.9	2.6	100.0(1,013)	16.7	2.6	100.0(1,731)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25.0	2.9	100.0(1,013)	25.3	2.9	100.0(1,731)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17.7	2.6	100.0(1,013)	18.7	2.7	100.0(1,731)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20.2	2.7	100.0(1,013)	19.0	2.7	100.0(1,731)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21.1	2.8	100.0(1,013)	22.3	2.9	100.0(1,731)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21.4	2.8	100.0(1,013)	24.2	2.9	100.0(1,731)
(9)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22.7	2.8	100.0(1,013)	22.7	2.9	100.0(1,731)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24.1	2.8	100.0(1,013)	26.5	3.0	100.0(1,731)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9.6	2.8	100.0(1,013)	20.7	2.8	100.0(1,731)
(12) 육아지원의 확대	24.5	2.8	100.0(1,013)	23.4	2.8	100.0(1,731)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5.4	2.5	100.0(1,013)	20.1	2.7	100.0(1,731)
(14) 공공성 확대	21.3	2.7	100.0(1,013)	21.7	2.8	100.0(1,731)
(15)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20.0	2.7	100.0(1,013)	22.0	2.8	100.0(1,731)
(16) 취학 전 출발선 평등	13.3	2.4	100.0(1,013)	12.5	2.5	100.0(1,731)
(17)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7.2	2.6	100.0(1,013)	21.4	2.8	100.0(1,731)
(18) 양육비 부담 완화	17.7	2.5	100.0(1,013)	19.3	2.6	100.0(1,731)

주: 1) 긍정비율은 '매우 잘 달성되었다',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긍정비율이 25%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4)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수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50.

### 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던 1순위 과제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첫 자녀의 연령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응답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우선, 첫째아가 초등학생인 부모는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14.6%),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2.5%),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0.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유아 부모 역시 초등 부모와 마찬가지로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18.6%)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이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2.1%),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0.1%) 순이었다. 반면, 영아 부모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6.9%), ‘양육비 부담 완화’(10.1%),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9.8%) 순으로 응답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맞벌이 가구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3.8%),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12.7%),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1.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외벌이 가구의 경우,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17.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3.4%)와 ‘양육비 부담 완화’(11.4%)가 그 뒤를 따랐다.

〈표 V-2-28〉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1순위

구분	단위: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전체	14.4	13.7	10.1	9.2	7.0	6.4	5.6	5.4	5.3	4.6	4.2	3.5	3.5	2.6	2.0	1.9	0.8	100.0(1,731)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4.6	12.5	10.7	7.0	10.4	4.7	4.9	5.7	5.7	2.9	5.7	6.3	2.6	2.3	0.8	1.8	1.3	100.0(384)
유아부모	18.6	12.1	10.1	9.6	5.6	4.8	5.9	5.4	5.5	4.1	3.6	3.4	3.6	3.1	1.8	2.4	0.5	100.0(784)
영아부모	8.3	16.9	9.8	10.1	6.6	9.6	5.7	5.2	4.6	6.4	3.9	1.8	3.9	2.1	3.0	1.2	0.9	100.0(563)
$\chi^2(df)$	92.386(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7	13.8	11.7	7.7	7.8	8.1	5.9	5.6	4.5	4.5	4.8	3.3	3.2	2.5	1.7	1.4	0.8	100.0(1,050)
외벌이	17.7	13.4	7.3	11.4	5.7	3.6	5.2	5.1	6.6	4.7	3.0	3.8	3.6	3.0	2.4	2.5	0.8	100.0(632)
해당없음	8.2	16.3	12.2	12.2	6.1	4.1	4.1	4.1	4.1	4.1	6.1	4.1	6.1	0.0	2.0	4.1	2.0	100.0(49)
$\chi^2(df)$	55.081(32)**																	

주: ①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③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④양육비 부담 완화 ⑤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⑥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⑦육아지원의 확대 ⑧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⑨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⑩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⑪보육서비스 질 제고 ⑫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⑬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⑬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⑭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⑮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⑯취학전 출발선 평등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우수하였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14.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며, 2순위 포함 시에도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20.8%)을 보였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의 경우, 1순위 응답률 13.7%에서 2순위 포함 21.0%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의 1순위 응답 비율은 10.1%로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았으나, 2순위가 포함(17.0%)되면서 그 순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의 1순위 응답률은 9.2%였으나, 2순위가 포함됨에 따라 18.2%로 급증하여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V-2-29〉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1+2순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4.4	6.4	20.8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3.7	7.3	21.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5.4	4.1	9.5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0.1	6.9	17.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2.6	4.0	6.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5.3	5.3	10.6
보육서비스 질 제고	4.2	6.9	11.1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6.4	7.1	13.5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2.0	3.2	5.2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4.6	6.9	11.5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3.5	4.4	7.9
육아지원의 확대	5.6	9.4	15.0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7.0	7.4	14.4
아이돌봄비,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3.5	5.7	9.2
취학 전 출발선 평등	0.8	1.7	2.5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9	4.1	6.0
양육비 부담 완화	9.2	9.0	18.2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한편,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미흡한 성과를 보였던 과제에 대한 1순위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 부모의 최종학력, 지역 규모에 따라 응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및 ‘취학 전 출발선 평등’에 대한 성과가 가장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11.5%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가 각각 10.6%로 그 뒤를 따랐다.

다음으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일 때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11.6%), ‘양육비 부담 완화’(11.1%),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0.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졸 이상일 때에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1.0%)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우세하였고, 그다음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10.9%)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9.3%) 순인 것으로 나타나, 다소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끝으로, 대도시 거주자들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12.5%)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10.3%)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12.1%)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9.3%)에 비교적 많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30〉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계(수)
전체	10.9	10.1	9.3	9.2	8.0	8.0	7.6	7.1	6.0	5.5	4.1	3.8	2.9	2.3	2.1	1.8	1.3	100.0(1,731)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0.6	5.3	9.7	11.5	7.1	11.5	10.6	7.1	3.5	6.2	6.2	1.8	2.7	1.8	1.8	1.8	0.9	100.0( 113)
251~350만원	10.7	5.0	9.5	10.7	7.9	6.6	10.7	9.1	5.0	5.4	6.6	3.3	5.0	0.8	1.7	1.7	0.4	100.0( 242)
351~500만원	9.6	10.8	9.2	10.0	6.1	6.3	7.6	6.7	5.1	8.4	3.9	4.5	2.4	2.2	3.1	2.2	2.0	100.0( 510)
501~600만원	13.6	13.6	8.5	6.8	8.8	5.8	6.4	8.1	6.8	4.7	3.7	3.7	3.4	2.0	2.4	1.0	0.7	100.0( 295)
601만원 이상	10.7	10.9	9.6	8.8	9.5	10.5	6.3	6.1	7.2	3.3	3.0	3.7	2.5	3.2	1.4	2.1	1.4	100.0( 571)
$\chi^2(df)$																		88.691(6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1	3.7	10.6	9.0	9.5	4.2	11.1	11.6	6.9	3.2	6.3	3.7	2.1	3.2	1.1	1.6	2.1	100.0( 189)
대졸 이상	11.0	10.9	9.1	9.3	7.8	8.4	7.2	6.5	5.8	5.8	3.8	3.8	3.0	2.1	2.3	1.9	1.2	100.0(1,542)
$\chi^2(df)$																		31.806(16)*
지역구분																		
대도시	10.1	12.5	8.7	10.3	8.0	8.9	6.8	6.8	5.4	4.5	4.2	3.7	2.5	2.8	2.3	1.8	0.7	100.0( 710)
중소도시	12.0	9.4	10.2	9.0	6.5	7.1	8.6	7.1	6.8	6.0	4.2	3.0	2.6	2.1	2.1	1.6	1.6	100.0( 764)
읍면	9.3	5.4	8.2	7.0	12.1	8.2	7.0	8.2	5.1	7.0	3.5	6.2	5.1	1.2	1.9	2.7	1.9	100.0( 257)
$\chi^2(df)$																		48.395(32)*

주: ①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②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③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④민



고 말할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⑤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취학전 출발선 평등 ⑦양육비 부담 완화 ⑧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⑩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⑪육아지원의 확대 ⑫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⑬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⑭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⑮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⑯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⑰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미흡한 성과를 보였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0.9%),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10.1%),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9.3%) 순으로 1순위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순위가 추가되면서 종합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21.1%)로 대체되었으며, ‘취학 전 출발선 평등’(17.3%)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16.8%)가 그 뒤를 이음으로써, 1순위 응답 분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V-2-31〉 문재인 정부에서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1+2순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5	2.4	7.9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9	5.1	16.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0.1	6.5	16.6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9.3	5.3	14.6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6.0	5.8	11.8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7.1	5.9	13.0
보육서비스 질 제고	8.0	8.8	16.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2.3	3.4	5.7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3.8	5.1	8.9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2.1	3.4	5.5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2.9	4.6	7.5
육아지원의 확대	4.1	6.8	10.9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9.2	11.9	21.1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8	3.9	5.7
취학 전 출발선 평등	8.0	9.3	17.3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3	2.9	4.2
양육비 부담 완화	7.6	9.0	16.6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1.7%),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11.6%),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1.4%) 순으로 높은 1순위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2순위가 포함되면서 종합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26.9%)’로 대체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질 제고(19.7%)’와 ‘양육비 부담 완화(18.3%)’가 그 뒤를 이음으로써, 1순위 응답 분포와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2-3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3.8	1.1	4.9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1.4	4.9	16.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6.5	5.7	12.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1.7	5.6	17.3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5.4	5.7	11.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4.6	4.9	9.5
보육서비스 질 제고	10.5	9.2	19.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4.1	4.3	8.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3.2	4.0	7.2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2.7	5.0	7.7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4.3	4.4	8.7
육아지원의 확대	6.0	10.2	16.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1.6	15.3	26.9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2.7	5.0	7.7
취학 전 출발선 평등	3.1	4.4	7.5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3	2.0	3.3
양육비 부담 완화	8.3	10.0	18.3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과제의 1순위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 부모의 최종학력, 지역 규모에 따라 응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양육비 부담 완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15.0%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서비스 질 제고’(12.4%)와 ‘육아지원의

확대'(11.5%)가 그 뒤를 따랐다.

다음으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완화'(13.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12.7%), '보육서비스 질 제고'(12.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졸 이상일 경우에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2.1%)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우세하였고,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1.9%)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11.4%)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대도시 거주자들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12.8%)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12.0%),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1.4%)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14.4%)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13.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0.9%)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3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계(수)
전체	11.7	11.6	11.4	10.5	8.3	6.5	6.0	5.4	4.6	4.3	4.1	3.8	3.2	3.1	2.7	1.7	1.3	100.0(1,731)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0	7.1	8.8	12.4	15.0	3.5	11.5	5.3	2.7	2.7	0.9	5.3	4.4	2.7	1.8	3.5	4.4	100.0 (113)
251~350만원	8.3	14.0	9.1	7.4	12.8	3.3	7.4	5.4	5.4	6.2	3.7	5.8	2.9	2.1	4.5	0.8	0.8	100.0 (242)
351~500만원	12.9	10.6	10.6	11.0	9.0	7.5	3.9	6.7	4.1	4.3	3.7	4.9	2.0	2.9	2.4	2.0	1.6	100.0 (510)
501~600만원	13.2	11.5	12.5	11.2	7.1	7.5	4.4	4.4	5.1	3.1	5.1	3.1	3.1	3.1	3.4	1.7	0.7	100.0 (295)
601만원 이상	11.9	12.3	13.0	10.7	4.9	7.2	6.8	4.7	4.9	4.4	4.7	1.9	4.4	3.9	2.1	1.4	0.9	100.0 (571)
$\chi^2(df)$										105.905(6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1	12.7	5.3	12.2	13.2	4.8	5.3	3.7	5.8	4.8	1.1	6.3	3.2	4.8	2.6	3.2	1.1	100.0 (189)
대졸 이상	11.9	11.4	12.1	10.3	7.7	6.7	6.0	5.6	4.5	4.2	4.5	3.4	3.2	2.9	2.7	1.5	1.3	100.0(1,542)
$\chi^2(df)$										30.919(16)*								
지역구분																		
대도시	11.4	12.0	11.3	12.8	9.0	6.5	5.5	4.2	5.2	3.2	4.5	3.8	3.2	2.1	2.5	1.8	0.8	100.0 (710)
중소도시	12.6	10.2	11.6	7.5	8.8	6.9	6.3	6.8	4.7	5.2	3.4	3.5	3.3	3.3	2.6	1.8	1.4	100.0 (764)
읍면	9.7	14.4	10.9	13.2	4.7	5.4	6.2	4.3	2.7	4.3	5.1	4.3	3.1	5.4	3.5	0.8	1.9	100.0 (257)
$\chi^2(df)$										46.957(32)*								

주: ①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②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③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④보육서비스 질 제고 ⑤양육비 부담 완화 ⑥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⑦육아지원의 확대 ⑧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⑨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⑩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⑪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⑫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⑬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⑭취학전 출발선 평 등 ⑮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⑯아이돌봄,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⑰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 라) 소결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인식한 목표 달성률에 대해 종합하면 총 열여덟 가지의 정책 과제 중, ‘달성되었다’와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27.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이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26.5%,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25.3%, ‘보육 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 보육)’ 24.2%, ‘육아지원의 확대’ 23.4% 순이었다. 한편,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 과제는 ‘취학 전 출발선 평등’으로 12.5%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16.7%)와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18.7%) 역시 비교적 낮은 긍정률을 나타냈다.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성과가 우수하였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14.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며, 2순위 포함 시에도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20.8%)을 보였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의 경우, 1순위 응답률 13.7%에서 2순위 포함 21.0%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미흡한 성과를 보였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0.9%),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10.1%),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9.3%) 순으로 1순위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11.7%),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11.6%),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11.4%) 순으로 높은 1순위 응답률을 나타냈다.

## 나. 전문가 정책 성과 평가

### 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결과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

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68.0%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64.0%,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가 64.0%,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가 62.0%로 그 뒤를 이었다.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은 '취학 전 출발선 평등'으로 33.0%에 그쳤다. 다음으로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가 40.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41.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가 각각 43.0%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는 2019년보다 긍정비율이 높아졌다.

〈표 V-2-3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7.5	4.5	100.0(106)	64.0	4.8	100.0(1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0.4	4.6	100.0(106)	62.0	4.6	100.0(10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41.5	4.1	100.0(106)	43.0	4.0	100.0(100)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45.3	4.4	100.0(106)	58.0	4.6	100.0(100)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5.8	4.2	100.0(106)	43.0	4.1	100.0(100)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31.1	3.8	100.0(106)	41.0	4.1	100.0(100)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45.3	4.3	100.0(106)	56.0	4.6	100.0(100)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55.7	4.7	100.0(106)	61.0	4.7	100.0(1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55.7	4.7	100.0(106)	64.0	4.8	100.0(100)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67.0	4.9	100.0(106)	68.0	5.0	100.0(100)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50.0	4.4	100.0(106)	52.0	4.4	100.0(100)
(12) 육아지원의 확대	52.8	4.6	100.0(106)	55.0	4.5	100.0(100)
(13) 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47.2	4.3	100.0(106)	43.0	4.3	100.0(100)
(1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53.8	4.6	100.0(106)	45.0	4.4	100.0(100)
(15) 취학 전 출발선 평등	36.8	4.0	100.0(106)	33.0	4.0	100.0(100)

정책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4.9	4.0	100.0(106)	40.0	4.1	100.0(100)
(17) 양육비 부담 완화	49.1	4.4	100.0(106)	49.0	4.4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3) 세부 결과는 부록 16에 수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 113-114.

## 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성과평가 순위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가 13.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9.0%,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이 9.0%로 그 뒤를 이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유아기 놀이 경험의 의미를 강조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정,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으나 놀이중심으로 개정된 후 이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유아교육의 세계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 유아 놀이권에 대한 현장 교직원 및 부모 인식 제고,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으로 실제 현장에서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함,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어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전국 광역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시범적용하면서 현장 전문가의 컨설팅과 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교육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됨 등을 제시하였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국공립 기관 확대를 통한 이용률 증가, 정부 및 지자체의 전방위적인 신규 설치 정책 추진,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참여·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병

설유치원 증설·단설유치원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인식 확대, 교육기관으로의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영유아의 필요에 따른 이용시간의 적절성 확보,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어린이집 이용시간 정도를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부모·영유아·정부 모두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고려,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질 관리 수월성 강화, 다양한 보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경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보육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표 V-2-3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2019년)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0년 조사		
	1순위	2순위	1+2순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6.0	14.0	4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3.0	10.0	23.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9.0	3.0	12.0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3.0	3.0	6.0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0	3.0	6.0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4.0	2.0	6.0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1.0	3.0	4.0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9.0	8.0	17.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6.0	16.0	22.0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6.0	9.0	15.0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5.0	3.0	8.0
(12) 육아지원의 확대	1.0	5.0	6.0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	3.0	3.0
(1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4.0	3.0	7.0
(15) 취학 전 출발선 평등	1.0	3.0	4.0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0	6.0	9.0
(17) 양육비 부담 완화	6.0	6.0	12.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조사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지자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12.0%,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11.0%,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가 11.0%로 그 뒤를 이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에서는 3번째로 나타난 반면,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는 1번째로 선정되었다. 2019년 3월부터 현원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되었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은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해 성과를 보인 과제와 성과가 미약한 과제라는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현재 정책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보다는 공립으로의 흡수처럼 보임,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인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딤, 재정 투명성 확보 미흡, 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충돌,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가시적인 성과 인지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지자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온종일 돌봄체계의 질 담보 어려움, 지자체의 적극성 미흡, 학교-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부족, 학교 자체의 의지 부족, 지자체와의 협력 미비, 돌봄 체제 구축 협력 미흡, 교육행정과 지역행정의 분리, 학교 및 교사들의 폐쇄적인 사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체계의 붕괴, 돌봄시간 연장에만 중점을 둔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서의 격차 완화 필요, 기관 유형 간에 존재하는 교사 측면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원 양성 및 자격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 관심 저조, 이원적인 관리 및 통합 체계의 부재, 유보통합 논의 자체의 담보, 교사양성체계의 격차, 인력배출경로 및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한 격차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부모의 확신 미흡, 하루 종일 실내에서 유아들이 놀게 하고 있으며 실외놀이·야외놀이·숲 놀이 등 유아들이 간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을 접할 수 있기에는 교사 인력 절대 부족, 경쟁 강조 문화로 인한 사교육 팽배, 초등교육에서는 쉬는 시간 늘리기, 짧은 학교수업시간 외의



측면에서 아동 놀이시간 컨트롤 어려움, 제도적으로는 놀 권리와 놀이 중심으로 변화되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출발선 평등을 위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놀이시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 등을 제시하였다.

〈표 V-2-36〉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0년 조사		
	1순위	2순위	1+2순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6.0	1.0	7.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0	3.0	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8.0	2.0	20.0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0	4.0	5.0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6.0	11.0	17.0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1.0	2.0	13.0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8.0	5.0	13.0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2.0	3.0	5.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2.0	3.0	5.0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0	1.0	2.0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0	12.0	24.0
(12) 육아지원의 확대	-	2.0	2.0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9.0	14.0	23.0
(1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2.0	4.0	6.0
(15) 취학 전 출발선 평등	6.0	12.0	18.0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1.0	13.0	24.0
(17) 양육비 부담 완화	2.0	8.0	10.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조사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가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12.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11.0%로 그 뒤를 이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보육서비스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었는데,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

으로 정착하는 것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 기관의 시설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훌륭한 교사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질적 향상 제고,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이 배출됨으로써 보육현장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교육·돌봄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및 교사 자격체계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OECD의 ECEC 분야의 핵심 키워드, 성공적인 보육서비스 질 제공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 관리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표 V-2-3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0년 조사		
	1순위	2순위	1+2순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0	4.0	5.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8.0	3.0	11.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1.0	6.0	17.0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3.0	3.0	6.0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7.0	4.0	11.0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2.0	12.0	24.0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13.0	7.0	20.0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5.0	1.0	6.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4.0	4.0	8.0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2.0	2.0
(11) 학교-지자체협력 존중일돌봄체계 구축	8.0	11.0	19.0
(12) 육아지원의 확대	2.0	5.0	7.0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3.0	16.0	29.0
(1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	2.0	2.0
(15) 취학 전 출발선 평등	4.0	5.0	9.0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7.0	9.0	16.0
(17) 양육비 부담 완화	2.0	6.0	8.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

유아교육 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요소에서 긍정평가(5+6+7)가 부정평가(1+2+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2-38〉 유아교육 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단위: %(명), 점

요소	1	2	3	잘 안된 편 (1+2+3)	4 (중간)	5	6	7	잘 된 편 (5+6+7)	계(수)	7점 평균
1. 효과성	3.0	8.0	13.0	24.0	33.0	30.0	11.0	2.0	43.0	100.0(100)	4.2
2. 효율성	4.0	8.0	16.0	28.0	32.0	28.0	10.0	2.0	40.0	100.0(100)	4.1
3. 형평성	2.0	12.0	17.0	31.0	30.0	29.0	9.0	1.0	39.0	100.0(100)	4.0
4. 적절성	3.0	9.0	15.0	27.0	28.0	28.0	15.0	2.0	45.0	100.0(100)	4.2
5. 포괄성	2.0	8.0	17.0	27.0	21.0	35.0	16.0	1.0	52.0	100.0(100)	4.3
6. 노력	2.0	3.0	10.0	15.0	20.0	47.0	9.0	9.0	65.0	100.0(100)	4.7
7. 대응성	3.0	6.0	19.0	28.0	32.0	25.0	13.0	2.0	40.0	100.0(100)	4.2
8. 추진체계	3.0	3.0	17.0	23.0	33.0	27.0	16.0	1.0	44.0	100.0(100)	4.3
9.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3.0	8.0	14.0	25.0	22.0	33.0	16.0	4.0	53.0	100.0(100)	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보육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에서는 대부분 평가요소에서 긍정평가(5+6+7)가 부정평가(1+2+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효율성(efficiency)에서는 긍정평가 41.0%, 부정평가 34.0%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보육정책의 예산 대비 효과에서 다른 평가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표 V-2-39〉 보육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단위: %(명), 점

요소	1	2	3	잘 안된 편 (1+2+3)	4 (중간)	5	6	7	잘 된 편 (5+6+7)	계(수)	7점 평균
1. 효과성	4.0	4.0	15.0	23.0	29.0	26.0	18.0	4.0	48.0	100.0(100)	4.4
2. 효율성	4.0	6.0	24.0	34.0	25.0	25.0	14.0	2.0	41.0	100.0(100)	4.1
3. 형평성	4.0	7.0	16.0	27.0	26.0	27.0	14.0	6.0	47.0	100.0(100)	4.3
4. 적절성	3.0	8.0	17.0	28.0	29.0	26.0	14.0	3.0	43.0	100.0(100)	4.2
5. 포괄성	3.0	3.0	12.0	18.0	29.0	27.0	22.0	4.0	53.0	100.0(100)	4.6
6. 노력	3.0	1.0	9.0	13.0	23.0	39.0	18.0	7.0	64.0	100.0(100)	4.8
7. 대응성	3.0	6.0	19.0	28.0	25.0	33.0	10.0	4.0	47.0	100.0(100)	4.3
8. 추진체계	3.0	8.0	16.0	27.0	29.0	27.0	13.0	4.0	44.0	100.0(100)	4.2
9.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3.0	8.0	17.0	28.0	24.0	31.0	14.0	3.0	48.0	100.0(100)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돌봄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요소에서 긍정평가(5+6+7)가 부정평가(1+2+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2-40〉 돌봄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단위: %(명), 점

요소	1	2	3	잘 안된편 (1+2+3)	4 (중간)	5	6	7	잘 된편 (5+6+7)	계(수)	7점 평균
1. 효과성	1.0	9.0	17.0	27.0	27.0	35.0	10.0	1.0	46.0	100.0(100)	4.2
2. 효율성	2.0	7.0	19.0	28.0	35.0	24.0	11.0	2.0	37.0	100.0(100)	4.1
3. 형평성	2.0	7.0	17.0	26.0	31.0	27.0	14.0	2.0	43.0	100.0(100)	4.2
4. 적절성	2.0	9.0	18.0	29.0	27.0	29.0	14.0	1.0	44.0	100.0(100)	4.2
5. 포괄성	3.0	6.0	14.0	23.0	34.0	21.0	19.0	3.0	43.0	100.0(100)	4.3
6. 노력	1.0	3.0	13.0	17.0	23.0	36.0	20.0	4.0	60.0	100.0(100)	4.7
7. 대응성	3.0	6.0	18.0	27.0	34.0	23.0	14.0	2.0	39.0	100.0(100)	4.2
8. 추진체계	3.0	7.0	23.0	33.0	27.0	24.0	15.0	1.0	40.0	100.0(100)	4.1
9.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2.0	11.0	12.0	25.0	28.0	26.0	19.0	2.0	47.0	100.0(100)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5) 소결

전문가 의견조사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결과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68.0%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64.0%,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가 64.0%,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가 62.0%로 그 뒤를 이었다.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은 ‘취학 전 출발선 평등’으로 33.0%에 그쳤다. 다음으로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가 40.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41.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가 각각 43.0%로 그 뒤를 이었다.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가 13.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이 각 9.0%로 그 뒤를 이었다.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조사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지자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12.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11.0%,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가 11.0%로 그

뒤를 이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에서는 3번째로 나타난 반면,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는 1번째로 선정되었다.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조사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가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12.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11.0%로 그 뒤를 이었다.

## 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정책 성과 평가

### 1) 유아교육정책의 항목별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제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항목별로 평가하고, 해당 항목의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최근 2년간(2019~2020년) 추진되었던 유아교육정책 8개 세부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8)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의 경우, 응답자의 61.0%(달성됨 36.3%+매우 잘 달성됨 24.7%)가 달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유아교육정책 중 추진 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목표 달성도가 높은 항목은 ‘(4)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 37.6%(달성됨 27.4%+매우 잘 달성됨 10.2%),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37.2%(달성됨 26.5%+매우 잘 달성됨 10.7%)로 분석되어, 비등한 비율로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정책은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서 40.5%(달성되지 않음 24.2%+전혀 달성되지 않음 16.3%)의 부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5)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와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부정 응답 비율이 각 35.8%, 34.9%로 분석되어,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과 교사는 ‘아동의 놀 권리/놀이시간 확대’,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를 목표 달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유·보 격차 완화,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 공공성 강화 정책은 유치원 교직원의 달성 체감도가 낮은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V-2-41〉 유아교육정책의 항목별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①+②)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긍정 응답 (④+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2.3	8.8	13.5	40.0	26.5	10.7	37.2	0.5	100.0(215)	3.2
(2)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 (40% 목표)	20.4	5.1	15.3	40.0	25.1	10.2	35.3	4.2	100.0(215)	3.2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4.9	11.6	23.3	32.1	21.9	8.8	30.7	2.3	100.0(215)	2.9
(4)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	20.0	6.5	13.5	37.7	27.4	10.2	37.6	4.7	100.0(215)	3.2
(5)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	35.8	8.8	27.0	34.0	16.3	8.4	24.7	5.6	100.0(215)	2.9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40.5	16.3	24.2	33.5	17.7	2.8	20.5	5.6	100.0(215)	2.6
(7) 취학 전 출발선 평등	30.7	13.0	17.7	36.7	23.7	7.4	31.1	1.4	100.0(215)	2.9
(8)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5.4	5.6	9.8	22.8	36.3	24.7	61.0	0.9	100.0(215)	3.7

주: 1)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2) 세부 결과는 부록 17에 수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해당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을 전체의 35.8%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하게 해야 함' 30.2%,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 자료가 충분해야 함' 18.1%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 충분한 교육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을 늘려야 함'과 '연수 시간이나 횟수를 늘려야 함'도 각각 7.9%, 1.4% 응답되어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표 V-2-42〉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	부모 인식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하게 해야 함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교육 자료가 충분해야 함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을 늘려야 함	연수 시간이나 연수 횟수를 늘려야 함	기타	계(수)
전체	35.8	30.2	18.1	7.9	1.4	6.5	100.0(215)
원장/교사 구분							
원장	40.4	36.5	5.8	15.4	0.0	1.9	100.0( 52)
교사	34.4	28.2	22.1	5.5	1.8	8.0	100.0(163)
$\chi^2(df)$			15.114(5)**				
설립유형							
공립단설	33.3	33.3	14.5	10.1	2.9	5.8	100.0( 69)
공립병설	47.7	20.5	11.4	9.1	0.0	11.4	100.0( 44)
사립사인	29.6	30.9	25.9	7.4	1.2	4.9	100.0( 81)
사립법인	42.9	38.1	14.3	0.0	0.0	4.8	100.0( 21)
$\chi^2(df)$			15.860(15)				
지역 구분							
대도시	34.6	33.3	16.0	6.2	2.5	7.4	100.0( 81)
중소도시	38.4	27.9	22.1	2.3	1.2	8.1	100.0( 86)
읍면	33.3	29.2	14.6	20.8	0.0	2.1	100.0( 48)
$\chi^2(df)$			19.082(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국공립유치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립유치원과의 상생방안 추진 필요’가 31.6%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증대 필요’가 21.9%로 높고, ‘시설 및 부지의 충분한 확보’ 17.2%,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 수 감소 완화’ 15.3%, ‘지역간 편차 완화’ 11.2%로 나타나 10% 대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V-2-43〉 ‘(2)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사립유치원과의 상생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시설 및 부지 확보가 충분해야 함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 수 감소를 완화해야 함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31.6	21.9	17.2	15.3	11.2	2.8	100.0(215)
원장/교사 구분							
원장	36.5	11.5	21.2	26.9	3.8	0.0	100.0( 52)
교사	30.1	25.2	16.0	11.7	13.5	3.7	100.0(163)
$\chi^2(df)$			15.676(5)**				
설립유형							
공립단설	7.2	26.1	26.1	24.6	15.9	0.0	100.0( 69)

구분	사립유치원과의 상생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시설 및 부지 확보가 충분해야 함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 수 감소를 완화해야 함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함	기타	계(수)
공립병설	2.3	38.6	22.7	13.6	9.1	13.6	100.0( 44)
사립사인	66.7	9.9	7.4	11.1	4.9	0.0	100.0( 81)
사립법인	38.1	19.0	14.3	4.8	23.8	0.0	100.0( 21)
$\chi^2(df)$			114.031(15)***				
규모(정원)							
40인 미만	22.7	22.7	18.2	22.7	9.1	4.5	100.0( 22)
40~100인 미만	17.9	26.9	20.9	11.9	14.9	7.5	100.0( 67)
100인 이상	40.5	19.0	15.1	15.9	9.5	0.0	100.0(126)
$\chi^2(df)$			21.308(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이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필요'하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개선' 28.8%,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18.1%, '공공성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에게 유인책 제공' 10.7% 순으로 나타났다.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분한 컨설팅 제공 필요'와 '공영형 유치원 등 관련 정책의 홍보 증대 필요'도 각각 4.7%, 2.3%의 유치원 교직원들이 응답하였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인 경우,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립유치원 교직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2-44〉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개선해야 함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사립유치원에 게 공공성을 강화할 유인이 제공해야 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공영형 유치원 등 관련 정책의 홍보를 증대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34.9	28.8	18.1	10.7	4.7	2.3	0.5	100.0(215)
원장/교사 구분								
원장	48.1	32.7	5.8	5.8	5.8	1.9	0.0	100.0( 52)
교사	30.7	27.6	22.1	12.3	4.3	2.5	0.6	100.0(163)
$\chi^2(df)$				11.671(6)				



구분	사립유치원 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사립유치원 의 회계투명성 을 개선해야 함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사립유치원에 게 공공성을 강화할 유인이 제공해야 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공영형 유치원 등 관련 정책의 홍보를 증대해야 함	기타	계(수)
설립유형								
공립단설	17.4	43.5	24.6	8.7	5.8	0.0	0.0	100.0( 69)
공립병설	9.1	38.6	27.3	11.4	9.1	2.3	2.3	100.0( 44)
사립사인	63.0	14.8	7.4	9.9	2.5	2.5	0.0	100.0( 81)
사립법인	38.1	14.3	19.0	19.0	0.0	9.5	0.0	100.0( 21)
$\chi^2(df)$				70.994(18)***				
규모(정원)								
40인 미만	13.6	27.3	36.4	18.2	0.0	0.0	4.5	100.0( 22)
40~100인 미만	20.9	31.3	22.4	17.9	4.5	3.0	0.0	100.0( 67)
100인 이상	46.0	27.8	12.7	5.6	5.6	2.4	0.0	100.0(126)
$\chi^2(df)$				36.244(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01$ .

국공립유치원의 질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교사와 원장 중 44.2%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을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충분한 행정지원 인력 제공'이 17.7%,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수요 반영'이 16.7%, '충분한 교직원 연수 기회 제공'이 11.2%, '급식 및 차량 운행 등 서비스 지원 증대'가 6.5%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별로 살펴보면, 공립단설(62.3%)과 사립법인(52.4%)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과반 수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공립병설(45.5%)은 충분한 행정지원 인력 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2-45〉 (4)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	행정지원 인력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교직원 연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급식 및 차량 운행 등 서비스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44.2	17.7	16.7	11.2	6.5	3.7	100.0(215)
원장/교사 구분							
원장	34.6	5.8	21.2	25.0	5.8	7.7	100.0( 52)
교사	47.2	21.5	15.3	6.7	6.7	2.5	100.0(163)
$\chi^2(df)$			22.449(5)***				
설립유형							
공립단설	62.3	14.5	5.8	13.0	2.9	1.4	100.0( 69)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	아동 인력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직원 연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급식 및 차량 운행 등 서비스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기타	계(수)
			행정지원 인력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공립병설	38.6	45.5	0.0	4.5	6.8	4.5	100.0( 44)
사립사인	29.6	7.4	33.3	16.0	8.6	4.9	100.0( 81)
사립법인	52.4	9.5	23.8	0.0	9.5	4.8	100.0( 21)
$\chi^2(df)$			70.806(15)***				
규모(정원)							
40인 미만	54.5	22.7	9.1	4.5	9.1	0.0	100.0( 22)
40~100인 미만	47.8	26.9	6.0	9.0	4.5	6.0	100.0( 67)
100인 이상	40.5	11.9	23.8	13.5	7.1	3.2	100.0(126)
$\chi^2(df)$			20.511(10)*				
지역 구분							
대도시	44.4	7.4	25.9	11.1	6.2	4.9	100.0( 81)
중소도시	38.4	25.6	12.8	11.6	9.3	2.3	100.0( 86)
읍면	54.2	20.8	8.3	10.4	2.1	4.2	100.0( 48)
$\chi^2(df)$			20.122(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사립유치원의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9.8%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8.8%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0.5%이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원 증대'도 13.5%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표 V-2-46〉 '(5)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함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의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증대해야 함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인상 수준을 높여야 함	기타	계(수)
원장/교사 구분							
원장	30.8	30.8	21.2	13.5	3.8	0.0	100.0( 52)
교사	29.4	28.2	20.2	13.5	7.4	1.2	100.0(163)
$\chi^2(df)$			1.514(5)				
설립유형							
공립단설	44.9	23.2	26.1	2.9	2.9	0.0	100.0( 69)
공립병설	45.5	9.1	34.1	6.8	2.3	2.3	100.0( 44)

구분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제고해야 함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함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의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자원을 증대해야 함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인상 수준을 높여야 함	기타	계(수)
사립사인	13.6	44.4	7.4	23.5	9.9	1.2	100.0( 81)
사립법인	9.5	28.6	23.8	23.8	14.3	0.0	100.0( 21)
$\chi^2(df)$			67.001(15)***				
지역 구분							
대도시	24.7	34.6	12.3	21.0	4.9	2.5	100.0( 81)
중소도시	27.9	27.9	24.4	8.1	11.6	0.0	100.0( 86)
읍면	41.7	20.8	27.1	10.4	0.0	0.0	100.0( 48)
$\chi^2(df)$			25.129(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하도록 하였다.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이 29.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함’이 28.8%, ‘누리과정 지원금 등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이 14.9%,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를 줄여야함’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시설 기준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과 ‘정부 보조의 격차를 줄여야 함’이 각 3.7%로 응답되었다.

〈표 V-2-47〉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누리과정 등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어야 함	사실 기준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정부 보조의 격차를 줄여야 함	기타	계(수)
전체	29.3	28.8	14.9	11.6	3.7	3.7	7.9	100.0(215)
원장/교사 구분								
원장	38.5	21.2	17.3	5.8	1.9	3.8	11.5	100.0( 52)
교사	26.4	31.3	14.1	13.5	4.3	3.7	6.7	100.0(163)
$\chi^2(df)$			7.406(6)					
설립유형								
공립단설	39.1	29.0	5.8	11.6	1.4	2.9	10.1	100.0( 69)
공립병설	34.1	15.9	13.6	13.6	6.8	6.8	9.1	100.0( 44)
사립사인	16.0	38.3	22.2	11.1	4.9	1.2	6.2	100.0( 81)
사립법인	38.1	19.0	19.0	9.5	0.0	9.5	4.8	100.0( 21)
$\chi^2(df)$			29.864(18)*					
규모(정원)								
40인 미만	31.8	40.9	4.5	9.1	9.1	0.0	4.5	100.0( 22)
40~100인 미만	32.8	28.4	9.0	13.4	3.0	7.5	6.0	100.0( 67)

구분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누리과정 지원금 등 공동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차이가 줄어들어야 함	시설 기준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정부 보조의 격차를 줄여야 함	기타	계(수)
100인 이상	27.0	27.0	19.8	11.1	3.2	2.4	9.5	100.0(126)
$\chi^2(df)$			14.31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2) 소결

최근 2년간(2019~2020년) 추진되었던 유아교육정책 8개 세부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8)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의 경우, 응답자의 61.0%(달성됨 36.3%+매우 잘 달성됨 24.7%)가 달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유아교육정책 중 추진 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목표 달성도가 높은 항목은 '(4)국공립유치원 질 강화' 37.6%(달성됨 27.4%+매우 잘 달성됨 10.2%),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37.2%(달성됨 26.5%+매우 잘 달성됨 10.7%)로 분석되어, 비등한 비율로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정책은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서 40.5%(달성되지 않음 24.2%+전혀 달성되지 않음 16.3%)의 부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5)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와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부정 응답 비율이 각 35.8%, 34.9%로 분석되어,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과 교사는 '아동의 놀 권리/놀이 시간 확대',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목표 달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유-보 격차 완화, 사립유치원 질, 공공성 강화 정책은 유치원 교직원의 달성 체감도가 낮은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 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정책 성과 평가

### 1) 보육정책의 항목별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최근 2년간(2019~2020년) 정부가 보육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 11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

문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원장과 교사의 전체 응답 값을 살펴보면, 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된 정책과제는 ‘(1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 시간 확대’로서 긍정응답 비율이 64.9%(달성됨 43.7%+매우 잘 달성됨 21.2%)로 나타나,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그 다음으로 목표 달성도가 높은 정책과제는 ‘(10)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57.6%(달성됨 39.1%+매우 잘 달성됨 18.5%), ‘(9)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51.0%(달성됨 32.5%+매우 잘 달성됨 18.5%),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41.7%(달성됨 26.5%+매우 잘 달성됨 15.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정책은 ‘(5)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서 56.3%(달성되지 않음 32.5%+전혀 달성되지 않음 23.8%)의 부정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4)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는 35.7%(달성되지 않음 22.5%+전혀 달성되지 않음 13.2%)의 부정응답 비중이 나타나 달성되지 않은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V-2-48〉 보육정책의 항목별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①+②)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긍정 응답 (④+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3.2	3.3	9.9	46.4	26.5	7.9	34.4	6.0	100.0(151)	3.3
(2)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5.9	2.0	13.9	34.4	26.5	13.2	39.7	9.9	100.0(151)	3.4
(3)국공립 어린이집 질 강화	17.2	4.0	13.2	47.0	16.6	9.3	25.9	9.9	100.0(151)	3.2
(4)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	35.7	13.2	22.5	30.5	18.5	7.9	26.4	7.3	100.0(151)	2.8
(5)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56.3	23.8	32.5	24.5	11.3	5.3	16.6	2.6	100.0(151)	2.4
(6)보육서비스 질 제고	21.2	6.0	15.2	34.4	26.5	15.2	41.7	2.6	100.0(151)	3.3
(7)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27.1	8.6	18.5	31.1	25.8	13.9	39.7	2.0	100.0(151)	3.2
(8)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19.9	5.3	14.6	37.7	26.5	11.9	38.4	4.0	100.0(151)	3.3
(9)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5.9	6.6	9.3	31.1	32.5	18.5	51.0	2.0	100.0(151)	3.5
(10)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7.9	3.3	4.6	30.5	39.1	18.5	57.6	4.0	100.0(151)	3.7
(11)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 시간 확대	9.3	3.3	6.0	25.2	43.7	21.2	64.9	0.7	100.0(151)	3.7

주: 1)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2) 세부 결과는 부록 18에 수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해야 함’을 전체의 33.8%가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함’ 28.5%, ‘충분한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 자료 필요’ 21.9%로 분석되었다. 10% 이하의 비율이기는 하지만, 컨설팅 확대와 연수 확대가 각 9.3%, 4.0% 응답되어, 어린이집 교사 대상 누리과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9〉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하게 해야 함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 자료가 충분해야 함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을 늘려야 함	연수 시간이나 연수 횟수를 늘려야 함	기타	계(수)
전체	33.8	28.5	21.9	9.3	4.0	2.6	100.0(1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43.6	23.6	16.4	12.7	3.6	0.0	100.0( 55)
교사	28.1	31.3	25.0	7.3	4.2	4.2	100.0( 96)
$\chi^2(df)$			7.827(5)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34.7	28.6	18.4	8.2	8.2	2.0	100.0( 49)
민간	34.8	26.1	21.7	8.7	4.3	4.3	100.0( 46)
가정	32.1	30.4	25.0	10.7	0.0	1.8	100.0( 56)
$\chi^2(df)$			6.099(10)				
규모(정원)							
40인 미만	39.4	26.8	22.5	9.9	0.0	1.4	100.0( 71)
40~100인 미만	21.7	36.7	20.0	10.0	10.0	1.7	100.0( 60)
100인 이상	50.0	10.0	25.0	5.0	0.0	10.0	100.0( 20)
$\chi^2(df)$			23.187(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르도록 한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이 56.3%로 분석되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수 감소를 완화해야 함’ 15.9%,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증대 필요’ 13.2%,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함’ 7.3%, ‘충분한 시설 및 부지 확보 필요’가 6.0%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V-2-50〉 '(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 수 감소를 완화해야 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함	시설 및 부지 확보가 충분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56.3	15.9	13.2	7.3	6.0	1.3	100.0(1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80.0	10.9	1.8	5.5	1.8	0.0	100.0( 55)
교사	42.7	18.8	19.8	8.3	8.3	2.1	100.0( 96)
$\chi^2(df)$			22.553(5)***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24.5	26.5	22.4	16.3	10.2	0.0	100.0( 49)
민간	69.6	10.9	8.7	2.2	6.5	2.2	100.0( 46)
가정	73.2	10.7	8.9	3.6	1.8	1.8	100.0( 56)
$\chi^2(df)$			35.237(10)***				
지역 구분							
대도시	52.7	17.6	18.9	5.4	5.4	0.0	100.0( 74)
중소도시	61.5	17.3	7.7	3.8	5.8	3.8	100.0( 52)
읍면	56.0	8.0	8.0	20.0	8.0	0.0	100.0( 25)
$\chi^2(df)$			15.903(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01$ .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 강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중 55.6%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어야 함'을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의 동기 부여' 18.5%, '지원인력 확대' 12.6%, '충분한 교직원 연구 기회 제공' 6.6% 순으로 응답되었다. 2%대의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급식, 차량 운행 등 서비스 지원 증대', '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도 국공립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장/교사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교사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64.6%)'을, 원장은 '교직원에게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기 개발의 동기를 부여해야 함(27.3%)'을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2-51〉 ‘(3) 국공립 어린이집 질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	교직원에게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해야 함	지원인력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교직원 연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급식 및 차량 운행 등 서비스 자원이 증대되어야 함	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55.6	18.5	12.6	6.6	2.6	2.0	2.0	100.0(1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40.0	27.3	9.1	14.5	3.6	1.8	3.6	100.0( 55)
교사	64.6	13.5	14.6	2.1	2.1	2.1	1.0	100.0( 96)
$\chi^2(df)$			17.908(6)**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65.3	4.1	18.4	4.1	4.1	2.0	2.0	100.0( 49)
민간	47.8	17.4	15.2	8.7	4.3	2.2	4.3	100.0( 46)
가정	53.6	32.1	5.4	7.1	0.0	1.8	0.0	100.0( 56)
$\chi^2(df)$			21.984(12)*					
규모(정원)								
40인 미만	54.9	26.8	9.9	7.0	0.0	1.4	0.0	100.0( 71)
40~100인 미만	60.0	3.3	16.7	8.3	6.7	3.3	1.7	100.0( 60)
100인 이상	45.0	35.0	10.0	0.0	0.0	0.0	10.0	100.0( 20)
$\chi^2(df)$			31.576(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4%는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3.2%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12.6%,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11.9%로 유사한 비율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인상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6.0% 집계되었다.



〈표 V-2-52〉 ‘(4)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원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함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의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증대해야 함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인상 수준을 높여야 함	기타	계(수)
전체	44.4	23.2	12.6	11.9	6.0	2.0	100.0 (1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52.7	27.3	5.5	10.9	1.8	1.8	100.0 ( 55)
교사	39.6	20.8	16.7	12.5	8.3	2.1	100.0 ( 96)
$\chi^2(df)$			8.057(5)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16.3	12.2	28.6	28.6	10.2	4.1	100.0 ( 49)
민간	47.8	32.6	6.5	2.2	8.7	2.2	100.0 ( 46)
가정	66.1	25.0	3.6	5.4	0.0	0.0	100.0 ( 56)
$\chi^2(df)$			58.722(10)***				
규모(정원)							
40인 미만	54.9	28.2	5.6	9.9	1.4	0.0	100.0 ( 71)
40~100인 미만	33.3	20.0	20.0	15.0	10.0	1.7	100.0 ( 60)
100인 이상	40.0	15.0	15.0	10.0	10.0	10.0	100.0 ( 20)
$\chi^2(df)$			23.916(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보육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 결과,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29.1%,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어야 함’ 23.2%,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22.5%로 응답되어, 20%대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V-2-53〉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유치원-어린이 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어야 함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누리과정 지원금 등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	정부 보조의 격차를 줄여야 함	시설 기준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기타	계(수)
전체	29.1	23.2	22.5	14.6	7.3	2.6	0.7	100.0 (1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12.7	20.0	29.1	12.7	18.2	7.3	0.0	100.0 ( 55)
교사	38.5	25.0	18.8	15.6	1.0	0.0	1.0	100.0 ( 96)
$\chi^2(df)$			31.892(6)***					

구분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유치원-어린이 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차이가 줄어들어야 함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누리과정 등 지원금 등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	정부 보조의 격차를 줄여야 함	시설 기준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기타	계(수)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28.6	28.6	14.3	22.4	4.1	2.0	0.0	100.0 ( 49)
민간	30.4	19.6	28.3	10.9	6.5	2.2	2.2	100.0 ( 46)
가정	28.6	21.4	25.0	10.7	10.7	3.6	0.0	100.0 ( 56)
$\chi^2(df)$			10.581(12)					
지역 구분								
대도시	27.0	31.1	18.9	17.6	2.7	2.7	0.0	100.0 ( 74)
중소도시	28.8	11.5	28.8	11.5	15.4	1.9	1.9	100.0 ( 52)
읍면	36.0	24.0	20.0	12.0	4.0	4.0	0.0	100.0 ( 25)
$\chi^2(df)$			17.245(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01$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58.9%로 과반 이상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 '과다한 행정업무 줄여야함' 15.9%, '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개선' 11.9%, '보육교사 역량 향상 기회 제공' 6.0%, '누리과정 지원금, 보육료 인상 수준 높여야함' 4.0%, '지원인력 확대' 2.6% 순으로 나타나, 나머지는 15%대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V-2-54〉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다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함	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교사 연수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누리과정 등 지원금 등 보육료 인상 수준을 높여야 함	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기타	계(수)
전체	58.9	15.9	11.9	6.0	4.0	2.6	0.7	100.0 (1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50.9	21.8	5.5	9.1	9.1	3.6	0.0	100.0 ( 55)
교사	63.5	12.5	15.6	4.2	1.0	2.1	1.0	100.0 ( 96)
$\chi^2(df)$			13.907(6)*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61.2	12.2	10.2	10.2	2.0	4.1	0.0	100.0 ( 49)
민간	52.2	13.0	17.4	2.2	10.9	2.2	2.2	100.0 ( 46)
가정	62.5	21.4	8.9	5.4	0.0	1.8	0.0	100.0 ( 56)
$\chi^2(df)$			17.614(12)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교사가 전념할 수 있도록 과다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함	보육에 과다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이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교사 연수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누리과정 등 지원금 등 보육료 인상 수준을 높여야 함	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기타	계(수)
규모(정원)									
40인 미만	60.6	22.5	8.5	4.2	2.8	1.4	0.0	100.0 ( 71)	
40~100인 미만	61.7	10.0	13.3	8.3	1.7	5.0	0.0	100.0 ( 60)	
100인 이상	45.0	10.0	20.0	5.0	15.0	0.0	5.0	100.0 ( 20)	
$\chi^2(df)$				23.26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하도록 하였다. '16시 이후 연장보육을 담당할 교사 수급이 어렵지 않아야 함'이 36.4%, '지원인력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이 35.8%로 나타나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이외에, '서비스 질 제고' 10.6%, '연장보육을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해야 함'이 6.0%, '연장보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해야 함'이 5.3%,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함'이 4.0%로 응답되 10%대 이하의 응답비중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인력관리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표 V-2-55〉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16시 이후에 연장보육을 담당할 교사 수급이 어렵지 않아야 함	지원인력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함	연장보육을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해야 함	연장보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해야 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36.4	35.8	10.6	6.0	5.3	4.0	2.0	100.0 (1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45.5	38.2	5.5	5.5	0.0	1.8	3.6	100.0 ( 55)
교사	31.3	34.4	13.5	6.3	8.3	5.2	1.0	100.0 ( 96)
$\chi^2(df)$				11.054(6)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42.9	32.7	10.2	6.1	4.1	4.1	0.0	100.0 ( 49)
민간	37.0	30.4	10.9	6.5	8.7	0.0	6.5	100.0 ( 46)
가정	30.4	42.9	10.7	5.4	3.6	7.1	0.0	100.0 ( 56)
$\chi^2(df)$				14.031(12)				

지역 구분

구분	16시 이후에 연장보육을 담당할 교사가 수급이 어렵지 않아야 함	지원인력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함	연장보육을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해야 함	연장보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해야 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함	기타	계(수)
대도시	37.8	39.2	8.1	5.4	2.7	6.8	0.0	100.0 ( 74)
중소도시	28.8	32.7	17.3	5.8	9.6	1.9	3.8	100.0 ( 52)
읍면	48.0	32.0	4.0	8.0	4.0	0.0	4.0	100.0 ( 25)
$\chi^2(df)$				14.866(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중 45.0%는 '어린이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평가 결과가 실제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26.5%,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 11.3% 순으로 응답하여,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부담 완화, 보육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 연결, 이해하기 쉬운 평가지표가 강조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표 V-2-56〉 '(8)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평가에 평가 결과가 실제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	평가 결과가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함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함	평가자의 자질을 제고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45.0	26.5	11.3	8.6	6.6	1.3	0.7	100.0 (1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30.9	30.9	10.9	16.4	5.5	3.6	1.8	100.0 ( 55)
교사	53.1	24.0	11.5	4.2	7.3	0.0	0.0	100.0 ( 96)
$\chi^2(df)$				15.936(6)*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49.0	26.5	8.2	6.1	8.2	0.0	2.0	100.0 ( 49)
민간	50.0	19.6	13.0	10.9	2.2	4.3	0.0	100.0 ( 46)
가정	37.5	32.1	12.5	8.9	8.9	0.0	0.0	100.0 ( 56)
$\chi^2(df)$				12.538(12)				
지역 구분								
대도시	48.6	23.0	12.2	5.4	8.1	1.4	1.4	100.0 ( 74)
중소도시	42.3	26.9	15.4	9.6	3.8	1.9	0.0	100.0 ( 52)
읍면	40.0	36.0	0.0	16.0	8.0	0.0	0.0	100.0 ( 25)
$\chi^2(df)$				10.264(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2) 소결

최근 2년간(2019~2020년) 정부가 보육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 11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원장과 교사의 전체 응답 값을 살펴보면, 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된 정책과제는 '(1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로서 긍정응답 비율이 64.9%(달성됨 43.7%+매우 잘 달성됨 21.2%)로 나타나,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그 다음으로 목표 달성도가 높은 정책과제는 '(10)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57.6%(달성됨 39.1%+매우 잘 달성됨 18.5%), '(9)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51.0%(달성됨 32.5%+매우 잘 달성됨 18.5%),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41.7%(달성됨 26.5%+매우 잘 달성됨 15.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정책은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서 56.3%(달성되지 않음 32.5%+전혀 달성되지 않음 23.8%)의 부정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4)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는 35.7%(달성되지 않음 22.5%+전혀 달성되지 않음 13.2%)의 부정응답 비중을 나타나 달성되지 않은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 3. 부모, 원장 및 교사 면담자료 분석

### 가.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 요구도 및 개선 의견

#### 1) 유보 격차

유보 격차에 대해 영유아 부모들은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공통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느끼기 어렵지만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차이가 컸다.

B: 첫째는 유치원을 보냈는데, 둘째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이제 이번 6살 때 어딜 보내는지 주변에서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결국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다른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차이가 있냐고. 똑같이 누리과정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굵직한 건 같으나, 방과후 영어나, 축구 등 유치원과 다르고, 이걸 다 엄마들이 해줘야 하는 거죠. 활동들이 유치원은 방과후 활동이 더 많다고 느껴요.

C: 저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방과후 부분을 더 보완하면 저처럼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엄마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유치원도 만족했지만, 어린이집도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 차이도 첫째 유치원은 60만원 들고, 어린이집은 0원이 되니까 그 차이에 비해서 학습적인 차이도 잘 못 느끼겠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아동을 유치하기 위해 각각의 특색을 살린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어린이집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 저는 격차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줄어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살짝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들은 특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아이들 수는 줄어들고, 아이들을 유치해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내세우기도 하고, 누리과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분야(예체능 등)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5살 때, 기관을 선택할 때 저도 당연히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었는데, 주변의 어머니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유치원은 음악, 어떤 유치원은 체육, 각각 유치원마다 특성을 내세우고, 제가 유치원 입학 설명회를 가보니까. 시설의 한 부분마다 체육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고,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의 경우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는 장기간 휴원을 하게 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원비가 아깝다는 의견이 있었다.

E: 사립유치원 입학 설명회를 다니면서 느낀 건, 부모의 눈을 현혹시킬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있고 모래놀이실도 있고, 누가 봐도 여기에 다니면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당시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몰랐지만,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유치원을 다니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수영도 못하고, 외부 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원비는 동일하게 나가고,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원비가 너무 아깝고 여기서 대체 뭘 배우는지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을 변경하는 일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체감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방과후 과정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보육지원체계 개편

2020년 3월에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B: 저는 선생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업무 부담이 줄은 건지 좋은 선생님이 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에 대해서는 연장반 교사 채용으로 기본보육을 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연장반 이용 자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연장반 이용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연장반 이용이 까다로워지지 않을 것인가가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부모들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다.

B: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저는 이걸 잘 모르니까. 무엇이 바뀌고, 자격심사를 하고 추가 지원금을 내야하고.. 우리 애는 4시에 데려올 테니까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자격심사 온 거 보니까 다져놔라 가능할거 같아서, 미리 할 걸 그랬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지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통합이잖아요. 통합 보육인데, 왜 돈이 다른가. 연령 상관없이 연장 보육을 생각했을 때, 연령별로 통합으로 이뤄질 텐데 합반인데, '왜 비용이 다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돈이 다른 지도 궁금하고. 근데 선생님이 한 명이 더 생긴 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사용해보지 않아서 사실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기본보육을 4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연장반 교사와 보조교사를 통해서 업무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보육의 질을 위해서 좋다고 평가하였다.

E: 저는 맞춤반이 없어지고, 종일반으로 통일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낸 어린이집은, 맞춤반과 종일반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4시까지를 따로 보육을 해주셨거든요. 따로 바우처 같은걸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이용했던 부분인데, 근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바우처를 사용해서 4시까지 보육을 해야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 맞벌이든 전업이든 그사이에 분명 사정이 있을 텐데. 4시까지... 확실히 2시나 3시까지 보육을 맡기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3시간 되고, 종일반은 4시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이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9시부터 다니는 교사가 계셨는데, 종일반으로 바뀌고 그런 건지,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보통 보조교사가 9시부터 10시까지 아이들 등원을 시켜주시고, 정교사분들은 10시부터 보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4시부터는 또 다른 누리 교사 선생님들이 보육을 맡아주시는 것 같은데,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 게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여러 선생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분담이 됴므로써 더 복지나...

### 3) 긴급돌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긴급돌봄의 프로그램 및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B: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못 가니까 줌으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살 아이가 컴퓨터를 보고 계속 달려들고 울고불고하니까... 학교에 오죽하면, 학교의 높으신 분이 전화 와서 아이가 집중을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들을 긴급 돌봄을 둘 다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안정이 찾아왔죠. 너무 감사한데, 다른 엄마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아이를 보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긴급 돌봄이라 줄 수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좀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셔서 유치원으로 옮길까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활동이나 보냈으면 선생님은 똑같이 출근하시니까, 출근하셨으면 평상시처럼 누리과정의 몇 퍼센트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 긴급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계획안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 저도 이용하긴 했는데, 사실 큰 불만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고생하실 테니까 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이게(코로나) 장기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스템 체계가 잡혀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정부지원금이라던지, 유치원 교사들은 월급을 받으시니까. 선생님 혼자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루 이틀 정도야 가서 있는 장난감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놀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가 되어버리는 시간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겠지만,



어린이들은 프로그램이나 선생님이 돌봐주셔야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린이집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이나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긴급 기간 동안 갔을 때, 재미가 없으면 나중에 추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예민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식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안 보내자니, 부모님들이 상황이 안 될 수 있고, 보내자니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긴급 돌봄도 어떤 하나의 매뉴얼처럼 계획안이라도 간단하게 나오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설명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었고,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잡혀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 4) 가정 내 양육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부모들은 영아기 가정 내 양육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게 된다고 보고 있었다.

B: 첫째는 3살까지 가정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이 없으니까 점점 아이들을 빨리 보내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한 명인 경우에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마가 보는 게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좋잖아요.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과 기관지원이 무상보육으로 인해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닌 경우도 어린이집에 빨리 아이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E: 지금의 양육수당이 무상보육을 이길 만큼의 돈 보다 크지 않은 거죠. 그거에 비하면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1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집에서 케어하는데, 무상보육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무상보육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일하지 않는 엄마들도 당연히 기관에 일찍 보내는 것 같아요.

무상보육으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을 의도했던 부모들도 주변의 권유로 인해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아닌 기관양육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A: 주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도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어머니한테 맡기거나 하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두 돌 지나고 굉장히 안쓰러워하면서 보냈는데, 막상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이미 더 일찍 기관을 다니던 애가 있었고, 그 중에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은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둘째 낳으면 어린이집 보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상보육인데 당연히 보내야지,

그리고 자유시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무슨 소리예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렇게 말을 해도 주변에서 이런 고지식한 엄마가 어딴어라는 분위기를 받더라고요. 저는 안쓰러워하면서 보내고, 늦게 퇴근해도 할머니한테 연락해서 하원도 부탁하는데, 오히려 일하지 않은 엄마들도 말기는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와요?”라고 물으면, “저희 차 마시고 와요.”라고 답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모유수유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박힌 것처럼 기관 양육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양육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은 자녀가 한 명일 때와 다자녀일 때를 구분하여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C: 저도 큰 아이를 일찍 기관에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둘째 아이가 의도치 않게 찾아오다 보니까 임신기간 중 혹은 출산이 다가와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미리 기관에 보내서 적응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큰 아이를 빨리 보냈던 것 같아요. 가정양육지원정책보다는 다자녀일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럼 가정양육을 연장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5) 시간제 보육

가정 내 양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양육수당보다는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부모들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D: 3세 때는 가정양육을 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찾기 위해 시간제 보육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도 좋은 점이 엄마가 밖에서 대기도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도 힐링 할 수 있어서 가끔 이용 했었거든요. 시간제 보육을 찾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형식적인 거예요.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시간제 보육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보면 아이가 어느 날은 오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하는데. 어떤 기관은 프로그램 자체도 있고 환영을 해서 저희 아이가 6개월을 잘 이용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근데 오히려 10만원을 주느니, 가정양육을 권장하시려면 나라에서 그런 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을 양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질적 제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D: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사들이 매번 바뀌더라고요. 한 곳은 아예 시간제 담당선생님이 계속 계시고, 아이들만 바뀌더라고요. 어린이집 내에 시간제 보육교실이 따로 있고, 아이가 갈 때도 되게 안정적이어서, 그런 기관이 정말 흔치 않거든요.

## 6) 개별 돌봄지원 서비스

아이돌보미와 산후도우미를 포함한 개별 돌봄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영유아 부모들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 아이돌보미와 산후도우미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민간 육아도우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E: 저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했는데요. 아이돌보미랑 산후지원 돌보미를 아무리 신청해도 안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비를 들여서 많은 돈을 내고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하실 거라면, 도우미를 많이 확보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용한 사람이 거의 극히 드물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시점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 믿음도 별로 없고, 체계적으로 보육을 하고 지원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B: 셋째 때 산후지원 도우미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첫째랑 둘째 때는 지원 자격이 안되어서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자격조건이 좀 더 완화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보미의 경우 양적인 공급 부족 뿐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아이돌보미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시간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의 확보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D: 직접 경험해보는 적은 없는데, 복직 기회가 있어서 복직을 할까 하고서 알아봤던 적이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늦게 퇴근하는 날 저녁시간만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맘 카페에서 후기를 찾아봤더니, 다들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단시간은 돌보미 선생님에 따라 다르고, 아이가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 매일 꾸준히 같은 분이 오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복직을 포기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 갑작스레 단시간 봐줄 사람을 찾는게 힘들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왜냐면 만약 제가 야근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도 당일에 알 수 있는 건데, 당일날 신청해서 바로 올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어렵고,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재취업하고 싶은 엄마들이 어렵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렵다고 다들 부정적으로 말하시더라고요.

## 7) 소결

유보 격차에 대해 영유아 부모들은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느끼기 어렵지만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긴급돌봄의 프로그램 및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영유아 부모들은 영아기 가정 내 양육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게 된다고 보고 있었다. 가정 내 양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양육수당보다는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돌보미와 산후도우미를 포함한 개별 돌봄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영유아 부모들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 아이돌보미와 산후도우미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민간 육아도우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 나. 초등 부모의 만족도, 요구도 및 개선 의견

### 1)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후 달라진 점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초등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는 돌봄의 측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등학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 규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아무래도 유치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의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 애들이 의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를 가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한 반에 많아봤자 10명~15명이었는데, 갔더니 30명~40명 되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애들이 적응이 안 된 상태로 와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저희 아이는 여자애라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는데,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남자애들

어머님들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애를 너무 혼낸다. 애들은 워낙 장난을 많이 치고, 아직 유치원인 줄 알고 아직 개념이 없잖아요. 엄마의 바람으로는 좋게 타일러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바로 옥박지르고 혼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말을 잘 듣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무섭단 얘기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던데요. 애들이 유치원 갈 때는 놀러 간다는 느낌? 근데, 학교는 갈 때 경직되는 거예요. 가서 규율을 지켜야 하고,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했었어요.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유초 연계의 차원에서 초등 1학년의 경우는 보조 인력 확보를 통해 돌봄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B: 처음에, 딸이 급식실에 갔다가 잠바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잠바를 찾으러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런 걸 가지고 급식실에 가면 안 된다고 너무 무섭게 혼을 내서, 이제 잠바를 학교에 안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 명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인원 자체가 부족한 것 같고, 도우미 선생님이 계시거나 화장실 가는 거나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인원을 늘리거나, 보조 선생님을 채용해서 1학년 학생들 케어를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2) 취학 후 교사와의 소통

초등 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는 교사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B: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무래도 보육 쪽이다 보니까. 케어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가서는 솔직히, 선생님께 그런 부분에 물어보는 건 실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1학년 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랑 선생님이 많이 부딪혀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영향을 받을까 싫어서, 그렇게 못하게 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소통 자체가 어쩔 수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부모가 교사와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부모가 교사와 소통이 어려울 경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옮길 수 있으나 초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취학 전에 비해 취학 후에는 역전되는 측면이 있게 된다.

A: 유치원 때는 애가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원에 바로 전화가 가능한데, 학교는 거의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부모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는데, 유치원은 옮겨도 그만인데, 학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선생님을 대하는 저의 자세가 최대한 공손하고 듣는 입장. 오히려 제가 질문을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이 말하시면 그냥 예라고 답하고 말지. 뭘 더 봐주세요. 이런 말은 웬만하면 잘 못하고, 정말 급하거나 중요한 거 아닌 이상 그런 애긴 못하고, 듣고만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통화했던 것 같아요. 학기별 상담 때, 찾아뵙는 것도 그다지, 선생님이 굳이 전화로 하라고,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는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얼굴도 한번 못 뵈어요. 제 마음 가짐으로 아무래도 혹시나 괜히 물어봤다가 혹시나 선생님한테 한소리 들을까 봐 조심스럽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아이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와의 소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B: 상담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어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는 인사를 하러 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문제가 있거나, 아이에 대해서 말할 게 있는 게 아니면 굳이 상담을 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학부모들이 말씀해주시니까. 학부모들과 같이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 3) 초등학교 급식

초등 부모들의 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으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무상급식으로 인해 양적 질적으로 부모의 만족도를 충족하고 있었다.

B: 유치원은 약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또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음식 자체가 아무래도 직접 만드는 것보단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다 생각도 들고, 엄마들 입장에서 좀 더 걱정되고 했는데, 초등 급식은 학생 수도 많고, 급식실도 있고, 직접 만들어서 하시니까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이 높은 것 같고, 또, 학생들이 급식 때문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급식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들을 선정할 때도,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고 점검도 많이 하고,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직접 가서 급식하는 걸 보고 관찰하고 그러니까 급식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밀학급인 학교의 경우는 급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

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대를 나누어 급식을 제공해야 하므로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시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B: 학생 인원이 많아서, 요즘에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한번 가는데도 거의 20분 만에 먹고 자리를 떠야지 다음 학년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에 다 들어갈 것을, 반 나눠서 들어가고, 간격을 두고 앉다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즐겁게 먹기보다는 거의 먼 산을 보면서 각자 자리에 앉아서 이거 빨리 먹고 가야 한다는 느낌. 즐겁게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억압적이고 생각보다는 즐겁지 않게 먹더라고요. 음식은 맛있는데, 항상 시간적인 부분이 짧아서,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4) 방과후 학교 이용

방과후 학교 이용에 대해서는 강좌의 종류는 많지만 인기 있는 강좌는 인원이 한정되어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되고. 작년에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인기 있는 강좌들은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맞아야지 하니까. 작년에 저희 아이가 공예를 했거든요. 너무 퀄리티 높게, 재료비도 되게 적었는데, 선생님께서 엄청 재밌게 해 주더라고요. 다음에도 하고 싶다 했는데, 다음에는 추첨이 다 떨어져서 못했어요. 근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학습에 관련된 수업들이 되게 많고, 어떤 학교는 공예나 과학과 관련된 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종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강좌수는 적고 애들은 많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 5) 긴급돌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부모에게 안내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 긴급도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긴급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긴급할 때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선택하기가 힘들고, 저도 긴급하면서도, 우선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긴급을 쓰려니까 주변 시선도 좀 그렇고, 긴급이라는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긴급해서 사용했어요.

#### 6)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돌봄의 질적 측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맞벌이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되지만 초등돌봄교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다 하시는 건 아니고, 극소수로 진행 되는 것 같고, 이게 약간 방치 개념이신 것 같고, 지나가다가 교실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냥 한 공간에 아이들을 앉혀놨더라고요. 제가 봐도 창살 없는 감옥 느낌? 그렇다고 운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색종이 접고, 그냥 앉아서 책 읽고 하는데 정말 피치 못해서 보내지 않고서는 친정엄마나 학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나 거의 사용을 안 했죠.

초등돌봄교실의 장점은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돌봄이라는 것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A: 저도 안 했고, 저는 직장맘들이 이용하기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원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A: 오히려 학원가는 것보다 낫다고, 학원 가서 못 알아듣는 거 하느니, 책이라도 많이 읽으면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책 읽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학교에 좋은 책이 많으니까. 그리고 책 보면 적어서 선생님한테 내고 상을 받거든요. 그럼 개네는 읽는 게 워낙 많으니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책 더 읽고, 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구나. 굳이 1학년인데, 학원 보내는 것보단 학교 가는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가 안전하니까, 안전한 공간에서 책 읽는 거니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2019/2020년에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 법안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등 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A: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학교는 제한이 있잖아요. 교육이니까.

A: 이렇게 되면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면 맞벌이가 많기는 이유는 단지 말길 데가 없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고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 학원보다는 금액이 저렴할 거 아니에요.



## 7)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초등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학교 밖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B: 학교에서 공문은 봤었어요. 가까운 근처에 3~4개 정도가 있다고 공지는 받았었는데, 잘 안 이용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보지 않고 넘겼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를 보내는 니 학교 돌봄으로 보내는 게 낫지. 이쪽은 안전한 부분도 그렇고, 학교가 낫다.

A: 그 장소가 학교라는 것이 점수를 따고 가는 거죠. 안전. 울타리가 있고, 교문이 있고, 수위 아저씨가 지키고 계시고, 그게 크죠. 아무나 학교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센터에서 하면 누구나 다 드나들 수 있는 거잖아요.

B: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분들이 학교로 와서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간다고 하면, 차량 타는 거에 있어서나 안전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학부모도 있을 것 같아서, 돌봄 자체를 학교 안에서 돌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셔서 교실을 이용해서서 프로그램을 해주시고 하는 거는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돌보는 프로그램이 빈약하면 그걸 보충해서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건 부모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초등돌봄교실이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다함께돌봄센터는 고학년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초등 부모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돌봄을 받음에 따라 저학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A: 마을 돌봄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안전 때문에 보내는 건데. 이걸 아이들이 같은 학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초등학생이 온다면 학년도 섞일 거고, 또 저학년 엄마들이 안 보내는 이유가 저학년이 고학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노는 형아가 와서 괜히 안 좋은 물 들일 수도 있고, 엄마들이 선호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문제도 지적하였다. 학교와 가까이 있으면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학교와 거리가 있을 경우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A: 그리고, 봤던 리스트들도 집에서 엄청 가까운 것도 아니라 그 동네에 어느 부분에 있긴 한데, 그걸 또 직접 찾아서 보내야 하니까. 그냥 보고 어딘가에 있구나, 그리고 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보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 8) 온종일 돌봄정책

현 정부에서 초등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정책에 대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보다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한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 근데, 지금까지 크게 체감이 안돼서, 지금 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체감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우선,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만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사이즈만 커지면 결국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 9) 소결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초등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는 돌봄의 측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등학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 규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 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는 교사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초등 부모들의 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으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무상급식으로 인해 양적 질적으로 부모의 만족도를 충족하고 있었다.

방과후 학교 이용에 대해서는 강좌의 종류는 많지만 인기 있는 강좌는 인원이 한정되어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부모에게 안내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돌봄의 질적 측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맞벌이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되지만 초등돌봄교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초등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학교 밖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현 정부에서 초등돌봄을 확

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정책에 대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보다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한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 어린이집 원장의 만족도, 요구도 및 개선 의견

### 1) 보육지원체계 개편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연장보육 시작 시간과 연장반 교사 채용 지원 예산 문제를 지적하였다.

#### 가) 연장보육 시작 시간

기본보육시간은 오후 4시에 종료하지만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오후 4~5시 사이에 발생하는 1시간의 공백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시간의 공백 시간을 기본보육 교사와 연장보육 교사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시간은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 시간 모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지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일단, 시간이 5시부터잖아요. 근데 애들은 4시부터 귀가를 해요. 일반적으로 힘들긴하겠지만, 이 한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한 시간 내 산만한 상황이에요. 꽤 많은 아이들이 엄마들은 4시부터 귀가라고 하니깐, 4시부터 오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고요. 4시부터 5시까지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다 다양한 시간대로 오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들이 이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연장반 선생님이 하는 일이나, 솔직히 연장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각 어린이집마다 인원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시간대에 담임 선생님들이 귀가 지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시간대에 보조교사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왜냐면 선생님들은 엄마를 만나서 잠깐의 얘기할 틈이 없잖아요. 아이를 귀가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또 보조교사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눈 앞에 가능하면 (직접 보고 하고 싶어 하는데) 4시부터 5시까지 애들이 굉장히 산만하고, 사고 나기 좋은 그런 시간대가 아닐 순 없어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한 시간이 너무 길고요. 비용 계산도 5시 이후부터 하잖아요.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을 구성할 만큼 아동 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사가 추가적으로 보육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A: 애들 규모가 많이 작은 어린이집은 실제로 4시 반, 5시 지나면 애가 많이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영아는 되고 유아는 안되고, 유아는 되고, 영아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유아 따로 영아 따로니까. 취지는 정말 맞거든요. 남아있는 아이들이 유아와 영아가 섞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취지는 충분한데, 어린이집마다 실질적으로 유아 5명, 영아 1명 이런 식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둘을 뽑아놓고도 이게 애 하나 빠질까 봐 문제, 게다가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유아는 80시간 영아는 30시간인데, 애는 있고, 선생님을 뽑았는데 시간이 안되는 거예요.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한 반만 있는 걸로 하고, 다른 한 반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 더 일을 더 하는 상황인 거죠.

연장보육시간이 오후 5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기본보육시간에 다니는 아동들도 오후 4시를 넘어 5시 가까이 돼서 하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연장보육시간이 오후 5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로 인해 유아반 80시간, 영아반 30시간의 연장반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 시간을 지키지 못해 연장반 교사 채용을 위한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연장반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기본보육시간에 다니는 아동들의 하원 시간을 늦게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B: 어린이집에서 4시부터 5시까지가 기본반과 연장반 사이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연장반의 5명을 제외한 100프로의 아이들이 4시 45분, 50분에 가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어쩔 때는 5시 이후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4시 59분 이렇게 가요. 5시 전에 부랴부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1시간 텀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시간이 못 맞춰져서 연장반 운영비, 보조비, 인건비를 지원을 못 받고, 애들은 다 59분에 가고. 그 시간까지 정원이 다 있어야 해요. 이 엄마들이 내가 몇 시간 면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텀을 아예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4시면 4시로 끊었어야 해요. 그리고 연장 선생님의 출근은 3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3시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연장반이라고 지명된 아이들이 30시간이 안된다고 (급여를) 안 준다면, 너무 억울한 거죠.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30시간이 안되는데 이 아이가 49분 50분에 가요. 기저귀를 벨이 올리면 그때 기저귀를 천천히 가니까. 왜냐면 그 연장반 선생님이 원장님 한 시간이 부족해요 이러면 50분 55분에 가는 애들은 귀가 지도를 늦게 해서 3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했죠.

C: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어머님, 저희가 지금 28시간 밖에 안되는데, 7~8분만 있으면 되니까. 잠깐 계시다 가시면 안 돼요?'해서 그래서 그 현관에 어머님들은 의자에 앉아서 담임하고 얘기하다가, 바우처 늦게 찍고 해서, 6월에, 그렇게 조각모음 하듯이 해서 30시간을 넘기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어요.

## 나) 연장반 교사 채용 비용 지원

연장반 교사 채용을 위한 비용 지원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도입할 때 연장반 교사 지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연장반 교사 채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 보육지원체계가 도입되면서 예상보다 연장반 교사 지원이 증가하면서 연장반 교사 채용을 위한 비용 지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서는 연장반 교사 채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일부 기간은 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A: 지금 문제가 원장님들이 교사를 채용하고 싶지만, 복지부가 예산을 작게 측정하고 적게 주고 이려다보니 새 예산이 안 나오잖아요. 신규인데도 안되는 거예요. 아예 잔머리를 썼다가 생긴거라면 자업자득인데, 신설한 시설들은 아예 교사들 지원을 못받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지를 하면서 11월까지만 주니까 12월은 못줍니다 라고 공고가 나왔어요.

B: 이번에 이런 보육 지원 체계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연장반 전담 교사를 따로 뽑았잖아요. 따로 자격을 준거죠. 누리 교사는 따로 하고. 근데 이런 공문이 나왔어요. 11월까지 밖에 안 준다. 그러면 연장반 교사의 처우 개선이나 교사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냐 할지, 그러니까 올해 보육지원체계가 3월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만족도가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데, 정말 방향성은 너무 잘 잡으셨어요. 오랫동안 10년간 제가 바라던 거였고,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런 지원 체계가 돼서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B: 제가 10년 전부터 바라던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렇게 교사 지원금이 11월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연장반을 담임하는 교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봉급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이에 따라 일부 어린이집은 연장반 교사 채용을 했으나 일부 기간에 대한 비용 지원이 나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C: 근데 그 부분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 4시부터가 가능했어요. 제가 6월이 돼서 새로운 교사를 다시 뽑아야 되는 시점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들 30시간 80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고, 여차피 2세 반과 3세 반을 합반을 못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또 해야 할 만큼. 정말 우리한테 이게 필요하냐.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선생님들 이야기가 뭐였냐면 작년까지 했던 4시 반 퇴근과 7시 반 퇴근이 있는 시스템이 더 좋아요. 이걸 저희 사이즈라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한 교실에 담임이 둘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는 그래서 그때 연장반 선생님을 새로

채용을 안 하고 작년처럼 당직제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너무 다행이었던 거죠. 7월, 8월을 저희 00구는 안 썼어요. 어떻게 안 썼냐면, 7월, 8월에 30시간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안 썼어요. 그래서 두 달을 원장님이 어린이집 예산에서 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도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해서 퇴사를 하는 쪽으로 갔어요. 저희는 선생님이 원해서 퇴사를 한 경우였지만, 거기는 아니었어요.

## 2) 어린이집 내 인력 운영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비담임교사,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등)에 대해서 시설에서 원하는 유형에 따라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각각의 인력 유형에 따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C: 연장반 선생님이 두 달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만, 저랑 친한 원장님이 갑자기 인건비가 뚝 끊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직 변경을 해서 보조교사로 바꿔라. 그럼 보조교사 인건비는 받고, 담임 수당만 안 나오는 거면, 그래서 한두 달은 견딜 수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근데, 그걸 구에서 진짜 3일을 고민하 시더라고요. 이거의 가능 여부를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고민해요라고 했어요. 보직이 바뀐 건데, 연장반 선생님이 아니고 보조교사라고요. 그걸 왜 고민하세요라고 물 었더니 이게 적법한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아까로 돌아가서, 그냥 그 어린이집에서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안 주셨어요. 안 주셔서 그래서 원장님이 두 달 인건비 주고, 그 선생님 8월에 퇴사했어요.

C: 지금 여기에는 가정어린이집은 없는데, 저희 구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인 시설에 교사 5명에, 보조교사 3명에, 보육도우미 1명인가 있어요. 거기 종사자가 9명이예요.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지금 애보다 어른이 더 많아요. 공간도 부족하고, 산소 부족해요. 어른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조그만 방에 그렇게 끼이면 안 되죠.

연장반 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한 반면, 비담임교사와 보조교사 등은 대체교사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 시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A: 연장반 선생님들은 대체교사가 있으면, 이쪽에서 신청이 돼요. 근데, 비담임이나 보조교사나 누리 교사는 대체교사 신청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대체교사가 신청이 안돼요. 그러면 비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면, 연장반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비담임 선생님들은 휴가와 휴계를 메꿔요. 그걸 메꾸는데, 그럼 본인들도 쉬고 싶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일주일 만에 휴가를 냈다. 이분들은, 최저시급 5일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

데 본인들이 휴가를 가면 어린이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체가 안되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 3)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동 수에 기반한 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A: 민간 입장에서는 아동 수대로 지원이잖아요. 교사 인건비 중심 지원 체제가 아닌 아동으로 지원되다 보니 교사 인건비가 늘 불확실하고 무서운 대상인 거죠. 고용유지가 늘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들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나쁜 판단을 하는, 어떤 경우는 이유를 잘라버리고 안 받아버리는, 운영료를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비용 지원 정책을 교사 인건비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A: 그니까 결국은 아동별 지원에서의 문제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비용 지원 정책을 최소한 다른 건 못해도, 통일을 해야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해서는 옛날엔 돈을 적게 줄 때는,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형 정책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지만, 국가가 보육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아동 수 기준 비용 지원 정책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기 어렵고,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아동 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므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아동 수 기준 비용 지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 옛날에는 양적 정책을 했고, 지금은 질적 정책을 했다면, 이제는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더 나은지를 봐야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인건비예요. 왜냐면 이게 인건비가 해결이 되어야 교사 대 아동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 교사 대 아동수를 줄이죠? 그러면 데모할 판이에요. 향후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교사 대 아동을 좀 줄여도 되는데, 근데 그걸 여전히 하지 않고, 특히 민간은 교사 대 아동, 아동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설의 노후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열악한 시설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C: 저희 00구에도 국공립이 92개가 있는데요. 25년에 지어진 국공립부터 제가 제일 최신 형이에요. 그럼 저희는 건물을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저 같은 사람의 개인적인 자산을 다 헌납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새로운 깨끗하고 좋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법 적용해서 정원을 측정했어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근데, 25년 전, 30년 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요 구법이에요. 비가 줄줄 새요. 그럼 뭐가 좋은 거죠?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신축이 아닌 기존의 열악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C: 국공립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게, 비용, 지원금 같고, 다 그렇다면 정말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교실이 좁은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다 들어가야 하는 국공립은 왜 아무도 신법 적용을 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공립이 5년마다 재위탁하 시거든요. 최소한 재위탁할 때는 신법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재위탁하는 시점에서는 신법 적용해서 면적만이라도 확보해줘야지. 이걸 국공립이 뭐가 좋은지. 확충을 하든, 시설을 늘리든, 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질적인걸 고려할 때, 교사의 질, 이런 거 다 떠나서, 매각 리모델링 나중에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면적만큼은 신법 적용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아동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 과밀한 공간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C: 안전 관련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있거든요. 그건 이미 건축과 이런 다른 과에서 소방 관련이라서 이미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보육실 면적이 아이들 수에 비해서 너무 좁다는 거예요.

현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양적인 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기대하는 질적인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 지금 국공립 확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면, 확충을 하던, 그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 관리 엄청 고민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게 확충을 해서 개수는 많아졌는데, 이 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질은 굉장히 좋으나 그런 고만하신다고 들었어요. 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문제예요. 너무 좁은 방에 애들이 바글바글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맘 카페 보면 '00어린이집 굉장히 좁아요.', '한 반에 40명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 올라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법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애들도 없는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부모가 선호하는 이유는 교사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 급여의 안정성으로 인해 교사의 이직률이 낮고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시설 및 환경의 문제는 오래된 시설을 사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A: 실제 엄마들이 요즘 왜 국공립을 선호를 하느냐. 그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도 나와요. 교사의 급여가 안정적이니까. 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나올 것이다. 솔직히 그런 효과가 없지는 않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계속 급여 호봉 조금 주니까, 안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들께서, 그 안에서 사실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비용 문제는 있었다면 사라진 문제고, 교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환경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봐요. 어린이집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오래된 국공립은 해결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국공립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일 거고.

## 5) 유보격차 완화

유보격차 완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교육과정, 교사 자격양성, 예산, 부처의 차이가 언급되었다. 누리과정을 통해 공통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으므로 교사 자격 및 양성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A: 통합이나 격차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큰 범주를 시작할 때, 논의를 할 때, 크게 4개로 나눈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교사에 대한 차이와 자격과 대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 번째는 예산의 문제고 예산 문제 관련해서 부처의 문제가 있고, 어디로 합칠 거냐. 일단, 영유아보육법은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기본법 안에 들어있으면서 복지라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에 관한 건 복지가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 되었든 교육과정은 통합이 된 거예요.

## 6) 제안하고 싶은 보육정책

### 가) 취약보육

취약보육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취약보육의 범위 및 지원방식에 대해 비용지원 이외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 취약보육을 해결하는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다문화면 돈만 주거나 그러진 말고, 다문화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집에 사실 그게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이젠 옛날처럼 영아가 취약이 아니에요. 취약보육이 아닌데, 계속 영아가 취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원 시설 입장에서는 유아반이 취약이에요.

A: 기피하는 취약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수익과 지출이라도 적정하게 비슷하게 맞춰줘야 하는 거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니까 취약보육이 뭐냐, 그러니까, 취약보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땐, 어떤 걸 달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 나) 야간연장 보육

야간연장 보육에 대해서도 야간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야간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적은 반면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 시간연장 보육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리질 않은 것 같아요.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손실은 어마어마해요. 갈수록, 요즘 애들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야간 연장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그 차액을 없앨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편법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건 논외로 하고, 결국 말하자면, 시간연장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다고 치잖아요. 시간연장 시간에 아이 둘 때문에 인건비 하나가 200 넘게 나가는 거잖아요. 전기를 다 풀타임으로 써야 하죠. 가스도 다 켜놓고, 밥도 이 두 명 때문에 새로 해야 되는... 시간연장 식식비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다른 거예요. 그걸 예산을 제대로 안 세운 거죠.

### 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되었으나 특히 영아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C: 담당 정원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최소한 0세하고 3세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0세는 인접한 개월 수 3명은 괜찮아요. 3월생하고 10월생이 오면요. 한 명은 앉아있고, 한명은 걸어요. 0세는 2명이 맞는 것 같고요. 3세는 10~12명이 적당한 것 같아요. 0세는 2명으로 줄여야 해요. 화재가 나도 양쪽에 끼고 뛰어나올 수 있잖아요. 셋은 못 뛰어요.

## 7)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교사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B: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잘 만들었는데, 사실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은 작년에 유아교육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는데, 반면에 미흡한 게 뭐냐면 지금 기본 보육하고 연장 보육 시간 때문에 유치원에는 알아보니까 2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4시에 끝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시행해보니까 5시가 돼야만 선생님들이 아이들로부터 놓여놔요. 근데 사실 놀이중심 유아교육,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시행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아이들의 놀이를 이끌어갈 때, 어떤 선생님의 계획될게 아니라 그날에 따른 아이들의 놀이를 끌어내려면 선생님들이 좀 더 방과후에 그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고, 염두해두고 공인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고민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희 원감님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나왔는데, 원장님 저같이 20년 된 교사도 너무 하기가 힘들어요. 잘했는데, 너무 좋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신났는데, 재밌는데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2020년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B: 누리과정을 1년 동안 아이들이 적게 오기 때문에 더 실행하기 쉽고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만약 애들이 다 나오게 되면 4시, 5시까지 애들과 있으면서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에 누리과정은 그래도 누리과정 실천집이나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그대로 따라가면 됐는데, 놀이 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은 그런 교과서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선생님들이 지원해주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한테 5시까지 아이들을 보육을 하라는 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8) 소결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연장보육 시작 시간과 연장반 교사 채용 지원 예산 문제를 지적하였다.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비담임교사,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등)에 대해서 시설에서 원하는 유형에 따라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동 수에 기반한 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설의 노후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열악한 시설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유보격차 완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교육과정, 교사 자격양성, 예산, 부처의 차이가 언급되었다. 누리과정을 통해 공통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으므로 교사 자격 및 양성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야간연장 보육에 대해서도 야간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야간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적은 반면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교사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만족도, 요구도 및 개선 의견

### 1) 보육지원체계 개편

#### 가) 연장반 교사 채용

보육지원체계 개편 중 연장반 교사 채용에 대해 연장반 교사 채용이 잘 안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기존 보육교사를 연장반 교사로 등록하고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C: 보육체계를 개편했을 때, 연장반 교사를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지 생각했을 거 아녜요. 한 원당 최소 2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다면, 이렇게 모자라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한 3월 정도에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연장반 교사가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원에 있는 전담반을 연장반에 돌려놓고, 지원이라도 받자, 실제로 지원을 받고, 연장반 교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었어요.

C: 저희 어린이집을 예로 들자면, 연세 드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연장반 교사는 다른 보조 교사로 올려놓고, 그 선생님은 실제로 연장반 교사 업무까지 하는 겁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오셔서 저녁 7시 반까지 하는 걸로.. 근데 추가적으로 연장반 교사가 들어가야 하는 수당이 이분한테 전혀 안 가고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형태로 연장반을 돌렸을 때, 나오는 수당이 선생님들한테 나눠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연장반 교사 지원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연장반 교사 채용에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연장반 교사 채용을 위한 비용 지원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A: 코로나 때문에 실제 긴급 돌봄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 더 많았고, 실제 코로나가 터진 건 대구 쪽이어서, 대구가 긴급 돌봄을 했을 적에는 서울, 경기 지역은 거의 정상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도권이 터지는 시기쯤에서, 실제 아이는 오지 않는데, 연장반에 있는 교사를 등록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C: 심지어는 원장들도 지원 안 했던 원장님들마저도 그거 일단 받아야지. 안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자리 맞듯이, 얼른 교사 등록해두고, 수당 지급받던 상황이었어요.

## 나) 연장반 시작 시간

기본보육시간은 오후 4시에 종료되지만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5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후 4~5시 사이의 1시간은 기존 보육교사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휴게시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B: 기본보육 선생님들이, 거기서 계획한 건 4시 반부터 5시를 선생님들 휴게시간으로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4시에 애들이 가질 않는데, 애네들 중에 기본보육 애들도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그럼, 너희가 애를 봐야 하고, 휴게시간이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B: 그냥 저희가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시간 일하고 낮잠 시간 중간에 쉰다는 걸, 5시까지 뭘 하고 30분 나눠서 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취지 자체가 휴게시간이라던데, 4시간 일하고 낮잠시간에 쉬고, 거기를 왜 그렇게 비워놨는지를 모르겠어요. 4시부터 5시.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4시와 연장보육시간이 시작되는 오후 5시 사이의 1시간은 원래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이라는 취지가 있었으나 실제로 업무 인수인계는 오후 4시 전에 이루어지고 오후 5시까지의 시간은 기존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4시부터 연장보육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C: 업무 인수인계 시간이라곤 얘기를 했었지요.

B: 인수인계 시간이 3시 반부터 4시예요. 그것도 아니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부모 쪽을 해주려다 보니까 생겼는지..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D: 엄마들이 애들 귀가하는 시간이 늘 동일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본보육반과 연장 보육반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엄마하고 먼저 일찍 가서 집에서 쉬는 게 애들한테 좋지, 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 시간, 4시 반부터 5시도 그냥 연장반으로 늘려야 될지, 거기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말할 때는, 5시부터 보육용으로 다 되니까,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보육교사들한테 그걸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시부터 연장반으로 하고, 연장 보육으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 2)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업무경감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C: 처우개선은 업무경감이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처우개선이면서, 보육의 현장에서 질을 담보해낼 수 있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도 관련된 얘기죠. 체계 개편에 발맞춰서 좋은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양질의 조건들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은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 저는 처우라는 게 실제 지킬 것을 지키고 있는 현장에서 문제가 났을 때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게, 처우개선이라고 보는 거지, 기본적인걸 지키지 않은 현장에서 처우개선을 얘기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름, 복지부나 정부 차원에서 선생님의 낮은 임금을 이야기하면서 처우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갑자기 없던 수당들의 명목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그것도 모든 교사들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유아반이나, 영아반이나, 장애반을 맡고 있느냐, 비장애반을 맡고 있느냐, 그리고 누리반을 맡느냐, 방과 후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임금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처우개선비의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어느 지역의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보육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C: 문제는 또 지금 현재 임금체계가... 민간이 70%잡아요. 70%의 민간에서 지역별로 모두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담합의 기준이 뭐냐, 지자체가 주고, 중앙정부가 주는 총액의 처우개선비를 뺀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없으면, 딱 최저임금 위반 아닌 정도가 돼요. 지금 그게 담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담합도 하나 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하고 지방도시로 갈수록 교사들은 계속 서울로, 광역시로 가고 싶은 거지, 소도시에 있고 싶지 않죠. 그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예를 들자면, 강원도 춘천은 처우개선비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가평만 하더라도, 홍천만 하더라도 조금 더 높거든요. 처우개선비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반전들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해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지 되고,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처우를 하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라고 할 텐데, 저희한테는 모든 지역과 또는 어느 시설 유형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다 천차만별로 처우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들을 일괄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및 단기 근로계약서 등 고용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고용안정은 시켰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5인 미만 시설에 대한 고용보험 있잖아요. 연차, 퇴직금이 보호되지 않은 일반 시설 중에 5인 미만 시설들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교사들도 알아서 점점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시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 교사들이 같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시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제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용안정. 제발 1년짜리 근로계약서, 그것을 평가인증기관에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고용복지부가 계속 얘기해서 평가인증 지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로계약서 유무를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악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기계약직 이라서 계약서 안 써도 되는데, 평가인증을 핑계로 해서 단기 계약서로 바꾸면서, 이 계약서를 자주 강요받아요. 제발, 조례나 지침으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되어야 해요. 국공립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례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광역시도나 지자체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명문화된 근무조건 고용안정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영아반 80%, 유아반 30%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다. 영아와 유아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C: 전체 국공립 시설에 인건비 있잖아요. 시설 확충하면 뭐합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특히, 가장 중심인 교사 인건비를 영유아 나눠서 지금 30%, 80%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줄 거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공립에서 급식 비리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명예욕으로 스펙 쌓기 위해서 원장도 하지만, 거기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근로기준법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국가가 국공립 확충 정책에 대해서 선언을 했다면, 최소한 그에 맞는, 격에 맞는 국공립 운영에 대한 지원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창피하다. 영아 80%, 유아 30%, 그래서 시설유형이 자주 영유아로 나뉘는 것도...

C: 그래서 최소한 줄 건 주고, 운영을, 위탁을 하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선 독도이라고 욕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줘야지 된다. 인건비는 국공립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확충했다고 말하기 전에, 복지부는 최소한 국공립을 확충과 더불어서 우리가 최소한 국공립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운영비 지원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니까, 가장 큰 맥락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층 상관없이, 몇 프로 여야지 된다. 그래야, 위탁을 받은 원장도 영아만 할게 아니라, 통합보육이든, 장애통합이든, 자기가 전망을 좀 세우면서, 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과 유아반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책은 호봉이 높은 교사일수록 인건비 지원이 많은 영아반으로 배치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으로 유아반에 대한 보육의 질 제고가 중요해진 현재 경력이 적은 교사일수록 유아반에 배치되는 상황은 보육의 질 제고



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B: 지금 이 불문율처럼 호봉이 높은 교사는 무조건 영아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리 교사들이 누리과정으로 아이들의 요구 대처를 제대로 하면서 하려면, 정말 노련한 교사여야 한다. 근데,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수업을 관리를 잘하는데.

B: 놀이중심으로, 누리 중심으로 하려면, 0세부터 만 5세까지 이 발달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이걸 해줘야 하는데, 지금 경력 있는 호봉 높은 사람은 다 영아반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표준화되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A: 실제 우리가 말하는 국공립, 국공립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 그래서 질도, 교사도 담보되어있고, 어느 정도 믿고 맡길 수 있다 라는 기본 전제가 되려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거죠. 원장도 80% 지원이잖아요.

#### 4) 잘 추진된 보육정책

현 정부에서 잘 추진된 보육정책은 휴게시간 보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휴게시간 보장은 노동정책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보육교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D: 저는 제 보육경력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어찌 됐든 그전에는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휴게시간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걸 보육정책은 아니고 노동법이고 원래 지켜야 되는 걸 이제야 하게 된 것이란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보육정책 때문이라고 할 순 없죠.

C: 저희가 체감하는 게, 보육정책으로 뭔가가 바꿨다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만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전환되면서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우리가 요구하거나 대놓고서 할 수 있었다는 걸 아예 몰랐잖아요.

일지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업무 부담 경감 역시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A: 일지가 간소화된 거가 좋아요. 이걸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류가 진짜 많았었던데요. 원래는 그 일지 안에 개별 아이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보육일지 한 장이 하루였으면, 지금은 한 장이 일주일로 됐거든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은 보육교사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A: 누리과정이 놀이중심으로 바뀌면서, 아이들한테 개별적인 지원이 직접적이었던 게 제3자 입장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입도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간다면, 놀이중심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직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고.

업무관련 공문 및 지침이 보육교사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D: 업무 관련 내용, 공문이나 지침이 공유가 전혀 안되거든요. 원장들한테만 가고, 교사들한테 안 가잖아요. 복지부에서 공문, 지자체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어린이집연합회까지는 모든 공문이 다 가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고 업무 관련은 원장밖에 못 보고, 그걸 오픈을 안 해주니까, 교사들이 전혀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마다 연합회 지역마다 같은 공문 내용을 갖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과 교사가 서로 필요 부분을 알게 된다면 이런 업무 관련 지침을 교사도 볼 수 있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같이 공유하던지, 우리가 언제든지 이 어디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5)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현장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C: 사실 유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곳이 거의 없어요. 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사도 사실 없고, 사실은 현장에서 누리과정 개정했는데, 이게 일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들도 너무 많고,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코로나 정부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되기 힘든 것들. 다만, 이게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된 것에 대한 유의미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교사가 교사 중심으로 놀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어쨌든 교육과정 안에 넣었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 들고요.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사교육의 미비로 인해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C: 다만, 현장에서 경력 교사들 외에 초임 교사들이 이것을 해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초임 세대 교사들이 놀이를 주도해서 큰 게 아니잖아요. 골목문화가 있었던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앉아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티칭도 1대 1로 배우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놀이를 주도하고, 주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개입을 안 한 다던지,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하거나 공유할 기회가 좀 더 많아야 해요.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는 부모의 인식이 놀이중심보다는 학습중심으로 되어 있어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C: 제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환경이어야지 되잖아요. 교실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실 안이 아니어야 가능한 일인데, 과연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까.

B: 학부모가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운영위원회가 말하는 데, '누리과정 중에 못한 거 다 채워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 교과서 뭐가 있어서 교구교재를 자기들한테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한 보육이란 게 그런 거였으니까. 교사도 교산데, 부모들의 인식, 아이들을 바라보는 걸 바꿔야.

C: 반대 경우는 뭐냐면, 아이한테 선택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어린이집에서 나들이는 일상적이어야 하는데, 그걸 내 아이는 빼 달라는 거지. 미세먼지, 코로나 상황에 아이를 내보내기가 싫다. 교실에 내버려 두라. 그런 공감과 이해 없이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데, 위험부담을 안고 나가는 건데, 이게 부모들로부터 걸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못하는 거죠.

현재와 같은 교사 대 아동 비율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고, 보조교사 지원이 증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D: 놀이중심 자체가 교사보단 아이가 주도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교사대 아동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7센데, 주말에 있었던 일이 너무 즐거워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은 너 차례가 아니야. 차례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아이는 내가 어떤 놀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내 차례가 아니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B: 보조교사 3반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보조교사는 최소한 적어도 1명 있어야 되거든요.

## 6) 유보격차 완화

유보격차 완화에 대해서는 유보격차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에서 시설유형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C: 유보통합을 어디다 뒀다 되냐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민간 시설에서 일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든, 그들의 격차를 줄이는 게 결국 유보 격차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전문성이든, 질이든, 처우개선들이 일정 정도 간극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도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소청심사위원회라고 거치거든요.

B: 저는 유-유 격차를 먼저 정리를 하고, 보-보 격차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유-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봐요. 저는 오래전이지만 유치원에서 일을 해봤고,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지만, 전 유치원 다신 안 갈래요. 저는 여기서 격차를 줄이는 게,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의 격차를 말하는 건지, 이 지점이 뭔지, 진짜 병설유치원과 격차를 말하는 건지.

유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A: 실제 격차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치원 교육과정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선생님과 유아교육과든, 양성원이든, 사이버든, 평생 교육원이든 어떻게든 받아왔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게 서로 공유가 되고 합쳐지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과정을 서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먼저 제공을 해줘야 됐고, 그거를 똑같이 이수 하든, 자격검증을 하든, 통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완하는 시기가 정해질 거잖아요.

유보격차의 완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의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줄여나가는 기반 위에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C: 민간과 공립의 차이 격차가 해소되고, 또 보육시설에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가 해소되는 시점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통합해서 모두 일원화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C: 유보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로드맵이라는 게 만약에 5년을 본다고 한다면, 5년 안에 연도별의 어느 성과들을 내거나 합치기 위한 전제로서의 로드맵이 아니라, 최소한 5년 동안, 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교과부와 치열하게 논의할 거고, 또는 복지부는 보육시설에 국공립 교사들이나 또는 대체 인력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 것인지, 일원화시킬 것인지,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원화 방향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로드맵은 서로 미룰게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 7) 소결

보육지원체계 개편 중 연장반 교사 채용에 대해 연장반 교사 채용이 잘 안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기존 보육교사를 연장반 교사로 등록하고 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4시에 시작하지만 연장보육료 지원은 오후 5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후 4~5시 사이의 1시간은 기존 보육교사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휴게시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업무경감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영아반 80%, 유아반 30%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다. 영아와 유아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잘 추진된 보육정책은 휴게시간 보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휴게시간 보장은 노동정책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보육교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에 현장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보격차 완화에 대해서는 유보격차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에서 시설유형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유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마. 유치원 원장의 정책 성과 평가 및 개선 의견

### 1)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정책에 따라 2021년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릴 경우, 사립유치원은 2018년 대비 900개소 이상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서면의견수합). 이에 국공립유치원을 급격하게 확대하기보다는 누리과정비를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였다.

C: 정책을 다 떠나서, 애들이 없어요.

D: 출산율은 제로 상태로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어도, 2020년생이 4년 후엔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국공립이고 사립이고... 올해, 주변에 아이 낳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올해 아이들이 들어온 해부터 이제 그때부터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도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아이가 없어서 못해요. 앞으로 4년 안에 다 정리된다고 보죠.

D: 사립유치원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출생률만 높아지면, 국공립도, 사립도 애들이 많고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출생률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그리고 국가가 약속한 게 누리과정비 30만원 인상이었어요. 그것만 줘도 돼요. 나머지 작은 차이는 부모가 주면 되는 데, 이건 안 지켜주고, 국공립유치원만 확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거죠. 출생부터 차별을 받으니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인 ‘처음학교로’, ‘에듀파인’이 급격히 추진되어 무리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사립유치원들은 비리 유치원 파동 이후, 유치원 3법 적용과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급격한 수용과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유치원 공공성 제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C: 지금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년은 아이들이 없는 해고, 이 상황이면 아예 접수조차도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처음학교로 하라니 이걸 설명도 못한 채로 이걸 맡겨야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곤욕스럽죠.

A: 이게 밑으로 가면서 공공성 제고 정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다 당장 단계 생겼는데, 공공성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사치예요.

D: 국가가 원하는 대로 다 투명하게 하자.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듀파인 하나가 국가가 다 들여다보고 있고, 투명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인대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에듀파인에 회계가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특히 ‘에듀파인’ 정책은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공공성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성 제고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에듀파인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세입, 세출 구조, 회계 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청의 담당자도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행정인력 지원이 안되어 에듀파인을 다루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였다.

A: 에듀파인 담당자에게 들었는데, 에듀파인을 만들긴 했는데, 사립유치원 회계를 잘 모르고 만들었대요. 우리가 수업료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지 잘 몰랐대요. 수업료, 특성화, 현장학습비, 교재비, 차량비, 종일반비, 6가지죠? 입학금, 급식비까지 있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몰랐대요. 유치원 회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있는지 몰랐다. 이러니, 감사에서 할 말은 많았겠다고 해요.

C: 지출은 거기 나간 항목대로 지출할 수 있는데, 세입이 4~5개예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애들마다 또 다 달라요. 이거 하다 보면 돌아요. 지출은 오늘 날짜까지 다 되는데, 세입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계속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입금하는 방법을 바꿔 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엄마들한테 스쿨뱅킹에서 인출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세입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금액이 다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A: 업무 하는 거 하면 되죠. 누가 오든 시켜서 하면 되는데, 현실하고 안 맞게 만들었다는 건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잘못된 정책인데, 성과로 봐서, 무조건 다 하면 성과? 그건 아니잖아요. 다했다고 좋은 성과는 아니지.

C: 이거 잘할 줄 알았나 봐요.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기막힌 일들이 많은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3월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9월이잖아요. 3월도 못 끝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에듀파인 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세입에서도 난제가 있고...

또한 에듀파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망이 잘 갖추어져야 했는데, 공유지분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들은 구조적 한계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

다고 하였다. 이에 에듀파인 정책이 충분히 정착되고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지원 해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책을 수용하고, 적응하고 시행해 나가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결과를 독촉하고, 못하는 곳을 지적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B: 기본적으로, 에듀파인은 돌아가려면 2기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유지분 아파트 1200개는 1기기는 커녕 500메가급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에듀파인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너무 느려서요. 아마 3분의 1 정도의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 잘 실행이 안될 거예요.

P: 교육부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익숙해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익숙해질 때까지는 최소한 2~3년은 더 걸리죠. 그러려면, 그동안에는 계속 지원해주고, 정상화를 시켜야죠. 이것도 잘 안되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감사를 해서 제작을 하고 법에 어떤 사항에 조치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교육부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단지 내의 속도의 문제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적을 하고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죠.

A: 사실 도입만 했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3월부터 못한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 3) 매입형 유치원 정책에 대한 의견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지역교육청별로 추진되는 정책이므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치원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서면의견수합). 또한 매입은 잘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매입이 이루어지는데, 매입 가격에는 현 시세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서면의견수합). 또한 매입형 유치원 정책과 관련하여 단설기준의 대형 유치원들을 매입하다보니, 오히려 비리유치원들을 매입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공유지분 아파트나 시설이 오래되었으나 교육을 열심히 해 온 유치원들을 매입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매입형 유치원의 문제점은, 처음에 매입형 나왔을 때 아시죠? 매입한 유치원들은 다 감사해서 비리 유치원으로 찍혔던 곳이에요. 대형 유치원, 5년 미만이어야 한다. 학급은 8학급 이상이어야 한다. 공유지분은 안된다. 다 그런 게 있으면, 결국 보니까 추려보니까 000 의원이 떠들었던 비리 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들이었어요. 우리 00도는 다



매입형 유치원으로 갔어요. 이게 정말 누구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국가는 정말 어려운 유치원, 공유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치원, 시설은 낙후됐어도 교육을 잘하는 유치원을 매입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되었어요.

사립유치원들은 00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만을 표현했다. 처음에 공유지분 유치원은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 가능하다고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준이 되면 매입형유치원으로 신청하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어려워진 사립유치원 운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식 퇴로로 매입형 유치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수의 유치원들이 코로나19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유치원 사업을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매입형 유치원이 공식적이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퇴로가 되기 때문이었다.

C: 그래서 올해 00사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엄청 많이 신청했대요.

A: 우리도 공유지분 안된다고 했다가, 너무 들어오는 게 없어서 봤더니 공유지분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최근에 지은 유치원들은 00도 비리 유치원들이었다고 해요.

A: 사립유치원들은 그렇게라도 받고, 지금 손 털어서 감사하는 마음인 거죠. 아는 유치원은 이르지 않았으면 코로나 때 큰일날 뻔 했다. 매입형이 나 살렸다는 원도 있어요. 결국 큰 유치원은 끝까지 살아남는구나 생각했죠.

#### 4) 공영형 유치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가) 법인화의 어려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의 문제, 특수법인 제안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게 사립 유치원 법인화는 충분한 예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정책으로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인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법인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인에서 법인화를 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사인 사립유치원으로 환원할 수 없다면, 대다수의 사립 유치원들은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법인은 불가하고, 사립 유치원에 맞는 특수법인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D: 우리가 당장 법인화로 가겠다. 걸림돌이 너무 커. 우리가 결정을 못했어. 스스로가 준비가 안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재정 지원 다 해준다, 공영화로 하면 된다. 왜 못 가느냐, 법인화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 그걸 몇억씩 내야 해요. 그걸 돈이 없어

요.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정말로 국가가 앞으로 무상 교육하고 다 법인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특수 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워요. 특수법인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사립학교 법인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맞는 법인 만들어주면, 거기에 맞게 열심히 투명하게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못할 때, 유치원 폐원 하고, 내 재산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현재, 사립학교법에 적용되는 법인이라면, 못하죠.

#### 나) 설립자와 원장 분리에 대한 거부감

유치원 3법 이후, 사립 법인 유치원의 경우, 법령상 설립자가 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현재 설립자 원장이 대다수인 사립 사인 유치원들은 법인화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설립자 원장이 법인화를 하여 설립자가 될 경우,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에서 업무를 하여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는 공영형 유치원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 경영에 익숙한 사립 유치원들은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면,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다고 해도 가족 채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 사립유치원 설립자 원장들이 아주 많아요. 설립자 원장이 80% 이상 되는데, 유치원 3법이 되면서 법인 유치원들은 설립자가 원장이 될 수 없어요. 법인화를 하면, 원장 하나를 또 써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기여하고 있어도 설립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지금 유치원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설립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C: 많은 원장님들의 자녀들이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공영형 유치원으로 바꾼다고, 설립자만 남고 나가라고 하면, 저부터 나가야 해요. 저는 원장이고 우리 남편이 설립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지금 몇 십년동안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원감도 아니고 평교사예요. 그럼 저랑 자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 5)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우선 충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사

이버 연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강의 하는 사람들도 놀이중심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국가에서 이야기한대로 실제로는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사립의 방식대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잘 해왔는데,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의미였다.

B: 사이버 연수 시간 30시간, 실시간으로 하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거 하나 들으면 밤새 들어야 해요.

Q1: 콘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나요?

B: 안돼요. 무슨 도움이 돼요.

D: 지금 놀이 중심을 현장에서? 교사들이 진짜 이해도 못하고, 역량도 그만큼 안되고,

B: 지금 사이버 연수하는 사람도 놀이중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서.

D: 그리고 작년에 졸업한 선생님들이요, 놀이중심을 배우고 나오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애기한 그대로 배우지 않았다고요.

A: 그냥 우리 사립 특성에 맞는 놀이중심으로 했던 거죠.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코로나로 현장실습이 줄어 누리과정 연수가 부족한 점도 지적하였다.

C: 근데 지금 대학에 실습을 해야지만, 내년에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원격연수를 받고, 실습을 나갈 수 있을까요?

A: 00도는 현장실습을 2주로 줄였더라고.

## 6) 유보통합 및 유보격차 완화 정책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보통합을 논하기 전에 공립-사립 유치원의 격차 완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 공립과의 격차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유치원 격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은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립 하고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 유치원 끼리만이라도 격차 해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지만, 주거 통합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 하고 유보통합을 얘기한다? 이걸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립하고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걸 최고 과제로 해서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지원이 일부 되고 있지만, 원비상한제로 인해 충분한 교원 급여 인상이 어려우므로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교원 급여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은 부모 부담 절감과 사립교원 권익 차원, 사립유치원 존폐 문제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였다(서면의견).

## 8) 유치원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

### 가) 국공립 40% 확충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번 정부 들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유아 40% 확충 정책의 영향,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공립의 학급수가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부모들이 유치원에 유아들을 보낼 수 없자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A: 저흰 직장어린이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격도 싼데, 환경도 좋고, 유아교육 전공 선생님이 와 있고, 이걸 무슨 방법으로 이겨요. 저희는 시설이 노후해서...

C: 초등학교 병설에 교장선생님 하신 분 말씀이 올해 병설유치원에 학급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B: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다 빠져나가니까. 7세가 지금 전멸이죠. 엄마들도 걱정하고,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져서 걱정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유치원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돌보는 것. 원격수업이 유치원에 가당하냐? 안된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들이 나가면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운영이 안 되는 입장에서,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나 보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C: 2월 말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5월 교육비를 못 받았잖아요. 또 이번 달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10억을 세웠는데, 다시 엄마들 다 환수하

고, 3,4월은 반 50%는 지원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거의 15~20%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다시 세워서, 마이너스 예산인 거지. 그러면, 지금 미리 앞당겨 쓰지만, 내년 1,2월엔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장님들이 무슨 원을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걱정하면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보다. 왜? 내년에 개원할 국공립유치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무조건 40프로 채운다고 하니까, 매입형도 많고, 병설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사립은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을 운영하느라 정상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부모들은 양육수당을 받아 영어유치원이나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생겼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은 지속적인 경영난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C: 7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만뒀서, 아예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냐? 학원에 가는 거예요. 영어학원... 양육수당 받고, 돈 조금 보태서 거길 보내고, 엄마들은 아이가 학습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은 못하고 있잖아요. 돌봄만 하고, 수업을 못해요. 수업을 하면, 난리 나니까.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학습이 떨어져요. 내년에 학교 가야 하는데.. 그래서 유치원에 맡기질 못하니까, 다 그만두고, 학원에 보내서 학습적인걸 높이는 거죠.

#### 나)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일부 비리 유치원들의 문제로 열심히 유아교육에 전념해 온 사립유치원들 전체가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자존감을 잃었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의 배제 등으로 현재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서면의견).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가 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 공공성 정책을 잘 따라서 하고 회계관리도 잘 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나 공적인 것이라는 마음도 원장들이 인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성 정책을 잘 따르는 유치원들을 정부가 살려나가야한다고 하였다.

D: 제가 오늘 00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결과를 봤는데, 우리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수준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고, 제가 지금 보면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학부모나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립이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할 줄 몰라서, 미숙하고, 어떤 특별한 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운영한 것이 진실인 거지. 내가 뭐 마음먹고 어떻게 잘못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의 불찰인 거지.

#### 다) 유치원 3법의 실질적 시행의 어려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식법의 적용은 공유지분 아파트 단지 유치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A: 저희 유치원 건물은 94년도 건물인데 공사하려면 6개월 문 닫고 대대적으로 공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건물임에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 알아서 하래요. 아까 말한 급식시설이 좀 안 좋아서, 처음 개원할 때는 급식시설이 없던 유치원이잖아요. 급식시설은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야 해요. 수도는 어떻게 끌고 있는데, 하수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계속 유치원 상황을 보고 하래요. 이게 무슨 억지인지 모르겠어요.

P: 이런 공유부지 관련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법이 시행이 돼요. 공유지분에 해당되는 유치원들은 당장 바로 문제가 나고, 이게 개선이 안되고는 시설을 확충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닥쳐서 법은 적용됐는데, 유치원도 시설을 못 갖추고 있으면, 벌금 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까 봐 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 돌아오는 게 없죠.

### 9) 개선방안

#### 가) 유치원 퇴로 방안 마련: 용도변경, 공유부지 문제 해결

면담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현재 사립유치원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비리유치원 사태와 국공립 확충정책, 저출산 현상, 코로나19는 대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그만두고 싶은 유치원들도 많은데, 마음대로 유치원을 폐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용도변경을 유연하게 해주고, 공유부지에 대한 제한 조항을 풀어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게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다수였다

A: 용도변경도 얘기했지만, 실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교육 시설이 남한테 상가가 들어가는 건 가슴이 아프고, 국가가 우리꺼 제값만 주고 사서, 학교시설이나 지역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 있는 도서관 굉장히 선

호해요. 지역 도서관도 좋고, 아니면 노인을 위한 복지센터. 이걸 제가 복지센터로 바꾸면 주민들 반대가 심해요. 근데, 나라가 복지센터를 만들면 괜찮아요. 가지고 가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맨날 왜 계속 다시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우리 유치원에 들어와서 해도 되잖아요. 더 주민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걸로 얼마든지 활용하면 좋죠.

C: 저희가 계속해서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A: 퇴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한 번은 다시 줄 설 수 있는 기회. 내가 뼈아프게 유지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손으로 이걸 문 닫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주택법에 의해 복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를 매입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유치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다(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종료되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제2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토지분할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Q1: 퇴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A: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문 닫을 수 있는 자유권을 보장해주셔야 해요. 용도변경을 아예 못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폐원을 했어도, 이 건물 저희가 동네에 용도변경도 어렵고. 저희가 공유지분으로 묶여있어요. 아파트하고 공유로, 저희가 어렵게 용도변경을 했어요. 지역마다 다른데, 경기도는 용도변경에서 유치원을 100프로를 안 주세요. 문 닫고 있는 곳에다가 51프로는 유치원이고 49프로만...

D: 그건 용도변경이 아니라, 유치원 부지에서 지금 그냥 쓰라는 거죠.

A: 그니까 용도변경을 안 해주니까, 이걸 닫으면 이 건물이 폐허가 되는 거죠. 이게 내 자산인데,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 나) 누리과정비 인상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누리과정비 지원비를 인상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30만원으로의 누리과정비 인상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D: 누리과정비라도 제대로 줘라 그럼 엄마들이 30만원에서 24만원이면 6만원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30만원 준다는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D: 이번에 월 2만원 올랐잖아요. 그래서 24만원이 됐는데, 24만원 되니까 엄마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내년에 얼마 오르는데요? 못 올린대요?

Q1: 그 올린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체감을 하나요? 체감이 돼요?

A: 네. 당장 2만원이 내려갔으니까.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D: 근데, 30만원 또 주기로 한걸 안 주니까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교육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랬을 때, 참 좋았는데.

## 10) 소결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정책에 따라 2021년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릴 경우, 사립유치원은 2018년 대비 900개소 이상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인 ‘처음학교로’, ‘에듀파인’이 급격히 추진되어 무리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지역교육청별로 추진되는 정책이므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치원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매입형 유치원 정책과 관련하여 단설기준의 대형 유치원들을 매입하다보니, 오히려 비리유치원들을 매입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공유지분 아파트나 시설이 오래되었으나 교육을 열심히 해 온 유치원들을 매입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게 사립 유치원 법인화는 충분한 예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정책으로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인으로의 환원할 수 있어야 법인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유치원 3법 이후, 사립 법인 유치원의 경우, 법령상 설립자가 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현재 설립자 원장이 대다수인 사립 사인 유치원들은 법인화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충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사 이버 연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보통합을 논하기 전에 공립-사립 유치원의 격차 완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지원이 일부 되고 있지만, 원비상한제로 인해 충분한 교원 급여 인상이 어려우므로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교원 급여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식법의 적용은 공유지분 아파트 단지 유치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용도변경을 유연하게 해주고, 공유부지에 대한 제한 조항을 풀어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게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다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누리과정비 지원비를 인상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30만원으로의 누리과정비 인상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바. 유치원 교사의 정책 성과 평가 및 개선 의견

### 1)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

#### 가) 매입형 유치원

면담에 참여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매입형 유치원은 시설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단설유치원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 지금 교사들은 11명이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00 지역에서 매입형 단설 유치원이 좋고, 단설유치원이 좋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아마 저기로 가지 않았겠죠. 왜냐면, 11명 중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청해서 온 교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만약에 좋다고 하면, 00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갔겠죠. 하지만,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경력교사들의 대부분은 휴직을 오래 했다가 들어온 선생님, 아니면 저처럼 타 지역에서 들어온, 그리고 나머지 인원수들은 다 신규 교사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했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홍보하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요. 숲은 성장했는데, 그 안에 내부에 질적인 관리는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시설 설비 측면에서도 너무나 열악한, 아무리 5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검토하는 자문단들이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교육청 행정직들이 와서 보게 되니까, 급식 시설도 하나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급식 수도 시설이 일반 가정식 수도 시설로 되어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급식 확충하려고 하면, 또 공사가 이뤄지고, 저희는 통합학교다 보니까 특수 아이들도 다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다시 공사하고.

면담에 참여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매입형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매입형 보다는 신설 단설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B: 실제로 매입형을 고쳐서 쓰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신설 짓는 게 낫습니다.

A: 매입형 유치원 중에는 지하에 물이 차고, 교직원의 주차장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차 할 공간이 없는 실정도 너무 열악하고, 교사들이 직접 급식을 들고 내려와요. 상당히 열악한 겁니다. 이런 내부적인 속사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시설 공사도 하겠지만, 2~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부지 자체가 제대로 확충되어있지 않으면, 놀이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충이 됐고, 숫자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건 상당히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너무 급하게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A: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는 건가. 국공립을 확충하기 위해서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싼값에 하려고 하지 않나. 차라리 제대로 된 단설 유치원을 하나둘씩 지어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은 상당 기간동안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 이외에도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과 통학버스 등에서 기존의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기준을 완화한다는 점도 있었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인데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방과후 과정 및 통학버스 등에서 국공립유치원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C: 원장들이 가기 전에 교구나 좋은 것들을 팔고 헌 것을 다 놓고 갈 정도로, 쓰기 어려운 것들을 남기고 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도 솔직히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 년 내내 공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면, 이거는 그냥 성급한 자리 늘리기가 아닐까 싶고, 아니면 정책을 급하게 확충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사립 어머니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들 어줬거든요. 통합버스 3~4대씩, 무조건 맞벌이도 아닌데 특성화랑 방과후 2년 동안 무 조건 다 할 수 있고, 이런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국공립유치원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약간 달래기 식으로 어머니들을 설득했다는 것도 성급했던 것 같아요.

E: 지금 저희도 사립이 있던 곳에서 특색도 하고 발레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국공립에서는 하루에 4~5시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해서 통합버스라던가 특기를 운영해서 선생님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방과후 과정까지 받는 거예요. 맞벌이 부모가 아닌 모든 학부모의 아이가 다 받아서, 200명 아이 중에 196명이 방과후 과정이고, 196명이 365일 내내 주말빼고 나온다고 들어요.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간의 협소함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25명 이상의 유아들을 교육하기에는 교실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A: 너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구조에서 사립을 바로 공립으로 전환시켜서 똑같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실이 너무 작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25명 이상 있는 거면 이걸 솔직히 말도 못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 나) 방과후 과정과 인력 관리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더불어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한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유치원의 양적인 확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과후 과정 확대에 따른 인력 관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A: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했다는 것. 확충도 좋지만, 확충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립과 공립에서 학부 모들이 고려하는 거에서 가장 큰 것은 운영시간이랑 운영 일수일 거예요. 솔직히, 직장 에서 8~9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8시간 근무해야 하는 거잖아요. 9시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이 맡기고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면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운영 시간은 못해도 10시간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오로지 그 부분을 교사의 인성으로 모는 거죠.

E: 맞벌이 학부모나 돌봄 필요한 아이들만 받겠다고 했는데, 일반 가정도 다 받으라고 하셨고요. 공교육은 공립은 오히려 에듀케어가 있으니, 아무나 다 들어가도 되고 한다 해야 어머니들이 공립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출산 추세로 인한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의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과후 과정 확대는 불가피하게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과후 과정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발생한다.

D: 에듀케어, 그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한 안전성이나 케어에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일반 담임교사들이. 근데 교사들은 자기 수업 시간 끝났잖아요. 근데, 방과후 특성화 교사들이 올 때, 그 반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기 반애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수업시간 넘는 거 아니냐, 우리가 2시까지도 애들을 보고 있다. 그렇게 문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교사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난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화 강사와 애들만 남겨뒀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근데 이것 또한 사립유치원과의 경쟁력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요. 인원 확보.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서비스를 만족하고 공립에 넣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시설만 확보해둔다면...

## 2) 국공립유치원 행정지원체계

면담에 참여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유치원 행정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업무 부담이 명확하지 않고 교장 재량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치원 수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지원해주어야 하지만, 초등학교 행정실은 병설유치원 지원 업무를 부가적인 업무로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도 병설유치원 업무에 대한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의 업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C: 행정지원체계가 교장 재량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행정실과 초등학교에서 하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별당아씨라고 하잖아요. 그건 알아서 해, 그리고 이들과 관계가 좋아야 해라는 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원감의 위신을 위해서 행정실로 옮겨준 거고. 행정지원체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 A: 그냥 단편적으로 행정 지원을 각 유치원당 한 명씩 했다고 해서 한 명 지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장에서는 '네 일이나, 내 일이나'로 엄청 논란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모든 일들을 못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업무나 시스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줘야 하는데, 업무를 명확하게 분담해놓지 않으니까, 교사들이 전부 다 하는. 명확하게 이걸 누가 보더라도, 행정일인데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 D: 지금 작년부터 행정실이 유치원 겸임 수당을 받거든요. 지금 행정일을 요구했을 때, 거 부당한 주 이유가 우리는 유치원 소속이 아니라서 줄 수가 없다.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있고, 결재하는 공간으로 우린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겸임수당을 받게 됐어요. 겸임 수당을 받는다는 건,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치원의 행정실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돈 받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이 돈 안 받겠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진짜 뭐하나 일 넘길 때마다 이럴 거면 행정실 앞에 누워 있어요 라고 해야 받아주고, 거의 싸우다시피 행정실과 많이 부딪혔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행정직의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A: 사전에, 겸임수당 주기 전에 TF팀을 마련해서 겸임수당을 줄테니까, 행정직이라 교사들 불러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매뉴얼만 알면 충분히 현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완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대로 하라는 대로 협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논란이 좀 많이 사그라들 수 있는데, 그냥 겸임수당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줘버리고,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하나도 없이 해버린 거죠.

### 3)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면담에 참여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 그 방향성은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발전된 교육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A: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현장에서도 효과는 있거든요. 어떻게 추구하는 방향과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나냐고 방법에 대해 논란은 계속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C: 저도 이번 연수 들으면서 강사님들 생각하는 마인드가 많이 개혁되었다.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거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 사고하고 친구와 교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더 요구되는데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유아에게 교사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C: 고민이 되는 시점이 뭐냐면, 예시로 자료집이나 누리집에 나온 걸 보면, 사진 찍어서 이 아이가 어떤 놀이를 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교사들이 만들 순 있는데, 일부 아이들은 안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사는 여기도 저기도 다 볼 수가 없어요. 실수를 하면, 그 아이의 대변 실수도 봐줘야 하고, 상황이 안되는데, 어쨌든 사진에 안 찍힌 아이들, 이 놀이에 참여 안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수집지에 넣기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선생님의 관심을 못 받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다 볼 수는 없다. 주류 놀이를 같이 하면 된대요. 말은 쉽죠. 근데 현장에서는 비주류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지. 걱정을 어떻게 해야 안 하게 하지. 그런 수집지를 만들다 보면, 사실 주간 교육계획안이 훨씬 쉬워요. 근데 교사들의 업무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E: 교사 대 아동 수가 있잖아요. 1대 26, 1대 24.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류, 비주류로 아이들의 흥미 중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놀이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10명일 때, 20명일 때, 교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다르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20명을 데리고 관찰하고 있는데, 그 관찰에 맞춰서 놀이 지원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아이들이 싸우거나 다치면 놀이의 흐름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한 명이 20명을 다 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관찰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교사가 관찰하면서 놀이중심에 맞게 지원하기엔 아이 수가 많다는 거죠.

놀이중심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C: 개정 누리과정 내용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지금 원격수업을 하면서 누리과정을 적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A: 원격수업을 하면서 놀이중심을 하라고 하는 건 전 애당초에... 그니까, 놀이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끼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미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놀이중심을 하라고 하는 건, 그건 일단 선생님들도 전제를 깔고 가야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선생님들이 혼란이 있다고 하면 애당초 교육청 차원이나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그 전제를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사 연수의 질적 수준이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E: 덧붙이자면, 제가 사실 본청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듣고 이번에 줌으로 연수하는 지역지 원청에서 하는 거 중앙연수원에서 하는 거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똑같은 교수님 나와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저는 1년이 지나서 뭔가 다른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해주시나 했는데, 이게 작년에 들었던 연수와 올해 10월에 들었던 연수가 똑 같아요. 너무 실망했어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이래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교사들만 현장에서만 계속 개정 누리과정 놀이중심을 하는데, 연수를 해주시는 강사님들 그 내용은 똑같아서, 너무 실망했어요.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위한 교사 연수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 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C: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예를 들면, 이 유치원에서 누리 중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교사의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가가 지역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교사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느냐. 저희 2020학년도 교육과정 유치원 만족도를 했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사항이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인식을 무슨 수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철학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교사 연수는 철학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사례 소개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에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철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B: 제가 느끼기엔 그거예요. 교육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이 교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선생님마다 철학이 다 달라요. 근데, 놀이중심 연수나 이런 걸 보면 그 철학은

다 뺐어요. 실례만 나와요. 애들 다 책상 뒤집어엎고 책상에 올라가는 게 놀이중심처럼 실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놀이중심 철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민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고민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놀이중심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기록하는 방식이나 선생님들이 자기에 맞는 걸 찾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고민하는 게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이중심 하고 있는데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질과 그런 방향이나 실례가 아니라, 자기가 놀이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그걸 먼저 찾고 고민하는 시간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 4) 소결

면담에 참여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시설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단설유치원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은 상당 기간동안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 이외에도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과 통학버스 등에서 기존의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기준을 완화한다는 점도 있었다. 국공립유치원의 양적인 확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과후 과정 확대에 따른 인력 관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공립유치원 행정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교장 재량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치원 수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지원해주어야 하지만, 초등학교 행정실은 병설유치원 지원 업무를 부가적인 업무로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더 요구되는데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유아에게 교사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사 연수의 질적 수준이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사. 초등돌봄전담사의 정책 성과 평가 및 개선 의견

### 1)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

2018년 4월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A: 2018년도에 학교 돌봄하고 지자체 돌봄, 지역별로 모였어요. 저희도 7개 학교와 둘러싸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협력체계로 하자고 모였는데, 1년에 두 번 모였어요. 어떻게 협력방안을 해보자. 돌봄 선생님을 만나고 센터장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모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몇 시 이후에 거기에 보내자고 했어요. 그러려면 지역아동센터는 학교하고 좀 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는 데리러 와야 해요. 근데 지역 아동 센터로 보내려면, 몇 시까지는 와야 한대요. 그래야만 지역아동센터는 아이 한 명당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아이한테 엄마한테 상의도 해야 하죠. 물어보면, 어떤 엄마는 호응하고, 어떤 엄마는 지역아동센터를 가는걸 원치 않아요. 지역 아동 센터는 아직까지 의식이 조금 어려운 아이나, 처진 아이들이 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희가 아 니라고 열심히 설명하죠.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저녁도 주고, 프로그램도 더 좋고, 선생님들 케어가 일대일로 더 잘되고 막 설명을 해서 한 명을 더 보냈어요. 보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한 명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한 선생님이 또 와야 해요. 또 데리러 가는 데 시간도 있고. 그래도 한 명은 보냈는데, 두 명, 세 명은 못 가더라고요. 이런 점이 연계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간에는 프로그램의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A: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자율휴업일이나 휴일 있잖아요. 아이들은 올 수가 없어요. 쉬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일 케어가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게 연계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연계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역시 프로그램도 연계하려고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2년 동안 끌어오다가 서로 간에 상생, 협력 체계로 가자고 했는데도 이게 서로 잘 이어지지 않으니깐.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서 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간에는 행정체계의 차이로 인한 행정업무의 부담이 장애물

로 작용하고 있었다.

A: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오려면 벽이 높아요. 거쳐 가는 문이 많아요. 무슨 청와대도 아니고, 관문이 많아요. 보안관실부터 교무실부터, 입구에서부터 서너 군데 관문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이 뭘 해야겠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후원도 받고, 지원도 받고, 대학생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프로그램도 잘하더라고요.

## 2)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 운영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고학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C: 키움센터를 고학년 위주로 하고, 초등학교 돌봄은 1, 2학년 저학년 위주로 하면, 지금 저학년들은 외부로 내보내기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고학년들이 초등돌봄교실 오는건 너무 좁아요. 시야도 좁고, 환경도 좋고, 이런 애들은 차라리 밖으로 내보내고, 저학년을 초등돌봄에 잡혀있으면 상호관계 연계도 되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학교 밖으로 이동 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 돌봄인 초등돌봄교실이 저학년 돌봄을 담당하고 학교 밖 돌봄인 다함께돌봄센터가 고학년 돌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B: 저는 연계를 한다면, 학교는 저학년 위주로 가면,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에 불안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저학년은 학교에서 담당하고, 고학년은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저학년보다 안전하잖아요. 그걸 경계의 선을 뒤서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3)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에 대해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저녁돌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학교에서 저녁돌봄을 운영하기에는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낙인감으로 인해 부모의 거부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B: 저는 저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돌봄교실이 돌봄 만들어진 취지가 어쨌든 맞벌이 가정을 위한 거였잖아요. 주된 내용은 그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학교에서 6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근데 현재 돌봄교실은 저녁이 없습니다. 전 그것도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상 대부분 6시에 직장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시까지 돌봄을 할 경우엔, 좀 그래요. 제가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이 웃기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무서운 공간이 학교더라고요. 아이도 무섭고, 선생님도 무섭고.

저녁돌봄의 경우 마을돌봄 기관과 연계 시에는 셔틀버스 또는 자원봉사 인력을 이용하여 아동이 이동하는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B: 선생님들이 5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용하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본 학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제약이 있냐면, 저학년 아이들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5시만 되면 어두워져요. 그런 아이들을 그 부모가 5시, 6시에 학교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혼자 학교에 남아있는걸 안 좋아해요. 그럼 저녁 돌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재정 많잖아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노인이나 봉사자들 이용해서 조금 더 특화시키고,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모델을...

D: 근데, 제가 학교에 있는 저는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키움센터나 마을 돌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학교 앞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저녁 돌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시부터 7시까지 진행하면, 그 이후를 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역으로 연계할 수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그게 이뤄져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이를 데리러오 가는 입장에서 어느 소속으로 사람들을 채용할 것인가?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자를 채용해서 아이를 직접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1년 정도 한 상태에서 학교 자체에서는 아이 돌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도우미, 일반 학부모들을 채용해서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진행했을 때,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안정적이었고, 학부모들 만족도도 높았었어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4) 초등돌봄전담사 인력관리 제도

##### 가) 보수교육 및 전문성 관리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양질적으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D: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배워서 애들한테 굳이. 저희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라. 그건.. 문서 작업하는 연수는 1년에 한두번 하는데, 전문성 키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초등돌봄전담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는 학교에서도 초등돌봄교실의 안전성에 주로 신경을 쓰고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D: 제가 보기엔, 교장은.. 돌봄은 내버려 두고 그냥 보는 것, 다치지만 않게 내버려 두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상보육으로 넘어오면서 그 생각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얼마 이상으로 비용을 받았을 때는 교육을 한다는 게 깔려있었는데, 무상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다치지 않게만 봐라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A: 저는 사실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많은 게, 저는 중등교육을 위해서 공부 한 사람이잖아요. 초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가끔씩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체계적으로 6개월 정도 아이들을 위한 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2시간?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 교육밖에 없거든요.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연수는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한 기초적인 연수는 이루어지지만 경력이 있는 돌봄전담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일제와 시간제 전담사는 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업무의 차이를 반영한 연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A: 대신에 그런 연수는 새로 신규로 채용된 선생님을 위한 돌봄교실과 아이의 이해, 발달 정보 기초적으로 하는 연수는 있었죠. 근데, 대신 연차가 오래된 선생님들, 조직관리나 운영관리 여러 가지 행정 차원에서, 솔직히 우리는 10년 넘게 일했어도, 그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다 우리가 결눈질로 배운 거지. 공문을 띄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또는 내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공부하거나, 결눈질해서 배우고 그랬죠.

E: 시간제 선생님들이 해야 할 것과 전일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연수가 되는 것 같아요.

## 나) 행정업무

전일제 전담사들의 경우 업무에서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는 전일제 전담사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E: 업무량을 따졌을 때는 학교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행정업무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가 있거든요.

B: 학교에서 내려온 모든 공문이나, 애들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나 교구, 강사, 인건비 저희가 다 맡으니까.

C: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담당자, 대학생 봉사자 등등 그 인력 관리까지도 다 관리해야 해요.

지역에 따라 학교에 전일제 전담사가 없는 경우는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교사가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일제 전담사가 있는 학교는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전일제 전담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돌봄 자체에 주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B: 아이들한테 우리가 돌봄전담사로 취직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온 건데, 행정업무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처음에 미안했어요.

A: 신문에는 이 행정사업을 다 선생님들이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역은 그렇게 하나 봐요. 서울 빼놓고 지방 같은 경우는 다 8시간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돌봄 선생님들이 5시간, 6시간, 7시간으로 8시간을 주지 않아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고 책임소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이 하고 교장선생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거겠죠.

#### 다) 긴급돌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의 운영은 초등돌봄교실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긴급돌봄에서도 EBS와 같은 원격수업을 진행했는데, 원격수업은 교육의 영역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C: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오전에 선생님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곳도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이 지금 천명이에요. 근데 긴급 돌봄에 대한 모든 문의사항은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창 긴급 돌봄 때문에 그랬을 때, 36통의 문의를 하루 동안 받았거든요. 그때 아이가 18명 있었는데, 아이를 돌보면서 그 많은 문의를 다 받은 거죠.

D: 아이들을 돌보라고 해놓고선, 원격 학습을 돌봄이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돼요?

D: 원격학습을 이제 등교하지 않는 날은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와서 화상으로 EBS로 같이 학습을 해요. 근데,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의 진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걸 보니까 저희가 돌봄 교사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게.

## 라) 승급과 급여

초등돌봄전담사들은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인데, 승급과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책임관 신설 등 전담사 내부에서 승급이 가능하도록 인력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 지금 들어온 사람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차이 없어요.

C: 저희 초창기부터 시작했어도, 시간제 선생님이랑 얼마 차이 안 나요. 반 차이 나는데, 시간제가 더 많이 받죠.

## 5) 돌봄 프로그램

### 가) 돌봄의 질

초등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바깥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학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C: 바깥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3년 전까지는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는 애들이랑 같이 밖에서 보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다치는 것도 싫어하고 애들끼리 놀다가 트러블 생기면, 왜 바깥 놀이를 시키냐, 왜 다치냐, 그렇게 나오고...

E: 학부모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사소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제하게 되는 거죠.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돌봄 프로그램의 질 제고보다는 현재는 아이들이 학교 정규 수업과 학원 사이에 머무는 정류장 같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B: 어떨 때는 귀가 도우미 같아요. 몇 시에 아이 보내주세요.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애들 보내 주는 거죠.

C: 집으로나 학원으로 몇시 몇분에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가 와요. 예전처럼 돌봄에 대해서, 교육적인 면을 많이 배울 거라고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얘기 맡기는 그런 곳으로 생각해요.

### 나) 무상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은 간식비 정도를 제외하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

모들도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인 제고를 기대하지 않고 학원을 가기 전까지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C: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가고 그래서, 무상으로 넘어오면서 전에 유상으로 했을 때, 시간 내에 끝나면 그 시간까지 가능하면 돌봄교실 애들도 전체 활동 끝나면 거의 귀가를 했는데, 무상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부모들도 돈을 안 내니까, 애들을 언제든지 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또 일찍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바깥놀이나 이런 것도 이래저래 상황도 안 맞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 D: 무상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일반 교실처럼 현장학습도 가고, 학습적인 부분, 숙제도 봐주고, 프로그램도 질적으로 좋아지고 그래서, 따로 방과후 보내거나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상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모든 게 허물어진거죠.

#### 다) 돌봄과 교육의 분리

학교에서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인식이 있었다.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이 교육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 C: 선생님들은 그동안 가르치고 지도하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고,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있고, 다 교사자격증이 있어요. 유형이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적인 측면 돌봄 측면을 혼합해서 했던 말이지요. 근데 2015년부터, 교육을 배제하고 가르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에듀케어라던가 보육 강사라는, 보육교사, 돌봄 교사라고 불리다 보니까, 교사라 불리면 교육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사도 아닌데, 교육 측면에 관여하는데 달갑지가 않겠죠. 그래서 교사나 강사라는 걸 아예 빼버리고 돌봄전담사라는 호칭으로 쓰게 하고, 교육적인 측면을 정말 배제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만 했어요.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의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 데, 돌봄전담사들은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 강사들을 통해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C: 어느 해부터 그렇게 넘어갔는데, 학부모들도 반대를 했죠. 예전에는 여러 가지를 해서 좀 고마웠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니, 돌봄에 가면 논다고만 하니까 학부모들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 학기가 지나니까 그럼 프로그램을 하라고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보고 전담사니까 하지 말래요. 돈 줄 테

니까 외부강사 채용해서 하래요. 근데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 분야에서 자격증 하나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적당한 사람 채용해서 그 분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라. 이것도 뭐 규정이 없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말하면 하라고 하는데, 강사 채용해서 해봤어요. 이게 좋잖아요. 돌봄교실에서 공짜로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외부강사를 채용해서 해라. 근데 돈도 많이 들거든요 비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어요. 우리 시급은 7~8천 원인데, 외부 강사는 2만 5천 원 3만 5천 원을 줘야 해요.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비용 조금 달라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전담 사라서 안 된다고 하죠.

#### 라) 다함께돌봄센터와의 비교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 수행에 대해 학교로부터의 간섭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운영의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돌봄 운영의 자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B: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처우에 대해서는 돌봄에 대한 정체성만 제대로 선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00에 생겼어요. 제 친구가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7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비교를 해봤어요. 아이들의 처우나 돌봄을 물어봐서 비교를 해봤는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저희는 학교의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아요. 00군청에서 선생님들 관리를 하고, 아이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맡기더라고요. 저는 그 시스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저희는 학교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스템을 가동 못 시키잖아요. 돌봄에 대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뽑고, 지금 방향 자체가 돌봄으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 6)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 가) 온종일돌봄체계 특별 법안

2019/2020년에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복지법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초등돌봄교실은 근거 법령이 없이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 법안들에는 초등돌봄교실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초등돌봄교실의 관리를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근거 규정들에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온종일돌봄체계 특별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현재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신분이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 그 신분 안정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전일제 전담 선생님들은 이미 다 센터장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센터장 한 명은 있어야 하잖아요. 기존에 전일제 선생님들이 센터장 역할들을 잘하고 있어요. 지휘만 한다 뿐이지. 그러면, 아예 센터장 역할을 주고 책임 맡게 해 주고, 대신에 누가 지자체로 가면 신분 안정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나. 시간제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A: 그거에 대해서 아까 그 법안이 한쪽이 위탁으로 갈 수 있다는, 한 줄 때문에, 차후에 지자체로 지금은 넘겼지만, 지자체가 지금 못할 때, '아 우리 위탁 처야겠다.'라고 해서 위탁으로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돌봄 전담 선생님들이 그거 하나는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갈 때,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고 가야 하고, 그거에 관련된 문구를 차라리 없애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자체 소속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에서 우려하는 점은 지자체 이관 자체보다는 민간위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간위탁이 될 경우 돌봄전담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돌봄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위탁이 된다면, 정말 질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전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직영보다는 위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크죠.

E: 위탁으로 가면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에 신경 쓰기 때문에, 영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지자체로 관리가 이관되는 것이 지역 연계의 차원에서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A: 돌봄 자체는 지자체가 다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E: 그리고 지역연계도 훨씬 편하게 되고, 지금 아예 연계 자체가 안된다고 보는 게 더...

## 나) 초등돌봄교실의 재원

초등돌봄교실은 지자체로 이관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이 교육청과 학교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 그런데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교육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는 재정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로 이관될 때 같이 기존의 재원도 같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로 이관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A: 현재 지금도 재원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자체로 가도 그대로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현재도 지자체 재원이 아니더라도, 교육부 재원이 지금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지자체로 옮겨간다고 한들, 이 재원이 안 들어가겠어요?

C: 돌봄의 재원을 지자체로만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50프로를 대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50프로를 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 7) 운영지침과 학교장 재량

초등돌봄정책으로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지침이 명확하지 못하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는 점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C: 전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디에 그렇게 맞춰야 합니까. 운영지침이라는 게 해마다 다르거든요. 정말 저는 이 말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E: 학교 교장 재량, 그게 또 해석의 문제예요.

B: 공문 내용 중에 가장 애매모호한 문구가 학교장 재량과 탄력 운영. 너무 웃기죠?

## 8) 소결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간에는 행정체계의 차이로 인한 행정

업무의 부담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 분담은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고학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에 대해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저녁돌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학교에서 저녁돌봄을 운영하기에는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양적 질적으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전일제 전담사들의 경우 업무에서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는 전일제 전담사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의 운영은 초등돌봄교실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긴급돌봄에서도 EBS와 같은 원격수업을 진행했는데, 원격수업은 교육의 영역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은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인데, 승급과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초등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바깥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학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돌봄 프로그램의 질 제고보다는 현재는 아이들이 학교 정규수업과 학원 사이에 머무는 정류장 같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교에서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인식이 있었다.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이 교육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 수행에 대해 학교로부터의 간섭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운영의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돌봄 운영의 자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에서 우려하는 점은 지자체 이관 자체보다는 민간위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간위탁이 될 경우 돌봄전담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돌봄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지침이 명확하지 못하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는 점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 4. 계량 분석

###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 분석

#### 1) 데이터, 변수 및 분석방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2018년 6개년도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통계청(2019)의 2019 일·가정 양립 지표에는 맞벌이 가구규모, 18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경력단절 사유(육아,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노동패널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속변수로 취업 여부, 상용직 여부, 정규직 여부, 종일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전분석 결과,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 상용직 여부, 정규직 여부, 종일제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 시 모든 모형에서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 및 월평균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결과만을 제시한다.

2013~2018년 노동패널 데이터 중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으로 구성된 데이터와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여성과의 비교를 위해서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에 포함된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은 954명이고,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은 1,288명이다.

이전의 합계출산율 분석에서 사용한 기초지자체 데이터를 노동패널 데이터와 결합하였고, 노동패널 데이터의 통제변수로는 모 연령, 가구소득, 모 교육수준(교육연수), 가구 구성원 수를 사용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합계출산율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는 보육통계에서 시군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시군구별 0~5세 인구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 모형과 동적패널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동적패널모형의 차분 GMM과 시스템 GMM을 사용 시 one-step GMM으로 분석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시에는 two-step GMM을 사용하였다. one-step GMM은 오차항이 IID(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인 경우에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도록 특화되어 있으나, 오차항이 IID가 아니면 이 추정량은 일관적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two-step GMM을 사용하게 된다(한치록, 2017: 179). 종속변수인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수준은 개인 수준으로 분석하지만, 설명변수인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분석하므로, 오차항이 IID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two-step GMM을 사용하였다.

출산율 분석에서는 동적패널모형을 강외생성 가정과 약외생성 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군구 단위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종속변수가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약외생성 가정은 사용하지 않고 강외생성 가정으로만 분석하였다.

## 2)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 분석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국공립어린이

집 공급률 증가가 취업모의 노동시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은 0.067시간이 증가하였다. 동적패널모형의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4-1> 취업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2234(.01689)	.066667 <sup>*</sup> (.03349)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898(.00692)	-.00603(.00775)
유치원공급률	.01751(.0197)	-.02135(.02143)
모 연령	-.00696(.02641)	-.00559(.0832)
가구소득	.00002(.00002)	.00003(.00003)
모 교육수준	.06371(.05185)	.42153(.29644)
가구 구성원 수	-.20002(.14751)	-.09424(.21601)
재정자립도	-.00871(.00807)	.00833(.01896)
사회복지예산비중	-.0049(.00805)	.02592(.01872)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002(.00005)	-.00002(.00006)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p < .05.

취업모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OLS, 고정효과 모형, 동적패널모형을 비롯한 모든 모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증가가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4-2>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59874(.54682)	.132(.70429)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20852(.19062)	.01289(.20964)
유치원공급률	-.71501(.51991)	.20554(.65741)
모 연령	.99407(.72469)	6.37407 <sup>***</sup> (1.40909)
가구소득	.01107 <sup>***</sup> (.00276)	.00132 <sup>*</sup> (.00066)
모 교육수준	7.94748 <sup>***</sup> (1.92271)	17.71873(15.30387)
가구 구성원 수	-19.22514 <sup>***</sup> (3.8285)	-13.06571 <sup>**</sup> (4.27575)
재정자립도	-.18515(.26685)	.66377 <sup>†</sup> (.36582)
사회복지예산비중	.466(.30254)	.15016(.36185)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172(.00146)	-.00143(.00102)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p < .1, <sup>\*</sup>p < .05, <sup>\*\*</sup>p < .01, <sup>\*\*\*</sup>p < .001.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에 미치는 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영향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2017년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영향에서 정책 도입 이전 추세를 분리하기 위해 시군구별 추세를 포함한 모형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OLS 모형에서는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은 약 0.059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모두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OLS에서 나타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영향은 시군구 경제상황의 특성 및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적패널모형의 결과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4-3〉 취업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679(.01293)	.03877(.04484)	.32977(.30549)
2017년 이후	-.36108(.33191)	-1.47541(1.67798)	-1.01606(2.3003)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5949 <sup>†</sup> (.03425)	.04079(.04209)	.01594(.05222)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948(.00701)	-.00306(.00805)	-.02066(.09025)
유치원공급률	.0158(.01953)	-.01898(.02217)	.02779(.14025)
모 연령	-.00663(.02672)	.22277(.37476)	.16239(.79022)
가구소득	.00002(.00002)	.00003(.00003)	.00002(.00004)
모 교육수준	.06181(.05217)	.42473(.31069)	.48027(.38826)
가구 구성원 수	-.20612(.14523)	-.09282(.21575)	-.21553(.2673)
재정자립도	-.00833(.00808)	.00871(.01918)	.00011(.05817)
사회복지예산비중	-.00534(.00808)	.02753(.01883)	.01897(.07045)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0009(.00005)	-.00002(.00006)	-.00016(.00014)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취업모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영향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LS와 고정효과 모형(시군구별 추세 미포함)에서는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고정효과 모형에 시군구별 추세를 포함 시 취업모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영향이 1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공급률이 1% 증가 시 취업모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063만원이 증가하였다. 동적패널모형의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4-4〉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28909(.65235)	.08611(.72661)	-2.85733(3.73196)
2017년 이후	-3.59152(7.18618)	20.30908(17.59368)	-5.52329(24.94254)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62592(.75441)	.06708(.45736)	1.06324 <sup>†</sup> (.56195)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20344(.1912)	.01777(.20784)	-.73797(.93212)
유치원공급률	-.73688(.53299)	.20943(.66132)	-4.37535 <sup>*</sup> (1.99144)
모 연령	.99562(.72884)	2.20254(4.19813)	68.04178 <sup>***</sup> (8.18417)
가구소득	.01104 <sup>***</sup> (.00277)	.00132(.00066)	.00132 <sup>*</sup> (.00067)
모 교육수준	7.9249 <sup>***</sup> (1.92865)	17.72402(15.28228)	11.91641(14.6685)
가구 구성원 수	-19.28785 <sup>***</sup> (3.82032)	-13.06338(4.27669)	-11.34211(4.18301)
재정자립도	-.18096(.26675)	.6644(.36571)	1.21448 <sup>*</sup> (.59814)
사회복지예산비중	.46186(.30233)	.15282(.36317)	1.28123 <sup>†</sup> (.72051)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181(.00147)	-.00143(.00102)	-.00329(.00218)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sup>\*</sup> $p < .05$ , <sup>\*\*\*</sup> $p < .001$ .

### 3)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 분석

####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

취업모의 주당 노동시간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을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여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LS에서는 결과가 유의미하였으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OLS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은 약 0.055시간이 증가하였다. 동적패널모형의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4-5〉 취업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3038 <sup>†</sup> (.01619)	.03833(.02341)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	-.74814 <sup>*</sup> (.27695)	-.12884(.29546)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5516 <sup>*</sup> (.02333)	.01286(.02188)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787(.00522)	-.01292(.00785)
유치원공급률	.03045 <sup>*</sup> (.01501)	.01101(.02068)
모 연령	-.00019(.02472)	.01345(.07042)
가구소득	-.000007(.00002)	.00002(.00002)
모 교육수준	.04976(.04443)	.46567(.21499)
가구 구성원 수	-.29735 <sup>*</sup> (.1172)	-.12092(.19362)
재정자립도	-.00781(.00667)	-.01189(.01232)
사회복지예산비중	.00274(.00733)	.01341(.01445)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007(.00006)	.00012(.00011)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sup>\*</sup> $p < .05$ , <sup>\*\*</sup> $p < .01$ .

취업모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을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OLS, 고정효과모형, 동적패널모형을 비롯한 모든 모형에서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4-6〉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53402(.5726)	.23118(.57155)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	-12.73162 <sup>*</sup> (6.41399)	-2.5788(4.82369)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8745(.67473)	-.00521(.41636)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25211(.17017)	.10752(.17236)
유치원공급률	-.54768(.45166)	.14608(.57019)
모 연령	-.1645(.65219)	5.57811 <sup>***</sup> (1.10142)
가구소득	.01188 <sup>***</sup> (.00218)	.00213 <sup>**</sup> (.00074)
모 교육수준	7.9358 <sup>***</sup> (1.67681)	16.83478(10.97898)
가구 구성원 수	-16.45068 <sup>***</sup> (3.59817)	-12.68722 <sup>***</sup> (3.44855)
재정자립도	-.19605(.23007)	.13576(.2973)
사회복지예산비중	.62017 <sup>†</sup> (.25184)	.17814(.32056)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159(.00122)	-.00036(.00097)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 종일제 취업 여부,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영향을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여성을 비교하기 위해, 삼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DDD)을 사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 2017년 이후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2017년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영향에서 정책 도입 이전 추세를 분리하기 위해 시군구별 추세를 포함한 모형을 추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에 미친 영향은 OLS와 고정효과모형(시군구별 추세 미포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고정효과모형에 시군구별 추세를 포함할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확률은 0.9%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군구별 취업의 추세를 통제할 경우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4-7〉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0004(.0033)	.00522(.00333)	-.00763(.01194)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	-.11322(.03674)	.01233(.0275)	-.00898(.03195)
2017년 이후	-.04148(.04462)	.03668(.07197)	-.00778(.09055)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198(.00395)	-.00371(.003)	-.00211(.00356)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0267(.00422)	-.00506 <sup>+</sup> (.00281)	-.0051(.00319)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0877(.0588)	-.03278(.04079)	-.05288(.04133)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5세자녀를 가진 여성,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0046(.00586)	.00568(.00369)	.009 <sup>*</sup> (.00396)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035(.00077)	.0014(.00107)	.00006(.00402)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유치원공급률	-.00193(.00194)	-.00245(.00346)	-.00443(.00753)
모 연령	.00401(.00294)	.02835 <sup>†</sup> (.01512)	1.01422 <sup>***</sup> (.03286)
가구소득	.00004 <sup>***</sup> (.000007)	.000006 <sup>**</sup> (.000002)	.000005 <sup>†</sup> (.000002)
모 교육수준	.02277 <sup>***</sup> (.00652)	.0903 <sup>**</sup> (.03369)	.03929(.03297)
가구 구성원 수	-.0659 <sup>***</sup> (.01607)	-.07134 <sup>***</sup> (.01908)	-.07375 <sup>***</sup> (.01913)
재정자립도	-.00276 <sup>**</sup> (.00097)	.00018(.00132)	.00072(.00234)
사회복지예산비중	.00068(.0011)	.0017(.0016)	.00053(.00337)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0003(.000006)	.000005(.000006)	.000001(.00337)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여부에 미친 영향은 OLS와 고정효과모형(시군구별 추세 미포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고정효과모형에 시군구별 추세를 포함할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확률은 0.68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군구별 취업의 추세를 통제할 경우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4-8〉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여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069(.00303)	.00441(.00309)	-.00783(.01009)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	-.02976(.03385)	.02109(.02329)	.02431(.02537)
2017년 이후	-.03027(.03892)	.055(.05775)	.00915(.0715)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77(.00363)	-.00286(.00271)	-.00432(.00287)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0278(.00358)	-.00132(.00205)	.00065(.00224)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128(.05317)	-.02404(.03284)	-.05307(.03279)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5세자녀를 가진 여성,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0147(.00504)	.00273(.00304)	.00685 <sup>†</sup> (.00319)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108(.00075)	.00075(.00084)	.00247(.00295)
유치원공급률	-.00233(.0019)	.00013(.00266)	-.0083(.0061)
모 연령	-.00417(.00274)	-.00187(.01207)	.02099(.02429)
가구소득	.00003 <sup>***</sup> (.000006)	.000005 <sup>**</sup> (.000002)	.000004 <sup>†</sup> (.000002)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모 교육수준	.02282***(.00645)	.04995(.04232)	.01559(.04099)
가구 구성원 수	-.06712***(.01513)	-.04563**(.01744)	-.06293***(.01704)
재정자립도	-.00157 <sup>†</sup> (.00095)	-.00035(.00117)	.00085(.00197)
사회복지예산비중	.00239 <sup>†</sup> (.00109)	.0007(.00144)	.00162(.0027)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0004(.000005)	.000005(.000004)	-.000005(.000006)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친 영향은 OLS와 고정효과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V-4-9〉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4939 <sup>†</sup> (.02038)	.42523(.61833)	1.79206 <sup>†</sup> (1.05376)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	-.6342 <sup>†</sup> (.34281)	-.28229(4.55188)	1.83252(4.80326)
2017년 이후	-.04664(.45097)	-4.21404(13.55573)	.57077(14.33382)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4557 <sup>†</sup> (.02341)	-.14397(.51646)	-.51844(.573)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3801(.0322)	-.23167(.51711)	-.04443(.5861)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3574(.56568)	1.55596(7.36235)	-4.23132(7.29647)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5세자녀를 가진 여성, 2017년 이후의 교차항	.02145(.04724)	.09292(.66637)	.87341(.67442)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856(.00533)	.10427(.17176)	.24502(.24112)
유치원공급률	.02828 <sup>†</sup> (.01498)	.13204(.57489)	-1.64772 <sup>†</sup> (.80109)
모 연령	-.00142(.02465)	6.44956 <sup>†</sup> (2.85595)	75.22781***(.465213)
가구소득	-.000003(.00002)	.00213 <sup>**</sup> (.00074)	.00181 <sup>**</sup> (.00067)
모 교육수준	.04792(.04492)	16.83561(11.02346)	11.04608(10.48226)
가구 구성원 수	-.30366***(.11649)	-12.72672***(.347346)	-14.64516***(.358246)
재정자립도	-.00774(.00666)	.13776(.29736)	.34967(.39447)
사회복지예산비중	.00237(.00732)	.17693(.32023)	.31744(.39813)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006(.00006)	-.00036(.00097)	.0001(.00129)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동적패널모형에서는 모두 취업모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차분 GMM에서는 약 1.72만원, 시스템 GMM에서는 약 1.69만원이 증가하였다.

〈표 V-4-10〉 취업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2017년 이후)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취업모 임금수준	.36337 <sup>†</sup> (.18913)	.36948 <sup>†</sup> (.20347)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37525(.81616)	.3815(.83378)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	-1.24677(6.26948)	-2.23079(6.30453)
2017년 이후	0(0)	0(0)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1.08989 <sup>†</sup> (.62798)	-1.03059(.6495)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1.41929 <sup>**</sup> (.48396)	-1.40954 <sup>**</sup> (.4997)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2017년 이후의 교차항	-7.13934(7.14306)	-6.77263(7.125)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5세자녀를 가진 여성, 2017년 이후의 교차항	1.72484 <sup>†</sup> (.71065)	1.68593 <sup>†</sup> (.73034)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1051(.17022)	-.00652(.17294)
유치원공급률	.2942(.65728)	.32628(.66725)
모 연령	3.41549(3.09119)	-148.9406(126.2208)
가구소득	-.00015(.00056)	-.0002(.00056)
모 교육수준	-3.85603(7.69211)	-4.68982(9.62925)
가구 구성원 수	-7.43134 <sup>**</sup> (4.50351)	-7.89098 <sup>†</sup> (4.42434)
재정자립도	-.11261(.37947)	-.12182(.38782)
사회복지예산비중	.42089(.39624)	.40401(.40429)
25~39세 여성 순이동자수	.00138(.00112)	.00152(.00115)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8	.008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263	.156

주: 1)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sup>\*</sup> $p < .05$ , <sup>\*\*</sup> $p < .01$ .

#### 4) 소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KOSIS 국가통계포털의 기초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데이터와 노동패널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노동패널 데이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여성을 비교하기 위해, 추가

적으로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종속 변수는 취업 여부, 종일제 취업 여부, 주당 노동시간 및 월평균 임금수준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종일제 취업,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통제하는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월평균 임금수준을 제외하고 그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후술할 초등돌봄교실과는 달리 취업모 뿐 아니라 전업모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이용시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취업모 뿐 아니라 전업모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모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초등돌봄교실 확충 정책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 분석

### 1) 개요

2018년 4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초등돌봄 서비스 중 학교 안 돌봄인 초등돌봄교실과 학교 밖 돌봄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동시에 확충하고, 학교 안팎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 학교 밖 돌봄 중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이 시작된지 오래되지 않아 초등돌봄 확충 정책이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 확충 정책이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데이터, 변수 및 분석방법

초등돌봄교실 확충 정책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

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2013~2018년의 6개년도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초등돌봄교실 확충은 2013~2018년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인원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을 2013-2018년 노동패널 데이터와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상용직 취업 여부, 종일제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여부,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수준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모 연령, 가구소득, 모 교육수준, 가구 구성원 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와 동일하게 OLS, 고정효과 모형,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합계출산율 및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의 정책 효과도 분석하였으나, 초등돌봄교실 확충과 연관된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은 2018년 4월에 발표되었으므로, 분석에 포함된 데이터가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의 정책 효과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동적패널모형의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분석 시에는, 종속변수는 개인 수준이나, 설명변수인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은 17개 시·도 수준이므로, 오차항이 IID(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마찬가지로 two-step GMM을 사용하였다. 출산율 분석에서는 동적패널모형을 강외생성 가정과 약외생성 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초등돌봄교실은 시도 단위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종속변수가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약외생성 가정은 사용하지 않고 강외생성 가정으로만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중 취업 여부, 상용직 취업 여부, 종일제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여부는 이항 변수이다. 이를 종속변수로 분석할 시 로짓 분석이나 프로빗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항변수를 OLS로 추정하는 것인데, 확률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추정하는 것에는 선형확률모형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한치록, 2016: 367).

데이터 분석은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은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이 6세인 경우는 취학 전인 경우가 있으므로, 분석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7,8세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데이터에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은 334명으로 충분한 샘플 사이즈 확보를 위해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취학 전인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0~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은 1,288명이다.

### 3) 분석결과

#### 가) 취업 여부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충은 초등돌봄교실 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돌봄교실 확충은 고정효과모형에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이 1% 증가 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확률은 0.073% 증가하였다.

〈표 V-4-11〉 모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0146(.00178)	.00762(.01712)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0122(.01003)	-.02344 <sup>*</sup> (.00923)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37(.00034)	.00073 <sup>*</sup> (.00032)
모 연령	.0062 <sup>*</sup> (.0029)	.03542 <sup>***</sup> (.00595)
가구소득	.00004 <sup>***</sup> (.000007)	.000007 <sup>***</sup> (.000002)
모 교육수준	.02214 <sup>**</sup> (.00654)	.08923 <sup>**</sup> (.03297)
가구 구성원 수	-.05813 <sup>***</sup> (.01587)	-.07625 <sup>***</sup> (.01923)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도 및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초등돌봄교실 확충 정책이 7,8세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



과거값을 통제할 경우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V-4-12〉 모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모 취업	.67158***(.06958)	.65133***(.06025)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3523(.04461)	.02732(.04813)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1872(.01201)	-.01491(.01138)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38(.00043)	.00023(.00041)
모 연령	.01256(.03298)	.07442(.04942)
가구소득	-.000008*(.000003)	-.000008*(.000003)
모 교육수준	-.07696†(.04415)	-.04561(.05885)
가구 구성원 수	-.01662(.02367)	-.01589(.0231)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	.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136	.138

주: 1)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p < .1, \*p < .01, \*\*\*p < .001.

#### 나) 상용직 취업여부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상용직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에서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이 1% 증가 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상용직 취업 확률은 0.057% 증가하였다.

〈표 V-4-13〉 모 상용직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도별 추세 미포함)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0013(.00166)	.00127(.01248)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0108(.00905)	-.01906**(.00702)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18(.00031)	.00057*(.00024)
모 연령	-.00377(.00253)	.01346**(.00513)
가구소득	.00004***(.000007)	.000005**(.000002)
모 교육수준	.02391***(.00614)	.05939(.0367)
가구 구성원 수	-.05328***(.01488)	-.02866**(.0169)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도 및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p < .05, \*\*p < .01, \*\*\*p < .001.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두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상용직 취업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이 1% 증가 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상용직 취업 확률은 0.069% 증가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상용직 취업 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14〉 모 상용직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모 상용직 취업	.62671***(.09419)	.61386***(.0772)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29(.02122)	.03027(.02047)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2566**(.00898)	-.02541**(.00883)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69 <sup>+</sup> (.00031)	.00069 <sup>+</sup> (.0003)
모 연령	-.00429(.01832)	-.06065(.06964)
가구소득	-.000004 <sup>+</sup> (.000002)	-.000004 <sup>+</sup> (.000002)
모 교육수준	-.03579(.03117)	-.03776(.02523)
가구 구성원 수	.00743(.01749)	.0066(.01608)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	.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448	.454

주: 1)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 $p < .05$ , \*\* $p < .01$ , \*\*\* $p < .001$ .

#### 다) 종일제 취업 여부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확충은 고정효과모형에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었다.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이 1% 증가 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확률은 0.041%가 증가하였다.

〈표 V-4-15〉 모 종일제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001(.00172)	.00247(.01232)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055(.00918)	-.01538 <sup>+</sup> (.00684)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3(.0003)	.00041 <sup>+</sup> (.00023)
모 연령	-.00275(.00269)	.01446**(.00504)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가구소득	.00003***(.000007)	.000005**(.000002)
모 교육수준	.02312***(.00647)	.0499(.04228)
가구 구성원 수	-.06379***(.01498)	-.05169**(.01779)

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도 및 연도더미 포함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오후 돌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종일제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4-16〉 모 종일제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모 종일제 취업	.65034(.09062)	.63923***(.07587)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2562(.02431)	.0258(.02466)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1766(.00892)	-.01556 <sup>†</sup> (.00809)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44(.00032)	.00036(.00028)
모 연령	.01143(.03407)	-.09868(.0748)
가구소득	-.000005 <sup>†</sup> (.000002)	-.000005 <sup>†</sup> (.000002)
모 교육수준	-.06583(.08008)	-.05426(.0766)
가구 구성원 수	-.01387(.01907)	-.01435(.01811)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	.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450	.447

주: 1)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 $p < .05$ , \*\*\* $p < .001$ .

### 라) 정규직 취업 여부

초등돌봄교실 확충 정책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정규직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10% 수준에서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이 1% 증가 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정규직 취업 확률은 0.038% 증가하였다.

〈표 V-4-17〉 모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도별 추세 미포함)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0085(.0016)	-.00075(.01246)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0089(.00873)	-.01109 <sup>†</sup> (.00647)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18(.0003)	.00038 <sup>†</sup> (.00022)
모 연령	-.00577 <sup>†</sup> (.00242)	.00637(.00435)
가구소득	.00003 <sup>***</sup> (.000006)	.000004 <sup>**</sup> (.0000015)
모 교육수준	.02289 <sup>***</sup> (.006)	.02766(.02653)
가구 구성원 수	-.04383 <sup>**</sup> (.0145)	-.01227(.01503)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도 및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동적패널모형에서 시스템 GMM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정규직 취업 확률을 1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이 1% 증가할 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정규직 취업 확률은 0.044% 증가하였다.

〈표 V-4-18〉 모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모 종일제 취업	.61241 <sup>***</sup> (.10502)	.6078(.10003)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255(.02098)	.0246(.02132)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1399 <sup>†</sup> (.00806)	-.01466 <sup>†</sup> (.0076)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42(.00027)	.00044 <sup>†</sup> (.00025)
모 연령	-.01383(.01381)	-.06949(.08533)
가구소득	-.000004 <sup>†</sup> (-.000002)	-.000004 <sup>†</sup> (.000002)
모 교육수준	-.00915 <sup>†</sup> (.00537)	-.00925 <sup>†</sup> (.00532)
가구 구성원 수	.00586(.01515)	.00654(.01327)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	.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285	.290

주: 1)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sup>†</sup> $p < .1$ , \* $p < .05$ , \*\*\* $p < .001$ .

#### 마) 주당 노동시간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LS와 고정효과 모형 모두에서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4-19〉 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1383(.01018)	.07168(.05957)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03406(.08658)	.04418(.08964)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014(.00285)	-.00067(.00267)
모 연령	.00412(.02482)	.02954(.06902)
가구소득	.000003(.00002)	.00002(.00002)
모 교육수준	.04438(.0434)	.46574(.20846)
가구 구성원 수	-.27667*(.11423)	-.09801(.1884)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도 및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  $p < .05$ .

동적패널모형에서도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V-4-20〉 모 노동시간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모 노동시간	.10463(.08598)	.10826(.06822)
초등돌봄교실공급률	-.01165(.02867)	.00445(.0286)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18226(.13486)	-.12257(.12387)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554(.00385)	.00343(.00354)
모 연령	.04862(.07284)	-.13669(2.07506)
가구소득	.00001(.00004)	.00002(.00004)
모 교육수준	-.02555(.11005)	-.06821(.4097)
가구 구성원 수	-.13067(.33451)	-.11393(.33592)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4	.002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446	.394

주: 1)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바) 월평균 임금수준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에서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이 1% 증가할 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약 0.1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V-4-21> 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도별 추세 미포함)
초등돌봄교실공급률	.16117(.41439)	2.13518(3.7469)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1.06957(2.1914)	-4.29798**(1.49)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00382(.07239)	.10333*(.04802)
모 연령	.32535(.63952)	7.7236*** (1.13738)
가구소득	.0119***(.00218)	.00212**(.00075)
모 교육수준	8.06305*** (1.67061)	16.55208(10.91027)
가구 구성원 수	-15.44985*** (3.5687)	-14.74978*** (3.54541)

주: 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도 및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 $p < .05$ , \*\* $p < .01$ , \*\*\* $p < .001$ .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차분 GMM과 시스템 GMM 모두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공급률이 1% 증가 시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0.117-0.118만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오후돌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주당 노동시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수준 증가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V-4-22> 모 임금수준에 미치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전년도 모 임금수준	.34615†(.18214)	.35885†(.19217)
초등돌봄교실공급률	3.35321(4.7196)	3.25526(4.81097)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	-4.57775** (1.67775)	-4.78101** (1.75171)
초등돌봄교실공급률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교차항	.11715*(.05588)	.11823*(.05689)
모 연령	1.56142(4.13856)	-149.9772(116.3387)
가구소득	-.00011(.00055)	-.0002(.00058)
모 교육수준	-4.23814(7.48752)	-5.36248(11.29649)
가구 구성원 수	-8.54928(4.5727)	-9.69954*(4.72823)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5	.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191	.199

주: 1)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2) 0~8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데이터 사용  
 † $p < .1$ , \* $p < .05$ , \*\* $p < .01$ .

#### 4) 소결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 상용직 취업 여부, 종일제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여부,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공급률 증가는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상용직 취업, 정규직 취업 확률을 대체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와 취약계층만 이용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공급률 증가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당 노동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월평균 임금수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오후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업모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VI

## 아동정책 성과분석

0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02 부모 및 전문가 의견(설문조사)



## VI. 아동정책 성과분석

### 1.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 가.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 1) 보건복지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평가한 아동정책에 해당하는 과제는 모두 7개로 정리되며, 해당 연도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I-1-1〉 보건복지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아동정책)

과제명	2017년	2018년	2019년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	보통	보통
아동행복도 제고를 위한 공적책임 강화	부진	-	-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	-	보통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공적 책임 및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다소미흡	-	-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내실화	보통	다소미흡	-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	보통	미흡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	-	보통

자료: 1)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9-10.  
 2)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7-9.  
 3)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6-8

##### 가)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96).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민간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것을 주요 성과로 보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강화 및 적극적인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96).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으로 인한 보호대상 지원체계 통합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VI-1-2〉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과제 난이도 높음. -보호대상아동의 지원체계 사업과 아동의 인권증진 사업(포용국가 아동정책 포함) 간 수준이 맞지 않음.
의견수렴 적절성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관 협력행사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 -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인권보장방안을 강화해야 함.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가 아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기술은 불필요함. -아동권리지수를 개발하여 전체 아동 관련 정책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공공인력 충원·배치 관련 지표 추가 검토
추진 일정 충실성	-특이사항 없음
정책소통의 충실성	-홍보 적극성 및 홍보성과는 보통 수준임.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한 상황대응이 적절함. -유엔 아동권리협약 관련 내용은 난이도 인정
성과지표 달성도	-2개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적극성 차원에서 평가되기 어려움.
정책목표 달성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제시된 성과지표 외 목표달성 해당 건과 수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기술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96.

#### 나)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97).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임대주택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보았으나, 자립하지 못한 아동의 유형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97). 보호대상아동의 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VI-1-3〉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조금씩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과제의 중요성 인정됨. -자립하지 못한 아동들의 유형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 -취약아동에 대한 포괄적 통계 데이터 구축 필요
의견수렴 적절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현장 의견수렴 노력 인정됨.
성과지표 적절성	-‘문제행동 개선율’, ‘자립률’, ‘행복감’ 성과지표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자립률 지표에서 단순 취업과 진학률보다는 일정 기간의 독립생활 유지를 담보하는 보다 엄밀한 자립 지표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종단 데이터 구축 후 활용이 기대됨.
추진 일정 충실성	-추진일정 난이도 및 이행 충실도 양호함.
정책소통의 충실성	-홍보의 적극성 및 홍보 성과 기술 내용 양호함.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드림스타트 등 지방비 매칭이 추진된 후 시도의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이 약함.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기여도 기술은 세부적인 조사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대체로 양호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97-98.

#### 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99).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의 진행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사전예방 조기발견제도 강화를 주요 성과로 보았으나,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실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99).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재학대 사례 및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I-1-4〉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충실하게 진행한 것이 고무적임.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사전예방 조기발견제도 강화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장점
의견수렴 적절성	-타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범부처 아동학대대응팀의 구성과 역할 수행은 장점임.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가 대표성, 측정가능성, 신뢰성 등에서 양호하나, ‘아동안전교육 예방사업’ 지표는 안전사고 건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참여자의 숫자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있음.
추진 일정 충실성	-추진일정상 다양한 과업들에 걸친 노력성 인정
정책소통의 충실성	-구체적인 학대 기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홍보노력은 충실히 기술되었으나, 홍보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음.
성과지표 달성도	-양호함.

평가지표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목표 달성도	-추가적 지표 제시 장점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여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는 성향이 강함. 따라서 가능한 모든 문제 유형을 발굴하고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자료의 분석과 연계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99-100.

##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아동정책과 관련된 관리과제는 모두 3개로 정리되며, 자체 평가한 2019년도 결과는 <표 VI-1-5>와 같다.

<표 VI-1-5> 여성가족부 주요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아동정책)

관리과제명	2019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우수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	다소우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부진

주: 2017년,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해당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등급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8.

### 가)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우수」로 나타났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과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 지원 및 입주기간 연장·아이돌봄 서비스 무상 지원·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 양육비 이행강화방안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보았고,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60-61). 한부모·조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 해소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VI-1-6〉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추진일정의 충실성(5점)	충실	-당해연도 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 추진이 인정됨.
2. 현장 의견 수렴(5점) *협업우수사례 (2점 가점)	우수 *우수	-현장 의견수렴과 협업사업이 우수함.
3. 지표①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만족도 *60점, 성과의 질 ±2 *가중치 50%	우수 (106%)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지표② : 양육비 이행률 *60점, 성과의 질 ±2 *가중치 40%	우수 (109%)	-12월말 기준으로 달성함. -이행률이 기본적으로 낮은 이유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지표③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가족기능 향상률 *60점, 성과의 질 ±2 *가중치 10%	우수 (100%)	-목표를 달성함.
6. 정책효과의 국민체감도(10점)	우수	-국민체감도 평가인단 평가 결과 우수함.
7.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 (10점)	우수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를 마련하고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정상 교부함. -발생 현안 대응은 우수하나, 정책 효과성 면에서 사업을 통한 예방성에 더욱 집중할 필요
8. 정책 환류의 충실성(5점)	보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9. 사회적 가치 평가(5점)	보통	-양육비 지원의 목적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62.

### 나)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다소우수」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63).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사회 적응 지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을 주요성과로 보았고,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결하는 등 센터 이용자 수 증가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63-64). 다문화가족 지원에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VI-1-7〉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추진일정의 충실성(5점)	충실	-당해연도 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 추진이 인정됨.
2. 현장 의견 수렴(5점) *협업우수사례(2점 가점)	우수 *우수	-현장의견 수렴 내용이 우수함.
3. 지표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50%	우수 (104%)	-센터 이용자 수 집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부처간 협업 필요
4. 지표② :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만족도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50%	우수 (102%)	-목표치 설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되어 우수함. -다문화가족 자녀 역량개발 및 인재 양성 노력이 돋보임.
5. 정책효과 국민체감도(10점)	우수	-국민체감도 평가인단 평가 결과 우수함.
6.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10점)	보통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개선 등 현안대응이 우수함. -다문화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정책 환류의 충실성(5점)	보통	-이주아동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한 점은 우수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8. 사회적 가치 평가(5점)	보통	-다문화가정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65.

####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는 「부진」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66). 대상자 맞춤형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콘텐츠 제작,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불법 결혼중개 및 인권침해 감시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보았으나, 한국어교육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언론매체에 대한 차별·편견 모니터링 및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66-67).

〈표 VI-1-8〉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추진일정의 충실성(5점)	충실	-당해연도 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 추진이 인정됨.
2. 현장 의견 수렴 (5점) * 협업우수사례(2점 가점)	우수 * 우수	-관계 부처,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다문화 가족 의견 개진 기회를 마련함.
3. 지표①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인원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50%	우수 (100%)	-사업의 목적과 수단이 체계화되지 못해 성과지표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4. 지표②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 60점, 성과의 질 ±2 * 가중치 50%	우수 (111%)	-사업의 목적과 수단이 체계화되지 못해 성과지표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일반 국민이 이주민을 접촉, 교류한 경험이 있을수록 인식개선 지수가 향상되므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모색이 필요
5. 정책효과의 국민체감도(10점)	우수	-국민체감도 평가인단 평가 결과 우수함.
6.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10점)	보통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간의 정합성,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정책 환류의 충실성(5점)	보통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8. 사회적 가치 평가(5점)	보통	-다문화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68.

## 2. 부모 및 전문가 의견(설문조사)

### 가. 부모의 정책 성과 평가

#### 1) 아동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본 조사에 참여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한 아동정책의 목표 달성률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인식한 목표 달성률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일곱 가지의 정책 과제 중, ‘달성되었다’와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22.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 22.0%,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20.6% 순이었다. 한편,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 과제는 ‘요보호아동 보호 체계 개편’으로 13.5%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부모의 육아 행복감’(14.1%) 역시 다소 낮은 긍정률을 나타냈다.

이상의 응답률을 2019년도 조사와 비교한 결과, ‘요보호아동 보호 체계 개편’,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부모의 육아 행복감’을 제외한 네 가지 정책 과제의 긍정비율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의 경우,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3.0%p 상승함으로써 가장 큰 변동을 나타냈다. 반면, ‘요보호아동 보호 체계 개편’의 긍정비율은 전년도 15.4%에서 13.5%로 1.9%p가량 하락하였다.

〈표 VI-2-1〉 아동정책 과제의 목표 달성률(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구분	2019년			2020년		
	긍정 비율	5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5점 평균	계(수)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15.4	2.7	100.0(1,013)	13.5	2.7	100.0(1,731)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18.6	2.7	100.0(1,013)	20.6	2.8	100.0(1,731)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19.2	2.7	100.0(1,013)	22.2	2.9	100.0(1,731)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17.6	2.6	100.0(1,013)	16.0	2.6	100.0(1,731)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15.0	2.5	100.0(1,013)	14.1	2.5	100.0(1,731)
(6) 아버지의 양육 참여	21.6	2.7	100.0(1,013)	22.0	2.6	100.0(1,731)
(7) 아동의 웰빙/행복	17.2	2.7	100.0(1,013)	18.3	2.8	100.0(1,731)

- 주: 1) 긍정비율은 '매우 잘 달성되었다',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긍정비율이 20%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4) 세부 결과는 부록 19에 수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51.

## 2) 아동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

현 정부의 아동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던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권리보장'의 1순위(26.1%)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48.4%)이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역시 1순위 응답률 24.5%, 1,2순위 종합 응답률 45.8%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 양육 참여'의 1순위 응답 비율은 14.6%로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았으나, 2순위가 포함(25.1%)되면서 그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의 1순위 응답률은 12.5%였으나, 2순위가 포함됨에 따라 27.2%로 상승하여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I-2-2〉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동정책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7.3	8.4	15.7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24.5	21.3	45.8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26.1	22.2	48.4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12.5	14.7	27.2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9.7	13.3	23
(6) 아버지의 양육 참여	14.6	10.5	25.1
(7) 아동의 웰빙/행복	5.3	9.6	14.9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한편, 현 정부의 아동정책 중 다소 미약한 성과를 나타냈던 과제에 관한 1순위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응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부모의 육아 행복감’(25.0%), ‘아버지의 양육 참여’(20.7%),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16.7%)의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외벌이 가구는 ‘부모의 육아 행복감’(26.4%),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18.0%), ‘아버지의 양육 참여’(16.1%)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 중 ‘부모의 육아 행복감’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성과가 미흡했던 과제로 평가되고 있으며,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가구에서 이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2-3〉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동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육아 행복감	아버지의 양육 참여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아동의 웰빙/행복	계(수)
전체	26.0	18.5	17.0	14.3	10.2	7.2	6.8	100.0 (1,7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0	20.7	16.7	14.2	10.2	7.2	6.1	100.0 (1,050)
외벌이	26.4	16.1	18.0	14.4	10.0	7.0	8.1	100.0 ( 632)
해당없음	42.9	4.1	10.2	14.3	14.3	10.2	4.1	100.0 ( 49)
$\chi^2(df)$					22.01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현 정부의 아동정책 중 비교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육아 행복감’의 1순위(26.0%)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46.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 역시 1순위 응답률 18.5%, 1,2순위 합산 응답률 36.3%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

은 양상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1순위 응답 비율(17.0%)과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33.0%) 또한 순위의 변동 없이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I-2-4〉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동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1+2순위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7.2	7.2	14.4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17.0	16.0	33.0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10.2	12.8	23.0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14.3	16.5	30.8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26.0	20.6	46.6
(6) 아버지의 양육 참여	18.5	17.7	36.3
(7) 아동의 웰빙/행복	6.8	9.2	15.9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3) 아동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끝으로, 현 정부의 아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에 관한 1순위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 및 연령에 따라 응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23.2%), ‘부모의 육아 행복감’(21.7%), ‘아동권리보장’(18.9%)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외벌이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27.1%), ‘부모의 육아 행복감’(23.1%), ‘아동권리보장’(14.4%)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 중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의 구축’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맞벌이 보다는 외벌이 가구에서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대 부모일 때에는 ‘부모의 육아 행복감’(29.9%)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아동권리보장’(19.4%)과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16.4%) 순이었다. 30대 부모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24.2%), ‘부모의 육아 행복감’(23.1%), ‘아동권리보장’(15.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40대 이상 부모인 경우에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26.4%)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동권리보장’(20.7%), ‘부모의 육아 행복감’(18.9%)이 그 뒤를 이었다.

〈표 VI-2-5〉 아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부모의 육아 행복감	아동권리 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아버지의 양육 참여	아동의 웰빙/행복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계(수)
전체	24.6	22.0	17.1	14.2	10.6	7.3	4.2	100.0 (1,7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2	21.7	18.9	14.7	10.9	6.6	4.1	100.0 (1,050)
외벌이	27.1	23.1	14.4	12.7	10.4	8.5	3.8	100.0 ( 632)
해당없음	22.4	14.3	14.3	22.4	6.1	8.2	12.2	100.0 ( 49)
$\chi^2(df)$				23.478(12)*				
연령								
20대	16.4	29.9	19.4	14.9	14.9	3.0	1.5	100.0 ( 67)
30대	24.2	23.1	15.2	15.1	11.2	7.1	4.1	100.0 (1,119)
40대 이상	26.4	18.9	20.7	12.1	8.8	8.3	4.8	100.0 ( 545)
$\chi^2(df)$				23.798(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현행 아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1순위 응답 비율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포함 시에는 41.3%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부모 육아 행복감’의 1순위 응답률은 22.0%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았으나, 2순위가 포함됨에 따라 42.0%로 급증함으로써 가장 높은 종합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끝으로, ‘아동권리보장’의 1순위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은 각각 17.1%와 34.3%로, 전체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I-2-6〉 아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4.2	6.8	11.0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24.6	16.7	41.3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17.1	17.2	34.3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14.2	17.7	31.8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22.0	20.0	42.0
(6) 아버지의 양육 참여	10.6	11.8	22.4
(7) 아동의 웰빙/행복	7.3	9.8	17.2
계(수)	100.0(1,731)	100.0(1,731)	(1,7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4) 소결

부모 설문조사에서 아동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인식한 목표 달성률에 대해 종합하면 총 일곱 가지의 정책 과제 중, ‘달성되었다’와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친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22.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 22.0%,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20.6% 순이었다. 한편,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 과제는 ‘요보호아동 보호 체계 개편’으로 13.5%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부모의 육아 행복감’(14.1%) 역시 다소 낮은 긍정률을 나타냈다.

현 정부의 아동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던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권리보장’의 1순위(26.1%)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48.4%)이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역시 1순위 응답률 24.5%, 1,2순위 종합 응답률 45.8%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현 정부의 아동정책 중 비교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육아 행복감’의 1순위(26.0%) 및 1,2순위 종합 응답 비율(46.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 역시 1순위 응답률 18.5%, 1,2순위 합산 응답률 36.3%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양상을 지속하였다.

현행 아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1순위 응답 비율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포함 시에는 41.3%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 나. 전문가 정책 성과 평가

### 1) 아동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아동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긍정비율 43.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42.0%,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이 41.0%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의 육아 행복감’은 긍정비율 1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은 2019년에는 긍정비율이 54.7%였으나, 2020년에는 43.0%로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는 202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재학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육아 행복감’은 2019년에는 긍정비율이 23.6%였으나, 2020년에는 16.0%로 하락하였다. ‘부모의 육아 행복감’은 2019년에도 아동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동의 웰빙/행복’은 긍정비율이 23.0%로 2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동의 웰빙/행복’은 2019년 조사에서는 긍정비율이 44.3%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23.0%로 크게 하락하였다.

〈표 VI-2-7〉 아동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19년/2020년 조사)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36.8	4.3	100.0 (106)	27.0	4.2	100.0 (100)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54.7	4.5	100.0 (106)	43.0	4.2	100.0 (100)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39.6	4.3	100.0 (106)	41.0	4.3	100.0 (100)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41.5	4.2	100.0 (106)	28.0	4.0	100.0 (100)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23.6	3.6	100.0 (106)	16.0	3.5	100.0 (100)
(6) 아버지의 양육 참여	44.3	4.1	100.0 (106)	42.0	4.0	100.0 (100)
(7) 아동의 웰빙/행복	44.3	4.1	100.0 (106)	23.0	3.7	100.0 (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3) 세부 결과는 부록 20에 수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15.

## 2) 아동정책 성과평가 순위

아동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조사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각각 20.0%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 운영 및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사교육 확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매뉴얼 및 법제도 정비, 분리되어 있던 전달체계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교육과정, 아동권리 보장 홍보,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 아동권리 보장 인식 제고, 관심 소외 영역(경제선 지능 아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부모교육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다양한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시행, 아버지 육아휴직 확대, 양육에 대한 부모참여 지원 제도 마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 확대, 근무시간 단축·정시 출퇴근·유연근무제 등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표 VI-2-8〉 아동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관련 국정과제	단위: %(명)		
	1순위	2순위	1+2순위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11.0	11.0	22.0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41.0	22.0	63.0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20.0	23.0	43.0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8.0	13.0	21.0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	5.0	5.0
(6) 아버지의 양육 참여	20.0	18.0	38.0
(7) 아동의 웰빙/행복	-	8.0	8.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아동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조사 결과, ‘부모의 육아 행복감’이 36.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아동의 웰빙/행복’이 18.0%,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14.0%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의 육아 행복감’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부모의 육아 행복감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양육 부담 감소 실패, 미약한 일·가정 양립 정책, 경쟁적 교육 환경, 장시간 근로, 육아 스트레스, 예비 부모 교육 미흡, 부모의 육아 피로감, 실질적 체감도가 떨어지는 관련 정책, 부모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웰빙/행복’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지교육 강화 의식 팽배, 어릴 때부터 계속되는 경쟁 구조, 위기에 처한 아동 수 증가, 학업과 조기교육의 폐해, 놀이시간의 부족, 정책에서 아동을 중심에 놓는다는 기본 전제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학대 피해아동,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예방 및 대응체계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약함,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부실, 아동이 이미 존재하는 보호체계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임에도 학대 피해를 방지하지 못함,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사후관리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표 VI-2-9〉 아동정책에서 가장 미흡한 성과를 보인 과제

관련 국정과제	단위: %(명)		
	1순위	2순위	1+2순위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9.0	9.0	18.0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14.0	8.0	22.0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6.0	7.0	13.0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10.0	9.0	19.0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36.0	16.0	52.0
(6) 아버지의 양육 참여	7.0	20.0	27.0
(7) 아동의 웰빙/행복	18.0	31.0	49.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3) 아동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아동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를 1순위로 2순위로 응답한 조사 결과,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동의 웰빙/행복’이 21.0%,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이 19.0%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종합적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 중장기 종합적 대책 수립, 예비부모 교육 확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예산 및 인력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웰빙/행복’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아동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아동이 배제되는 아동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한 2019년을 기점으로 아동의 기본 권리를 위한 국가적 정책 방향성을 확립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 UN 아동인권선언의 주요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탐색 등을 제시하였다.

〈표 VI-2-10〉 아동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관련 국정과제	단위: %(명)		
	1순위	2순위	1+2순위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6.0	8.0	14.0
(2)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27.0	7.0	34.0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19.0	18.0	37.0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9.0	11.0	20.0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16.0	21.0	37.0
(6) 아버지의 양육 참여	2.0	9.0	11.0
(7) 아동의 웰빙/행복	21.0	26.0	47.0
계(수)	100.0(100)	100.0(100)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4) 아동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

아동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에서는 대부분 평가요소에서 긍정평가(5+6+7)가 부정평가(1+2+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응성(responsibility)에서는 긍정

평가 31.0%, 부정평가 30.0%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정책이 수요자의 욕구 및 필요에 대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표 VI-2-11〉 아동정책 평가요소별 평가

단위: %(명), 점

요소	1	2	3	잘 안된편 (1+2+3)	4 (중간)	5	6	7	잘 된편 (5+6+7)	계(수)	7점 평균
1. 효과성	1.0	6.0	20.0	27.0	37.0	30.0	3.0	3.0	36.0	100.0(100)	4.1
2. 효율성	2.0	6.0	19.0	27.0	41.0	25.0	4.0	3.0	32.0	100.0(100)	4.1
3. 형평성	2.0	4.0	12.0	18.0	47.0	24.0	8.0	3.0	35.0	100.0(100)	4.2
4. 적절성	1.0	8.0	12.0	21.0	41.0	27.0	8.0	3.0	38.0	100.0(100)	4.2
5. 포괄성	2.0	5.0	11.0	18.0	35.0	30.0	13.0	4.0	47.0	100.0(100)	4.4
6. 노력	2.0	4.0	9.0	15.0	31.0	35.0	15.0	4.0	54.0	100.0(100)	4.5
7. 대응성	2.0	7.0	21.0	30.0	39.0	21.0	7.0	3.0	31.0	100.0(100)	4.0
8. 추진체계	2.0	6.0	19.0	27.0	37.0	22.0	10.0	4.0	36.0	100.0(100)	4.2
9.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1.0	6.0	16.0	23.0	40.0	20.0	13.0	4.0	37.0	100.0(100)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5) 소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아동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 보호종합지원 체계(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긍정비율 43.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42.0%,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이 41.0%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의 육아 행복감’은 긍정비율 1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조사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각각 20.0%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조사 결과, ‘부모의 육아 행복감’이 36.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아동의 웰빙/행복’이 18.0%,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14.0%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를 1,2순위로 응답한 조사 결과,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동의 웰빙/행복' 21.0%,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19.0%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정책의 평가요소별 평가에서는 대부분 평가요소에서 긍정평가(5+6+7)가 부정평가(1+2+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응성(responsibility)에서는 긍정평가 31.0%, 부정평가 30.0%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정책이 수요자의 욕구 및 필요에 대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 VII

## 총괄평가 및 정책제언

- 01 저출산정책
- 0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 03 아동정책



## Ⅶ. 총괄평가 및 정책제언

### 1. 저출산정책

#### 가. 집행

##### 1) 재정(투입의 충분성)

OECD 데이터에서 2015년 기준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평균 2.0%이나, 한국은 1.2%에 불과하고 아동수당을 포함해도 1.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5).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그 비중은 2019년 GDP 대비 0.16%에 불과하다(박선권, 2020a: 4). 아동수당을 비롯한 저출산정책은 현금지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투입 비중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산출

##### 1) 수급자 범위

아동수당의 경우 2018년 9월에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을 당시는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지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만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지급을 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는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연령이 확대되었다.

2019년에 이루어진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및 지급연령 확대는 부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는 부모 설문조사에서 24.9%의 지지를 받아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로 선정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는 긍정비율이 78.0%로 부정비율 9.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아동수당 도

입 및 연령 확대'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34.0%의 지지를 받아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로 선정되었다.

## 2) 지원의 충분성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 설문조사에서 아동수당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현금 지원수준이 낮아서'가 7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9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및 지급연령 확대를 이루었으나 지급수준은 아동 당 월 1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영유아 부모 면담조사에서도 아동수당은 지급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의 효과에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 금액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만족도(서비스의 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 설문조사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61.1%로 2019년 조사의 43.9%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39.2%에서 2020년 50.3%로 증가하였다.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지원,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 조사 대비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부모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9년 조사 대비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정책의 현금지원, 시간지원, 건강/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저출산정책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성과

### 1)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 가)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부모 설문조사에서 저출산정책 중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에 대한 목표 달성도 평가의 긍정비율은 11.1%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의 10.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는 부모 설문조사에서 저출산정책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삶의 제고 정책의 방향을 수요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는 달성도 평가에서 긍정비율 22.0%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2020년 12월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삶의 질 제고 정책의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는 저출산정책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향후 집중해야 할 저출산정책 1순위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를 선택한 응답자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 나)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부모 설문조사에서 15.0%의 응답을 받아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 급여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육아휴직 특히 아버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아버지가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제약을 줄여나가야 한다. 부모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저출산정책 1순위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14.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다)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반면에 부모 설문조사에서 저출산정책 중 가장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24.9%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는 1순위를 선택한 응답자가 34.0%로 저출산정책 중 가장 성과가 우수한 과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 2) 파급 효과

계량 분석에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고정효과 모형에서 100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을 약 1.8~2.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 합계출산율의 과거값을 통제한 동적패널모형에서는 그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키므로써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하락을 완화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2017년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 증가 시 합계출산율을 약 0.17~0.2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적패널모형에서도 2017년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대표되는 육아 인프라 확충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 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박창현·김근진, 2018: 31).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은 반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많아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 출산지원금 수준이 높아지는 데에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육아 인프라를 확대하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출산지원금 증가는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육아 인프라를 비롯한 정주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출산 후 육아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육아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 확대와 동시에 육아 인프라를 비롯한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지만 인구가 적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가 공포된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했다(민규량, 2019: 128).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을 비롯한 육아 인프라 확충을 기초 지자체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2017년 이후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과 결합했을 때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육아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와 연계한 협력체계 추진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라.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언

### 1)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부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아동수당의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 예산의 GDP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0년 8월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재정 투자는 GDP 대비 지출비중으로 OECD 평균 2.0%이나, 우리나라는 1.2%로 파악하였고, 아동수당 포함시 우리나라는 1.36%로 추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5).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아동 및 가족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재원투입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국내 GDP의 0.8%의 추가 투입이 필

요하다고 파악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76).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2018년 GDP 고려시 0.8%는 약 14.2조원에 해당하고(2019년 아동관련 재정소요액 약 22.0조원), 향후 10년간 매년 1.4조원씩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관계부처 합동, 2020: 76).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일상화된 사회적 위험 하에서 아동가구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가정 양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발전방안 강구를 추진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69). 해외사례를 보면 OECD 32개국 중 15세 이상까지 지원하는 국가가 29개국이며, 이중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국가가 17개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69).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을 통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만7세 미만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69). 부모 설문조사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61.1%로 2019년 조사의 43.9%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는 2019년에 이루어진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뿐 아니라 2020년 추가적으로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의 영향 역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위기 시 아동수당 금액 및 형태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69).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앞으로 재난 위기 상황 등 특수한 필요가 있을 시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 2)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제도 개선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지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제도에 대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대체인력 지원이 부족하여 실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시간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제도적으로는 수급자 범위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수급자 범위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시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 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69).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직 종사자·자영업자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어도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69).

## 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 가. 집행

#### 1) 재정(투입의 충분성)

보육정책에 투입되는 중앙정부의 보육재정은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a: 436).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19년 3조4,163억원, 2020년 3조4,328억원이고, 어린이집 지원은 2019년 1조1,868억원, 2020년 1조4,241억원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019년 8,923억원, 2020년 8,157억원이다(보건복지부, 2020a: 436).

유아교육 정책에 투입되는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재정은 2019년 4조3,928억원, 2020년 4조5,956억원인데, 그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유아교육지원 예산은 2019년 3조8,153억원, 2020년 4조316억원이다(교육부, 2020a: 271).

이 중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유아교육지

원 예산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 이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교육재정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육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인하여, 2016년 교육세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를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6년 제정 당시 3년 한시법으로 규정되었는데, 2019년 12월 3일 개정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3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한시법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전달체계

### 가) 초등돌봄교실과 온종일 돌봄체계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성된다. 마을돌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학교돌봄을 구성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이 교육부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은 상당부분이 학교장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로 '학교-지자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선택한 전문가는 12.0%로 2번째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온종일 돌봄체계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을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행정과 지역행정의 분리로 인해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초등돌봄전담사들도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 시스템의 분리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초등돌봄교실의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관리주체 일원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온종일돌봄체계의 전달체계 개편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나) 유보격차 완화

현 정부는 유보통합에 앞서 유보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에 12.0%로 3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11.0%로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부정비율 40.5%로 유아교육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보육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부정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도 유보격차 완화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인력관리

### 가) 보육지원체계 개편

부모 설문조사에서 29.0%의 부모들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37.0%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를 그 이유로 선택하였다. 영유아 부모 면담조사에서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어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에서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나) 초등돌봄교실 운영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보수교육의 부실함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연수가 실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돌봄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는데, 전일제 전담사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보수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 설문조사에서 초등돌봄 교실에 대해 불만족한 부모들의 70.6%는 그 이유로 ‘서비스의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우려가 부모의 주된 불만인 만큼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담에 참여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돌봄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학교에서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는 인식이 있을 뿐 아니라 돌봄교실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는 운영 때문에 돌봄 프로그램에서 교육 활동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돌봄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초등돌봄전담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4) 접근성

#####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설문조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부모의 32.0%는 그 이유를 ‘주위에 가까이 없음’으로 응답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는데,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확대가 요구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치율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데,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뉴스, 2020.10.15.).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나)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밖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초등 부모의 48.3%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온종일 돌봄체계에서 학교 밖 초등돌봄을 위해 증점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초등 부모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초등 부모 및 초등돌봄전담사 면담조사에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초등돌봄교실과의 연계가 용이하지만 학교와 거리가 멀다면 연계가 어렵고 부모도 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학교와의 거리를 포함한 접근성 확보의 측면에서 추진해야 함을 보여준다.

## 5) 공공성

### 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모 설문조사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긍정비율이 16.7%로 나타났는데, 12.5%인 ‘취학 전 출발선 평등’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2019년 조사 결과의 18.9%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부모들은 아직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에서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10.1%로 2번째로 미흡한 과제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선택한 전문가들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유아교육 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부정비율이 34.9%로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필요’하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개선’ 28.8%,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18.1%, ‘공공성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에게 유인책 제공’ 10.7%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인 경우,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립유치원 교직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9년 3월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현원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되었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도입되었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볼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 만큼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증진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나) 공영형 및 매입형 유치원 정책

부모 설문조사에서 공영형 유치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비율은 50.0%로 나타났다. 공영형 유치원에 만족하는 이유는 알아본 결과, ‘부모 부담금이 낮아지므로’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이 높아지므로’ 20.7%, ‘교육 및 서비스 질이 높아지므로’ 12.1%, ‘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므로’ 8.6%,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므로’ 3.4% 순으로 응답되었다. 공영형 유치원을 이용한 부모는 비용 측면과 공공성/질 측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형 유치원에 불만족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가 46.2%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30.8%,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23.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설문조사에서 매입형 유치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비율은 36.7%로 나타났다. 매입형 유치원을 이용하였을 때 만족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모 부담금이 낮아서’를 고른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서’ 31.8%, ‘유치원의 공공성이 높아서’ 18.2%, ‘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므로’ 9.1%,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서’ 4.5% 순으로 응답되었다. 매입형 유치원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입형 유치원의 불만족 이유로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70.0%)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이어서 ‘부모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지므로’(20.0%),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어려워지므로’(10.0%)가 불만족 이유로 나타났다.

## 나. 산출

### 1) 수급자 범위

#### 가) 온종일 돌봄체계

2018년 4월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2019년도에 학교돌봄 1만4천명, 마을돌봄 1만2천명 총 2만6천명을 확대하여, 초등돌봄 수혜 인원을 37만2천명으로 계획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6). 2019년 전체 초등돌봄 서비스 수혜 인원은 39만7천명으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1.09.), 원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약 1,800개소 확충하여 약 9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15). 이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신축 아파트 내 설치 의무화, 생활 SOC 복합화 선정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60).

온종일 돌봄체계에서 돌봄시설의 연도별 확충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이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미·김보미·김진아, 2020a: 73). 보건복지부에서 성과지표로 사용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개소수 목표는 2018년 17개, 2019년 150개이다(보건복지부, 2020a: 371).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다함께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총 1,8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29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국회, 2020b: 34). 2020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 신규 설치를 계획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355개소가 신청함에 따라 센터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350개 센터 소요분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국회, 2020b: 34).

2019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아동수를 보면 정원 4,418명, 현원 2,968명이다(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미·김보미·김진아, 2020b: 1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수는 정원 수 기준으로 개소당 약 25명 수준인데, 온종일돌

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1,800개에 이용 아동 수 9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개소수를 목표대로 달성했다고 해도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는 50%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 목표는 167개소, 이용 아동 수 5,000명인데(장명림 외, 2020a: 51), 2019말 기준 이용 아동 수는 이에 미달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의 어려움으로 지자체 돌봄 담당자들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공간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장명림 외, 2020a: 5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비에 리모델링비만 포함되어 있고, 임차료 등 장소 마련 및 사용 비용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장명림 외, 2020a: 54).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가능 건축물은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도서관 등인데(장명림 외, 2020b: 82), 임차료 등 장소 확보 비용의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시설 수는 4,218개소, 이용 아동 중 초등학생 수는 98,501명이다(장명림 외, 2020b: 15).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2016년 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수 중 초등학생은 8.2만명으로 1~3학년 4.2만명, 4~6학년 4만명으로 파악하였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 3),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만명의 이용 아동수를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15). 2019년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초등학생은 98,501명이므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발표 시보다 약 16,500명이 증가하여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감 예방을 위해 일반아동 입소비율을 2019년 20%에서 2020년 40%로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20a: 369). 2019년에는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으로 등록하고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에는 시설별 신고정원의 6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으로 등록하고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일반아동 입소비율을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20a: 369).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등록비율은 온종일돌봄체계의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 2) 지원의 충분성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유아교육 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는 부정비율이 35.8%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응답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의 평가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8%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8.8%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0.5%이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원 증대’도 13.5%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보육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원 및 관리 강화’는 부정비율이 35.7%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응답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의 평가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립유형 별로 살펴보면, 민간(전혀 달성되지 않음 19.6%)과 가정어린이집(전혀 달성되지 않음 16.1%)에서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4.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원장과 교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한 달성도를 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설문조사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4%는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3.2%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해야한다’ 12.6%,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11.9%로 유사한 비율로 분석되었다.

### 3) 만족도(서비스의 질)

#### 가) 시간제 보육과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설문조사에서 2019년 조사보다 만족도가 하락한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보육'과 '공동육아나눔터'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은 만족 비율이 54.4%로 2019년 조사의 63.4%보다 하락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만족 비율이 51.3%로 2019년 조사의 60.0%보다 하락하였다. '시간제 보육'은 불만족하는 이유로 '서비스의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이 35.6%로 가장 높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부모 면담조사에서도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있어 부모를 만족시키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 나)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정책 중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해서는 부모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29.0%,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4.1%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연장보육 이용이 용이해졌으므로'가 45.5%로 가장 높았고,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지므로'가 46.5%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와 외벌이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자들이 연장반 이용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연장반 이용 기준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보육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긍정비율이 39.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설문조사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16시 이후 연장보육을 담당할 교사 수급이 어렵지 않아야 함'이 36.4%, '지원인력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이 35.8%로 나타나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 다) 초등돌봄정책

초등방과후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은 만족도가 60.3%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의 70.9%보다 하락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는 53.8%로 2019년 조사의 73.3%보다 하락하였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70.6%가 ‘서비스의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을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에 주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초등 부모 면담조사에도 초등돌봄교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가 각각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보육정책의 방향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주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강화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달성도 평가에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는 긍정비율 41.7%로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58.9%로 과반 이상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 ‘과다한 행정업무 줄여야 함’ 15.9%, ‘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개선’ 11.9%, ‘보육교사 역량 향상 기회 제공’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 성과

#### 1)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 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부모 설문조사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의 달성도 평가에서는 ‘놀이중심 누리

과정 개정'이 긍정비율 27.9%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에서도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달성도 평가에서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긍정비율 64.0%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와 함께 2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전문가 의견조사의 가장 성과를 보인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1순위에서도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유아교육 정책의 달성도 평가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가 긍정비율 61.0%로 유아교육 정책 중 달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도 긍정비율 37.2%로 3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가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설립유형별로는 유치원이 사립인 경우보다 공립인 경우에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정책 목표 달성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보육정책 달성도 평가에서도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는 긍정비율 64.9%로 가장 달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긍정비율 3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이와 연관된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부모 설문조사에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에서는 13.7%로 2번째였으나,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에서도 10.9%로 1번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확충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을 보여준다.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에서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가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충 뿐 아니라 질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는 긍정비율이 35.3%로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원장의 57.7%는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 정책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교사는 28.2%에 불과해 원장과 교사의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국공립유치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국공립·사립유치원 상생방안 필요’가 31.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증대 필요’가 21.9%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긍정비율이 39.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이 56.3%로 분석되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수 감소를 완화해야 함’ 15.9%,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증대 필요’ 13.2%,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함’ 7.3%, ‘충분한 시설 및 부지 확보 필요’가 6.0% 순으로 응답되었다.

#### 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의 질 강화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유아교육 정책 달성도 평가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는 긍정비율이 37.6%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의 질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유치원 교사와 원장 중 44.2%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을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충분한 행정지원 인력 제공’이 17.7%,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수요 반영’이 16.7%, ‘충분한 교직원 연수 기회 제공’이 11.2%, ‘급식 및 차량 운행 등 서비스 지원 증대’가 6.5%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별로 살펴보면, 공립단설(62.3%)과 사립법인(52.4%)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과반 수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공립병설(45.5%)은 충분한 행정지원 인력 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보육정책 달성도 평가에서는 긍정비율이 25.9%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 강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중 55.6%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어야 함’을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의 동기 부여’ 18.5%, ‘지원인력 확대’ 12.6%, ‘충분한 교직원 연구 기회 제공’ 6.6% 순으로 응답되었다. 원장/교사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교사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64.6%)’을, 원장은 ‘교직원에게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기 개발의 동기를 부여해야 함(27.3%)’을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라)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의 달성도 평가에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는 긍정비율이 38.4%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중 45.0%는 ‘어린이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함’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평가 결과가 실제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26.5%,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 11.3% 순으로 응답하여,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부담 완화, 보육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 연결, 이해하기 쉬운 평가지표가 강조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2) 파급 효과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각각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과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 종일제 취업,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초등돌봄교실 확충은 취업, 상용직 취업, 정규직 취업,

월평균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통제하는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월평균 임금수준을 제외하고 그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종일제 취업 및 주당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오후돌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7~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간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3) 중장기 영향(아동 및 부모 삶의 질 제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초등학교 놀이시간과 공간 확충을 위해서 학습, 돌봄, 놀이 등이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휴게·놀이 공간 조성, 바닥 난방, 개수대 설치, 실내 인테리어 등)을 통하여 아동 중심의 학교 공간을 마련하고, 교과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놀이 위주의 활동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32).

## 라.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언

### 1) 초등돌봄정책의 개선 방향

#### 가) 초등돌봄교실 및 온종일 돌봄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달체계 개편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가 지금까지 마련되지 못한 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지만 초등돌봄교실 관리를 학교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2020년 4월에 교육부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의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교사들의 반발로 추진을 중단한 상태이다.

초등돌봄교실 뿐 아니라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돌봄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장명림 외, 2020a: 73). 장명림 외(2020a)에서는 현장 지자체 돌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협의회에서 현장의 어려움

을 파악한 결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관련 근거법 부재가 지적되었는데, 근거법이 없이 지자체 내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사업 추진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장명림 외, 2020a: 73).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는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60).

이와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에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은 “온종일 돌봄시설”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내 시설”을 포함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명시하였다(권칠승 의원안 제3조, 강민정 의원안 제3조).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권칠승 의원안 제6조제2항, 강민정 의원안 제7조제2항)고 규정하여 교육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초등돌봄교실의 시행 주체임을 명시하였다.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안 중 권칠승 의원안과 강민정 의원안은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의 시행 주체를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로 명시한 점은 동일하나 중앙정부 수준의 시행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권칠승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권칠승 의원안 제5조제2항),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권칠승 의원안 제6

조제1항)고 규정하여, 교육부 장관을 온종일 돌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안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둔다.”(강민정 의원안 제5조제1항),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의 조정 2.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 3.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중앙정부 수준의 온종일 돌봄 시행 주체로 규정하였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포함된 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에서는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초등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민간위탁될 경우 현재 무기계약직인 돌봄전담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에는 명시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권철승 의원안 제10조제2항, 강민정 의원안 제11조제2항)고 규정하여 지자체의 조례에 설치 기준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위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열어두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권철승 의원안 제12조, 강민정 의원안 제13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권철승 의원안 제12조제3항, 강민정 의원안 제13조제3항),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173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중 직영 65개소, 위탁 104개소, 공동운영 4개소로 운영되고 있다(장명립 외, 2020b: 12). 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민간 위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가 45.2%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담당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면담에 참여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이 아닌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관리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되고 학교 내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관리주체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가 수월해지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수준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없이 초등돌봄교실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민간위탁의 확대로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루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이 관건이 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및 운영 등 지원 예산은 2019년 3,841억원, 2020년 3,814억원이다(교육부, 2020a: 276).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2020년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가 45.2%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만 맡겨놓을 수 없고,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기존 초등돌봄교실 예산의 지자체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기존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되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되어 왔고,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유치·중등 교육을 위한 재원이며, 돌봄이 교육이 아니라는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 보통교부금으로 편성된 기존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급격한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2030년에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2.9명으로 OECD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35), 2020년 기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고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아동 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운영 효율성 상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불렀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2019년 3조8,153억원, 2020년 4조31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교육부, 2020a: 271),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기존 예산의 지자체 이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지자체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자체-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을 2020년 8월 발표하였다(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20: 28).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 아동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20: 28). 초등학생 3만명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한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을 제공한다는 계획은 2018년 4월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11).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부터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한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 운영 초등돌봄교실이 2021년부터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곧바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보다 지자체 운영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마을돌봄인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이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 목표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등 저학년 아동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로 인해 학교 외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해도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성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구축

앞에서 언급한 초등돌봄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에서는 돌봄교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1:2로 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국회, 2020b: 35).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모델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가 저조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돌봄교실 시설 제공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요 조사 및 사전 협의가 철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국회, 2020b: 35).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은 2021~2022년 2년 간 초등학교 내 설치되는 1,500개 돌봄교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설치비 100%, 운영비의 25%를 교부금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39). 2021년 예산안 기준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225억원을 부담하고, 운영비 88억원은 보건복지부 22억, 교육청 22억, 지자체 44억씩 분담할 계획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40). 이에 대해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범위 및 재원부담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41).

지자체-학교 협력모델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교실을 위한 예산이 서울시 중구 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학교 내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던 기존 돌봄예산과 서울시 중구의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다(김민희·박소영·이지혜·이희현·김주영, 2020: 67). 김민희 외(2020)에서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던 돌봄교실 운영 예산에 추가하여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 지원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김민희 외, 2020: 67). 앞에서 살펴본것듯이 이를



위해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및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역할 분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 2016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는 약 24만명으로 1~2학년 21만명, 3~4학년 3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3). 2019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는 290,358명으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1.0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당시보다 약 5만명이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에는 약 700실의 초등돌봄교실을 추가로 확충하여 약 30만명의 아동에 대해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1.14.).

2019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290,358명 중 저녁돌봄 이용 아동은 8,812명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중 3% 수준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1.20.).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오후돌봄에 비해 저녁돌봄에 참여하는 아동 수가 적어 학교에서 저녁돌봄을 제공하기에는 안전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녁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이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19년 기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아동 수는 정원 4,418명, 현원 2,968명인데, 정원 기준으로 봐도 초등돌봄교실의 저녁돌봄 이용 아동 수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비록 일반아동 이용 비율 기준 상향으로 일반아동 이용이 늘어났으나, 낙인감으로 인해 아직까지 일반아동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수 증가가 초등돌봄교실이 오후돌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라)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 및 인력관리 개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에서 교육 활동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전담사가 초등돌봄교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수당 지급 등의 문제로 인해 초등돌봄

교실에서 초등돌봄전담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제약되고 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는 안되고 돌봄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2016년에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의 문제점으로 보수 면에서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 항목이 신설되는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학교비정규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없어, 시도 별로 수당지급 여부, 수당금액, 총 임금액의 차이가 크고,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유은혜 의원안 제안이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봉을 인정하는 보수표를 만들어, 단일한 보수기준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유은혜 의원안 제안이유). 해당 법안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객관적으로 일시적 업무가 아니고 학기 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유은혜 의원안 제2조제3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유은혜 의원안 제5조제2항)고 규정하여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하였다. 해당 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 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른다.”(유은혜 의원안 제10조제1항)고 규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보수체계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부칙에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유은혜 의원안 부칙 제2조제4항)고 규정하였는데, 임용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인해 교사들의 반발이 심각하여, 해당 법안은 철회되었다.

현재 초등돌봄전담사는 대체적으로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경력이 쌓여도 승급 및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돌봄 프로그램 질적 제고를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직제 개편을 통해 승급 및 급여 인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교육공무직 법안은 2016년에 철회되었으나 초등돌봄전담사의 지위를 규정한 근거법 자체는 앞에서 살펴본 온종일 돌봄체계의 근거법 마련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2) 보육지원체계 개편 후속 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에서 2020년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시행착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먼저 연장보육료 예산이 실제 수요보다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도입할 당시 여론 수렴 단계에서 연장반 교사 지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러한 예측에 기반하여 연장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연장반 교사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연장보육료 지원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연장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지적된 문제는 연장보육료 지원 시간에 대한 것이다.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데 연장보육료 지원은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기본보육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하원을 4~5시 사이에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오후 4시 이후의 하원지도를 기본보육 담임교사가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연장반 전담교사는 오후 3시부터 출근해서 7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오후 4~5시 사이의 하원지도를 기본보육 담임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보육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현재는 기본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이나 보육료 지원은 오후 5시까지로 산정되어 지원되고,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되나 연장보육료 지원은 오후 5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연장보육료 지원이 오후 4시부터 이루어져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연장보육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후 4시 이후의 업무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3)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후속조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전문가 의견조사,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을 전체의 35.8%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하게 해야 함' 30.2%,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 자료가 충분해야함' 18.1% 순으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해야 함'을 전체의 33.8%가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명확화' 28.5%, '충분한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 자료 필요' 21.9%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 충분한 교육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4) 유보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가 의견조사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도 유보격차 완화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에서 유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이 29.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이 28.8%, '누리과정 지원금 등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이 14.9%,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를 줄여야 함'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설문조사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29.1%,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어야 함' 23.2%,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22.5%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유보격차 완화에  
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에서도 유보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교사 자격·양성체  
계에 있어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자격양성체  
계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보 간 차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향후 유보통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  
리과정 도입으로 유아의 정규 교육과정은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의 자격·양성체계의 차이는 줄여나가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  
육의 전달체계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로드맵이 요구된다.

### 3. 아동정책

#### 가. 집행

##### 1) 재정(투입의 충분성)

보건복지부 사업 중 '아동자립지원(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  
당)'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019년 13,076억원, 2020년 24,851억원으로 크게 증  
가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및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019  
년 225억원, 2020년 225.8억원으로 편성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비해 예산  
지원 증가는 크지 않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기반하고 있는데, 재원의 안정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안정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2) 전달체계

부모 설문조사에서 아동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로는 '아동권리  
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가 26.1%로 가장 높았고,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

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24.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아동정책에서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아동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41.0%로 가장 높았고,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가 20.0%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로 27.0%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과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를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아동학대 전담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요보호아동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아동돌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아동실종 대응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수행되는 아동보호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을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의 정책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종합 조정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20). 현 시도 전달체계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17개 시도), 아동자립 전담기관(9개 시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분절적 운영 및 지역 간 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20).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단위 통합 정책지원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일부 시·도 대상 시범사업 추진 후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20).

그 외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은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라 18개 시군구는 2020년

12월까지, 109개 시군구는 2021년 10월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된다(관계부처 합동, 2020: 54).

현재 아동복지 관련 시스템은 사회보장, 아동학대, 입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자립지원 등 10여종으로 분산 구축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58).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고, 공통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원화된 아동 정보관리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58).

## 나. 산출

### 1) 수급자 범위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장 성과가 큰 과제 1순위로 41.0%의 지지를 받았으나,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에서도 14.0%로 3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가장 미흡한 과제 1순위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여전히 많은 학대 피해아동,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예방 및 대응체계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약함,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부실, 아동이 이미 존재하는 보호체계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임에도 학대 피해를 방지하지 못함,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사후관리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도입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성과

### 1) 중장기 영향(아동 및 부모 삶의 질 제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

평균인 7.6점에 비해 크게 낮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20: 1, 15). 어린이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기준 1.1명으로 OECD 21위 수준이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15).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재학대판정률은 10.3%로 2024년까지 7.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15).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의하면 영유아 건강검진율은 2018년 기준 74.5%로 2024년까지 8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15). 이러한 결과를 보면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아동의 삶의 질 지표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아동정책 달성도 평가에서 ‘아동의 웰빙/행복’은 2019년 조사에서는 긍정비율이 44.3%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긍정비율이 23.0%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1순위로 ‘아동의 웰빙/행복’을 선택한 비율이 18.0%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웰빙/행복’을 아동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지교육 강화 의식 팽배, 어릴 때부터 계속되는 경쟁 구조, 위기에 처한 아동 수 증가, 학업과 조기교육의 폐해, 놀이시간의 부족, 정책에서 아동을 중심에 놓는다는 기본 전제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 라.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안

### 1)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

#### 가) 아동학대 대응 정책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아동학대 대응 정책 예산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집행하고 있으나 그 예산은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에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부터 나오며 2019년 225억, 2020년 225.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보건복지부 2020a: 397).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설치 예산은 복권기금으로부터 나오며 2019년 55.3억원,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보건복지부 2020a: 397).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확충 등 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9년 및 2020년에는 각각 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보건복지부 2020a: 397). 이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예산의 74.8%가 범죄피해보호기금, 19.6%가 복권기금, 5.6%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는 복권기금이 사용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사용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2020a)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는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 소관 사업의 예산을 해당 부처 일반회계 이관을 통해 기금 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국회, 2020a: 8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1년도 지출계획안에서는 전체 1,049억500만원 사업비의 59.5%인 623억9,200만원이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 소관 사업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국회, 2020a: 85).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2019년 대비 57억8,400만원(25.6%)이 증가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사업비 증액(37억4,700만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관여 없이 보건복지부가 집행하고 있다(국회, 2020a: 85).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사업집행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부족한 법무부가 예산규모를 결정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소관 부처 예산과 분리하여 심사하므로 사업 예산에 대해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국회, 2020a: 86). 국회에서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제사법위원회, 복권기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이하일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 기금과 복권기금은 일반회계보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의 재원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가 납입된다. 그런데 벌금 수납액은 2015년 1조3,490억원에서 2019년 1조 835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벌금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수납액 자체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다(한국경제, 2021.1.12.). 복권기금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는 복권기금이 사용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아동학대에 사용되는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정적인 아동학대 예산 확보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1년도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보호 사업 예산 283억6,200만원 중 95.8%에 해당하는 271억6,800만원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예산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간접 지원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인 정부 중의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국회, 2020a: 86). 이에 따라 국회 검토보고에서는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국회, 2020a: 86).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여 총 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226개 시군구의 30% 수준이다(박선권, 2020b: 10).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0년 3월 기준 전국에 7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박선권, 2020b: 15).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아동복지법제15조제6항에서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

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일 때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7년 9.7%, 2018년 10.3%, 2019년 11.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보건복지부, 2020c: 50)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이 시급하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예산 증액에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비록 기금이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안정적인 아동학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신옥·강혜규·노대명·이현주·이병재(2015).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 교육부(2018).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교육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교육부(2019b). 2019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교육부(2020a). 2020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교육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0).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 국회(2020a).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 I).
- 국회(2020b).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 II).
-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소관]
- 권기현(2010). 정책분석론. 박영사.
-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미곤·고제이·이철희·홍석철·전병목·여유진·이소영·조성은·전진아·김은정·노용환·서문희·정희정·최은영·김성아·권선정·고경표·서효진(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민희·박소영·이지혜·이희현·김주영(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승권·김태완·김유경·신현웅·김연우(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 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01.09.). 지난해 초등돌봄서비스 39만 7000여명 이용. 교육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01.14.). 올해 돌봄교실 700실 늘린다...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교육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01.20.). 초등돌봄 수요 적극대응...돌봄 서비스 지속 확대하겠다. 교육부.
- 민규량(201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경제학연구, 67(3), 111-163.
- 박선권(2020a).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박선권(2020b).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창현·김근진(2018). 국·공립 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3).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201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보건복지부(2018b).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20b).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보건복지부(2020c).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봉주·김선숙·안재진·유조안·유민상·최창용·이연정(2013). 쉽게 알아보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 이상협·이철희·홍석철(2016).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경제추적연구소.
- 이영욱·김도형·허진욱·이경배·권형준·전혜지·임찬순(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체계 개편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주연(2016).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01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1-106.
- 이희길·도남희·유민상·정지은(2018).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
- 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미·김보미·김진아(2020a).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지역 돌봄 운영 방안-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미·김보미·김진아(2020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 정해식·강신욱·김동진·김성아(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윤경·김나영·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동훈·김근진·이윤진·이삼식·정익중·김기현·김승연·조혜주·염혜경(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사회보장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 통계개발원.(2019). 국민 삶의 질 2019.
- 통계청(2019).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 통계청(2020). 2019년 출생 통계.
- 한치록(2016). 계량경제학 강의. 박영사.
- 한치록(2017). 패널데이터강의. 박영사.
- Angrist, J. D. & Jorn-Steffen, P. (2014). 대체로 해롭지 않은 계량경제학. (강창희·박상곤 옮김) 서울: 경문사. (원서출판, 2009).
- Angrist, J. D. & Jorn-Steffen, P. (2017). 고수들의 계량경제학. (강창희·박상곤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15).
- Arellano, M., & Bond, S. (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277-297.
- Arellano, M., & Bover, O. (1995). Another look at the instrumental



- variable estimation of error-components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68(1), 29-51.
- Autor, D. H. (2003). Outsourcing at will: The contribution of unjust dismissal doctrine to the growth of employment outsourc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1), 1-42.
- Beasley, T., & Burgess, R. (2004). Can labour market regulation hinder 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Indi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 91-134.
- Blundell, R., & Bond, S. (1998).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87(1), 115-143.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인터넷 자료】

- 경향신문(2020. 6. 11). 광주시, 내년부터 '출생육아수당' 최대 680만원...돈만 준다고 애 낳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12040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12040005)(2020. 6. 20 인출)
- 베이비뉴스(2020. 10. 15). [국감]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서울 100%·광주 0%.
- 한국경제(2021. 1. 12). 아동학대 예산 뜯어보니...70%가 복권·벌금 수입에 달렸다.
- 한국노동연구원(2020). 한국노동패널조사. <https://www.kli.re.kr>
- KOSIS 국가통계포털(2020). <http://kosis.kr>





# 2018~2022 Childrearing Policy Analysis and Outcome Evaluation(III)

Keun Jin Kim, Changhyun Park, Hee Su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2019~2020 Korean childrearing policy's outcome and impacts on families and children, in terms of its policy performance goals and major indicies about overall childrearing environment.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oon government's national policy agenda of childrearing. This study classified the main three areas as fertility policy, ECEC, and inclusive policy for children.

The evaluation of the childrearing policies's outcome is composed of 4 parts. First, the self-evaluation result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or childrearing policies in 2019 are analyzed. Second, the outcome analysis of parents and professional stakeholders including ECEC experts, director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s, concerning 2019~2020 childrearing policies, were done based on the response results of online survey. Third, in-depth interviews of parents, director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s, elementary school care providers are analyzed to show the pros, cons, need for improvement and blind spot of childrearing policies. Fourth, panel data analys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fertility and care policies using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are reported.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overall evaluation of childrearing policy was on average positive, but insufficient and inadequate part and need to improve are suggested in particular process of policies.

Keyword: childrearing policy, policy analysis, outcome evaluation



## 부록 1. 설문조사지(부모)

###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Ⅲ)」의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자녀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부모 여러분의 의견과 주관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평가와 응답은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I.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

선문1. 귀댁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1. 자녀 있음 (            )명
2. 자녀 없음 → 면접 중단

선문2. 각 자녀의 출생년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첫째 자녀 (            )년
2. 둘째 자녀 (            )년
3. 셋째 자녀 (            )년
4. 넷째 자녀 (            )년

선문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_\_\_\_\_시·도
- 2) \_\_\_\_\_시·군·구
- 3) \_\_\_\_\_읍·면·동

문1-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문1-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문1-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해주세요.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졸

문1-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문1-5. 귀하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4. 구직 중
5. 미취업

문2-1.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수급경험 있음	모름
기초생활수급 여부	①	②	③	④
법정차상위계층 여부	①	②	③	④

문2-2.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과거 그러함	모름
다문화가족 여부	①	②	③	④
한부모가족 여부	①	②	③	④

문3-1. 귀 댁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 부의 형제 자매
- 4. 자녀모의 형제자매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 7. 자녀의 외조부              8. 자녀의 외조모              9. 그 외 친인척(                  )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3-2.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전일제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문3-3.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4. 구직 중    5. 미취업

문3-4. 귀하의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전일제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문4-1.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부 근로소득 (                      )만원
- 2) 모 근로소득 (                      )만원
- 3) 기타 가구 소득(기타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정부지원금 등) (                      )만원

문4-2. 귀 댁의 월 평균 자녀 양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 자녀양육비의 경우,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비, 공과금 등은 제외하고, 자녀 고유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대략으로 말씀해주십시오(해당 자녀 합산).

- 1) 취학 전(만 0~5세)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                      )만원
- 2) 취학 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                      )만원
- 3) 초등학교 4학년부터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                      )만원

## II. 육아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

문5. 최근 2년 이내에 (2019~2020년)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용 경험 유무와 그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문5-1. 이용 경험		문5-2.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민간 산후도우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어린이집 이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유치원 이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시간제보육/돌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공동육아나눔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5-3.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1.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2.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3.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4.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5. 비용이 부담됨 6.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공급부족) 7.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8. 기타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2.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3. 공공 산후도우미(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4. 민간 산후도우미	
5. 어린이집 이용	
6. 유치원 이용	
7. 시간제보육/돌봄	
8. 육아종합지원센터	
9. 공동육아나눔터	
10. 지역아동센터	



문5-4.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시간이 2020년 3월부터 12시간(7:30~19:30)에서 7시간(9:00~1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 있음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문5-4-1. 기본보육시간은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되었으나, 기본보육시간 이외에 실시되는 연장보육(16:00~19:30)은 자격심사를 통해 이용가능하고, 시간당 1,000~3,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주시시오.

매우 불만족 →문5-4-3	불만족 →문5-4-3	보통 →문5-5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5-4-2.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2. 비용 부담이 낮아지므로
3. 연장보육 이용이 용이해졌으므로
4. 기타 (                    )

문5-4-3.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
2. 비용 부담이 높아지므로
3.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4. 기타 (                    )

문5-5. 공영형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부모 부담금을 줄이고 엄격한 공공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 있음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문5-5-1. 공영형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5-6

문5-5-2. (공영형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문5-5-4	불만족 →문5-3-4	보통 →문5-6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5-5-3.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교육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2. 부모 부담금이 낮아지므로
3. 유치원의 공공성이 높아지므로
4. 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므로
5.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므로
6. 기타 (                    )

문5-5-4.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2.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3.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므로
4. 운영/관리주체에 따라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염려되므로
5. 기타 (                    )

문5-6. 매입형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 있음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문5-6-1. 매입형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6

문5-6-2. (매입형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문5-6-4	불만족 →문5-6-4	보통 →문6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5-6-3.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교육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2. 부모 부담금이 낮아지므로

3. 유치원의 공공성이 높아지므로
4. 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므로
5.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므로
6. 기타 (                    )

문5-6-4.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2. 사립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3.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므로
4. 기타 (                    )

문6. 최근 2년 이내에 (2019~2020년)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용 경험 유무와 그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6-1. 이용 경험		문6-2.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다함께돌봄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3.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2.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3.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4.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5. 비용이 부담됨 6.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공급부족) 7.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8.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9.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10. 기타
1. 초등돌봄교실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	
5.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문6-4. 보건복지부에서는 초등학교생에게 학교 밖에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 있음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문7. 귀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무엇을 이용하셨습니까? 각 지원 제도 별로 이용 경험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비해당: 이용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 / 이용안함: 이용 자격요건은 되지만 이용하지 않음

구분		비해당	이용함	이용안함
현금 지원	1. 출산장려금	①	②	③
	2. 양육수당	①	②	③
	3. 아동수당		②	③
	4. 자녀장려금	①	②	③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①	②	③
시간 지원	6. 모 출산휴가	①	②	③
	7. 부 출산휴가	①	②	③
	8. 모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9. 부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10. 모 육아휴직	①	②	③
	11. 부 육아휴직	①	②	③
	12. 모 유연근무제(사차출퇴근제등)	①	②	③
13. 부 유연근무제(사차출퇴근제등)	①	②	③	
건강/의료 지원 등	14.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15. 산후조리 지원	①	②	③
	16. 임신·출산 지원	①	②	③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①	②	③
기타	18. 기타( )	①	②	③

문7-1. 이용한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시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출산장려금	①	②	③	④	⑤
2. 양육수당	①	②	③	④	⑤
3. 아동수당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장려금	①	②	③	④	⑤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①	②	③	④	⑤
6. 모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7. 부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8. 모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9. 부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10. 모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①	②	③	④	⑤
11. 부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①	②	③	④	⑤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①	②	③	④	⑤
13.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①	②	③	④	⑤
14. 의료비 지원(예방접종, 건강검진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15. 산후조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16. 임신·출산 지원(난임지원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한부모가족수당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18. 기타( )	①	②	③	④	⑤

문7-2. 해당 현금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①현금 지원 수준이 낮아서 ②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서 ③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④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⑤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⑥지자체별로 현금지원제도에 차이가 있어서 ⑦기타
1. 출산장려금	
2. 양육수당	
3. 아동수당	
4. 자녀장려금	
5. 세제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 등)	

문7-3. 해당 시간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①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②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③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④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⑤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기타
6. 모 출산휴가	
7. 부 출산휴가	
8. 모 근로시간 단축	

구분	①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②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③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④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⑤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기타
9. 부 근로시간 단축	
10. 모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11. 부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13.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문7-4. 해당 건강/의료지원 등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①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②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 ③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④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⑤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기타
14. 의료비 지원(예방접종, 건강검진확대 등)	
15. 산후조리 지원	
16. 임신·출산 지원(난임지원 확대 등)	
17. 취약가구 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등) (한부모가족수당 확대 등)	

문8.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하였을 때 긴급돌봄을 이용하셨습니까?

1. 예 →문8-1                      2. 아니오 →문8-2

문8-1. 긴급돌봄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2.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3.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
4. 비용 지원이 되어서
5.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6. 기타 (                      )

문8-2.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2.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3. 이용신청을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공급부족)
4. 주위에 가까이 없어서
5.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7. 기타 (                    )

문8-3.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할 때 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가족돌봄휴가
2. 육아휴직
3. 유연근로제
4. 긴급돌봄
5. 아이돌봄지원
6. 현금지원
7. 기타 (                    )

### III.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

문9. 다음은 정부의 저출산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19~2020)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①	②	③	④	⑤	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⑥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①	②	③	④	⑤	⑥
4. 육아시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지원-수당 조정)	①	②	③	④	⑤	⑥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 의료비경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①	②	③	④	⑤	⑥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문10. 다음은 정부의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19~2020)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17.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⑥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19.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24.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27. 육아지원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29. 공공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3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32. 취학 전 출발선 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33.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34. 양육비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문11. 다음은 정부의 아동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19~2020)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35.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36.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37.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①	②	③	④	⑤	⑥
38.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①	②	③	④	⑤	⑥
39. 부모의 육아 행복감	①	②	③	④	⑤	⑥
40. 아버지의 양육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41. 아동의 웰빙/행복	①	②	③	④	⑤	⑥

문12.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큰 순서대로 2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33.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7.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4.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5.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4. 육아시간 지원	19.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36. 아동정책 (수혜)의 시각지대 보완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7.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38. 아버지의 양육참여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39. 아동의 웰빙/행복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2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27. 육아지원의 확대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9.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30. 취학전 출발선 평등	
	3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2. 양육비 부담 완화	

문13.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작은 순서대로 2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33.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7.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4.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5.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4. 육아시간 지원	19.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36. 아동정책 (수혜)의 시각지대 보완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7.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38. 아버지의 양육참여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39. 아동의 웰빙/행복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2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27. 육아지원의 확대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9.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30. 취학전 출발선 평등	
	3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2. 양육비 부담 완화	

문14.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에서 각각 순서대로 2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33.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7.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4.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5.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저출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4. 육아시간 지원	19.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36.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37.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38. 아버지의 양육참여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39. 아동의 웰빙/행복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2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로화,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27. 육아지원의 확대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29. 아이돌보미,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30. 취학전 출발선 평등	
	3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32. 양육비 부담 완화	

문15. 육아정책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어느 정도 적절하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정책 관련 서비스에서 의도하는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어느 정도 적절하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육아정책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	다소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2. 설문조사지(유치원교사(원장 포함))

###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Ⅲ): 2019~2020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육아 관련 현장 종사자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설문은 2020년 시점에서 바라본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1. 다음은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19~2020)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⑨
2.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⑨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⑨
4.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⑨
5.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⑨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⑨
7. 취학 전 출발선 평등	①	②	③	④	⑤	⑨
8.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⑨

문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
2. 연수 시간이나 연수 횟수를 늘려야 함
3.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 자료가 충분해야 함
4.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하게 해야 함
5.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을 늘려야 함
6. 기타( )

문3.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 수 감소를 완화해야 함
2.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함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4. 시설 및 부지 확보가 충분해야 함
5. 사립유치원과의 상생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6. 기타( )

문4.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해야 함
2.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3. 사립유치원에게 공공성을 강화할 유인이 제공해야 함
4. 공공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5.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6. 공영형 유치원 등 관련 정책의 홍보를 증대해야 함
- 7. 기타( )

문5. 국공립유치원 질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직원 연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2. 행정지원 인력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3.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4. 급식 및 차량 운행 등 서비스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 5.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
- 6. 기타( )

문6. 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함
- 2.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3.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 4.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의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증대해야 함
- 5.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인상 수준을 높여야 함
- 6. 기타( )

문7.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누리과정 지원금 등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
- 2.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3.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 4. 시설 기준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 5. 정부 보조의 격차를 줄여야 함
- 6.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어야 함
- 7. 기타( )

문8. 현재 유아교육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입니까?

- 1. ( )

배문 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유치원 원장
- 1. 유치원 교사

배문 2. 귀하가 재직 중인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무엇입니까?

1. 공립단설                      2. 공립초등학교병설
3. 사립사인                    4. 사립법인                    5. 기타(                      )

배문 3. 귀하가 재직 중인 유치원은 어디에 소재합니까?

\_\_\_\_\_ 시(도) \_\_\_\_\_구(군)

배문4. 귀하가 재직 중인 유치원의 기관 규모는 어떠합니까?

- 총 원아 수 현원 \_\_\_\_\_명, 정원 \_\_\_\_\_명
- 총 교직원 수 \_\_\_\_\_명 (교사\_\_\_\_\_명, 그 외\_\_\_\_\_명)

배문 5-1(배문1에서 유치원 원장). 귀하의 경력은 어떠합니까?

- 유치원 원장 경력 \_\_\_\_\_년 \_\_\_\_\_개월
- 유치원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배문 5-2(배문2에서 유치원 교사). 귀하의 경력은 어떠합니까?

- 유치원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배문 6.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전문대(2~3년) 졸업      2. 대학교(4년제)      3.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7.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유아교육학                2. 아동(가족)학                3. 아동(사회)복지학
4. 교육학                      5. 초등교육학                6. 특수교육학
7. 가정(관리)학              8. 보육학                      9. 기타(                      )

배문 8.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배문 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3. 설문조사지(어린이집 보육교사용(원장 포함))

##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Ⅲ): 2019~2020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육아 관련 현장 종사자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설문은 2020년 시점에서 바라본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1. 다음은 정부의 보육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19~2020)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⑥
3. 국공립 어린이집 질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4.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8.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9.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10.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문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
2. 연수 시간이나 연수 횟수를 늘려야 함
3.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 자료가 충분해야 함
4.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하게 해야 함
5.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을 늘려야 함
6. 기타( )

문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 수 감소를 완화해야 함
2.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함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4. 시설 및 부지 확보가 충분해야 함
5.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6. 기타( )

문4. 국공립 어린이집 질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직원 연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2. 지원인력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3. 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4. 급식 및 차량 운행 등 서비스 지원이 증대되어야 함
5.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 함
6. 교직원에게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해야 함
7. 기타( )

문5.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원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함
2.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3.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4.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의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증대해야 함
5.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인상 수준을 높여야 함
6. 기타( )

문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누리과정 지원금 등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
2.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3.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4. 시설 기준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5. 정부 보조의 격차를 줄여야 함
6.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어야 함
7. 기타( )

문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2. 교사 연수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3. 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4. 누리과정 지원금 등 보육료 인상 수준을 높여야 함
5. 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6.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함
7. 기타( )

문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함
2.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함
3. 연장보육을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해야 함
4. 지원인력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5. 16시 이후에 연장보육을 담당할 교사 수급이 어렵지 않아야 함
6. 연장보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해야 함
7. 기타( )

문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
2. 어린이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
3.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함
4. 평가 결과가 실제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5. 평가 결과가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함
6. 평가자의 자질을 제고해야 함
7. 기타( )

문10. 현재 보육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입니까?

1. ( )

배문 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어린이집 원장
2.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문 2. 귀하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무엇입니까?

1. 국공립
2. 민간
3. 가정
4. 직장
5. 기타( )

배문 3. 귀하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은 어디에 소재하십니까?

\_\_\_\_\_시(도) \_\_\_\_\_구(군)

배문4. 귀하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기관 규모는 어떠합니까?

- 총 원아 수 현원 \_\_\_\_\_명, 정원 \_\_\_\_\_명
- 총 교직원 수 \_\_\_\_\_명 (교사 \_\_\_\_\_명, 그 외 \_\_\_\_\_명)

배문5-1(배문1에서 어린이집 원장). 귀하의 경력은 어떠합니까?

-원장 경력 \_\_\_\_년 \_\_\_\_개월

-교사 경력 \_\_\_\_년 \_\_\_\_개월

배문5-2(배문2에서 보육교사). 귀하의 경력은 어떠합니까?

-보육교사 경력 \_\_\_\_년 \_\_\_\_개월

배문 6.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고등학교 졸업
2. 전문대(2~3년) 졸업
3. 대학교(4년제)
4.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7.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보육학
2. 아동(가족)학
3. 아동(사회)복지학
4. 가정(관리)학
5. 유아교육학
6. 교육학
7. 초등교육학
8. 특수교육학
9. 기타(                    )

배문 8.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 세

배문 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4. 설문조사지(전문가)

#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Ⅲ)」의 일환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육아 관련 각 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1., 제2.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설문은 2020년 시점에서 바라본 육아정책의 구성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은 현정부 육아정책의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의 개요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국정과제 개요

보 기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100대 국정과제)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100대 국정과제)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10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10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10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10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100대 국정과제)	13. -일·가정 양립 일상화(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100대 국정과제)	14.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100대 국정과제)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100대 국정과제)	16.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17.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 2. 정책과제 개요

구분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별 계획	정책과제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100대 국정과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0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일·가정 양립 일상화): 4대 복합·혁신과제	4. 육아시간 지원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출생에 대한 사회적책임 확립): 4대 복합·혁신과제	

구분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별 계획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li> <li>-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 지원 강화): 100대 국정과제</li> <li>-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일·가정 양립 일상화): 4대 복합·혁신과제</li> </ul>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 지원 강화): 100대 국정과제</li> <li>-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일·가정 양립 일상화): 4대 복합·혁신과제</li> </ul>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 지원 강화): 100대 국정과제</li> <li>-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일·가정 양립 일상화): 4대 복합·혁신과제</li> </ul> <p>주요내용</p>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지원-수당 조정)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100대 국정과제</li> <li>-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출생에 대한 사회적책임 확립): 4대 복합·혁신과제</li> </ul> <p>주요내용</p>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li> <li>-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한부모가족 자립, 다문화가족 지원, 취약가족 지원): 100대 국정과제</li> <li>-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4대 복합·혁신과제</li> <li>- 포용국가 아동정책(보건복지부)</li> <li>-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100대 국정과제</li> <li>-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교육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세대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 지원 강화): 100대 국정과제</li> </ul>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 I. 육아정책 평가: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문1. 다음은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정부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귀하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시는 성과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못하고 있으면 1점, 매우 잘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하고 있다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ㄴ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ㄴ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ㄴ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ㄴ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문재인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중 실행이 가장 잘 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1-2순위로 응답해주시시오.

문2-1. 가장 중요한 과제 2가지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14.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16.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17.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2-2. 정책 추진과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 2가지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14.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 16.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 17.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2-2-1. 정책 추진과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1. [문2-2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이유: ( )
- 2. [문2-2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이유: ( )

**문2-3. 가장 미흡한 과제 2가지**

-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 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 14.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 16.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 17.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2-3-1. 가장 미흡한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1. [문2-3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이유 ( )
- 2. [문2-3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이유 ( )

문2-3-2. 가장 미흡하다고 선택하신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문2-3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개선방안 ( )
- 2. [문2-3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개선방안 ( )

문3. 다음은 **저출산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19~2020년)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되 었다	잘 모르겠다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4. 육아시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지원-수당 조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3-1.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를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4. 육아시간 지원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지원-수당 조정)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문3-1-1. (성공요인분석) 성과를 보인 과제의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3-1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성공요인 ( )
2. [문3-1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성공요인 ( )

문3-2. 저출산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를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4. 육아시간 지원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지원-수당 조정)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문3-2-1. (실패요인분석) 성과가 미약한 정책이나 과제의 경우 그 이유(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3-2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실패요인 ( )
2. [문3-2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실패요인 ( )

문3-3. 저출산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4. 육아시간 지원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지원-수당 조정)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14.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문3-3-1. (집중필요 과제) 저출산정책에서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3-3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이유 ( )
2. [문3-3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이유 ( )

문4. 다음은 **유아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 포함)** 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해주시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19~2020년)에 대해 평가해주시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육아지원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5. 취학 전 출발선 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7. 양육비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4-1. 유아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 포함)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를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 육아지원의 확대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15. 취학 전 출발선 평등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7. 양육비 부담 완화

문4-1-1. (성공요인분석) 성과를 보인 과제의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4-1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성공요인 ( )
2. [문4-1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성공요인 ( )

4-2. 유아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 포함)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를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 육아지원의 확대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15. 취학 전 출발선 평등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7. 양육비 부담 완화

문4-2-1. (실패요인분석) 성과가 미약한 정책이나 과제의 경우 그 이유(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4-2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실패요인 ( )
2. [문4-2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실패요인 ( )



문4-3. 유아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 포함) 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5.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6.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7. 보육서비스 질 제고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0.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11.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 육아지원의 확대
13.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1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15. 취학 전 출발선 평등
16.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17. 양육비 부담 완화

문4-3-1. (집중필요 과제) 유아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 포함) 정책에서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4-2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이유 ( )
2. [문4-2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이유 ( )

문5. 다음은 정부의 **아동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19~2020년)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4. 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구분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아버지의 양육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아동의 웰빙/행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5-1. 아동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를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4.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아버지의 양육참여
7. 아동의 웰빙/행복

문5-1-1. (성공요인분석) 성과를 보인 과제의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5-1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성공요인 ( )
2. [문5-1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성공요인 ( )

문5-2. 아동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를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4.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아버지의 양육참여
7. 아동의 웰빙/행복

문5-2-1. (실패요인분석) 성과가 미약한 정책이나 과제의 경우 그 이유(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5-2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실패요인 ( )
2. [문5-2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실패요인 ( )

문5-3. 아동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3.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4.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5. 부모의 육아 행복감
6. 아버지의 양육참여
7. 아동의 웰빙/행복

문5-3-1. (집중필요 과제) 아동정책에서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5-3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이유 ( )
2. [문5-3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이유 ( )

## II. 육아정책 평가: 육아정책의 계획-실행-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문6. 귀하는 '육아정책'의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육아정책'의 **계획 수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시된 각 정책과 이를 포괄하는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 전혀 잘 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저출산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유아교육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보육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동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7. 귀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 간의 '육아정책'의 **실행과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시된 각 정책과 이를 포괄하는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 매우 못하고 있으면 1점, 매우 잘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저출산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유아교육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보육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동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 (구체적 정책 설계) 제시된 육아정책(예: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현금지원 확대, 돌봄체계 구축 등)의 주요 계획을 고려할 때, 육아정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육아정책을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정책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9. (정책의제평가) 육아정책의 의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와 문제, 내재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정책을 저출산-유아교육·보육 돌봄-아동정책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	반영하는 편이다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0. (투입요소평가) 결과/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집행체계(예: 예산, 인력/조직 등 거버넌스, 전달체계)**는 적절히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1. (정책집행평가) 육아정책이 의도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산출**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2-16. 정부의 육아정책을 다음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해주세요.

- ▶ 효과성: 목표성취 - (가시적인, 가치있는) 결과가 나타났는가?
- ▶ 효율성: 비용 등 투입 대비 산출 및 대상 설정(targeting)의 적절성
- ▶ 형평성: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가?
- ▶ 적절성: 가치 있는 결과가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즉 전체적인 성과의 정도가 전체 욕구 수준에 어느정도 부합하였는가?
- ▶ 포괄성: 정책의 대상과 내용 설계에 있어 (기존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포괄하여 전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화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인가?
- ▶ 노력: 정책수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노력을 위한 역량이나 노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둬.
- ▶ 대응성: 성취된 정책결과가 해당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주는가. 즉 정책이 수혜자/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는가?

자료: '권기현(2010). '정책분석론' 참조

문12. 정부의 **저출산정책**을 다음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해주세요. 각 요소별로 얼마나 잘 이루어 졌다고 혹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잘 되지 못했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효과성(effect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성(efficienc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형평성(equ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적절성(relev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포괄성(inclu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노력(effor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대응성(respon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추진체계(govern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3.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을 다음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해주시시오. 각 요소별로 얼마나 잘 이루어 졌다고 혹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잘 되지 못했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효과성(effect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성(efficienc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형평성(equ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적절성(relev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포괄성(inclu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노력(effor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대응성(respon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추진체계(govern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4. 정부의 **보육정책**을 다음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해주시시오. 각 요소별로 얼마나 잘 이루어 졌다고 혹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잘 되지 못했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효과성(effect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성(efficienc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형평성(equ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적절성(relev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포괄성(inclu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노력(effor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대응성(respon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추진체계(govern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5. 정부의 **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을 다음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해주시요. 각 요소별로 얼마나 잘 이루어 졌다고 혹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잘 되지 못했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효과성(effect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성(efficienc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형평성(equ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적절성(relev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포괄성(inclu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노력(effor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대응성(respon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추진체계(govern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6. 정부의 **아동정책**을 다음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해주시요. 각 요소별로 얼마나 잘 이루어 졌다고 혹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잘 되지 못했으면 1점, 매우 잘 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잘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되었다
1. 효과성(effect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효율성(efficienc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형평성(equ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적절성(relev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포괄성(inclu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노력(effor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대응성(responsivenes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추진체계(governa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7.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 다음은 2019~2020년 육아정책 개별 과제의 추진과 목표 달성이 궁극적으로 육아정책이 추구하는 위의 목적과 방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가·부모·아동·기관의 4가지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17-1. **국가수준**에서 정부의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이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해주시요.

※ 전혀 못하고 있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1점, 매우 잘하고 있거나 기여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출산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접근성 (access, divers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재정투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육아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삶의 질 전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지표/항목	
국가 수준	출산율	- 출산율 제고
	접근성 (access, diversity)	- 다양한 서비스(교육·보육·돌봄, 종일제-시간제)에의 접근성 - 무상/의무 교육·보육 및 돌봄 체계(교육연한, 시간) 구축
	재정투자 확대	- GDP 대비 ECEC/가족복지 재정 비율 - 아동 1인당 보육·교육·돌봄 예산
	육아환경	- 지역사회 육아환경 조성 - 육아지원 인프라(센터, 공원, 도서관 등)
	삶의 질 전반	- 사회적 격차 완화(계층별, 출산율, 결혼율, 부모취업률, 양육비지출 차이) - Quality of Life(삶의 질, 육아친화문화 등)

문17-2. **부모수준**에서 정부의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이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요.

※ 전혀 못하고 있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1점, 매우 잘하고 있거나 기여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양육비용 부담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서비스의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지표/항목	
부모	양육비용 부담 (affordability, 양육지원체계)	- 양육비용(평균, 편차, 양육비용부담비율) - 공·사 교육·보육·돌봄 비용 부담 - 비용지원체계(서비스-현금 지원 조합 및 선택권) - 보건의료 지원(산전-산후 출산지원, 양육지원) - 포용성(inclusiveness): 취약계층 지원체계 - 다문화, 장애, 한부모/조손 가족 서비스 이용률 및 지원을
	서비스의 질	- 서비스 이용만족도(질, 이용시간, 내용/프로그램 등) - 부모 참여(교사와의 소통, 부모교육 및 참여)
	양육역량 및 가정환경	- 부모 육아휴직 비율 및 급여수준 - 부모역량(양육역량, 육아행복감, 부모 양육시간) - 가정환경의 질(HOME)



문17-3. **아동수준**에서 정부의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이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전혀 못하고 있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1점, 매우 잘하고 있거나 기여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형평성(equ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 분		지표/항목
아동	형평성(equity)	- 취학전 출발선 평등(학습준비도)
	웰빙 및 발달성과 (learning or developmental outcome)	- 아동웰빙(행복감, 생활시간조사: 보육·교육·놀이·수면·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등) - 아동사망률/유병률,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문17-4. **기관수준**에서 정부의 육아정책 수립과 추진이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 전혀 못하고 있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1점, 매우 잘하고 있거나 기여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기여하지 못함			보통			매우 기여함
1.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공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 분		지표/항목
기관	서비스의 질 (quality, pedagogy)	- 국가수준 공통의 커리큘럼 - 평가/모니터링 체계, 평가/모니터링 참여율 - 교직원 자격, 교육(연수), 급여, 복지(근로시간, 이직률, 근속률 등) - 과정적 질: 교직원 전문성(역량/효능감, 페다고지, 상호작용) - 구조적 질: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크기, 아동1인당 면적 - 아동학대, 안전사고 발생건수/비율
	공공성	- 인프라(다양한 서비스인프라, 국공립기관인프라(이용률)) - 직장어린이집 설치 포함 - 기관지원체계(유-보, 공-사립 격차 완화)

문18. 육아정책의 조정과 변화를 위해 다음 중 어떠한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책내용 점검
2. 전달체계 변화
3. 거버넌스 점검
4. 목적/목표 설정
5. 수요자/대중과의 소통
6. 문화형성
7. 기타 ( )

배문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하십니까? 가장 주되게 하시는 일을 응답해 주십시오.

1. 대학 교수
2.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공무원
4. 현장전문가(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종사자)
5. 기타 전문가( )

배문 2.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사회복지
2. 정책/행정
3. 유아교육/교육
4. 보육
5. 가족
6. 아동
7. 경제
8. 기타( )

배문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1. 만 ( )세

배문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5. 면담조사지(영유아 부모)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면담조사 질문지(영유아 부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와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일 시 : 2020년 \_\_월 \_\_일

장 소 :

#### I.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성 별	①남자 ②여자	2. 연 령	만 _____ 세
3. 최종학력	①고등학교 졸업 ②대학교 졸업 ③대학원 졸업 이상		
4. 취업상태	①미취업 ②취업	5. 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6. 자녀 성별	①남아 ②여아	7. 자녀 연 령	만 _____ 세
7. 취원 기관 (어린이집/유치원 유형)	① 현재 _____ ② 과거 _____		
8.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기간	① 어린이집 __년 __개월 ② 유치원 __년 __개월 ③ 총 __년 __개월		
9. 자녀 정보	①첫째(성별: _____ 연 령: _____) ②둘째(성별: _____ 연 령: _____) ③셋째(성별: _____ 연 령: _____) ④넷째(성별: _____ 연 령: _____)		

## II. 주요 면담 내용

1.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또는 가정양육 시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격차가 있다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3.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이 기존 12시간(7:30~19:30)에서 7시간(9:00~16:00)으로 변경되었으나, 기본보육시간 이외에 실시되는 연장보육(16:00~19:30)은 자격심사를 통해 이용가능하고, 시간당 1,000~3,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양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보육·교육 지원 뿐 아니라 가정양육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6.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산후지원도우미 등 개별돌봄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정책이 육아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8.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휴원하였을 때 긴급돌봄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러한 긴급돌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9.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0. 영유아의 육아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6. 면담조사지(초등학생 부모)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면담조사 질문지(초등학생 부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와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일 시 : 2020년 \_\_월 \_\_일

장 소 :

### I.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성 별	<input type="checkbox"/> ①남자 <input type="checkbox"/> ②여자	2. 연 령	만_____세	
3.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②대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③대학원 졸업 이상			
4.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①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②취업	5. 지역	_____시(도) _____구(군)	
초 등 학 생 의 부모	6. 자녀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남아 <input type="checkbox"/> ②여아	7. 자녀 연령	만_____세
	8. 학교	<input type="checkbox"/> ①공립 <input type="checkbox"/> ②사립 초등학교 _____학년		
	9. 이용 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①초등돌봄교실 <input type="checkbox"/> ②방과후학교 <input type="checkbox"/> ③지역아동센터 <input type="checkbox"/> ④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input type="checkbox"/> ⑤공공아이돌보미 <input type="checkbox"/> ⑥기타_____		
10. 자녀 정보	①첫째(성별: _____연령: _____) ②둘째(성별: _____연령: _____) ③셋째(성별: _____연령: _____) ④넷째(성별: _____연령: _____)			

## II. 주요 면담 내용

1.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와 비교하여 일상 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또는 원장과 소통할 때와 초등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과 소통할 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초등학교 급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문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십니까? 이용한다면 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문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자녀가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포함)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한다면 자녀가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문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6. 자녀가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한다면 자녀가 이용하는 마을돌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문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하지 않는다면 마을돌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7.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가 휴교하였을 때 긴급돌봄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러한 긴급돌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초등자녀 돌봄 시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9. 초등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체감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초등 자녀의 돌봄을 위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7. 면담조사지(유치원 원장)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면담조사 질문지(유치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와 유아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 원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일 시 : 2020년 \_\_\_월 \_\_\_일

장 소 :

### I.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기관명	_____	2. 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3. 설립유형	①공립 단설    ②공립초등학교 병설    ③사립 법인 ④사립 사인    ⑤기타_____		
4. 기관 규모	총 원아 수 현원 _____명, 정원 _____명 총 교직원 수 _____명 (교사 _____명, 그 외 _____명)		
5. 원장 경력	_____년 _____개월	6.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7. 연령	만_____세	8. 성별	①여    ②남
9. 최종학력 및 전공	①대학교 졸업(전공: _____) ②대학원 졸업 이상(학부전공: _____, 대학원전공 _____)		

## Ⅱ. 주요 면담 내용

1.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매입형 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공영형 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6.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유보통합 및 유보격차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유아교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4.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5. 유치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8. 면담조사지(유치원 교사)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면담조사 질문지(유치원 교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와 유아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일 시 : 2020년 \_\_월 \_\_일

장 소 :

### I.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기관명	_____	2. 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3. 설립유형	①공립 단설    ②공립초등학교병설    ③사립 법인 ④사립 사인    ⑤기타_____		
4. 기관 규모	총 원아 수 현원 _____명, 정원 _____명 총 교직원 수 _____명 (교사 _____명, 그 외 _____명)		
5. 직위	①일반교사 ②주임교사 ③원감	6. 담당 학급 연령	만 _____세
7. 유치원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8. 보육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9. 연령	만 _____세	10. 성별	①여    ②남
11. 최종학력 및 전공	①대학교 졸업(전공: _____) ②대학원 졸업 이상(학부전공: _____, 대학원전공 _____)		

## Ⅱ. 주요 면담 내용

1.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유치원 보조 인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국공립유치원 행정지원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유보통합 및 유보격차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8.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유아교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9.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9. 면담조사지(어린이집 원장)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면담조사 질문지(어린이집 원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와 보육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일 시 : 2020년 \_\_월 \_\_일

장 소 :

### I.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기관명	_____	2. 지역	_____시(도) _____구(군)
3. 설립유형	①국공립어린이집    ②민간어린이집    ③가정어린이집 ④직장어린이집    ⑤기타_____		
4. 기관 규모	총 원아 수 현원 _____명, 정원 _____명 총 교직원 수 _____명 (교사 _____명, 그 외 _____명)		
5. 원장 경력	_____년 _____개월	6.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7. 연령	만 _____세	8. 성별	①여    ②남
9. 최종학력 및 전공	①고등학교 졸업    ②대학교 졸업(전공: _____) ③대학원 졸업 이상(학부전공: _____, 대학원전공 _____)		

## Ⅱ. 주요 면담 내용

1.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어린이집 내 인력 운영(비담임교사,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공공성, 회계투명성, 보육의 질 제고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현 정부는 유보격차 완화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격차가 실제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화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7. 2019년 표준보육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9. 현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보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4.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10. 면담조사지(어린이집 보육교사)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면담조사 질문지(어린이집 보육교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와 보육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일 시 : 2020년 \_\_월 \_\_일

장 소 :

#### I.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기관명	_____	2. 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3. 설립유형	①국공립어린이집    ②민간어린이집    ③가정어린이집 ④직장어린이집    ⑤기타_____		
4. 기관 규모	총 원아 수 현원 _____명, 정원 _____명 총 교직원 수 _____명 (교사 _____명, 그 외 _____명)		
5. 직위	①일반교사    ②주임교사 ③원감	6. 담당 학급 연령	만 _____세
7. 보육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8. 유치원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9. 연령	만 _____세	10. 성별	①여    ②남
11. 최종학력 및 전공	①고등학교 졸업    ②대학교 졸업(전공: _____) ③대학원 졸업 이상(학부전공: _____, 대학원전공 _____)		

## Ⅱ. 주요 면담 내용

1.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현 정부는 유보격차 완화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격차가 실제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6. 현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7.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보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9.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11. 면담조사지(초등돌봄 종사자)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면담조사 질문지(초등돌봄 종사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성과평가와 초등돌봄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경험하고 느끼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일 시 : 2020년 \_\_월 \_\_일

장 소 :

#### I. 응답자의 일반 특성

1. 학교명	_____	2. 지역	_____시(도) _____구(군)
3.초등돌봄 종사자 구분	①초등돌봄전담사 ②지역아동센터장 ③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④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선생님 ⑥ 기타		
4. 초등돌봄 종사자 경력	_____년 _____개월	5. 고용형태	①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계약직
7. 연령	만_____세	8. 성별	①여 ②남
9. 최종학력 및 전공	①고등학교 졸업 ②대학교 졸업(전공:_____) ③대학원 졸업 이상(학부전공:_____, 대학원전공_____)		

## Ⅱ. 주요 면담 내용

1. 현 정부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초등학생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학교돌봄과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학년과 고학년 학년별 중점 분담, 학교와 마을 유형의 특성화 분담 등)
4.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후돌봄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오후돌봄 뿐 아니라 아침돌봄과 저녁돌봄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오후돌봄과 아침돌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초등돌봄의 인력 관리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 현 정부의 초등돌봄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7.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초등돌봄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현 정부의 초등돌봄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9. 현 정부의 초등돌봄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초등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현 정부의 초등돌봄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12. 설문조사 부표: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전문가 의견조사)

〈부록 표 1〉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2.0	7.0	22.0	30.0	27.0	11.0	1.0	100.0 (100)	4.1
분야									
유아교육	2.9	0.0	28.6	25.7	34.3	8.6	0.0	100.0 ( 35)	4.1
보육	2.5	15.0	12.5	32.5	20.0	15.0	2.5	100.0 ( 40)	4.1
기타	0.0	4.0	28.0	32.0	28.0	8.0	0.0	100.0 ( 25)	4.1
$\chi^2(df)/F$				14.072(12)					0.0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5.1	30.8	20.5	30.8	10.3	0.0	100.0 ( 39)	4.0
보육/가족/아동	2.3	11.6	9.3	37.2	25.6	11.6	2.3	100.0 ( 43)	4.2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33.3	33.3	22.2	11.1	0.0	100.0 ( 18)	4.1
$\chi^2(df)/F$				12.513(12)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2〉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2)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6.0	12.0	21.0	32.0	21.0	8.0	0.0	100.0 (100)	3.7
분야									
유아교육	8.6	8.6	25.7	22.9	28.6	5.7	0.0	100.0 ( 35)	3.7
보육	5.0	12.5	15.0	35.0	22.5	10.0	0.0	100.0 ( 40)	3.9
기타	4.0	16.0	24.0	40.0	8.0	8.0	0.0	100.0 ( 25)	3.6
$\chi^2(df)/F$				7.432(10)					0.5
전공									
유아교육/교육	5.1	15.4	20.5	25.6	23.1	10.3	0.0	100.0 ( 39)	3.8
보육/가족/아동	7.0	11.6	20.9	30.2	23.3	7.0	0.0	100.0 ( 43)	3.7
사회복지/행정/경제	5.6	5.6	22.2	50.0	11.1	5.6	0.0	100.0 ( 18)	3.7
$\chi^2(df)/F$				4.960(10)					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3〉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3)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2.0	10.0	20.0	36.0	24.0	5.0	3.0	100.0 (100)	4.0
분야									
유아교육	2.9	5.7	25.7	31.4	31.4	2.9	0.0	100.0 ( 35)	3.9
보육	0.0	7.5	20.0	32.5	27.5	7.5	5.0	100.0 ( 40)	4.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기타	4.0	20.0	12.0	48.0	8.0	4.0	4.0	100.0 ( 25)	3.6	
$\chi^2(df)/F$	13.746(12)									1.8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10.3	20.5	30.8	28.2	5.1	2.6	100.0 ( 39)	4.0	
보육/가족/아동	0.0	7.0	23.3	34.9	27.9	4.7	2.3	100.0 ( 43)	4.1	
사회복지/행정/경제	5.6	16.7	11.1	50.0	5.6	5.6	5.6	100.0 ( 18)	3.7	
$\chi^2(df)/F$	9.108(12)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4>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4)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5.0	21.0	24.0	31.0	16.0	2.0	1.0	100.0 (100)	3.4	
분야										
유아교육	2.9	17.1	25.7	34.3	17.1	2.9	0.0	100.0 ( 35)	3.5	
보육	7.5	17.5	25.0	30.0	15.0	2.5	2.5	100.0 ( 40)	3.5	
기타	4.0	32.0	20.0	28.0	16.0	0.0	0.0	100.0 ( 25)	3.2	
$\chi^2(df)/F$	5.459(12)									0.6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20.5	25.6	28.2	17.9	5.1	0.0	100.0 ( 39)	3.5	
보육/가족/아동	7.0	18.6	23.3	37.2	11.6	0.0	2.3	100.0 ( 43)	3.4	
사회복지/행정/경제	5.6	27.8	22.2	22.2	22.2	0.0	0.0	100.0 ( 18)	3.3	
$\chi^2(df)/F$	7.979(12)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5>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5)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5.0	6.0	18.0	26.0	29.0	15.0	1.0	100.0 (100)	4.2	
분야										
유아교육	2.9	0.0	20.0	20.0	31.4	25.7	0.0	100.0 ( 35)	4.5	
보육	7.5	5.0	15.0	30.0	32.5	7.5	2.5	100.0 ( 40)	4.1	
기타	4.0	16.0	20.0	28.0	20.0	12.0	0.0	100.0 ( 25)	3.8	
$\chi^2(df)/F$	15.074(12)									2.4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2.6	10.3	33.3	33.3	17.9	0.0	100.0 ( 39)	4.5	
보육/가족/아동	7.0	4.7	25.6	18.6	32.6	9.3	2.3	100.0 ( 43)	4.0	
사회복지/행정/경제	5.6	16.7	16.7	27.8	11.1	22.2	0.0	100.0 ( 18)	3.9	
$\chi^2(df)/F$	15.079(12)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6〉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6)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5.0	12.0	23.0	36.0	17.0	6.0	1.0	100.0 (100)	3.7
분야									
유아교육	0.0	2.9	20.0	40.0	28.6	8.6	0.0	100.0 ( 35)	4.2
보육	5.0	17.5	20.0	35.0	15.0	5.0	2.5	100.0 ( 40)	3.6
기타	12.0	16.0	32.0	32.0	4.0	4.0	0.0	100.0 ( 25)	3.1
$\chi^2(df)/F$				16.887(12)					6.0**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7.7	15.4	38.5	33.3	5.1	0.0	100.0 ( 39)	4.1
보육/가족/아동	4.7	16.3	25.6	37.2	7.0	7.0	2.3	100.0 ( 43)	3.6
사회복지/행정/경제	16.7	11.1	33.3	27.8	5.6	5.6	0.0	100.0 ( 18)	3.1
$\chi^2(df)/F$				21.994(12)*					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7〉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7)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4.0	8.0	20.0	41.0	24.0	3.0	0.0	100.0 (100)	3.8
분야									
유아교육	2.9	5.7	8.6	57.1	22.9	2.9	0.0	100.0 ( 35)	4.0
보육	5.0	10.0	22.5	30.0	30.0	2.5	0.0	100.0 ( 40)	3.8
기타	4.0	8.0	32.0	36.0	16.0	4.0	0.0	100.0 ( 25)	3.6
$\chi^2(df)/F$				9.816(10)					0.8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5.1	17.9	48.7	23.1	2.6	0.0	100.0 ( 39)	3.9
보육/가족/아동	4.7	11.6	23.3	37.2	20.9	2.3	0.0	100.0 ( 43)	3.7
사회복지/행정/경제	5.6	5.6	16.7	33.3	33.3	5.6	0.0	100.0 ( 18)	4.0
$\chi^2(df)/F$				4.303(10)					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8〉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8)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1.0	9.0	17.0	34.0	28.0	10.0	1.0	100.0 (100)	4.1
분야									
유아교육	0.0	2.9	20.0	34.3	25.7	14.3	2.9	100.0 ( 35)	4.4
보육	2.5	12.5	10.0	30.0	37.5	7.5	0.0	100.0 ( 40)	4.1
기타	0.0	12.0	24.0	40.0	16.0	8.0	0.0	100.0 ( 25)	3.8
$\chi^2(df)/F$				11.765(12)					1.5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17.9	35.9	23.1	17.9	2.6	100.0 ( 39)	4.4
보육/가족/아동	2.3	11.6	18.6	27.9	34.9	4.7	0.0	100.0 ( 43)	4.0
사회복지/행정/경제	0.0	16.7	11.1	44.4	22.2	5.6	0.0	100.0 ( 18)	3.9
$\chi^2(df)/F$				13.061(12)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9〉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9)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1.0	8.0	23.0	35.0	24.0	7.0	2.0	100.0 (100)	4.0
분야									
유아교육	0.0	8.6	25.7	31.4	25.7	8.6	0.0	100.0 ( 35)	4.0
보육	2.5	7.5	17.5	40.0	22.5	5.0	5.0	100.0 ( 40)	4.1
기타	0.0	8.0	28.0	32.0	24.0	8.0	0.0	100.0 ( 25)	4.0
$\chi^2(df)/F$				6.382(12)					0.1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28.2	30.8	25.6	10.3	2.6	100.0 ( 39)	4.2
보육/가족/아동	2.3	11.6	18.6	39.5	20.9	4.7	2.3	100.0 ( 43)	3.9
사회복지/행정/경제	0.0	11.1	22.2	33.3	27.8	5.6	0.0	100.0 ( 18)	3.9
$\chi^2(df)/F$				6.731(12)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0〉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0)(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1.0	5.0	10.0	24.0	39.0	17.0	4.0	100.0 (100)	4.6
분야									
유아교육	0.0	8.6	8.6	14.3	48.6	20.0	0.0	100.0 ( 35)	4.6
보육	2.5	2.5	2.5	32.5	32.5	17.5	10.0	100.0 ( 40)	4.8
기타	0.0	4.0	24.0	24.0	36.0	12.0	0.0	100.0 ( 25)	4.3
$\chi^2(df)/F$				20.617(12)					1.6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5.1	12.8	12.8	46.2	17.9	5.1	100.0 ( 39)	4.7
보육/가족/아동	2.3	4.7	2.3	34.9	34.9	16.3	4.7	100.0 ( 43)	4.6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22.2	22.2	33.3	16.7	0.0	100.0 ( 18)	4.3
$\chi^2(df)/F$				12.829(12)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1>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1)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1.0	13.0	22.0	29.0	29.0	3.0	3.0	100.0 (100)	3.9
분야									
유아교육	0.0	2.9	20.0	28.6	40.0	2.9	5.7	100.0 ( 35)	4.4
보육	2.5	12.5	22.5	30.0	25.0	5.0	2.5	100.0 ( 40)	3.9
기타	0.0	28.0	24.0	28.0	20.0	0.0	0.0	100.0 ( 25)	3.4
$\chi^2(df)/F$				14.051(12)					5.0**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20.5	25.6	43.6	2.6	5.1	100.0 ( 39)	4.4
보육/가족/아동	2.3	16.3	20.9	30.2	23.3	4.7	2.3	100.0 ( 43)	3.8
사회복지/행정/경제	0.0	27.8	27.8	33.3	11.1	0.0	0.0	100.0 ( 18)	3.3
$\chi^2(df)/F$				16.085(12)					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1$ .**<부록 표 12>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2)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4.0	18.0	25.0	28.0	20.0	4.0	1.0	100.0 (100)	3.6
분야									
유아교육	0.0	17.1	20.0	34.3	22.9	2.9	2.9	100.0 ( 35)	3.8
보육	10.0	10.0	25.0	27.5	20.0	7.5	0.0	100.0 ( 40)	3.6
기타	0.0	32.0	32.0	20.0	16.0	0.0	0.0	100.0 ( 25)	3.2
$\chi^2(df)/F$				16.607(12)					1.8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5.4	28.2	23.1	25.6	5.1	2.6	100.0 ( 39)	3.8
보육/가족/아동	9.3	18.6	16.3	34.9	16.3	4.7	0.0	100.0 ( 43)	3.4
사회복지/행정/경제	0.0	22.2	38.9	22.2	16.7	0.0	0.0	100.0 ( 18)	3.3
$\chi^2(df)/F$				13.247(12)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3>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3)일·가정 양립 일상화**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2.0	12.0	27.0	29.0	22.0	6.0	2.0	100.0 (100)	3.8
분야									
유아교육	0.0	8.6	28.6	40.0	20.0	2.9	0.0	100.0 ( 35)	3.8
보육	5.0	7.5	25.0	32.5	17.5	10.0	2.5	100.0 ( 40)	3.9
기타	0.0	24.0	28.0	8.0	32.0	4.0	4.0	100.0 ( 25)	3.8
$\chi^2(df)/F$				17.177(12)					0.1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2.8	28.2	25.6	23.1	10.3	0.0	100.0 ( 39)	3.9
보육/가족/아동	4.7	9.3	25.6	37.2	16.3	4.7	2.3	100.0 ( 43)	3.7
사회복지/행정/경제	0.0	16.7	27.8	16.7	33.3	0.0	5.6	100.0 ( 18)	3.9
$\chi^2(df)/F$				11.452(12)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4〉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4)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4.0	19.0	30.0	29.0	16.0	2.0	0.0	100.0(100)	3.4
분야									
유아교육	0.0	8.6	31.4	28.6	28.6	2.9	0.0	100.0( 35)	3.9
보육	5.0	20.0	22.5	42.5	7.5	2.5	0.0	100.0( 40)	3.4
기타	8.0	32.0	40.0	8.0	12.0	0.0	0.0	100.0( 25)	2.8
$\chi^2(df)/F$				20.865(10)*					6.4**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5.4	30.8	25.6	25.6	2.6	0.0	100.0( 39)	3.7
보육/가족/아동	4.7	20.9	25.6	34.9	11.6	2.3	0.0	100.0( 43)	3.3
사회복지/행정/경제	11.1	22.2	38.9	22.2	5.6	0.0	0.0	100.0( 18)	2.9
$\chi^2(df)/F$				10.495(10)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15〉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5)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3.0	12.0	19.0	30.0	25.0	9.0	2.0	100.0(100)	4.0
분야									
유아교육	0.0	11.4	20.0	22.9	31.4	14.3	0.0	100.0( 35)	4.2
보육	5.0	12.5	7.5	40.0	22.5	7.5	5.0	100.0( 40)	4.1
기타	4.0	12.0	36.0	24.0	20.0	4.0	0.0	100.0( 25)	3.6
$\chi^2(df)/F$				16.328(12)					1.7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2.8	23.1	12.8	33.3	15.4	2.6	100.0( 39)	4.2
보육/가족/아동	4.7	14.0	11.6	41.9	20.9	4.7	2.3	100.0( 43)	3.8
사회복지/행정/경제	5.6	5.6	27.8	38.9	16.7	5.6	0.0	100.0( 18)	3.7
$\chi^2(df)/F$				16.583(12)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6〉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6)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3.0	5.0	21.0	27.0	34.0	8.0	2.0	100.0 (100)	4.2
분야									
유아교육	2.9	2.9	25.7	22.9	31.4	14.3	0.0	100.0 ( 35)	4.2
보육	5.0	5.0	10.0	30.0	40.0	5.0	5.0	100.0 ( 40)	4.3
기타	0.0	8.0	32.0	28.0	28.0	4.0	0.0	100.0 ( 25)	3.9
$\chi^2(df)/F$				12.973(12)					0.9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30.8	23.1	28.2	12.8	2.6	100.0 ( 39)	4.3
보육/가족/아동	7.0	7.0	11.6	27.9	39.5	4.7	2.3	100.0 ( 43)	4.1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22.2	33.3	33.3	5.6	0.0	100.0 ( 18)	4.1
$\chi^2(df)/F$				11.963(12)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7〉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17)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하고 있다	계(수)	평균
전체	1.0	10.0	14.0	28.0	30.0	12.0	5.0	100.0(100)	4.3
분야									
유아교육	0.0	8.6	5.7	28.6	25.7	22.9	8.6	100.0( 35)	4.7
보육	2.5	5.0	20.0	32.5	25.0	10.0	5.0	100.0( 40)	4.2
기타	0.0	20.0	16.0	20.0	44.0	0.0	0.0	100.0( 25)	3.9
$\chi^2(df)/F$				19.648(12)					3.4*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7.7	5.1	28.2	30.8	20.5	7.7	100.0( 39)	4.7
보육/가족/아동	2.3	9.3	20.9	32.6	20.9	9.3	4.7	100.0( 43)	4.1
사회복지/행정/경제	0.0	16.7	16.7	16.7	50.0	0.0	0.0	100.0( 18)	4.0
$\chi^2(df)/F$				17.097(12)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부록 13. 설문조사 부표: 저출산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부모 설문조사)

〈부록 표 18〉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6.2	27.6	30.9	8.3	2.8	4.2	100.0(1,731)	2.3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23.2	24.7	35.2	9.9	3.1	3.9	100.0( 384)	2.4
유아부모	25.4	28.6	30.7	8.0	2.4	4.8	100.0( 784)	2.3
영아부모	29.5	28.1	28.2	7.6	3.0	3.6	100.0( 563)	2.2
$\chi^2(df)/F$				10.924(8)				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7.4	26.5	31.9	6.2	1.8	6.2	100.0( 113)	2.2
251~350만원	26.4	31.8	25.2	8.7	2.1	5.8	100.0( 242)	2.2
351~500만원	25.9	22.5	37.5	8.2	1.0	4.9	100.0( 510)	2.3
501~600만원	24.4	28.1	30.2	7.8	4.7	4.7	100.0( 295)	2.4
601만원 이상	27.1	30.1	27.7	8.9	3.9	2.3	100.0( 571)	2.3
$\chi^2(df)/F$				34.030(16)**				0.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19〉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2	28.7	30.2	14.4	3.7	2.7	100.0(1,731)	2.5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9.5	27.4	40.7	5.3	2.7	4.4	100.0( 113)	2.4
251~350만원	23.1	29.8	28.9	10.3	2.1	5.8	100.0( 242)	2.3
351~500만원	22.9	28.8	30.2	12.7	2.4	2.9	100.0( 510)	2.4
501~600만원	16.6	29.8	30.5	16.6	4.4	2.0	100.0( 295)	2.6
601만원 이상	18.6	27.8	28.5	18.4	5.4	1.2	100.0( 571)	2.6
$\chi^2(df)/F$				37.681(16)**				5.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9	30.2	29.1	10.1	2.1	3.7	100.0( 189)	2.3
대졸 이상	19.6	28.5	30.4	15.0	3.9	2.6	100.0(1,542)	2.5
$\chi^2(df)/t$				6.813(4)				-2.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20>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7.9	28.0	30.8	15.9	3.9	3.4	100.0(1,731)	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5	26.5	29.6	18.4	4.5	2.6	100.0(1,050)	2.6
외벌이	17.1	30.4	32.6	12.2	2.8	4.9	100.0( 632)	2.5
해당없음	16.3	30.6	32.7	12.2	6.1	2.0	100.0( 49)	2.6
$\chi^2(df)/F$				17.016(8)*				2.3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1.2	26.5	34.5	8.8	2.7	6.2	100.0( 113)	2.4
251~350만원	18.2	32.2	29.3	11.2	3.7	5.4	100.0( 242)	2.5
351~500만원	20.4	29.0	30.0	14.7	2.5	3.3	100.0( 510)	2.5
501~600만원	14.9	27.8	32.2	16.6	5.8	2.7	100.0( 295)	2.7
601만원 이상	16.5	25.7	30.6	20.1	4.6	2.5	100.0( 571)	2.7
$\chi^2(df)/F$				28.312(16)*				4.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5	24.9	29.6	13.2	2.6	3.2	100.0( 189)	2.4
대졸 이상	16.9	28.4	30.9	16.3	4.1	3.4	100.0(1,542)	2.6
$\chi^2(df)/t$				11.344(4)*				-2.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 표 21>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육아시간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9.1	31.5	30.0	12.8	3.5	3.0	100.0(1,731)	2.5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8.5	27.3	34.1	13.8	3.4	2.9	100.0( 384)	2.5
유아부모	19.8	32.9	30.1	10.2	4.0	3.1	100.0( 784)	2.4
영아부모	18.7	32.5	27.2	15.8	2.8	3.0	100.0( 563)	2.5
$\chi^2(df)/F$				16.321(8)*				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1	31.7	27.0	14.9	4.3	2.0	100.0(1,050)	2.5
외벌이	17.7	31.3	34.5	9.8	1.7	4.9	100.0( 632)	2.4
해당없음	16.3	30.6	36.7	8.2	8.2	0.0	100.0( 49)	2.6
$\chi^2(df)/F$				28.371(8)***				1.1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3.0	30.1	31.0	6.2	3.5	6.2	100.0( 113)	2.3
251~350만원	21.5	31.8	32.6	9.5	0.4	4.1	100.0( 242)	2.3
351~500만원	18.6	31.2	33.1	12.2	2.0	2.9	100.0( 510)	2.5
501~600만원	17.3	30.8	29.2	15.6	4.1	3.1	100.0( 295)	2.6
601만원 이상	18.7	32.4	26.4	14.7	5.8	1.9	100.0( 571)	2.6
$\chi^2(df)/F$				35.610(16)**				3.0*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5	31.2	28.6	10.1	0.5	3.2	100.0 ( 189)	2.2
대졸 이상	18.2	31.6	30.2	13.2	3.8	3.0	100.0 (1,542)	2.5
$\chi^2(df)/t$				12.697(4)*				-3.2**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22>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2	23.0	28.6	19.2	6.5	2.4	100.0(1,731)	2.7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6.5	24.8	31.0	9.7	2.7	5.3	100.0( 113)	2.3
251~350만원	27.3	26.0	23.6	14.0	4.1	5.0	100.0( 242)	2.4
351~500만원	20.6	21.6	30.8	18.4	6.5	2.2	100.0( 510)	2.7
501~600만원	18.0	23.7	28.5	19.7	7.5	2.7	100.0( 295)	2.7
601만원 이상	16.8	22.2	28.4	23.8	7.9	0.9	100.0( 571)	2.8
$\chi^2(df)/F$				39.237(16)**				8.4***
최종학력								
고졸 이하	30.2	22.8	29.1	12.2	3.2	2.6	100.0( 189)	2.3
대졸 이상	19.0	23.0	28.5	20.1	6.9	2.4	100.0(1,542)	2.7
$\chi^2(df)/t$				19.592(4)***				-4.2***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부록 표 23>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부모의 노동권 보장**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9.4	27.7	35.0	11.7	2.1	4.2	100.0 (1,731)	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9	25.8	37.0	13.3	2.6	3.4	100.0 (1,050)	2.6
외벌이	21.0	30.9	32.0	9.5	0.9	5.7	100.0 ( 632)	2.3
해당없음	28.6	26.5	30.6	4.1	8.2	2.0	100.0 ( 49)	2.4
$\chi^2(df)/F$				31.447(8)***				8.1***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2.1	32.7	30.1	5.3	2.7	7.1	100.0 ( 113)	2.3
251~350만원	26.9	27.7	31.8	6.2	1.7	5.8	100.0 ( 242)	2.2
351~500만원	19.2	29.0	34.1	11.6	1.2	4.9	100.0 ( 510)	2.4
501~600만원	18.0	25.8	35.3	14.6	2.7	3.7	100.0 ( 295)	2.6
601만원 이상	16.5	26.4	37.8	13.8	2.8	2.6	100.0 ( 571)	2.6
$\chi^2(df)/F$				34.020(16)**				6.7***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최종학력								
고졸 이하	28.6	24.9	32.8	7.9	0.0	5.8	100.0 ( 189)	2.2
대졸 이상	18.2	28.0	35.2	12.1	2.4	4.0	100.0 (1,542)	2.5
$\chi^2(df)/t$				17.468(4)**				-3.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 <부록 표 24>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부모의 육아권 보장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2	29.8	32.4	11.6	2.7	3.4	100.0(1,731)	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9	29.2	31.8	13.0	3.3	2.8	100.0(1,050)	2.5
외벌이	19.9	30.9	33.7	9.8	1.3	4.4	100.0( 632)	2.4
해당없음	30.6	26.5	26.5	6.1	8.2	2.0	100.0( 49)	2.3
$\chi^2(df)/F$				20.375(8)**				2.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3.0	33.6	30.1	4.4	3.5	5.3	100.0( 113)	2.3
251~350만원	23.6	31.4	30.6	6.2	2.5	5.8	100.0( 242)	2.3
351~500만원	20.8	27.1	33.9	13.3	1.0	3.9	100.0( 510)	2.4
501~600만원	19.7	29.5	30.2	14.9	3.1	2.7	100.0( 295)	2.5
601만원 이상	18.0	30.8	33.3	12.1	4.0	1.8	100.0( 571)	2.5
$\chi^2(df)/F$				31.839(16)*				3.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8.6	26.5	32.8	6.9	1.6	3.7	100.0( 189)	2.2
대졸 이상	19.2	30.2	32.3	12.2	2.9	3.3	100.0(1,542)	2.5
$\chi^2(df)/t$				13.235(4)*				-3.0**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부록 표 25>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7.4	12.7	32.6	32.9	12.9	1.6	100.0 (1,731)	3.3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9.4	16.4	29.4	32.6	9.9	2.3	100.0 ( 384)	3.2
유아부모	7.0	11.4	34.6	32.0	13.8	1.3	100.0 ( 784)	3.3
영아부모	6.6	11.9	32.0	34.3	13.9	1.4	100.0 ( 563)	3.4
$\chi^2(df)/F$				14.570(8)				4.2*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8	16.8	38.9	22.1	8.8	4.4	100.0 ( 113)	3.1
251~350만원	7.9	16.5	31.4	27.7	13.2	3.3	100.0 ( 242)	3.2
351~500만원	9.0	13.3	34.7	28.4	13.3	1.2	100.0 ( 510)	3.2
501~600만원	5.4	10.8	31.5	37.3	14.2	0.7	100.0 ( 295)	3.4
601만원 이상	6.5	10.5	30.5	38.9	12.6	1.1	100.0 ( 571)	3.4
$\chi^2(df)/F$				33.961(16)**				4.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4	15.3	34.4	25.4	6.3	2.1	100.0 ( 189)	2.9
대졸 이상	6.3	12.3	32.4	33.8	13.7	1.5	100.0 (1,542)	3.4
$\chi^2(df)/t$				35.607(4)***				-5.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26〉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출산·양육 세제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1.8	23.0	37.7	19.5	4.6	3.5	100.0 (1,731)	2.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1.5	28.3	37.2	15.0	2.7	5.3	100.0 ( 113)	2.7
251~350만원	11.6	28.1	35.5	14.0	4.5	6.2	100.0 ( 242)	2.7
351~500만원	13.5	20.8	38.8	20.4	3.1	3.3	100.0 ( 510)	2.8
501~600만원	11.5	18.6	37.6	23.4	5.8	3.1	100.0 ( 295)	2.9
601만원 이상	10.5	24.0	37.8	19.8	5.6	2.3	100.0 ( 571)	2.9
$\chi^2(df)/F$				23.228(16)				2.4*
연령								
20대	10.4	25.4	37.3	19.4	4.5	3.0	100.0 ( 67)	2.8
30대	12.5	22.3	37.0	19.7	4.7	3.8	100.0 (1,119)	2.8
40대 이상	10.5	24.2	39.3	18.9	4.2	2.9	100.0 ( 545)	2.8
$\chi^2(df)/F$				3.025(8)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2	21.7	31.2	16.4	4.2	5.3	100.0 ( 189)	2.6
대졸 이상	10.6	23.2	38.5	19.8	4.6	3.2	100.0 (1,542)	2.8
$\chi^2(df)/t$				19.703(4)***				-2.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27>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0	19.1	38.9	23.8	5.3	2.9	100.0 (1,731)	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9.8	18.9	38.5	25.0	5.3	2.5	100.0 (1,050)	3.0
외벌이	9.8	20.1	39.2	22.6	4.4	3.8	100.0 ( 632)	2.9
해당없음	16.3	10.2	44.9	12.2	14.3	2.0	100.0 ( 49)	3.0
$\chi^2(df)/F$				16.966(8)*				0.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9.7	23.0	40.7	16.8	5.3	4.4	100.0 ( 113)	2.8
251~350만원	12.4	22.7	38.0	15.3	5.0	6.6	100.0 ( 242)	2.8
351~500만원	9.8	18.0	40.2	25.1	5.1	1.8	100.0 ( 510)	3.0
501~600만원	8.8	15.6	39.3	27.5	6.8	2.0	100.0 ( 295)	3.1
601만원 이상	9.8	19.4	37.7	25.7	4.7	2.6	100.0 ( 571)	3.0
$\chi^2(df)/F$				21.475(16)				3.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4	20.1	33.3	20.6	5.8	3.7	100.0( 189)	2.8
대졸 이상	9.2	18.9	39.6	24.2	5.2	2.9	100.0(1,542)	3.0
$\chi^2(df)/t$				11.637(4)*				-2.1*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부록 표 28>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8.4	14.2	34.0	28.9	11.7	2.9	100.0 (1,731)	3.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0	17.7	37.2	19.5	12.4	5.3	100.0 ( 113)	3.1
251~350만원	12.0	12.8	36.0	25.6	8.3	5.4	100.0 ( 242)	3.1
351~500만원	9.2	13.3	35.1	28.6	11.8	2.0	100.0 ( 510)	3.2
501~600만원	7.1	12.5	33.6	29.5	15.6	1.7	100.0 ( 295)	3.3
601만원 이상	7.0	15.6	31.7	32.0	10.9	2.8	100.0 ( 571)	3.2
$\chi^2(df)/F$				23.612(16)				2.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3	15.3	33.3	23.3	9.5	3.2	100.0 ( 189)	3.0
대졸 이상	7.6	14.0	34.0	29.6	11.9	2.9	100.0 (1,542)	3.2
$\chi^2(df)/t$				15.429(4)**				-3.3***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29>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2)기타지원 확대: 산모산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8.3	16.2	36.3	25.7	8.7	4.9	100.0 (1,731)	3.1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0	17.7	46.0	15.9	8.0	4.4	100.0 ( 113)	3.0
251~350만원	9.1	16.1	39.3	21.5	6.2	7.9	100.0 ( 242)	3.0
351~500만원	9.2	16.3	36.5	26.1	8.0	3.9	100.0 ( 510)	3.1
501~600만원	5.8	14.9	34.6	28.1	12.5	4.1	100.0 ( 295)	3.3
601만원 이상	8.4	16.5	34.0	27.8	8.4	4.9	100.0 ( 571)	3.1
$\chi^2(df)/F$				22.593(16)				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7	17.5	36.0	19.6	6.3	7.9	100.0 ( 189)	2.9
대졸 이상	7.7	16.0	36.4	26.5	8.9	4.5	100.0 (1,542)	3.1
$\chi^2(df)/t$				9.763(4)*				-2.9**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30>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3)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8.5	14.6	41.2	20.8	5.7	9.2	100.0 (1,731)	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8.0	14.1	41.0	22.0	5.8	9.0	100.0 (1,050)	3.0
외벌이	8.1	15.5	42.1	19.5	5.4	9.5	100.0 ( 632)	3.0
해당없음	24.5	14.3	34.7	12.2	6.1	8.2	100.0 ( 49)	2.6
$\chi^2(df)/F$				19.311(8)*				4.7**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3.3	19.5	42.5	11.5	6.2	7.1	100.0 ( 113)	2.8
251~350만원	10.3	15.7	44.2	13.2	5.4	11.2	100.0 ( 242)	2.9
351~500만원	8.6	14.3	40.0	23.1	5.1	8.8	100.0 ( 510)	3.0
501~600만원	6.1	12.9	40.3	24.4	7.8	8.5	100.0 ( 295)	3.2
601만원 이상	7.9	14.4	41.3	21.9	5.1	9.5	100.0 ( 571)	3.0
$\chi^2(df)/F$				27.450(16)*				4.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16.9	39.7	15.9	4.2	8.5	100.0 ( 189)	2.8
대졸 이상	7.7	14.3	41.4	21.4	5.8	9.3	100.0 (1,542)	3.0
$\chi^2(df)/t$				14.021(4)**				-3.3**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31〉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4)(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2	23.0	38.8	18.0	4.8	5.2	100.0(1,731)	2.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0	24.8	44.2	11.5	5.3	6.2	100.0( 113)	2.8
251~350만원	9.5	25.2	38.8	13.6	6.6	6.2	100.0( 242)	2.8
351~500만원	10.8	21.0	42.2	17.6	4.1	4.3	100.0( 510)	2.8
501~600만원	6.4	27.8	33.2	21.4	6.1	5.1	100.0( 295)	2.9
601만원 이상	12.3	21.0	37.7	19.8	3.9	5.4	100.0( 571)	2.8
$\chi^2(df)/F$				30.130(16)*				0.7
지역구분								
대도시	11.4	24.5	37.6	17.2	3.5	5.8	100.0( 710)	2.8
중소도시	8.5	23.3	39.0	19.1	5.2	4.8	100.0( 764)	2.9
읍면	11.7	17.9	41.6	17.1	7.0	4.7	100.0( 257)	2.9
$\chi^2(df)/F$				14.318(8)				3.4*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32〉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5)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1.7	24.0	40.8	15.3	4.0	4.2	100.0(1,731)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7	24.2	40.6	15.5	4.5	3.5	100.0(1,050)	2.8
외벌이	11.6	22.9	41.6	15.7	2.7	5.5	100.0( 632)	2.7
해당없음	14.3	32.7	34.7	4.1	12.2	2.0	100.0( 49)	2.7
$\chi^2(df)/F$				17.855(8)*				0.3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8	23.0	46.9	8.0	6.2	7.1	100.0( 113)	2.8
251~350만원	12.4	24.0	43.4	12.4	2.9	5.0	100.0( 242)	2.7
351~500만원	11.0	24.9	42.5	15.3	3.1	3.1	100.0( 510)	2.7
501~600만원	10.2	22.4	39.0	18.3	5.4	4.7	100.0( 295)	2.9
601만원 이상	13.5	24.2	37.8	16.3	4.2	4.0	100.0( 571)	2.7
$\chi^2(df)/F$				19.117(16)				1.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9	23.3	41.3	10.6	3.2	5.8	100.0( 189)	2.6
대졸 이상	11.2	24.1	40.7	15.8	4.2	4.0	100.0(1,542)	2.8
$\chi^2(df)/t$				6.634(4)				-2.2*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부록 14. 설문조사 부표: 저출산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전문가 의견조사)

〈부록 표 33〉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되지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계(수)	평균
전체	7.0	17.0	25.0	29.0	16.0	6.0	0.0	100.0 (100)	3.5
분야									
유아교육	5.7	17.1	37.1	22.9	14.3	2.9	0.0	100.0 ( 35)	3.3
보육	10.0	17.5	10.0	45.0	10.0	7.5	0.0	100.0 ( 40)	3.5
기타	4.0	16.0	32.0	12.0	28.0	8.0	0.0	100.0 ( 25)	3.7
$\chi^2(df)/F$				17.679(10)					0.6
전공									
유아교육/교육	5.1	20.5	33.3	28.2	10.3	2.6	0.0	100.0 ( 39)	3.3
보육/가족/아동	11.6	18.6	11.6	37.2	14.0	7.0	0.0	100.0 ( 43)	3.4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38.9	11.1	33.3	11.1	0.0	100.0 ( 18)	4.1
$\chi^2(df)/F$				18.964(10)*					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34〉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되지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3.0	9.0	18.0	23.0	35.0	8.0	3.0	1.0	100.0 (100)	4.2
분야										
유아교육	0.0	5.7	17.1	22.9	40.0	11.4	0.0	2.9	100.0 ( 35)	4.4
보육	7.5	15.0	15.0	25.0	25.0	7.5	5.0	0.0	100.0 ( 40)	3.9
기타	0.0	4.0	24.0	20.0	44.0	4.0	4.0	0.0	100.0 ( 25)	4.3
$\chi^2(df)/F$				12.711(12)						1.5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7.7	20.5	20.5	38.5	10.3	2.6	0.0	100.0 ( 39)	4.3
보육/가족/아동	7.0	14.0	14.0	23.3	25.6	9.3	4.7	2.3	100.0 ( 43)	4.0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22.2	27.8	50.0	0.0	0.0	0.0	100.0 ( 18)	4.3
$\chi^2(df)/F$				12.934(12)						0.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35>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단위: %(명), 점

구분	①매우 못하고 있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모 르겠 다	계(수)	평균
전체	2.0	9.0	14.0	24.0	34.0	7.0	7.0	3.0	100.0(100)	4.3
분야										
유아교육	0.0	8.6	8.6	28.6	34.3	8.6	5.7	5.7	100.0( 35)	4.5
보육	5.0	7.5	17.5	25.0	27.5	5.0	12.5	0.0	100.0( 40)	4.3
기타	0.0	12.0	16.0	16.0	44.0	8.0	0.0	4.0	100.0( 25)	4.2
$\chi^2(df)/F$					10.576(12)					0.3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5.1	15.4	30.8	28.2	7.7	10.3	2.6	100.0( 39)	4.5
보육/가족/아동	4.7	14.0	11.6	16.3	37.2	4.7	7.0	4.7	100.0( 43)	4.1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16.7	27.8	38.9	11.1	0.0	0.0	100.0( 18)	4.3
$\chi^2(df)/F$					10.195(12)					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36>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육아시간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	9.0	16.0	21.0	36.0	12.0	3.0	1.0	100.0 (100)	4.3
분야										
유아교육	0.0	8.6	14.3	17.1	42.9	11.4	2.9	2.9	100.0 ( 35)	4.4
보육	5.0	10.0	12.5	27.5	30.0	10.0	5.0	0.0	100.0 ( 40)	4.2
기타	0.0	8.0	24.0	16.0	36.0	16.0	0.0	0.0	100.0 ( 25)	4.3
$\chi^2(df)/F$					8.360(12)					0.4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0.3	15.4	20.5	35.9	12.8	5.1	0.0	100.0 ( 39)	4.4
보육/가족/아동	4.7	11.6	11.6	18.6	34.9	14.0	2.3	2.3	100.0 ( 43)	4.2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27.8	27.8	38.9	5.6	0.0	0.0	100.0 ( 18)	4.2
$\chi^2(df)/F$					9.258(12)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37>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계(수)	평균
전체	3.0	6.0	11.0	20.0	33.0	23.0	4.0	100.0 (100)	4.6
분야									
유아교육	2.9	5.7	5.7	17.1	42.9	22.9	2.9	100.0 ( 35)	4.7
보육	5.0	5.0	15.0	27.5	20.0	22.5	5.0	100.0 ( 40)	4.4
기타	0.0	8.0	12.0	12.0	40.0	24.0	4.0	100.0 ( 25)	4.7
$\chi^2(df)/F$					8.765(12)				0.6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계(수)	평균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5.1	10.3	20.5	38.5	23.1	2.6	100.0 ( 39)	4.7
보육/가족/아동	7.0	9.3	14.0	18.6	23.3	20.9	7.0	100.0 ( 43)	4.3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5.6	22.2	44.4	27.8	0.0	100.0 ( 18)	4.9
$\chi^2(df)/F$				11.261(12)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38>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부모의 노동권 보장**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모르 겠다	계(수)	평균
전체	4.0	6.0	17.0	26.0	34.0	9.0	1.0	3.0	100.0(100)	4.1
분야										
유아교육	0.0	5.7	11.4	20.0	48.6	14.3	0.0	0.0	100.0( 35)	4.5
보육	10.0	2.5	20.0	25.0	27.5	5.0	2.5	7.5	100.0( 40)	3.9
기타	0.0	12.0	20.0	36.0	24.0	8.0	0.0	0.0	100.0( 25)	4.0
$\chi^2(df)/F$				17.374(12)						2.8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0.3	7.7	23.1	41.0	15.4	0.0	2.6	100.0( 39)	4.4
보육/가족/아동	9.3	2.3	23.3	23.3	32.6	2.3	2.3	4.7	100.0( 43)	3.9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22.2	38.9	22.2	11.1	0.0	0.0	100.0( 18)	4.1
$\chi^2(df)/F$				18.739(12)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39>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부모의 육아권 보장**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모르 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13.0	14.0	31.0	27.0	8.0	4.0	2.0	100.0 (100)	4.1
분야										
유아교육	0.0	8.6	5.7	34.3	34.3	14.3	2.9	0.0	100.0 ( 35)	4.5
보육	2.5	20.0	15.0	22.5	25.0	7.5	5.0	2.5	100.0 ( 40)	3.9
기타	0.0	8.0	24.0	40.0	20.0	0.0	4.0	4.0	100.0 ( 25)	3.9
$\chi^2(df)/F$				14.416(12)						2.1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2.8	7.7	28.2	35.9	10.3	5.1	0.0	100.0 ( 39)	4.4
보육/가족/아동	2.3	18.6	16.3	23.3	23.3	9.3	4.7	2.3	100.0 ( 43)	4.0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22.2	55.6	16.7	0.0	0.0	5.6	100.0 ( 18)	3.9
$\chi^2(df)/F$				16.297(12)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40〉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계(수)	평균
전체	0.0	4.0	5.0	13.0	29.0	33.0	16.0	100.0(100)	5.3
분야									
유아교육	0.0	5.7	2.9	11.4	22.9	40.0	17.1	100.0( 35)	5.4
보육	0.0	5.0	5.0	12.5	32.5	27.5	17.5	100.0( 40)	5.3
기타	0.0	0.0	8.0	16.0	32.0	32.0	12.0	100.0( 25)	5.2
$\chi^2(df)/F$				4.307(10)					0.2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2.6	15.4	28.2	35.9	15.4	100.0( 39)	5.4
보육/가족/아동	0.0	7.0	7.0	9.3	30.2	27.9	18.6	100.0( 43)	5.2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5.6	16.7	27.8	38.9	11.1	100.0( 18)	5.3
$\chi^2(df)/F$				4.620(10)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41〉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출산·양육 세제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⑧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	4.0	13.0	19.0	30.0	18.0	8.0	6.0	100.0(100)	4.7
분야										
유아교육	2.9	5.7	5.7	14.3	34.3	22.9	8.6	5.7	100.0( 35)	4.8
보육	2.5	2.5	7.5	17.5	32.5	22.5	10.0	5.0	100.0( 40)	4.9
기타	0.0	4.0	32.0	28.0	20.0	4.0	4.0	8.0	100.0( 25)	4.0
$\chi^2(df)/F$				17.690(12)						3.8*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10.3	17.9	33.3	20.5	10.3	5.1	100.0( 39)	4.9
보육/가족/아동	4.7	4.7	11.6	16.3	27.9	20.9	7.0	7.0	100.0( 43)	4.6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22.2	27.8	27.8	5.6	5.6	5.6	100.0( 18)	4.2
$\chi^2(df)/F$				7.938(12)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부록 표 42〉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지원-수당 조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 되었다	⑧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3.0	3.0	8.0	20.0	24.0	30.0	9.0	3.0	100.0(100)	4.9
분야										
유아교육	2.9	0.0	5.7	11.4	31.4	34.3	11.4	2.9	100.0( 35)	5.2
보육	2.5	2.5	7.5	15.0	25.0	30.0	12.5	5.0	100.0( 40)	5.1
기타	4.0	8.0	12.0	40.0	12.0	24.0	0.0	0.0	100.0( 25)	4.2
$\chi^2(df)/F$				16.300(12)						4.6*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0.0	7.7	17.9	38.5	23.1	10.3	2.6	100.0 ( 39)	5.1
보육/가족/아동	4.7	2.3	9.3	14.0	16.3	39.5	9.3	4.7	100.0 ( 43)	5.0
사회복지/행정/경제	5.6	11.1	5.6	38.9	11.1	22.2	5.6	0.0	100.0 ( 18)	4.3
$\chi^2(df)/F$					19.476(12)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43>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1.0	4.0	11.0	27.0	38.0	16.0	2.0	100.0(100)	5.4
분야										
유아교육	0.0	0.0	0.0	8.6	22.9	51.4	14.3	2.9	100.0 ( 35)	5.7
보육	2.5	0.0	7.5	12.5	22.5	27.5	25.0	2.5	100.0 ( 40)	5.4
기타	0.0	4.0	4.0	12.0	40.0	36.0	4.0	0.0	100.0 ( 25)	5.1
$\chi^2(df)/F$					16.619(12)					2.0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5.1	5.1	25.6	38.5	20.5	2.6	100.0 ( 39)	5.6
보육/가족/아동	2.3	0.0	4.7	14.0	23.3	39.5	14.0	2.3	100.0 ( 43)	5.4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0.0	16.7	38.9	33.3	11.1	0.0	100.0 ( 18)	5.4
$\chi^2(df)/F$					8.028(12)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44>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2)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0.0	2.0	3.0	14.0	30.0	35.0	13.0	3.0	100.0(100)	5.4
분야										
유아교육	0.0	0.0	0.0	14.3	20.0	48.6	11.4	5.7	100.0 ( 35)	5.6
보육	0.0	2.5	5.0	15.0	25.0	30.0	20.0	2.5	100.0 ( 40)	5.4
기타	0.0	4.0	4.0	12.0	52.0	24.0	4.0	0.0	100.0 ( 25)	5.0
$\chi^2(df)/F$					14.536(10)					2.2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5.1	10.3	25.6	35.9	17.9	2.6	100.0 ( 39)	5.4
보육/가족/아동	0.0	2.3	2.3	18.6	23.3	37.2	11.6	4.7	100.0 ( 43)	5.3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0.0	11.1	55.6	27.8	5.6	0.0	100.0 ( 18)	5.3
$\chi^2(df)/F$					9.316(10)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45>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3)(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모르겠다	계(수)
전체	0.0	0.0	12.0	25.0	26.0	27.0	10.0	100.0 (100)	5.0
분야									
유아교육	0.0	0.0	8.6	22.9	17.1	40.0	11.4	100.0 ( 35)	5.2
보육	0.0	0.0	15.0	20.0	30.0	22.5	12.5	100.0 ( 40)	5.0
기타	0.0	0.0	12.0	36.0	32.0	16.0	4.0	100.0 ( 25)	4.6
$\chi^2(df)/F$					8.798(8)				1.8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0.0	10.3	25.6	20.5	28.2	15.4	100.0 ( 39)	5.1
보육/가족/아동	0.0	0.0	14.0	23.3	27.9	27.9	7.0	100.0 ( 43)	4.9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11.1	27.8	33.3	22.2	5.6	100.0 ( 18)	4.8
$\chi^2(df)/F$					3.311(8)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46>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4)(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3.0	5.0	10.0	27.0	20.0	22.0	11.0	2.0	100.0(100)	4.7
분야										
유아교육	0.0	2.9	8.6	31.4	17.1	25.7	14.3	0.0	100.0( 35)	5.0
보육	5.0	5.0	7.5	17.5	27.5	25.0	12.5	0.0	100.0( 40)	4.8
기타	4.0	8.0	16.0	36.0	12.0	12.0	4.0	8.0	100.0( 25)	4.0
$\chi^2(df)/F$					11.223(12)					3.1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12.8	30.8	15.4	25.6	12.8	0.0	100.0( 39)	4.9
보육/가족/아동	4.7	4.7	7.0	18.6	25.6	25.6	11.6	2.3	100.0( 43)	4.8
사회복지/행정/경제	5.6	11.1	11.1	38.9	16.7	5.6	5.6	5.6	100.0( 18)	3.9
$\chi^2(df)/F$					11.385(12)					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47> 저출산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5)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	3.0	15.0	30.0	29.0	14.0	6.0	1.0	100.0(100)	4.5
분야										
유아교육	2.9	0.0	14.3	25.7	31.4	17.1	8.6	0.0	100.0( 35)	4.7
보육	2.5	5.0	10.0	27.5	32.5	15.0	7.5	0.0	100.0( 40)	4.6
기타	0.0	4.0	24.0	40.0	20.0	8.0	0.0	4.0	100.0( 25)	4.0
$\chi^2(df)/F$					9.504(12)					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0.0	20.5	28.2	28.2	15.4	7.7	0.0	100.0 ( 39)	4.6
보육/가족/아동	4.7	4.7	11.6	23.3	32.6	18.6	4.7	0.0	100.0 ( 43)	4.5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11.1	50.0	22.2	0.0	5.6	5.6	100.0 ( 18)	4.2
$\chi^2(df)/F$						13.204(12)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부록 15. 설문조사 부표: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부모 설문조사)

〈부록 표 48〉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6.5	16.5	42.8	22.8	5.1	6.3	100.0 (1,731)	3.0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7	17.4	42.2	24.2	6.3	4.2	100.0 ( 384)	3.1
유아부모	6.1	14.8	44.5	25.3	5.6	3.7	100.0 ( 784)	3.1
영아부모	7.5	18.3	40.9	18.5	3.6	11.4	100.0 ( 563)	2.9
$\chi^2(df)/F$					14.189(8)			6.1**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부록 표 49〉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의 목표 달성률: (2)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40% 목표)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9.8	21.7	38.5	19.2	3.9	6.9	100.0 (1,731)	2.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5.0	15.9	38.9	15.0	3.5	11.5	100.0 ( 113)	2.7
251~350만원	10.3	22.3	39.3	15.3	3.3	9.5	100.0 ( 242)	2.8
351~500만원	9.8	21.6	39.8	21.2	2.2	5.5	100.0 ( 510)	2.8
501~600만원	5.8	21.7	36.9	22.0	6.4	7.1	100.0 ( 295)	3.0
601만원 이상	10.5	22.8	37.7	18.6	4.6	6.0	100.0 ( 571)	2.8
$\chi^2(df)/F$					25.799(16)			2.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부록 표 50〉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3.9	27.1	35.0	13.8	2.9	7.3	100.0 (1,731)	2.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5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8.8	21.3	38.4	20.3	5.0	6.1	100.0 (1,731)	2.9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6.5	22.1	38.3	22.7	6.0	4.4	100.0 ( 384)	3.0
유아부모	9.1	20.4	38.8	21.3	5.7	4.7	100.0 ( 784)	2.9
영아부모	10.1	22.0	38.0	17.4	3.2	9.2	100.0 ( 563)	2.8
$\chi^2(df)/F$				12.375(8)				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8.9	20.9	37.6	21.5	5.6	5.5	100.0 (1,050)	2.9
외벌이	8.2	22.0	39.9	19.1	3.3	7.4	100.0 ( 632)	2.9
해당없음	16.3	22.4	36.7	10.2	12.2	2.0	100.0 ( 49)	2.8
$\chi^2(df)/F$				16.768(8)*				1.3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1.5	16.8	41.6	14.2	7.1	8.8	100.0 ( 113)	2.9
251~350만원	10.3	21.9	40.9	12.8	5.4	8.7	100.0 ( 242)	2.8
351~500만원	8.8	22.4	38.4	21.4	3.3	5.7	100.0 ( 510)	2.9
501~600만원	6.4	21.0	36.3	21.7	7.8	6.8	100.0 ( 295)	3.0
601만원 이상	8.9	21.2	37.8	23.1	4.4	4.6	100.0 ( 571)	2.9
$\chi^2(df)/F$				26.418(16)*				2.0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5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1.3	25.2	38.3	16.3	2.4	6.6	100.0 (1,731)	2.7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9.9	21.6	41.9	18.8	2.9	4.9	100.0 ( 384)	2.8
유아부모	9.8	27.0	37.8	16.8	2.8	5.7	100.0 ( 784)	2.7
영아부모	14.2	25.0	36.6	13.9	1.4	8.9	100.0 ( 563)	2.6
$\chi^2(df)/F$				17.643(8)*				6.4**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5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1.5	25.0	37.8	15.8	3.2	6.8	100.0 (1,731)	2.7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8.6	22.4	40.1	18.5	5.2	5.2	100.0 ( 384)	2.9
유아부모	11.6	24.7	38.3	16.7	3.6	5.1	100.0 ( 784)	2.7
영아부모	13.3	27.2	35.5	12.6	1.2	10.1	100.0 ( 563)	2.6
$\chi^2(df)/F$				25.013(8)**				11.4***
지역구분								
대도시	12.8	26.5	36.5	14.5	2.5	7.2	100.0 ( 710)	2.6
중소도시	10.9	26.6	37.0	16.0	3.1	6.4	100.0 ( 764)	2.7
읍면	9.7	16.3	43.6	18.7	5.1	6.6	100.0 ( 257)	2.9
$\chi^2(df)/F$				19.699(8)*				6.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 표 5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보육서비스 질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9.0	20.6	43.4	18.7	3.6	4.8	100.0 (1,731)	2.9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6.0	20.8	45.8	19.3	4.4	3.6	100.0 ( 384)	3.0
유아부모	8.7	19.0	45.5	19.4	4.0	3.4	100.0 ( 784)	2.9
영아부모	11.4	22.6	38.9	17.2	2.5	7.5	100.0 ( 563)	2.8
$\chi^2(df)/F$				16.931(8)*				5.9**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부록 표 5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보육자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7.4	19.2	43.7	19.8	4.4	5.5	100.0 (1,731)	2.9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5.2	18.5	45.1	20.8	4.9	5.5	100.0 ( 384)	3.0
유아부모	6.8	19.9	44.5	20.3	5.1	3.4	100.0 ( 784)	3.0
영아부모	9.8	18.7	41.6	18.5	3.2	8.3	100.0 ( 563)	2.9
$\chi^2(df)/F$				11.563(8)				3.7*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9.7	19.5	46.0	15.0	5.3	4.4	100.0 ( 113)	2.9
251~350만원	9.5	16.1	42.6	17.8	4.1	9.9	100.0 ( 242)	2.9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351~500만원	6.9	19.0	46.5	18.8	4.1	4.7	100.0 ( 510)	2.9
501~600만원	4.1	19.7	41.4	22.4	7.5	5.1	100.0 ( 295)	3.1
601만원 이상	8.2	20.3	42.4	21.2	3.2	4.7	100.0 ( 571)	2.9
$\chi^2(df)/F$				22.304(16)				2.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56>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9.4	20.2	41.5	18.7	4.0	6.1	100.0(1,731)	2.9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5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7.7	18.4	41.4	22.2	4.3	6.0	100.0(1,731)	3.0
지역구분								
대도시	8.3	18.9	40.0	23.5	3.4	5.9	100.0( 710)	2.9
중소도시	6.3	19.9	42.1	21.3	4.7	5.6	100.0( 764)	3.0
읍면	10.5	12.5	43.2	21.0	5.8	7.0	100.0( 257)	3.0
$\chi^2(df)/F$				15.649(8)*				0.3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58>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9.6	22.1	39.6	18.1	2.6	8.0	100.0(1,731)	2.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59>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2)육아지원의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9.8	21.9	39.6	20.2	3.2	5.3	100.0(1,731)	2.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2.4	23.0	41.6	9.7	4.4	8.8	100.0( 113)	2.7
251~350만원	12.0	21.9	39.3	14.9	2.9	9.1	100.0( 242)	2.7
351~500만원	9.6	21.0	41.0	21.6	2.9	3.9	100.0( 510)	2.9
501~600만원	7.5	19.7	40.0	23.4	3.7	5.8	100.0( 295)	3.0
601만원 이상	9.6	23.6	37.8	21.7	3.2	4.0	100.0( 571)	2.8
$\chi^2(df)/F$				19.008(16)				2.6*
연령								
20대	4.5	17.9	46.3	17.9	4.5	9.0	100.0( 67)	3.0
30대	11.1	22.0	39.0	18.7	3.3	6.0	100.0(1,119)	2.8
40대 이상	7.7	22.2	40.0	23.7	2.9	3.5	100.0( 545)	2.9
$\chi^2(df)/F$				12.584(8)				3.3*
지역구분								
대도시	10.4	20.8	38.0	22.0	2.8	5.9	100.0( 710)	2.9
중소도시	8.5	25.3	40.2	17.9	3.3	4.8	100.0( 764)	2.8
읍면	11.7	14.8	42.0	22.2	4.3	5.1	100.0( 257)	2.9
$\chi^2(df)/F$				18.353(8)*				1.1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60>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3)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4.5	24.1	36.3	16.9	3.2	5.0	100.0 (1,731)	2.7
첫째아 기준								
초등부모	13.3	22.1	40.6	16.9	2.9	4.2	100.0 ( 384)	2.7
유아부모	14.0	24.0	35.6	19.1	3.6	3.7	100.0 ( 784)	2.7
영아부모	16.0	25.6	34.3	13.9	3.0	7.3	100.0 ( 563)	2.6
$\chi^2(df)/F$				10.719(8)				3.1*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6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4)공공성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5	21.0	41.1	18.3	3.4	5.8	100.0 (1,731)	2.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6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5)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9.5	23.1	39.1	18.4	3.6	6.3	100.0 (1,731)	2.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0.6	23.9	40.7	13.3	2.7	8.8	100.0 ( 113)	2.7
251~350만원	11.6	19.4	39.3	19.4	2.9	7.4	100.0 ( 242)	2.8
351~500만원	9.4	24.9	40.0	17.6	2.7	5.3	100.0 ( 510)	2.8
501~600만원	8.1	18.0	38.0	23.1	5.4	7.5	100.0 ( 295)	3.0
601만원 이상	9.1	25.6	38.5	17.2	4.0	5.6	100.0 ( 571)	2.8
$\chi^2(df)/F$				19.697(16)				2.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6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6)취학 전 출발선 평등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8.3	28.2	34.6	10.2	2.3	6.4	100.0(1,731)	2.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6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7)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9	22.9	39.6	17.5	3.9	5.3	100.0(1,731)	2.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6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8)양육비 부담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8.8	27.8	31.5	16.2	3.1	2.5	100.0(1,731)	2.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부록 16. 설문조사 부표: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

〈부록 표 66〉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	5.0	7.0	20.0	36.0	20.0	8.0	2.0	100.0(100)	4.8
분야										
유아교육	0.0	2.9	5.7	14.3	42.9	28.6	5.7	0.0	100.0(35)	5.1
보육	2.5	7.5	2.5	25.0	27.5	22.5	12.5	0.0	100.0(40)	4.8
기타	4.0	4.0	16.0	20.0	40.0	4.0	4.0	8.0	100.0(25)	4.3
$\chi^2(df)/F$					15.238(12)					2.6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5.1	7.7	17.9	38.5	25.6	5.1	0.0	100.0(39)	4.9
보육/가족/아동	2.3	7.0	2.3	18.6	32.6	20.9	14.0	2.3	100.0(43)	5.0
사회복지/행정/경제	5.6	0.0	16.7	27.8	38.9	5.6	0.0	5.6	100.0(18)	4.2
$\chi^2(df)/F$					14.378(12)					2.2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6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6.0	11.0	20.0	38.0	22.0	2.0	0.0	100.0(100)	4.6
분야										
유아교육	0.0	5.7	8.6	20.0	40.0	22.9	2.9	0.0	100.0(35)	4.7
보육	2.5	10.0	10.0	20.0	32.5	22.5	2.5	0.0	100.0(40)	4.5
기타	0.0	0.0	16.0	20.0	44.0	20.0	0.0	0.0	100.0(25)	4.7
$\chi^2(df)/F$					6.196(12)					0.5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12.8	17.9	46.2	20.5	0.0	0.0	100.0(39)	4.7
보육/가족/아동	2.3	11.6	11.6	18.6	25.6	25.6	4.7	0.0	100.0(43)	4.5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5.6	27.8	50.0	16.7	0.0	0.0	100.0(18)	4.8
$\chi^2(df)/F$					13.013(12)					0.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68〉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4.0	16.0	10.0	26.0	32.0	10.0	1.0	1.0	100.0 (100)	4.0
분야										
유아교육	2.9	11.4	5.7	14.3	45.7	17.1	2.9	0.0	100.0 ( 35)	4.5
보육	7.5	20.0	12.5	30.0	22.5	5.0	0.0	2.5	100.0 ( 40)	3.6
기타	0.0	16.0	12.0	36.0	28.0	8.0	0.0	0.0	100.0 ( 25)	4.0
$\chi^2(df)/F$					15.247(12)					4.6*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7.9	5.1	20.5	35.9	17.9	2.6	0.0	100.0 ( 39)	4.4
보육/가족/아동	9.3	14.0	14.0	27.9	25.6	7.0	0.0	2.3	100.0 ( 43)	3.7
사회복지/행정/경제	0.0	16.7	11.1	33.3	38.9	0.0	0.0	0.0	100.0 ( 18)	3.9
$\chi^2(df)/F$					15.201(12)					2.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69〉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4.0	3.0	10.0	25.0	33.0	21.0	4.0	0.0	100.0 (100)	4.6
분야										
유아교육	2.9	0.0	8.6	20.0	37.1	25.7	5.7	0.0	100.0 ( 35)	4.9
보육	7.5	5.0	2.5	17.5	45.0	17.5	5.0	0.0	100.0 ( 40)	4.6
기타	0.0	4.0	24.0	44.0	8.0	20.0	0.0	0.0	100.0 ( 25)	4.2
$\chi^2(df)/F$					24.723(12)*					2.2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0.0	7.7	15.4	41.0	30.8	2.6	0.0	100.0 ( 39)	4.9
보육/가족/아동	7.0	7.0	9.3	20.9	30.2	18.6	7.0	0.0	100.0 ( 43)	4.4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16.7	55.6	22.2	5.6	0.0	0.0	100.0 ( 18)	4.2
$\chi^2(df)/F$					22.631(12)*					2.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70〉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5.0	11.0	14.0	25.0	29.0	14.0	0.0	2.0	100.0 (100)	4.1
분야										
유아교육	2.9	8.6	14.3	17.1	37.1	20.0	0.0	0.0	100.0 ( 35)	4.4
보육	10.0	17.5	2.5	27.5	30.0	10.0	0.0	2.5	100.0 ( 40)	3.8
기타	0.0	4.0	32.0	32.0	16.0	12.0	0.0	4.0	100.0 ( 25)	4.0
$\chi^2(df)/F$					21.295(10)*					1.5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10.3	10.3	17.9	33.3	25.6	0.0	0.0	100.0 ( 39)	4.5
보육/가족/아동	9.3	16.3	9.3	20.9	32.6	7.0	0.0	4.7	100.0 ( 43)	3.8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33.3	50.0	11.1	5.6	0.0	0.0	100.0 ( 18)	3.9
$\chi^2(df)/F$					25.790(10)**					2.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7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3.0	10.0	18.0	26.0	28.0	10.0	3.0	2.0	100.0(100)	4.1
분야										
유아교육	0.0	5.7	17.1	25.7	31.4	14.3	5.7	0.0	100.0( 35)	4.5
보육	7.5	12.5	12.5	25.0	25.0	12.5	2.5	2.5	100.0( 40)	4.0
기타	0.0	12.0	28.0	28.0	28.0	0.0	0.0	4.0	100.0( 25)	3.8
$\chi^2(df)/F$					12.978(12)					2.4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0.3	10.3	28.2	35.9	10.3	5.1	0.0	100.0( 39)	4.4
보육/가족/아동	7.0	11.6	16.3	16.3	27.9	14.0	2.3	4.7	100.0( 43)	4.0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38.9	44.4	11.1	0.0	0.0	0.0	100.0( 18)	3.6
$\chi^2(df)/F$					20.306(12)					2.3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7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보육서비스 질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3.0	3.0	7.0	31.0	36.0	16.0	4.0	0.0	100.0(100)	4.6
분야										
유아교육	0.0	2.9	0.0	34.3	40.0	17.1	5.7	0.0	100.0( 35)	4.9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보육	7.5	5.0	0.0	20.0	45.0	17.5	5.0	0.0	100.0 ( 40)	4.6
기타	0.0	0.0	28.0	44.0	16.0	12.0	0.0	0.0	100.0 ( 25)	4.1
$\chi^2(df)/F$				35.357(12)***						2.8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5.1	2.6	33.3	35.9	20.5	2.6	0.0	100.0 ( 39)	4.7
보육/가족/아동	7.0	2.3	2.3	20.9	44.2	16.3	7.0	0.0	100.0 ( 43)	4.7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27.8	50.0	16.7	5.6	0.0	0.0	100.0 ( 18)	4.0
$\chi^2(df)/F$				28.550(12)**						2.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1$ , \*\*\*  $p < .001$ .

**<부록 표 73>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	4.0	13.0	20.0	31.0	23.0	7.0	0.0	100.0(100)	4.7
분야										
유아교육	0.0	2.9	11.4	17.1	34.3	31.4	2.9	0.0	100.0 ( 35)	4.9
보육	5.0	5.0	5.0	20.0	30.0	25.0	10.0	0.0	100.0 ( 40)	4.8
기타	0.0	4.0	28.0	24.0	28.0	8.0	8.0	0.0	100.0 ( 25)	4.3
$\chi^2(df)/F$				15.132(12)						1.4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15.4	20.5	28.2	30.8	2.6	0.0	100.0 ( 39)	4.8
보육/가족/아동	4.7	7.0	4.7	18.6	32.6	20.9	11.6	0.0	100.0 ( 43)	4.8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27.8	22.2	33.3	11.1	5.6	0.0	100.0 ( 18)	4.4
$\chi^2(df)/F$				14.955(12)						0.4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74>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 체계**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	3.0	9.0	21.0	32.0	23.0	9.0	1.0	100.0(100)	4.8
분야										
유아교육	0.0	0.0	5.7	28.6	34.3	20.0	11.4	0.0	100.0 ( 35)	5.0
보육	5.0	2.5	5.0	12.5	27.5	35.0	10.0	2.5	100.0 ( 40)	5.1
기타	0.0	8.0	20.0	24.0	36.0	8.0	4.0	0.0	100.0 ( 25)	4.3
$\chi^2(df)/F$				19.548(12)						3.2*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0.0	10.3	20.5	35.9	20.5	10.3	2.6	100.0 ( 39)	5.0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보육/가족/아동	4.7	4.7	4.7	18.6	25.6	30.2	11.6	0.0	100.0( 43)	4.9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16.7	27.8	38.9	11.1	0.0	0.0	100.0( 18)	4.3
$\chi^2(df)/F$						12.401(12)				1.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75>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2.0	8.0	21.0	36.0	20.0	12.0	0.0	100.0(100)	5.0
분야										
유아교육	0.0	2.9	5.7	20.0	28.6	28.6	14.3	0.0	100.0( 35)	5.2
보육	2.5	2.5	10.0	12.5	37.5	22.5	12.5	0.0	100.0( 40)	5.0
기타	0.0	0.0	8.0	36.0	44.0	4.0	8.0	0.0	100.0( 25)	4.7
$\chi^2(df)/F$						12.789(12)				1.1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0.0	10.3	20.5	33.3	23.1	12.8	0.0	100.0( 39)	5.1
보육/가족/아동	2.3	4.7	7.0	14.0	32.6	25.6	14.0	0.0	100.0( 43)	5.0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5.6	38.9	50.0	0.0	5.6	0.0	100.0( 18)	4.6
$\chi^2(df)/F$						14.614(12)				0.9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76>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11.0	15.0	20.0	29.0	19.0	4.0	1.0	100.0(100)	4.4
분야										
유아교육	0.0	5.7	14.3	22.9	17.1	34.3	5.7	0.0	100.0( 35)	4.8
보육	2.5	12.5	10.0	20.0	40.0	10.0	2.5	2.5	100.0( 40)	4.3
기타	0.0	16.0	24.0	16.0	28.0	12.0	4.0	0.0	100.0( 25)	4.1
$\chi^2(df)/F$						15.880(12)				2.1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2.8	10.3	20.5	23.1	28.2	5.1	0.0	100.0( 39)	4.6
보육/가족/아동	2.3	11.6	14.0	20.9	30.2	16.3	2.3	2.3	100.0( 43)	4.3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27.8	16.7	38.9	5.6	5.6	0.0	100.0( 18)	4.3
$\chi^2(df)/F$						9.816(12)				0.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77〉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2)육아지원의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5.0	11.0	27.0	35.0	17.0	3.0	1.0	100.0 (100)	4.5
분야										
유아교육	0.0	0.0	8.6	31.4	31.4	22.9	5.7	0.0	100.0 ( 35)	4.9
보육	2.5	10.0	7.5	20.0	37.5	17.5	2.5	2.5	100.0 ( 40)	4.5
기타	0.0	4.0	20.0	32.0	36.0	8.0	0.0	0.0	100.0 ( 25)	4.2
$\chi^2(df)/F$						12.702(12)				2.1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5.1	5.1	30.8	30.8	25.6	2.6	0.0	100.0 ( 39)	4.7
보육/가족/아동	2.3	7.0	14.0	18.6	41.9	9.3	4.7	2.3	100.0 ( 43)	4.4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16.7	38.9	27.8	16.7	0.0	0.0	100.0 ( 18)	4.4
$\chi^2(df)/F$						12.120(12)				0.9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78〉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3)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	6.0	16.0	33.0	28.0	12.0	3.0	0.0	100.0 (100)	4.3
분야										
유아교육	0.0	2.9	17.1	34.3	25.7	17.1	2.9	0.0	100.0 ( 35)	4.5
보육	5.0	5.0	10.0	32.5	30.0	12.5	5.0	0.0	100.0 ( 40)	4.3
기타	0.0	12.0	24.0	32.0	28.0	4.0	0.0	0.0	100.0 ( 25)	3.9
$\chi^2(df)/F$						10.621(12)				1.7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7.7	17.9	33.3	17.9	20.5	2.6	0.0	100.0 ( 39)	4.3
보육/가족/아동	4.7	4.7	11.6	27.9	37.2	9.3	4.7	0.0	100.0 ( 43)	4.3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22.2	44.4	27.8	0.0	0.0	0.0	100.0 ( 18)	3.9
$\chi^2(df)/F$						13.511(12)				0.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79〉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4.0	16.0	33.0	30.0	13.0	2.0	1.0	100.0 (100)	4.4
분야										
유아교육	0.0	5.7	17.1	28.6	28.6	17.1	2.9	0.0	100.0 ( 35)	4.4
보육	2.5	5.0	15.0	30.0	30.0	12.5	2.5	2.5	100.0 ( 40)	4.3
기타	0.0	0.0	16.0	44.0	32.0	8.0	0.0	0.0	100.0 ( 25)	4.3
$\chi^2(df)/F$						5.787(12)				0.1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5.1	17.9	33.3	25.6	12.8	5.1	0.0	100.0 ( 39)	4.4
보육/가족/아동	2.3	4.7	16.3	25.6	32.6	16.3	0.0	2.3	100.0 ( 43)	4.3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11.1	50.0	33.3	5.6	0.0	0.0	100.0 ( 18)	4.3
$\chi^2(df)/F$						9.491(12)				0.0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80>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5)취학 전 출발선 평등**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4.0	9.0	20.0	34.0	23.0	7.0	3.0	0.0	100.0 (100)	4.0
분야										
유아교육	0.0	2.9	17.1	25.7	40.0	11.4	2.9	0.0	100.0 ( 35)	4.5
보육	7.5	10.0	15.0	42.5	12.5	7.5	5.0	0.0	100.0 ( 40)	3.9
기타	4.0	16.0	32.0	32.0	16.0	0.0	0.0	0.0	100.0 ( 25)	3.4
$\chi^2(df)/F$						20.405(12)				5.7**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7.7	17.9	28.2	33.3	7.7	5.1	0.0	100.0 ( 39)	4.3
보육/가족/아동	9.3	7.0	11.6	37.2	23.3	9.3	2.3	0.0	100.0 ( 43)	4.0
사회복지/행정/경제	0.0	16.7	44.4	38.9	0.0	0.0	0.0	0.0	100.0 ( 18)	3.2
$\chi^2(df)/F$						23.114(12)*				4.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81>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6)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4.0	11.0	20.0	25.0	25.0	11.0	4.0	0.0	100.0 (100)	4.1
분야										
유아교육	0.0	5.7	14.3	22.9	28.6	20.0	8.6	0.0	100.0 ( 35)	4.7
보육	7.5	10.0	22.5	27.5	22.5	7.5	2.5	0.0	100.0 ( 40)	3.8
기타	4.0	20.0	24.0	24.0	24.0	4.0	0.0	0.0	100.0 ( 25)	3.6
$\chi^2(df)/F$						13.940(12)				6.0**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5.1	20.5	17.9	25.6	20.5	7.7	0.0	100.0 ( 39)	4.5
보육/가족/아동	7.0	11.6	16.3	27.9	27.9	7.0	2.3	0.0	100.0 ( 43)	3.9
사회복지/행정/경제	0.0	22.2	27.8	33.3	16.7	0.0	0.0	0.0	100.0 ( 18)	3.4
$\chi^2(df)/F$						16.264(12)				4.2*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82〉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초등돌봄 포함) 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7)양육비 부담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 통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12.0	9.0	29.0	27.0	16.0	6.0	0.0	100.0(100)	4.4
분야										
유아교육	0.0	5.7	5.7	34.3	31.4	17.1	5.7	0.0	100.0( 35)	4.7
보육	2.5	12.5	5.0	32.5	20.0	17.5	10.0	0.0	100.0( 40)	4.5
기타	0.0	20.0	20.0	16.0	32.0	12.0	0.0	0.0	100.0( 25)	4.0
$\chi^2(df)/F$					14.567(12)					1.9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0.3	7.7	35.9	23.1	15.4	7.7	0.0	100.0( 39)	4.5
보육/가족/아동	2.3	11.6	2.3	27.9	30.2	18.6	7.0	0.0	100.0( 43)	4.6
사회복지/행정/경제	0.0	16.7	27.8	16.7	27.8	11.1	0.0	0.0	100.0( 18)	3.9
$\chi^2(df)/F$					14.800(12)					1.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부록 17. 설문조사 부표: 유아교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부록 표 83〉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8.8	13.5	40.0	26.5	10.7	0.5	100.0(215)	3.2
원장/교사 구분								
원장	3.8	13.5	38.5	30.8	13.5	0.0	100.0( 52)	3.4
교사	10.4	13.5	40.5	25.2	9.8	0.6	100.0(163)	3.1
$\chi^2(df)/t$			2.922(4)					1.5
설립유형								
공립단설	8.7	8.7	39.1	26.1	15.9	1.4	100.0( 69)	3.3
공립병설	6.8	11.4	31.8	31.8	18.2	0.0	100.0( 44)	3.4
사립사인	11.1	13.6	42.0	28.4	4.9	0.0	100.0( 81)	3.0
사립법인	4.8	33.3	52.4	9.5	0.0	0.0	100.0( 21)	2.7
$\chi^2(df)/F$			21.795(12)*					3.5*
지역 구분								
대도시	11.1	9.9	43.2	27.2	7.4	1.2	100.0( 81)	3.1
중소도시	10.5	20.9	33.7	26.7	8.1	0.0	100.0( 86)	3.0
읍면	2.1	6.3	45.8	25.0	20.8	0.0	100.0( 48)	3.6
$\chi^2(df)/F$			16.807(8)*					4.4*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84〉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제고(40% 목표)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5.1	15.3	40.0	25.1	10.2	4.2	100.0 (215)	3.2
원장/교사 구분								
원장	1.9	9.6	30.8	40.4	17.3	0.0	100.0 ( 52)	3.6
교사	6.1	17.2	42.9	20.2	8.0	5.5	100.0 (163)	3.1
$\chi^2(df) / t$			13.500(4)**					3.4***
설립유형								
공립단설	5.8	8.7	37.7	34.8	10.1	2.9	100.0 ( 69)	3.4
공립병설	6.8	9.1	36.4	31.8	11.4	4.5	100.0 ( 44)	3.3
사립사인	3.7	19.8	42.0	17.3	12.3	4.9	100.0 ( 81)	3.2
사립법인	4.8	33.3	47.6	9.5	0.0	4.8	100.0 ( 21)	2.7
$\chi^2(df) / F$			19.751(12)					2.9*
지역 구분								
대도시	7.4	17.3	40.7	24.7	4.9	4.9	100.0 ( 81)	3.0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중소도시	4.7	15.1	39.5	25.6	9.3	5.8	100.0 ( 86)	3.2
읍면	2.1	12.5	39.6	25.0	20.8	0.0	100.0 ( 48)	3.5
$\chi^2(df) / F$			9.427(8)					3.3'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85>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1.6	23.3	32.1	21.9	8.8	2.3	100.0(215)	2.9
원장/교사 구분								
원장	3.8	3.8	23.1	40.4	25.0	3.8	100.0( 52)	3.8
교사	14.1	29.4	35.0	16.0	3.7	1.8	100.0(163)	2.7
$\chi^2(df) / t$			47.958(4)***					7.0***
설립유형								
공립단설	10.1	18.8	39.1	26.1	2.9	2.9	100.0( 69)	2.9
공립병설	15.9	25.0	27.3	22.7	2.3	6.8	100.0( 44)	2.7
사립사인	9.9	22.2	29.6	19.8	18.5	0.0	100.0( 81)	3.1
사립법인	14.3	38.1	28.6	14.3	4.8	0.0	100.0( 21)	2.6
$\chi^2(df) / F$			20.371(12)					2.4
규모(정원)								
40인 미만	9.1	36.4	27.3	22.7	0.0	4.5	100.0( 22)	2.7
40~100인 미만	17.9	26.9	35.8	14.9	3.0	1.5	100.0( 67)	2.6
100인 이상	8.7	19.0	31.0	25.4	13.5	2.4	100.0(126)	3.2
$\chi^2(df) / F$			16.617(8)*					6.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86>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국공립 유치원 질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6.5	13.5	37.7	27.4	10.2	4.7	100.0 (215)	3.2
원장/교사 구분								
원장	0.0	7.7	38.5	36.5	13.5	3.8	100.0 ( 52)	3.6
교사	8.6	15.3	37.4	24.5	9.2	4.9	100.0 (163)	3.1
$\chi^2(df) / t$			8.897(4)					2.8**
설립유형								
공립단설	5.8	8.7	37.7	36.2	10.1	1.4	100.0 ( 69)	3.4
공립병설	11.4	9.1	20.5	38.6	20.5	0.0	100.0 ( 44)	3.5
사립사인	4.9	16.0	42.0	19.8	7.4	9.9	100.0 ( 81)	3.1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사립법인	4.8	28.6	57.1	4.8	0.0	4.8	100.0 ( 21)	2.7
$\chi^2(df) / F$			29.807(12)**					3.8*
지역 구분								
대도시	7.4	17.3	40.7	23.5	6.2	4.9	100.0 ( 81)	3.0
중소도시	8.1	15.1	33.7	29.1	9.3	4.7	100.0 ( 86)	3.2
읍면	2.1	4.2	39.6	31.3	18.8	4.2	100.0 ( 48)	3.6
$\chi^2(df) / F$			12.178(8)					5.0**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부록 표 87〉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사립유치원 지원 및 관리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8.8	27.0	34.0	16.3	8.4	5.6	100.0 (215)	2.9
원장/교사 구분								
원장	5.8	13.5	30.8	25.0	21.2	3.8	100.0 ( 52)	3.4
교사	9.8	31.3	35.0	13.5	4.3	6.1	100.0 (163)	2.7
$\chi^2(df) / t$			21.875(4)***					4.4***
설립유형								
공립단설	7.2	17.4	42.0	17.4	10.1	5.8	100.0 ( 69)	3.1
공립병설	2.3	20.5	27.3	29.5	4.5	15.9	100.0 ( 44)	3.2
사립사인	12.3	35.8	32.1	8.6	9.9	1.2	100.0 ( 81)	2.7
사립법인	14.3	38.1	28.6	14.3	4.8	0.0	100.0 ( 21)	2.6
$\chi^2(df) / F$			21.936(12)*					3.0*
지역 구분								
대도시	12.3	33.3	34.6	9.9	6.2	3.7	100.0 ( 81)	2.6
중소도시	9.3	20.9	32.6	20.9	8.1	8.1	100.0 ( 86)	3.0
읍면	2.1	27.1	35.4	18.8	12.5	4.2	100.0 ( 48)	3.1
$\chi^2(df) / F$			10.724(8)					3.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01$ .

#### 〈부록 표 88〉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6.3	24.2	33.5	17.7	2.8	5.6	100.0 (215)	2.6
원장/교사 구분								
원장	5.8	19.2	48.1	17.3	3.8	5.8	100.0 ( 52)	2.9
교사	19.6	25.8	28.8	17.8	2.5	5.5	100.0 (163)	2.6
$\chi^2(df) / t$			10.002(4)*					2.5*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설립유형								
공립단설	11.6	20.3	34.8	24.6	2.9	5.8	100.0 ( 69)	2.9
공립병설	11.4	20.5	38.6	18.2	0.0	11.4	100.0 ( 44)	2.7
사립사인	16.0	29.6	33.3	12.3	4.9	3.7	100.0 ( 81)	2.6
사립법인	42.9	23.8	19.0	14.3	0.0	0.0	100.0 ( 21)	2.0
$\chi^2(df) / F$			19.778(12)					3.4*
지역 구분								
대도시	14.8	34.6	29.6	13.6	3.7	3.7	100.0 ( 81)	2.6
중소도시	18.6	17.4	33.7	20.9	2.3	7.0	100.0 ( 86)	2.7
읍면	14.6	18.8	39.6	18.8	2.1	6.3	100.0 ( 48)	2.7
$\chi^2(df) / F$			8.792(8)					0.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89>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취학 전 출발선 평등**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3.0	17.7	36.7	23.7	7.4	1.4	100.0 (215)	2.9
원장/교사 구분								
원장	7.7	9.6	42.3	21.2	17.3	1.9	100.0 ( 52)	3.3
교사	14.7	20.2	35.0	24.5	4.3	1.2	100.0 (163)	2.8
$\chi^2(df) / t$			13.805(4)**					2.7**
설립유형								
공립단설	10.1	13.0	31.9	33.3	10.1	1.4	100.0 ( 69)	3.2
공립병설	9.1	18.2	36.4	27.3	6.8	2.3	100.0 ( 44)	3.0
사립사인	17.3	18.5	42.0	14.8	6.2	1.2	100.0 ( 81)	2.7
사립법인	14.3	28.6	33.3	19.0	4.8	0.0	100.0 ( 21)	2.7
$\chi^2(df) / F$			12.388(12)					2.6
규모(정원)								
40인 미만	22.7	31.8	18.2	22.7	4.5	0.0	100.0 ( 22)	2.5
40~100인 미만	17.9	17.9	35.8	22.4	4.5	1.5	100.0 ( 67)	2.8
100인 이상	8.7	15.1	40.5	24.6	9.5	1.6	100.0 (126)	3.1
$\chi^2(df) / F$			11.920(8)					3.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90〉 유아교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 시간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5.6	9.8	22.8	36.3	24.7	0.9	100.0 (215)	3.7
원장/교사 구분								
원장	1.9	7.7	15.4	46.2	26.9	1.9	100.0 ( 52)	3.9
교사	6.7	10.4	25.2	33.1	23.9	0.6	100.0 (163)	3.6
$\chi^2(df) / t$			5.617(4)					2.0*
설립유형								
공립단설	7.2	7.2	14.5	40.6	29.0	1.4	100.0 ( 69)	3.8
공립병설	4.5	6.8	13.6	36.4	38.6	0.0	100.0 ( 44)	4.0
사립사인	4.9	12.3	30.9	34.6	16.0	1.2	100.0 ( 81)	3.5
사립법인	4.8	14.3	38.1	28.6	14.3	0.0	100.0 ( 21)	3.3
$\chi^2(df) / F$			18.586(12)					3.0*
지역 구분								
대도시	7.4	6.2	34.6	30.9	19.8	1.2	100.0 ( 81)	3.5
중소도시	5.8	12.8	17.4	34.9	29.1	0.0	100.0 ( 86)	3.7
읍면	2.1	10.4	12.5	47.9	25.0	2.1	100.0 ( 48)	3.9
$\chi^2(df) / F$			15.691(8)*					1.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부록 18. 설문조사 부표: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부록 표 91〉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3.3	9.9	46.4	26.5	7.9	6.0	100.0 (151)	3.3
원장/교사 구분								
원장	1.8	9.1	49.1	27.3	10.9	1.8	100.0 ( 55)	3.4
교사	4.2	10.4	44.8	26.0	6.3	8.3	100.0 ( 96)	3.2
$\chi^2(df) / t$			1.573(4)					1.0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0.0	10.2	55.1	26.5	4.1	4.1	100.0 ( 49)	3.3
민간	8.7	15.2	45.7	19.6	8.7	2.2	100.0 ( 46)	3.0
가정	1.8	5.4	39.3	32.1	10.7	10.7	100.0 ( 56)	3.5
$\chi^2(df) / F$			12.588(8)					3.2*
지역 구분								
대도시	0.0	12.2	44.6	27.0	8.1	8.1	100.0 ( 74)	3.3
중소도시	9.6	7.7	50.0	23.1	5.8	3.8	100.0 ( 52)	3.1
읍면	0.0	8.0	44.0	32.0	12.0	4.0	100.0 ( 25)	3.5
$\chi^2(df) / F$			11.629(8)					2.2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92〉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2.0	13.9	34.4	26.5	13.2	9.9	100.0 (151)	3.4
원장/교사 구분								
원장	0.0	12.7	29.1	32.7	20.0	5.5	100.0 ( 55)	3.6
교사	3.1	14.6	37.5	22.9	9.4	12.5	100.0 ( 96)	3.2
$\chi^2(df) / t$			6.454(4)					2.3*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2.0	12.2	38.8	30.6	10.2	6.1	100.0 ( 49)	3.4
민간	2.2	17.4	37.0	17.4	13.0	13.0	100.0 ( 46)	3.3
가정	1.8	12.5	28.6	30.4	16.1	10.7	100.0 ( 56)	3.5
$\chi^2(df) / F$			4.168(8)					0.8
지역 구분								
대도시	1.4	12.2	35.1	29.7	14.9	6.8	100.0 ( 74)	3.5
중소도시	3.8	11.5	32.7	21.2	13.5	17.3	100.0 ( 52)	3.3
읍면	0.0	24.0	36.0	28.0	8.0	4.0	100.0 ( 25)	3.2
$\chi^2(df) / F$			4.806(8)					0.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93>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국공립 어린이집 질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4.0	13.2	47.0	16.6	9.3	9.9	100.0 (151)	3.2
원장/교사 구분								
원장	3.6	10.9	49.1	20.0	10.9	5.5	100.0 ( 55)	3.3
교사	4.2	14.6	45.8	14.6	8.3	12.5	100.0 ( 96)	3.1
$\chi^2(df) / t$			1.115(4)					0.9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0.0	10.2	49.0	26.5	10.2	4.1	100.0 ( 49)	3.4
민간	4.3	19.6	50.0	4.3	10.9	10.9	100.0 ( 46)	3.0
가정	7.1	10.7	42.9	17.9	7.1	14.3	100.0 ( 56)	3.1
$\chi^2(df) / F$			12.847(8)					2.3
지역 구분								
대도시	1.4	9.5	47.3	20.3	8.1	13.5	100.0 ( 74)	3.3
중소도시	5.8	19.2	44.2	13.5	9.6	7.7	100.0 ( 52)	3.0
읍면	8.0	12.0	52.0	12.0	12.0	4.0	100.0 ( 25)	3.1
$\chi^2(df) / F$			6.452(8)					1.1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93>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3.2	22.5	30.5	18.5	7.9	7.3	100.0 (151)	2.8
원장/교사 구분								
원장	12.7	21.8	29.1	23.6	10.9	1.8	100.0 ( 55)	3.0
교사	13.5	22.9	31.3	15.6	6.3	10.4	100.0 ( 96)	2.8
$\chi^2(df) / t$			1.932(4)					1.1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4.1	18.4	44.9	16.3	2.0	14.3	100.0 ( 49)	2.9
민간	19.6	34.8	19.6	10.9	13.0	2.2	100.0 ( 46)	2.6
가정	16.1	16.1	26.8	26.8	8.9	5.4	100.0 ( 56)	3.0
$\chi^2(df) / F$			21.832(8)**					1.2
지역 구분								
대도시	9.5	21.6	32.4	17.6	8.1	10.8	100.0 ( 74)	2.9
중소도시	19.2	23.1	26.9	21.2	7.7	1.9	100.0 ( 52)	2.7
읍면	12.0	24.0	32.0	16.0	8.0	8.0	100.0 ( 25)	2.8
$\chi^2(df) / F$			2.628(8)					0.3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1$ .

〈부록 표 94〉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23.8	32.5	24.5	11.3	5.3	2.6	100.0 (151)	2.4
원장/교사 구분								
원장	21.8	32.7	21.8	14.5	9.1	0.0	100.0 ( 55)	2.6
교사	25.0	32.3	26.0	9.4	3.1	4.2	100.0 ( 96)	2.3
$\chi^2(df) / t$			3.483(4)					1.3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10.2	40.8	34.7	10.2	2.0	2.0	100.0 ( 49)	2.5
민간	32.6	32.6	15.2	6.5	13.0	0.0	100.0 ( 46)	2.3
가정	28.6	25.0	23.2	16.1	1.8	5.4	100.0 ( 56)	2.3
$\chi^2(df) / F$			20.933(8)**					0.4
지역 구분								
대도시	20.3	29.7	27.0	13.5	5.4	4.1	100.0 ( 74)	2.5
중소도시	32.7	34.6	17.3	11.5	3.8	0.0	100.0 ( 52)	2.2
읍면	16.0	36.0	32.0	4.0	8.0	4.0	100.0 ( 25)	2.5
$\chi^2(df) / F$			6.933(8)					1.4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1$ .

〈부록 표 95〉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보육서비스 질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6.0	15.2	34.4	26.5	15.2	2.6	100.0 (151)	3.3
원장/교사 구분								
원장	1.8	14.5	20.0	36.4	27.3	0.0	100.0 ( 55)	3.7
교사	8.3	15.6	42.7	20.8	8.3	4.2	100.0 ( 96)	3.1
$\chi^2(df) / t$			18.897(4)***					3.7***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2.0	16.3	38.8	28.6	12.2	2.0	100.0 ( 49)	3.3
민간	8.7	17.4	37.0	17.4	19.6	0.0	100.0 ( 46)	3.2
가정	7.1	12.5	28.6	32.1	14.3	5.4	100.0 ( 56)	3.4
$\chi^2(df) / F$			6.302(8)					0.2
지역 구분								
대도시	5.4	12.2	33.8	29.7	14.9	4.1	100.0 ( 74)	3.4
중소도시	7.7	17.3	36.5	21.2	17.3	0.0	100.0 ( 52)	3.2
읍면	4.0	20.0	32.0	28.0	12.0	4.0	100.0 ( 25)	3.3
$\chi^2(df) / F$			2.692(8)					0.3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01$ .

〈부록 표 96〉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8.6	18.5	31.1	25.8	13.9	2.0	100.0 (151)	3.2
원장/교사 구분								
원장	7.3	16.4	27.3	32.7	16.4	0.0	100.0 ( 55)	3.3
교사	9.4	19.8	33.3	21.9	12.5	3.1	100.0 ( 96)	3.1
$\chi^2(df) / t$			2.726(4)					1.3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6.1	20.4	30.6	28.6	14.3	0.0	100.0 ( 49)	3.2
민간	13.0	13.0	37.0	23.9	13.0	0.0	100.0 ( 46)	3.1
가정	7.1	21.4	26.8	25.0	14.3	5.4	100.0 ( 56)	3.2
$\chi^2(df) / F$			3.603(8)					0.2
지역 구분								
대도시	5.4	13.5	32.4	31.1	14.9	2.7	100.0 ( 74)	3.4
중소도시	11.5	25.0	32.7	17.3	13.5	0.0	100.0 ( 52)	3.0
읍면	12.0	20.0	24.0	28.0	12.0	4.0	100.0 ( 25)	3.1
$\chi^2(df) / F$			6.791(8)					2.0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97〉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8)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5.3	14.6	37.7	26.5	11.9	4.0	100.0(151)	3.3
원장/교사 구분								
원장	1.8	14.5	36.4	25.5	21.8	0.0	100.0(55)	3.5
교사	7.3	14.6	38.5	27.1	6.3	6.3	100.0(96)	3.1
$\chi^2(df) / t$			8.875(4)					2.3*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4.1	16.3	38.8	36.7	4.1	0.0	100.0(49)	3.2
민간	8.7	13.0	41.3	17.4	15.2	4.3	100.0(46)	3.2
가정	3.6	14.3	33.9	25.0	16.1	7.1	100.0(56)	3.4
$\chi^2(df) / F$			8.933(8)					0.6
지역 구분								
대도시	4.1	14.9	35.1	27.0	13.5	5.4	100.0(74)	3.3
중소도시	5.8	17.3	36.5	23.1	15.4	1.9	100.0(52)	3.3
읍면	8.0	8.0	48.0	32.0	0.0	4.0	100.0(25)	3.1
$\chi^2(df) / F$			6.578(8)					0.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98>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9)육이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6.6	9.3	31.1	32.5	18.5	2.0	100.0 (151)	3.5
원장/교사 구분								
원장	3.6	5.5	27.3	41.8	21.8	0.0	100.0 ( 55)	3.7
교사	8.3	11.5	33.3	27.1	16.7	3.1	100.0 ( 96)	3.3
$\chi^2(df) / t$			5.694(4)					2.1*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2.0	16.3	26.5	38.8	16.3	0.0	100.0 ( 49)	3.5
민간	10.9	4.3	39.1	26.1	19.6	0.0	100.0 ( 46)	3.4
가정	7.1	7.1	28.6	32.1	19.6	5.4	100.0 ( 56)	3.5
$\chi^2(df) / F$			9.432(8)					0.2
지역 구분								
대도시	2.7	8.1	33.8	32.4	18.9	4.1	100.0 ( 74)	3.6
중소도시	11.5	7.7	25.0	32.7	23.1	0.0	100.0 ( 52)	3.5
읍면	8.0	16.0	36.0	32.0	8.0	0.0	100.0 ( 25)	3.2
$\chi^2(df) / F$			8.080(8)					1.4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99>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0)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3.3	4.6	30.5	39.1	18.5	4.0	100.0 (151)	3.7
원장/교사 구분								
원장	1.8	0.0	21.8	49.1	25.5	1.8	100.0 ( 55)	4.0
교사	4.2	7.3	35.4	33.3	14.6	5.2	100.0 ( 96)	3.5
$\chi^2(df) / t$			11.022(4)*					3.2**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0.0	4.1	38.8	38.8	18.4	0.0	100.0 ( 49)	3.7
민간	8.7	2.2	32.6	37.0	17.4	2.2	100.0 ( 46)	3.5
가정	1.8	7.1	21.4	41.1	19.6	8.9	100.0 ( 56)	3.8
$\chi^2(df) / F$			10.007(8)					0.8
지역 구분								
대도시	1.4	5.4	27.0	43.2	17.6	5.4	100.0 ( 74)	3.7
중소도시	5.8	3.8	32.7	30.8	23.1	3.8	100.0 ( 52)	3.6
읍면	4.0	4.0	36.0	44.0	12.0	0.0	100.0 ( 25)	3.6
$\chi^2(df) / F$			5.170(8)					0.4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100〉 보육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1)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3.3	6.0	25.2	43.7	21.2	0.7	100.0 (151)	3.7
원장/교사 구분								
원장	1.8	0.0	18.2	50.9	29.1	0.0	100.0 ( 55)	4.1
교사	4.2	9.4	29.2	39.6	16.7	1.0	100.0 ( 96)	3.6
$\chi^2(df) / t$			10.954(4)*					3.3**
설립유형								
국공립·법인외	0.0	4.1	32.7	46.9	16.3	0.0	100.0 ( 49)	3.8
민간	8.7	8.7	23.9	37.0	21.7	0.0	100.0 ( 46)	3.5
가정	1.8	5.4	19.6	46.4	25.0	1.8	100.0 ( 56)	3.9
$\chi^2(df) / F$			10.322(8)					1.6
지역 구분								
대도시	1.4	9.5	24.3	41.9	21.6	1.4	100.0 ( 74)	3.7
중소도시	7.7	0.0	25.0	44.2	23.1	0.0	100.0 ( 52)	3.8
읍면	0.0	8.0	28.0	48.0	16.0	0.0	100.0 ( 25)	3.7
$\chi^2(df) / F$			10.131(8)					0.0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부록 19. 설문조사 부표: 아동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부모 설문조사)

〈부록 표 101〉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8.7	22.6	42.1	11.7	1.8	13.1	100.0 (1,731)	2.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7	20.1	40.7	7.9	1.1	17.5	100.0 (189)	2.6
대졸 이상	8.2	22.9	42.3	12.2	1.9	12.5	100.0 (1,542)	2.7
$\chi^2(df)/t$				7.621(4)				-2.1*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록 표 102〉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1.3	23.9	37.6	18.0	2.6	6.6	100.0 (1,731)	2.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03〉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8.8	21.3	41.5	19.2	3.0	6.2	100.0 (1,731)	2.9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04〉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2.2	27.4	36.9	13.5	2.5	7.5	100.0 (1,731)	2.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부록 표 105〉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부모의 육아 행복감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6.5	29.2	35.8	11.6	2.5	4.4	100.(1,731)	2.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부록 표 106〉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아버지의 양육 참여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6.7	26.8	31.8	19.2	2.8	2.7	100.01,731)	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1	25.8	31.0	21.0	3.4	2.6	100.01,050)	2.7
외벌이	17.2	28.2	33.9	16.6	1.3	2.8	100.0 632)	2.6
해당없음	22.4	30.6	20.4	14.3	8.2	4.1	100.0 49)	2.5
$\chi^2(df)/F$								3.5*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0.4	25.7	31.9	14.2	3.5	4.4	100.0 113)	2.5
251~350만원	21.1	30.2	31.4	12.0	2.5	2.9	100.0 242)	2.4
351~500만원	16.1	27.1	33.9	19.2	2.0	1.8	100.0 510)	2.6
501~600만원	17.6	27.1	28.5	19.3	4.4	3.1	100.0 295)	2.6
601만원 이상	14.2	25.2	31.7	23.3	2.6	3.0	100.0 571)	2.7
$\chi^2(df)/F$								3.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9	24.9	27.0	14.8	3.2	5.3	100.0 189)	2.4
대졸 이상	15.7	27.0	32.4	19.8	2.7	2.4	100.01,542)	2.7
$\chi^2(df)/t$								-2.7**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  $p < .01$ .

## 〈부록 표 107〉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아동의 웰빙/행복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보통	④	⑤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5점 평균
전체	10.0	22.4	44.4	15.5	2.8	4.9	100.0 (1,731)	2.8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부록 20. 설문조사 부표: 아동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전문가 의견조사)

〈부록 표 108〉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1)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 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3.0	15.0	42.0	17.0	9.0	1.0	12.0	100.0(100)	4.2
분야										
유아교육	0.0	2.9	25.7	34.3	11.4	14.3	0.0	11.4	100.0( 35)	4.1
보육	2.5	5.0	2.5	47.5	25.0	5.0	2.5	10.0	100.0( 40)	4.3
기타	0.0	0.0	20.0	44.0	12.0	8.0	0.0	16.0	100.0( 25)	4.1
$\chi^2(df)/F$					16.490(12)					0.2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28.2	33.3	12.8	12.8	0.0	10.3	100.0( 39)	4.1
보육/가족/아동	2.3	4.7	7.0	48.8	18.6	2.3	2.3	14.0	100.0( 43)	4.1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5.6	44.4	22.2	16.7	0.0	11.1	100.0( 18)	4.6
$\chi^2(df)/F$					16.889(12)					1.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09〉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2)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 겠다	계(수)	평균
전체	4.0	2.0	23.0	27.0	28.0	14.0	1.0	1.0	100.0(100)	4.2
분야										
유아교육	0.0	2.9	28.6	25.7	22.9	17.1	0.0	2.9	100.0( 35)	4.2
보육	7.5	2.5	17.5	22.5	32.5	15.0	2.5	0.0	100.0( 40)	4.3
기타	4.0	0.0	24.0	36.0	28.0	8.0	0.0	0.0	100.0( 25)	4.1
$\chi^2(df)/F$					8.405(12)					0.2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5.1	30.8	23.1	23.1	15.4	0.0	2.6	100.0( 39)	4.1
보육/가족/아동	9.3	0.0	18.6	27.9	30.2	11.6	2.3	0.0	100.0( 43)	4.1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16.7	33.3	33.3	16.7	0.0	0.0	100.0( 18)	4.5
$\chi^2(df)/F$					12.871(12)					0.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10>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3)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6.0	16.0	35.0	26.0	15.0	0.0	1.0	100.0(100)	4.3
분야										
유아교육	0.0	5.7	17.1	34.3	17.1	25.7	0.0	0.0	100.0( 35)	4.4
보육	2.5	7.5	10.0	32.5	32.5	15.0	0.0	0.0	100.0( 40)	4.3
기타	0.0	4.0	24.0	40.0	28.0	0.0	0.0	4.0	100.0( 25)	4.0
$\chi^2(df)/F$					12.248(10)					1.1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17.9	33.3	23.1	23.1	0.0	0.0	100.0( 39)	4.5
보육/가족/아동	2.3	11.6	14.0	32.6	25.6	14.0	0.0	0.0	100.0( 43)	4.1
사회복지/행정/경제	0.0	0.0	16.7	44.4	33.3	0.0	0.0	5.6	100.0( 18)	4.2
$\chi^2(df)/F$					11.267(10)					1.1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11>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4)아동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2.0	3.0	22.0	40.0	19.0	8.0	1.0	5.0	100.0(100)	4.0
분야										
유아교육	0.0	0.0	31.4	34.3	14.3	14.3	0.0	5.7	100.0( 35)	4.1
보육	5.0	5.0	10.0	42.5	27.5	5.0	2.5	2.5	100.0( 40)	4.1
기타	0.0	4.0	28.0	44.0	12.0	4.0	0.0	8.0	100.0( 25)	3.8
$\chi^2(df)/F$					16.182(12)					0.6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2.6	28.2	38.5	15.4	10.3	0.0	5.1	100.0( 39)	4.0
보육/가족/아동	4.7	2.3	16.3	41.9	20.9	7.0	2.3	4.7	100.0( 43)	4.1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22.2	38.9	22.2	5.6	0.0	5.6	100.0( 18)	4.0
$\chi^2(df)/F$					6.734(12)					0.0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12>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5)부모의 육아 행복감**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 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모르 겠다	계(수)	평균
전체	5.0	15.0	25.0	38.0	14.0	2.0	0.0	1.0	100.0(100)	3.5
분야										
유아교육	5.7	8.6	28.6	37.1	17.1	2.9	0.0	0.0	100.0( 35)	3.6
보육	5.0	17.5	20.0	42.5	12.5	2.5	0.0	0.0	100.0( 40)	3.5
기타	4.0	20.0	28.0	32.0	12.0	0.0	0.0	4.0	100.0( 25)	3.3
$\chi^2(df)/F$					3.807(10)					0.5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 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모 르겠다	계(수)	평균
전공										
유아교육/교육	2.6	15.4	33.3	28.2	17.9	2.6	0.0	0.0	100.0( 39)	3.5
보육/가족/아동	7.0	16.3	16.3	46.5	11.6	2.3	0.0	0.0	100.0( 43)	3.5
사회복지/행정/경제	5.6	11.1	27.8	38.9	11.1	0.0	0.0	5.6	100.0( 18)	3.4
$\chi^2(df)/F$						6.386(10)				0.0

주: 평균은 '잘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13〉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6)아버지의 양육참여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1.0	12.0	19.0	26.0	36.0	6.0	0.0	0.0	100.0(100)	4.0
분야										
유아교육	2.9	2.9	14.3	28.6	45.7	5.7	0.0	0.0	100.0( 35)	4.3
보육	0.0	20.0	17.5	30.0	25.0	7.5	0.0	0.0	100.0( 40)	3.8
기타	0.0	12.0	28.0	16.0	40.0	4.0	0.0	0.0	100.0( 25)	4.0
$\chi^2(df)/F$						11.942(10)				1.5
전공							0.0	0.0		
유아교육/교육	0.0	12.8	12.8	23.1	46.2	5.1	0.0	0.0	100.0( 39)	4.2
보육/가족/아동	2.3	14.0	18.6	32.6	23.3	9.3	0.0	0.0	100.0( 43)	3.9
사회복지/행정/경제	0.0	5.6	33.3	16.7	44.4	0.0	0.0	0.0	100.0( 18)	4.0
$\chi^2(df)/F$						11.608(10)				0.6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록 표 114〉 아동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7)아동의 웰빙/행복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달성되 지 않았다	②	③	④보통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계(수)	평균
전체	3.0	11.0	25.0	37.0	16.0	7.0	0.0	1.0	100.0(100)	3.7
분야										
유아교육	2.9	5.7	22.9	40.0	14.3	14.3	0.0	0.0	100.0( 35)	4.0
보육	5.0	7.5	25.0	37.5	20.0	5.0	0.0	0.0	100.0( 40)	3.8
기타	0.0	24.0	28.0	32.0	12.0	0.0	0.0	4.0	100.0( 25)	3.3
$\chi^2(df)/F$						12.348(10)				2.4
전공										
유아교육/교육	0.0	10.3	25.6	33.3	17.9	12.8	0.0	0.0	100.0( 39)	4.0
보육/가족/아동	7.0	9.3	25.6	34.9	18.6	4.7	0.0	0.0	100.0( 43)	3.6
사회복지/행정/경제	0.0	16.7	22.2	50.0	5.6	0.0	0.0	5.6	100.0( 18)	3.5
$\chi^2(df)/F$						10.810(10)				1.5

주: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9~2020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90 485692

ISBN 979-11-90485-69-2